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한국 사회 계층균열의 등장과 정당재편성

- 2000년대 선거를 중심으로

The Rise of Class Cleavage
and Party Realignment in South Korea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이 용 마

한국 사회 계층균열의 등장과 정당재편성
- 2000년대 선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 치 학 과
이 용 마

이용마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8월

위 원 장	박 찬 옥	(인)
부 위 원 장	강 원 택	(인)
위 원	곽 진 영	(인)
위 원	김 의 영	(인)
위 원	박 원 호	(인)

국 문 초 록

민주화 직후 수립된 한국정당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 지역주의 특성을 가진 정당들로 구성된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였다. 이 정당체계는 형성 직후부터 투표율이 급감하고 무당파 층이 증가하는 등 위기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약화되면서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은 기존의 사회균열 구조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어온 ‘북한 위협론’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져온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구조가 좌우파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인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한국사회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노동자계급 이외에 신중간계급이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이 신중간계급마저 외환위기를 계기로 계층 하강 현상을 경험하는 등 1960년대 한국자본주의 발달 이후 처음으로 계급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되는 등 계급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7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2000년 민주노동당을 결성하는 등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중요한 고비를 넘게 된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 등이 합법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각 부문 간의 노동의 분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계급형성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후퇴하고 심각한 조직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비해 신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시민운동은 1980년대 민중운동이 수행해온 역할을

대신하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의제설정 기능을 담당했다. 특히 2000년대 ‘3김’이 퇴장하면서 본격화된 정당개혁은 사회적 하층보다는 중간층의 정치적 참여를 높였고, 그 결과 고학력으로 특징되는 신중단계급의 정치적 활성화를 제고했다.

외환위기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 후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계급보다는 신중단계급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고 보다 진보 개혁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2002년 이후 6차례의 대선과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재 이상의 고학력, 중산층 수준 소득을 가진 신중단계급일수록 진보 진영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층은 보수 진영의 정당이나 후보를 꾸준히 지지해 대조를 이루었다. 구중산층이나 하층의 경우 상층과 신중산층 사이에서 동요하며 투표행태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2000년대에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균열 구조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상층과 신중산층의 서로 다른 투표행태는 이들의 이념성향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도 파악되었다. 주관적 이념평가와 구체적 정책분야에 대한 평가 두 측면에서 모두 신중산층은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인 반면 상층은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념 성향은 각 계층 내에서도 분야별로 차별성을 보였다. 즉 대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념에서는 신중산층의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반면, 경제적 이념과 관련해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계층을 떠나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이념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선거에서는 계층균열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기존의 지역균열을 대체해 정당재편성을 주도했다. 하지만 보수 편향적인 경제적 이념이 두드러진 선거에서는 계층균열이 약화되면서 지역균열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상층과 보수 진영, 신중산층과 진보 진영이 짝을 이루어지는 정당-유권자 연합이 고정되지 못하고 선거 이슈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다. 이는 정당재편성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정당체계가 점진적 재편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균열구조, 계층균열, 신중산층, 정당-유권자 연합, 정당재편성, 점진적
재편성

학 번: 2004-30899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1. 한국의 정당정치와 계층	1
2. 정당체계의 유형과 변동	6
제 2 절 논문의 구성	10
제 2 장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	14
제 1 절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14
1. 외국에서의 논의	14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8
제 2 절 정당체계 분석을 위한 대안적 분석틀	27
1.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의 변화	27
2. 이념균열에 따른 정당재편성	32
제 3 장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과 위기	36
제 1 절 “1987년 체제”의 수립	36
1. “1987년 체제”의 성격	36
2. 보수 편향 정당체계의 형성 배경	40
3.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 배경	48
제 2 절 “1987년 체제”의 위기	51
1. 기존 정당체계에 대한 유권자의 외면	51
2. 지역주의 정당-유권자 연합의 점진적 해체	55
제 4 장 균열구조의 변화와 신중산층의 부상	64
제 1 절 이념균열 구조의 변화: 반공이데올로기의 퇴조	65
1. 국제적/국내적 환경의 변화	65
2. 새로운 세대의 등장	70
3. 소결	74

제 2 절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	76
1. 서비스사회와 양극화	76
2. 외환위기와 양극화	81
3.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	88
4. 노동계급의 정치적 상황 변화	110
5. 소결	121
제 3 절 정당체계 재편성의 주체: 신중산층의 활성화	123
1. 1990년대 시민운동과 신중산층	124
2. 미국식 정당개혁과 신중산층	135
3. 소결	143
 제 5 장 계층균열 구조와 정당재편성	145
제 1 절 계층균열에 기초한 정당-유권자 연합	146
1. 새로운 계층균열 구조의 출현	146
2. 계층균열 구조의 일반화	161
3. 소결	198
제 2 절 계층균열 구조와 이념	203
1. 계층별 이념균열의 특수성	203
2. 정치 이념과 계층균열: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	218
3. 경제 이념과 계층균열	224
4. 소결	237
제 3 절 한국 사회의 정당재편성	240
1. 정당균열선의 전환 여부	241
2. 정당 경쟁방식의 변화	254
3. 소결	264
 제 6 장 결 론	269
 참고문헌	279
Abstract	309

표 목 차

(표 3-1)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	38
(표 3-2)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39
(표 3-3) 무당파 유권자 현황	53
(표 3-4) 김대중 후보에 대한 영남권의지지	56
(표 3-5) 호남 정당 및 그 후보에 대한 영남권의지지	56
(표 3-6) 역대 대선에서 호남 지역 지지율	58
(표 3-7) 제17대 대선 유권자의 출신지별 지지행태	59
(표 3-8) 제18대 대선 유권자의 출신지별 지지행태	60
(표 3-9) 자유민주연합의 충청 지역 지지율	62
(표 3-10) 충청 지역 정당의 충청 지역 지지율	62
(표 4-1) 한국사회 산업별 취업자 비율	77
(표 4-2) 계급 분포의 변화	78
(표 4-3)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증가 추이	80
(표 4-4) 시간당 임금 불평등	81
(표 4-5) 비정규직 규모	83
(표 4-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84
(표 4-7) 주택보급율과 주택보유 형태	85
(표 4-8) 금융소득 신고자 내역	86
(표 4-9) 경제위기 전후 경제성장, 내/외수 증가율	87
(표 4-10) 소득양극화 지수의 추이	93
(표 4-11) 계급별 지위 이동 실태	94
(표 4-12) 중산층 부문별 하강 이동 실태	95
(표 4-13) 관리직 취업자 수 변화	96
(표 4-14) 일자리 이동 가능성 분석	97
(표 4-15) 계급과 고용지위별 월 소득 추이	97
(표 4-16) 자영업자 수의 변화	98
(표 4-17) 중간계층 귀속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100

(표 4-18) 비중산층의 중간계층 인식	102
(표 4-19) 2002년 중산층의 이념적 성향	106
(표 4-20) 2006년 중산층의 이념적 성향	107
(표 4-21) 주요 쟁점에 대한 계층별 지지율	108
(표 4-22) 2003년 4월 부문별 이념성향	108
(표 4-23)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별 진보	109
(표 4-24) 노동자계급의 증대	112
(표 4-25)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쟁의	113
(표 4-26) 계급별 계급의식의 변화	119
(표 4-27) 2000년 주요 시민단체의 현황	126
(표 4-28) 사회운동 단체 회원의 직업구성	127
(표 4-29)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비교	128
(표 4-30) 낙천낙선운동 결과 지역별 낙선율	131
(표 4-31) 노사모의 직업별 분포도	139
(표 5-1) 2002년 대통령선거 결과	146
(표 5-2) 제16대 대선 대구/경북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49
(표 5-3) 제16대 대선 부산/경남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50
(표 5-4) 제16대 대선 영남 출신 계층별 투표행태	150
(표 5-5) 제16대 대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51
(표 5-6) 제16대 대선 계층과 지역 변수의 효과	151
(표 5-7) 제16대 대선 계층별 이념평균	152
(표 5-8) 1997년 대통령선거 결과	153
(표 5-9) 제15대 대선 영호남 계층별 투표행태	157
(표 5-10) 제15대 대선 계층별 이념평균	158
(표 5-11) ‘DJP연대’에 대한 평가	159
(표 5-12) 제14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159
(표 5-13) 제14대 대선 계층별 지지후보	160
(표 5-14) 2007년 대통령선거 결과	162
(표 5-15)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	163
(표 5-16) 제17대 대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168

(표 5-17) 제18대 대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170
(표 5-18) 제17대 대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71
(표 5-19) 제17대 대선 영남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72
(표 5-20) 제18대 대선 영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73
(표 5-21) 제18대 대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74
(표 5-22) 대선에서 계층과 지역 변수의 효과	175
(표 5-23) 제17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178
(표 5-24) 제18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179
(표 5-25) 제19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180
(표 5-26) 제17대 총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184
(표 5-27) 제18대 총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188
(표 5-28) 제19대 총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191
(표 5-29) 제17대 총선 각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93
(표 5-30) 제18대 총선 영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93
(표 5-31) 제18대 총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94
(표 5-32) 제19대 총선 영남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95
(표 5-33) 제19대 총선 영남 출신 계층별 투표행태	196
(표 5-34) 제19대 총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196
(표 5-35) 총선에서 계층과 지역 변수의 효과	197
(표 5-36) 2000년대 대선에서 계층투표 현황	199
(표 5-37) 2000년대 총선에서 계층투표 현황	200
(표 5-38) 각 시기별 계층 분포도	204
(표 5-39) 경제정책에 대한 계층 간 이념평균	209
(표 5-40) 국회의원들의 주관적 이념평균	213
(표 5-41) 후보 지지에 영향을 준 사건	219
(표 5-42)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220
(표 5-43)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계층별 찬성 여부	222
(표 5-44) 17대 총선 쟁점에 대한 계층별 평가	223
(표 5-45) 지지후보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사안	225
(표 5-46) 2007년 대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이슈	226

(표 5-47)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227
(표 5-48)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228
(표 5-49) 이명박 정부 첫 정책에 대한 평가	229
(표 5-50)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도	229
(표 5-51) 이명박 정부 하 향후 전망	230
(표 5-52)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	232
(표 5-53)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233
(표 5-54) 우리 사회 당면과제를 잘 해결할 정당	234
(표 5-55) 차기 대선에서 지지 후보	234
(표 5-56) 차기 대통령의 시급한 해결과제	235
(표 5-57) 5년 전에 비해 고소득자/저소득자 간의 갈등	235
(표 5-58) 대선 후보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한 선호도	236
(표 5-59) ‘친노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론’ 이 투표에 미친 영향	237
(표 5-60) 역대 정부별 연간 구속 노동자 수	249
(표 5-61) 각 당 논평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이슈 비중	250
(표 5-62) 제17대 국회 각 당 공조처리 법안	251
(표 5-63) 정몽준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258
(표 5-64) 노무현 · 정몽준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	259
(표 5-65) 정동영 · 문국현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260
(표 5-66) 정동영 ·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념성향	261
(표 5-67) 유권자가 판단한 각 후보들의 이념성향	261
(표 5-68) 문재인 · 안철수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262
(표 5-69) 문재인 · 안철수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	263
(표 5-70) 문재인 · 안철수 후보의 이념성향별 지지율	263

그 립 목 차

(그림 2-1) 새로운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의 변화	30
(그림 2-2) 쉰퀴스트의 정당재편성 시나리오	33
(그림 2-3) 이념균열 등장에 따른 정당재편성	34
(그림 3-1) 지역주의 정당체계로의 재편성	50
(그림 3-2)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51
(그림 3-3) 역대 총선 투표율	52
(그림 3-4) 2010년~2011년 무당파 유권자 현황	53
(그림 4-1) 중간계급과 중산층의 관계	90
(그림 4-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16
(그림 5-1) 제16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147
(그림 5-2) 제16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148
(그림 5-3) 제15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155
(그림 5-4) 제15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156
(그림 5-5) 제17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165
(그림 5-6) 제17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166
(그림 5-7) 제17대 대선 진보·보수 후보군에 대한 지지계층	167
(그림 5-8) 제18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169
(그림 5-9) 제18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170
(그림 5-10) 제17대 총선 계층별 투표행태	182
(그림 5-11) 제17대 총선 정당별 지지계층	183
(그림 5-12) 제17대 총선 진보·보수 정당군에 대한 지지계층	184
(그림 5-13) 제18대 총선 계층별 투표행태	186
(그림 5-14) 제18대 총선 정당별 지지계층	186
(그림 5-15) 제18대 총선 진보·보수 정당군에 대한 지지계층	187
(그림 5-16) 제19대 총선 계층별 투표행태	189
(그림 5-17) 제19대 총선 정당별 지지계층	190
(그림 5-18) 제19대 총선 진보·보수 정당군에 대한 지지계층	191

(그림 5-19) 일반 유권자의 이념분포도	205
(그림 5-20) 계층별 이념평균	206
(그림 5-21) 정책분야별 유권자 이념평균	207
(그림 5-22) 경제 분야의 계층 간 이념평균	208
(그림 5-23) 사회 분야의 계층 간 이념평균	211
(그림 5-24) 정치, 탈물질 분야의 계층 간 이념평균	211
(그림 5-25) 제16~19대 주요 정당 이념분포도	214
(그림 5-26) 정책분야별 국회의원 이념평균	215
(그림 5-27) 경제 분야 이념 거리	216
(그림 5-28)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 이념 거리	216
(그림 5-29) 주요 정당별 선거강령 이슈에 따른 공간적 위치	256
(그림 5-30) 정치이념에 따른 정당재편성	266
(그림 5-31) 경제이념에 따른 정당재편성	26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1. 한국의 정당정치와 계층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라는 중대(重大)선거를 통해 형성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정당체계는 이념균열 구조상으로 보수 우위, 정치균열 구조상으로 지역주의라는 두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기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쟁하던 보수 정당들이 이름만 바꾸어 재등장했을 뿐 민주화에 따른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없었다. 그 결과 보수 정당들의 이념적 토대 역시 기존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정당 간에 이념을 둘러싼 경쟁도 없었고, 서구와 같은 계급균열 구조 역시 정치균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각 정당 지도자의 출신지역에 따라 정당-유권자 연합이 형성되면서 지역주의 정당 체계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지역주의 정당체계는 출현 직후부터 그 위기를 맞게 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정당체계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유권자들은 투표에 대한 기권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1987년 제13대 대선의 공식 투표율은 89.2%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년 만인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겨우 63.0%대에 그쳤다. 1988년 75.8%대에 이르렀던 제13대 총선 투표율은 이보다 급격하게 추락해 20년 만인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46.1%에 불과했다.

이 기간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소위 무당파 또한 크게 증가했고, 일반 당원들의 비중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새로운 정당의 잦은 출현과 소멸, 정당들의 숱한 이합집산, 결과적으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 (최장집, 2002)로 표현되는 선거 유동성의 증가 등 지역주의에 근거한 우리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서구에서 나타난 기존 정당의 대표성 약화에 따른 정당의 쇠

퇴 내지는 위기 현상과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¹⁾ 그런 점에서 최근의 선거유동성은 일차적으로 우리 보수 정당들의 대표성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 나타나는 우리나라 정당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들이 서구와 전혀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 형성되어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구의 정당 쇠퇴론 내지 위기론과 그 맥락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정당의 위기는 지역주의와 보수 우위로 대표되는 기존 정당체계의 “해체” (dealignment)(Beck, 1984)라는 현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당 체계의 위기는 ‘3김’이 퇴장한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3김이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들의 퇴장은 곧바로 기존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위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3김의 퇴장이 곧바로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0년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 결과는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3김의 퇴장은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여기에 2004년 제17대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이래 제18대와 제19대 총선에서도 진보 정당이 꾸준히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 것은 지역주의의 쇠퇴와 함께 또 다른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들 진보 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제17대 국회부터 각각 10석, 5석, 13석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정당이 높은 대표성의 관문을 뚫고 원내에 진출해 자신의 존립기반을 유지하는 데 차례로 성공했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쉽게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어렵다는 점에서 3김의 퇴장 이상으로 그 상징성이 크다.

진보 정당의 의회 진출은 기존 한국 정당들에게도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진보 정당은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보적 정책을 제시하며 보수 정당들만의 지역주의 균열 구조 위에 진보와 보수라는 새로운 이

1) 서구의 정당쇠퇴론 내지 정당위기론은 1960년대 말 이후 전통적인 계급 좌파의 쇠퇴와 생태주의 정당의 등장, 기존 기독교 정당에 대한 도전, 극우 정당의 등장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지칭한다. 정당쇠퇴론 내지 위기론은 정당이 시민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한다. Dalton and Weldon(2005), Ignazi(1992), Kitschelt(1986), Lawson(1988), Lucardie(2000), Reiter(1989), Schoonmaker(1988), 광진영(2002) 등 참고.

념균열 구조를 추가했다. 기존 정당들도 진보 정당이 제시한 진보적 정책과의 차별성 혹은 동질성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정책적, 이념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정당들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열린 우리당이 제17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당 간의 이념적 경쟁이 한층 고조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정당들 또한 진보 정당이 제시한 의제들을 흡수하며 그동안 터부시하며 스스로 배제해왔던 이념적 스펙트럼의 좌측 공간으로 한 클릭 이동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국 정당정치의 새로 변화된 모습은 이념적 스펙트럼의 우측에만 밀집되어 있던 유권자들에게 이념적 지평을 확대해주는 효과 또한 가져왔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래 줄곧 협애한 보수 우파적 이념공간에만 머물던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진보 좌파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잇따른 선거에서 울산과 경남 창원 등 일부 노동자 밀집 도시에서 진보 정당 후보들의 강세 현상은 유권자들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성향은 그동안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가려져 있던 계급균열이 새롭게 표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상층의 보수적인 투표행태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상층은 일관되게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 혹은 후보에 대해 눈에 띄는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계급정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을 둘러싼 갈등, 이명박 정부 이후 감세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등 계급 내지 계층을 둘러싼 균열 현상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계급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이 2000년대 이후 갑자기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계급정치가 출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계층 갈등 현상일 뿐인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존 정당들의 대응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현상타개책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한가 아니면 정당 속성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정당 속성의 변화를 야기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당의 변화인가 아니면 균열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보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균열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정당

속성의 변화라면 그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정당 간의 힘의 변화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기존 정당들의 달라진 대응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 성향이 여전히 압도적인 점을 들어 기존 지역주의 균열구도와 정당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즉 1987년 민주화 이후 수립된 보수 우위의 지역주의 체계가 서구와 마찬가지로 “동결”(freezing)(Lipset and Rokkan, 1967)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연구도 균열구조나 정당체계를 떠나 정당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나타난 포괄정당화 현상이나 선거전문가 정당, 카르텔정당, 기업형 정당화의 경우 우리나라 정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다.²⁾ 하지만 이는 균열구조나 정당체계의 변화와는 별개의 정당 속성의 측면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 한국 정당정치의 변화 현상을 기존의 시각과 달리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최근 정당정치의 변화는 기존 정당들이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에 따른 불가역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1987년 정초(定礎)선거를 통해 보수 이념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 균열구도가 형성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 그리고 정치적 균열구조가 등장하면서 심각한 변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계층균열과 세대균열을 통해 이념균열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지역주의 균열구조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의 정당과 지역유권자 간에 형성된 기존의 정당-유권자 연합이 서서히 해체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각 정당이 정책적 성격을 강화하며 이념노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균열구조에 맞게 계층이나 이념에 기초한 정당-유권자 연합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구조의 변화 혹은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를 야기한 결정적인

2) 서구 정당들은 정당위기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 카르텔 정당, 선거전문가 정당 등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포괄정당에 대한 논의로는 Kirchheimer(1966), 카르텔정당에 대한 논의는 Katz and Mair(1995), 선거전문가 정당에 대해서는 Panebianco(1988), 기업형 정당 모델에 대해서는 Hopkin and Paolucci(1999) 등을 참고.

배경은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기존 계층 구조의 심각한 변화를 경험했다. 노동자계급으로 대표되는 하층뿐만 아니라 신(新)중간계급을 비롯한 중간층, 나아가 상층의 일부까지 심각한 계층 하강의 위기에 빠졌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던 한국사회 계층구조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이래 가장 큰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각 계층으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만들었다. 최근 계층을 둘러싼 갈등이 눈에 띄는 정도로 등장하고 있는 주된 원인일 것이다. 특히 신중간계급으로 대표되는 신(新)중산층이 정치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서 민주주의와 정치 일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높은 활용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며 계층 간 이념균열의 표출을 억눌러온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약화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북한의 실체가 명확해지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룬 북한의 위협론이 상당 부분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계층 간 균열구조가 정당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계층균열과 세대균열, 이념균열 등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균열구조의 잇따른 등장은 궁극적으로 정당체계의 변화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균열구조의 변화가 곧바로 정당체계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당체계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00년대 이후 새로 등장한 계층균열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계층균열 구조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또 1997년 대선과 2000년대 치러

진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함으로써 2000년대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계층균열 구조의 현황과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 논문은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이 실제 한국에서 정당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재편성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해볼 것이다. 균열구조의 변화와 정당체계의 변화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당체계의 유형과 변동

정당의 기본적인 기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균열구조 속에서 파생하는 사회적 이익을 정치체제에 반영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이자 정치체제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기능이다. 이 정당의 기능에서 바로 조직으로서의 정당, 유권자 속의 정당, 정부 조직으로서의 정당이라는 전통적인 세 가지 분석틀이 유래한다(Ware, 1996: 1-7).

그런데 정당의 기능은 이와 같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당체계가 발생한다. 정당체계란 말 그대로 정당들로 구성된 체계이다. 이 점에서 정당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독립변수들에서 파생하는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체계’ (system)라고 할 경우 단순한 부분들의 합 이상의 속성을 띠게 된다.

사르토리의 정의에 따르면 정당체계는 “정당들 간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체계” (Sartory, 1976: 44)이다. 즉 정당체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복수의 정당이 있어야 하고, 이들 간의 경쟁과 협력과 같은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그 구조와 방식, 방향 등에 따라 정당들 간의 관계 즉 특정 시기 특정 정당의 소멸이나 탄생, 정당의 변화, 정당 간의 이합집산, 정당 간 경쟁의 방향, 정당 간의 동맹과 연립정부 구성 등을 야기한다.

정당체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종속변수의 지위를 넘어 독립변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정당체계가 역으로 정당 간의 상호 경쟁구도에 따라

정당의 속성을 규정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이 정당정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종의 인식 틀을 형성한다. 따라서 “정당체계에 대한 이해는 정당체계를 구성하는 정당의 속성, 정당과 정당의 관계, 정당체계의 사회와의 연계성, 그리고 정당체계와 국가의 관련성 등 다양한 측면의 역동적 유형에 대한 이해를 포함” (곽진영, 2004: 142)하게 된다.

서구에서 정당체계를 유형화해 분류를 시도한 것도 바로 이 점에서 정치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즉 유형분류란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당체계를 이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과 정당체계의 속성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에는 사회적 균열과 같은 사회학적 요소, 선거제도나 의회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요소, 정당 간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쟁적 요소 등 세 가지가 있다(Ware, 1996: 8). 정당체계의 유형분류는 바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역으로 정당체계의 유형을 통해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³⁾

정당체계의 유형분류는 듀베르제(Duverger, 1954)가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분하면서 비롯되었다. 달(Dahl, 1966)은 야당의 경쟁전략을 기준으로 정당체계를 분류했고, 블론델(Blondel, 1968)은 정당의 수에 정당의 상대적 크기를 추가해 양당제와 2.5당제 등으로 분류를 시도했다. 로칸(Rokkan, 1968)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 수와 과반 정당, 소수 정당의 분포를 기준으로 1 대 1+1 혹은 1 대 3~4 정당체계 등으로 분류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당의 수를 정당체계 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사르토리(Sartori, 1976)에 와서 정당의 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정당체계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추가되었다. 정당의 수와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정당 간 경쟁의 방향성, 즉 원심적 경쟁인지 구심적 경쟁인지와 정당의 파편화 정도를 종합해서 정당체계 분류를 시도했다. 이후 사르토리의 정당체계 분류법은 많은 연구자들이 채택하면서 가장 전통적인 정당체계 분류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3) 정당체계의 유형분류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한 글로는 곽진영(2004), Mair(1997), Ware(1996) 등 참고.

이와 같은 정당체계의 분류는 서구 정당체계가 좌우 이념균열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균열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Lipset and Rokkan, 1967; 1990).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전통적 정당체계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던 이념균열의 약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균열구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당체계 분류가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77)는 기존의 좌우 이념균열 대신 물질주의와 탈(脫)물질주의 간의 새로운 가치균열 구조의 출현을 제시하였다.

또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은 좌우 이념균열에 따른 정당체계의 “동결”(freezing)이라는 립셋과 로칸의 유명한 명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야기했다(Lipset and Rokkan, 1967). 즉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당 즉 녹색 정당이나 극우 정당, 기존 이념 정당들의 변화된 속성, 정당과 사회 집단과의 관계, 정당과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개별 정당 차원을 넘어 정당체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의 관계와 관련해 정당의 사회적 이익 반영도를 측정해 정당체계를 분류하려는 시도도 등장했다. 잔더(Janda, 1980)는 정당이 사회균열 구조 내의 각 중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고르게 이끌어내는 사회적 포괄성과 사회균열 구조 내의 특정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회적 집중성이라는 척도를 개발해 정당체계를 구분하기도 했다.⁴⁾ 또한 정당체계와 국가와의 관계와 관련해 정권교체의 폭과 정부에의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폐쇄형 정당체계와 개방형 정당체계를 구분한 시도도 역시 나타났다(Mair, 1997).

정당체계의 유형과 변동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에서 볼 때 정당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정당들의 변화가 아니다. 정당체계의 변화는 정당들의 변화는 물론 정당과 정당, 정당과 시민사회, 정당과 국가 간의 관계 등의 총체적인 변화에 기인하거나 혹은 역으로 그 변화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변화 양상이 단순

4) 광진영(1998)은 잔더의 사회적 포괄성과 집중성 개념을 토대로 포괄성이 높고 집중성은 낮은 이익통합체계와 그 반대로 사회적 집중성은 높지만 포괄성은 낮은 이익표출체계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당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했다.

히 정당 자체의 변화나 아니면 정당체계의 변화를 수반한 것이냐에 따른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되는 정당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동 내지 제한적인 변화에 머물 것이다.⁵⁾

반대로 후자가 사실이라면 향후 정당의 속성은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정당 내 리더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당 체계에 의해, 그리고 이 체계에 맞춰 정당의 속성이 변화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변화는 새로운 정당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스미스에 따르면 정당체계의 변화는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정당체계의 “일시적인 변동”이 있다. 또 체계의 특징을 대부분 유지한 가운데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고 체계의 유동성이 커지는 “제한적인 변화”, 여러 변화가 동시에 발생해 새로운 평형 단계에 접어들기 전의 불안정한 상황인 “전반적인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당체계가 체제붕괴 등을 통해 등장하는 “변혁”(transformation) 등이 그것이다. Smith(1989: 353)

제 2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 사회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서구와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그리고 한국에서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기존 논의의 이론적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

또 서구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예비(豫備)적 분석을 실시한다. 즉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균열구조론에 입각한 정당체계론과 쉐퀴스트(Sundquist, 1973)와 번햄(Burnham, 1970)의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에 따른 정당 재편성론의 관점에서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정당정치의 변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론적 가설을 세워본다.

3장에서는 민주화 이후 수립된 최초의 보수 정당 우위 체계이자 현재 변화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1987년 체제”(김종엽, 2009a)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체제는 소위 권위주의 “구체제”와의 협약을 통한 민주화의 이행이라는 한계 속에 수립됨으로써 보수 여야 정당들만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민주화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재야 운동권” 세력을 사실상 배제했다. 그 결과 이들이 대표하고 있던 계급적·민족적 균열을 정치균열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정당체계를 낳게 된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 총선이라는 정초선거를 통해 나타난 극심한 지역주의는 이로 인한 또 다른 결과였다.

하지만 보수 우위 지역주의로 특징되는 “1987년 체제”는 출현 직후부터 투표율의 급락과 무당파층의 급증, 선거 유동성의 증대 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충청과 영남, 호남 등 지역균열을 형성했던 세 지역에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상당히 쇠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4장에서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균열구조가 등장하게 된 사회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반공이테올로기가 퇴조하고,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기존의 보수 우위 정당체계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토대가 흔들리

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중단계급이라 불리는 중간층이 늘어났지만,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야기한 양극화의 최대 피해세력으로 등장했다. 그 결과 소위 “중산층의 위기”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계층적 인식이 확산된다.

노동자들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진보정당의 결성을 통해 본격적인 계급형성의 단계를 밟아갔지만 외환위기라는 거센 돌풍에 휩싸이면서 계급 형성에 큰 시련을 맞게 된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최대 경쟁세력으로 떠오른 시민운동이 중간층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고, 중간층을 정치적으로 활성화하는 미국식 정당개혁 등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균열구조와 정당재편성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보다는 ‘신중산층’이 등장한다.

신중산층은 직업적으로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신중단계급에 해당하면서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벌거나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을 말한다. 신중산층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진보적 성향의 새로운 정당을 회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중산층 중심의 ‘중간층 운동’은 그 한계 또한 분명히 보이고 있다. 중간층 운동은 서구의 신좌파처럼 기본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계급적 성격을 띠지도 않는다. 즉 일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강하지만 본격적인 계급 운동이 되기에는 그 속성이 불분명하다.

5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처음 등장한 한국사회 계층균열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먼저 유권자들을 소득수준과 직업,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층과 신(新)중산층, 구(舊)중산층, 하층 등 네 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2002년부터 실시된 세 차례 대선과 세 차례 총선에서 보인 투표행태를 분석할 것이다. 구중산층이란 자영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들 중에 중산층의 소득수준을 갖거나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를 지칭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역 정당과 지역 유권자 간에 형성되었던 정당-유권자 연합이 해체(dealignment)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반면, 상층과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계층균열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계층균

열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계층균열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계층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가 있음을 분석해보겠다. 먼저 각 계층의 일반 이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층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중산층과 하층은 보수와 진보를 오락가락하면서 이념적으로 균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계층이 가진 이념적 차별성은 선거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상층과 보수 정당, 신중산층과 진보 정당 간의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이 나타났음을 선거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분야별 이념균열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념균열 구조는 보수와 진보의 팽팽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이념균열 구조는 아직 보수 우위의 대립을 형성하고 있다. 두 균열구조는 시기에 따라 정치적 이념균열 구조가 우위에 등장하기도 하고, 경제적 이념균열 구조가 우위에 등장하기도 한다. 정치적 이념균열 구조가 우위에 등장할 경우 보수 우위의 경제적 이념균열 구조는 잠복기에 들어가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념균열 구조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탓에 선거 국면의 이슈에 따라 이념균열 구조에 뚜렷한 부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과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 혹은 정당재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해보겠다. 정당재편성과 관련된 몇 가지 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정당체계는 기존 정당-유권자 연합의 해체로 특징지어지는 점진적인 재편성(secular realignment)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균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재정렬(realignment)로 특징되는 안정적인 재편성 국면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6장은 결론부로 이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정리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2000년대 이후 계층별 이념균열 구조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전문 연구기관에서 매 선거 직후 실시한 선거후 여론조사 자료이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는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KSDC)가 실시한 선거후조사,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동아시아 연구원과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각각 실시한 패널조사, 2012년 총선에서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총선후조사, 2012년 대선에서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에서 각각 조사한 대선후조사 자료이다. 2007년 대선과 2012년 총선·대선 분석에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선거후조사 자료도 일부 함께 사용할 것이다.

또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념성향에 대한 조사 자료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 등이 2002년부터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2012년 국민 이념조사 자료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대선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이들 자료는 일반 여론조사 자료와 달리 학술연구를 위해 전문가들의 감수하에 여론조사 문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선거후조사 자료의 경우 실제 투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 간에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감안해 적절한 가중치(weight)를 부여해 실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가공했음을 미리 알려둔다. 그 외 추가된 여론조사 자료는 분석을 실시할 때마다 각주를 통해 상세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제 2 장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

제 1 절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1. 외국에서의 논의

(1) 서구의 균열구조론

서구에서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에 대한 논의는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에서 출발한다. 립셋과 로칸에 따르면 서구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권력관계가 총체적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균열구조가 등장했다. 즉 지배적 문화 대 종속적 문화, 교회 대 정부, 1차 산업 대 2차 산업, 노동자 대 고용주 등 네 가지 핵심적인 사회적 균열이 등장했고, 이 균열구조에 기반을 둔 정당체계가 등장했다.

물론 사회적 균열이 곧바로 정당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화와 통합, 대표성, 다수결 등 네 가지 제도적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정당화의 관문은 정치적 반대파가 얼마나 허용되느냐의 문제이다. 통합의 관문은 정치적 시민권 즉 모든 시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느냐를 따지고, 대표성의 관문은 의회에 대한 접근성, 즉 제도적인 차원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묻는다. 마지막으로 다수결의 관문은 정치적 다수 세력에 대해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발전하면서 지역적·종교적 균열구조는 대부분 해소되거나 부차화되고,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 간 균열구조가 주요한 정치적 균열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20년대에 이 계급균열 구조를 기반으로 확립된 서구의 좌우 이념정당 체계는 그대로 “동결”(freezing)되어서 196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립셋과 로칸의 주장이다.

로즈와 어윈(Rose and Urwin, 1970)은 이후 서구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해 립셋과 로칸의 “동결명제”(freezing thesis)를 입증한다. 페테르센(Pedersen, 1983; 1990)과 매과이어(Maguire, 1983) 역시 새로운 정당

체계의 유동성 지표를 개발하고 경험적 연구기간을 더 늘려 분석한 결과 동결명제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서구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 하락과 선거 유동성 증대, 신좌파 운동의 등장, 새로운 극우정당의 출현 등이 이어지면서 이 동결명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동결명제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론자는 샤미르(Shamir, 1984)이다. “대부분의 정당체계는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결된 것이 아니다. 동결 가설은 거부되어야 한다”(Shamir, 1984: 70)는 샤미르의 언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샤미르는 서구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과 파편화, 이데올로기적 분극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어떤 정당체계도 동결명제와는 맞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서구 정당체계는 처음부터 동결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레인과 어슨(Ersson and Lane, 1982; Lane and Ersson, 1994; 1997), 달톤과 벡, 플라나간(Dalton, Beck, and Flanagan, 1984), 플라나간과 달톤(Flanagan and Dalton, 1984)등은 동결명제에 대해 샤미르와 같이 단절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급균열의 쇠퇴와 균열구조의 다원화 등으로 인해 정당체계는 안정적인 적이 없었고, 장기적으로 동결명제가 적실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잉글하트(Inglehart, 1971; 1977 등)는 계급균열의 쇠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을 제시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풍요와 교육수준의 증가, 직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안전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에서 삶의 질로 대표되는 탈(脫)물질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체계 역시 기존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따른 좌우 대립구도에서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로 대별되는 새로운 균열구도에 맞게 변화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반면 바르톨리니와 메이어(Bartolini and Mair, 1990), 레이파르트(Lijphart, 1990), 메이어(Mair, 1983; 1997), 볼킨스와 클린즈만(Volkens and Klingeman, 2002), 윌리네츠(Wolinetz, 1979; 1990) 등은 서구 정당체계에서 매 시기 선거의 유동성 증가와 새로운 정당의 등장 등 1960년대 이후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좌우 정당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

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선거의 유동성이 곧바로 정당체계의 변화와 동일시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결국 서구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나, 그리고 실제 그 기준이 변화되었느냐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통일된 관점의 부재로 인해 정당체계 자체의 변화과정이나 새로운 정당체계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역으로 서구에서 정당체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것이다.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과 그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논의는 오히려 미국에서의 ‘정당재편성’(政堂再編成) 논의를 통해 나타났다.

(2) 미국의 정당재편성론

미국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정당재편성(party realignment)이라는 개념 하에 진행되었다. 정당재편성은 사회적 균열구조론과 그에 따른 정당체계의 형성이라는 립셋과 로칸의 이론에서 출발한다. 다만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당제라는 정당체계의 기본적인 유형이 지속되는 미국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당의 수를 중시한 정당체계의 유형보다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에 주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정당재편성론을 주장한 사람은 키(Key, 1955)다. 키는 미국 선거를 분석하면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와 “급격한 재편성”(critical realign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는 이후 “점진적 재편성”(secular realignment) 개념을 추가해 중대선거에 따른 급격한 재편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상을 추가한다(Key, 1959). 즉 급격한 재편성이 단절적이고 급격하면서도 지속적인 변화상을 표현한다면, 점진적 재편성은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재편성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정당재편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화는 번햄과 페트로식, 썬퀴스트 등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게 된다(Brady, 1988; Burnham, 1970; 1981; 1996; Petrocik 1981; 1987; Sundquist, 1973; 박경산, 2003).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850년대와 1890년대, 1930년대 등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 중대선거가 이

루어졌고, 그에 따라 정당과 유권자 간의 정렬이 완전히 달라졌다. 또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비교적 결정적인 중대선거는 없었지만 점진적인 재편성에 버금가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Beck, 1984; Petrocik, 1981; 1987; 이현우, 2003; 정진민, 1996; 1997; 2000 등).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정당재편성은 한 세대의 교체와 엇비슷한 주기적 간격을 두고 발생했으며, 유권자들이 전통적 투표행태로부터 매우 강한 단절을 보여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정당재편성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정당-유권자 연합에서 이탈(dealignment)해 새로운 균열구조에 맞는 정당-유권자 연합으로 재정렬(realignment)을 하는 과정이다. 정당재편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정당체계에 있으며, 유권자들이 기존의 정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정당의 변화를 야기한 결과이다.

예컨대 1850년대 정당재편성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의 증대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문제가 노예제라는 이슈를 둘러싸고 대립한 결과 노예해방을 주장한 공화당이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을 형성하면서 공화당 우위체제를 확립했으며, 1890년대 정당재편성 역시 금본위제와 보호무역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면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은 공화당이 30년 동안의 우위 체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또 1930년대 정당재편성도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뉴딜이라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정책을 통해 노동자를 비롯한 경제적 하층을 적극 포섭한 민주당의 우위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 재편성의 과정에는 기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반영해 대부분 강력한 제3당이 출현해 기존 정당과 합당하거나 기존 정당에 흡수되면서 정당의 변화를 야기하는 등 정당재편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썬퀴스트(Sundquist, 1973: 37)에 따르면 정당체계의 재편성 과정은 비록 급격한 재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 두 번의 중대선거로 끝나지 않고, 보통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점진적 재편성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 전에 발생했던 중대선거의 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850년대와 1890년대에는 점진적 재편성이 먼저 지속되다가 마지막 중대선거를 거치며 정당재편성을 완성한 반면, 1930년대에는 중대선거를 먼저 겪은 뒤 점진적 재편성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당재편성이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또 다른 재편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30년대 재편된 민주당 우위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30년대 이래 한 세대 이상이 경과하면서 특히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쇠퇴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변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즉 새로운 정당 정렬은 중간층과 상층, 남부 백인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과 하층과 흑인 및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간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Petrocik, 1987). 물론 1960년대 이후 중대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정당재편성 여부에 대한 공감대는 부족하지만 기존 정당-유권자 연합에서 이탈(dealignment)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 선거의 결과를 볼 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기존의 연구

우리나라에서 정당체계 혹은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과거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당정치 자체가 제 역할이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여야 간의 정권교체는 고사하고 자유로운 선거경쟁조차 못하면서 정당정치가 큰 의미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서구적인 개념의 정당체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한 편이다.

정당체계의 형성을 부정하는 논자들은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아직 유동적이고 구조화되지 못해 “체제성 혹은 체계성”(systemness)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김용호, 2001: 297). 또 “한국 정당정치는 아직 ‘정당체계’라든지 소위 ‘양당제’, ‘다당제’ 같은 분석적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차라리 ‘무체계’라고 일컫는 것이 정확한 표현”(김수진, 2008: 194-195)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체계에 대한 연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수와 크기, 이데올로기 등을 기준으로 정당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한 서구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당구도 혹은 균열구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⁶⁾ 즉 여야 정당이 상호 대립구도를 형성하며 갈라지는 정치균열 구조의 문제를 놓고 “여야 구도(與野構圖)”, “여촌야도(與村野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당의 균열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진행된 일련의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매 선거마다 영남과 호남, 충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균열이 선거과정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지역주의 균열구조의 등장 배경과 원인, 그 해소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집중되었다(김만흠, 1994; 김욱, 2004; 박찬욱, 1999; 2005; 손호철, 1993; 안순철·조성대, 2005; 이갑윤, 1998; 2000; 조기숙, 1997; 2000; 조성대, 2004; 최장집, 1996 등). 그렇지만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역균열의 상징적 인물들이 정당의 주요 지도자로 존재하고 계급이나 이념, 세대, 종교 등의 여타 균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지역주의 균열구조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지역주의 균열구조와 관련한 정당체계에 대한 논의는 서복경(2002)과 은민수(2003)가 “1987년 정당체계”와 관련해 “보수독점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과 그 기원, 성격에 대해 분석한 것이 거의 전부일 정도이다. 그나마 이 논의도 사실상 2000년대 이전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다 보니 정당체계의 변화보다는 “87년 체제”의 형성과 동결에 대한 서술에 그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런데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기점으로 기존의 균열구조에 대한 연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기존의 지역균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지역균열과 이념균열 혹은 세대균열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균열들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들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념균열 연구는 강원택(2002a; 2003; 2005)이 1997년 대선과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것이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강원택은

6) 정당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체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정당구도”라는 용어이다(김제한, 1994; 심지연, 2004a).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1987년 이후 “권력행사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대표적 이익을 추구하고 선거경쟁에 참여하는 집단”(Ware, 1996: 5)으로서 정당이 존재하고, 이들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정당체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분석을 통해 이념균열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세대균열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박찬욱(2006)도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의 비교를 통해 균열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 결과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등장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후 전개된 대부분의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균열에 대한 연구는 세대균열을 통해 드러나는 이념균열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른 세대균열(정진민, 1992; 1998; 2008; 2012; 조중빈, 2003; 황아란, 2009 등)과 함께 탈물질주의 가치와 물질주의 가치 간에 나타나는 균열구조(김육, 2006; 마인섭, 2003; 2004; 마인섭 · 장훈 · 김재한, 1997; 이현출, 2005 등), 2002년 대선을 계기로 등장한 자유지상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균열구조(장훈, 2004) 등 이념균열 이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균열구조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새로운 균열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정진민(2001; 2003a), 박명호(2004a; 2004c; 2006), 곽진영(2006), 서복경(2010) 등이 세대와 이념 균열구조의 등장에 따른 정당체계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찬욱(2006)은 향후 선거양상을 보아야 하겠지만 2002년 대선이 “재편선거가 될 의미 있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이정진(2007)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02년 대선을 “정당재편성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정진은 2002년 대선이 정당재편성의 완성이 아니고, 이후 선거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표의 이동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함께 제시하기도 한다. 정당체계의 변화에 관한 이와 같은 논의들은 대부분 미국식 정당재편성 개념을 도입해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정병기(2009)의 연구는 정당체계 변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화 이후 10년 동안 “보수적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가 형성되어 공고화되었다면, 그 후 10년 동안 보수진영 분열과 지역주의 약화 등으로 기존 정당체계가 해체과정에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당체계의 “동결”(凍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우리 정당체계가 서구와 같이 이념균열에 따라 좌, 우파 정당 간의 대결구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독점

정당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최장집 2002; 최장집 2006; 최장집·박찬표·박상훈, 2007). 현재의 정당체계는 1948년 내지 1958년의 보수독점 정당체계가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부활한 뒤 동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의 정당체계와 해방 직후 정당체계와의 차이점은 현 체계가 지역주의라는 틀을 띠고 있을 뿐이며, 향후 정당체계는 대중정당의 건설을 통해 서구와 같은 좌우 이념정당체계로 변모해야 한다. 서복경(2002)과 은민수(2003)의 연구 역시 2002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 타인지 정당체계의 동결을 강조하는 최장집, 박상훈, 박찬표의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균열구조나 정당체계보다는 정당 자체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도 등장했다. 예컨대 2000년대 이후 원내정당이나 유권자 정당으로의 변화를 중시하는 입장(정진민, 2008), 카르텔 정당에서 유목형 정당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시각(장훈, 2003;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정당들의 적응(adaptation) 양태를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 내지 정당체계 측면에서의 변화가 정당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이념균열 구조와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따른 계급균열 혹은 계층균열 구조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계급균열이 정치과정, 특히 선거에서 나타난 행태에 대한 연구는 정영태(1993a)가 거의 유일하다. 정영태는 1992년 제14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계급별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지역균열이 계급균열을 질식시키는 상황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노동자들 역시 계급투표보다는 지역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는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정영태(1993b)와 안희수·정영태(1993)는 또 한국선거연구회의 제14대 대선 직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와 중간층의 정치의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두 연구는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지역주의에 의해 희석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계급균열은 표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계급균열 혹은 계층균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입한 2004년 이후 주로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강원택, 2004;

임영일, 2004; 안순철·가상준, 2006; 장상철, 2008 등). 민주노동당 지지자에 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노동자들보다는 고학력, 화이트칼라층의 지지가 높아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계급정당과 대중정당 사이에서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중간층에 대한 문제의식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철희(2002; 2006)는 신중간계급이 급속도로 증대되면서 새로운 정치균열을 형성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또 김영태(2006)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 대선에서 나타난 중산층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산층이 보수적 개혁지향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매 선거마다 중산층의 지지 후보나 정당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어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병훈·신재열(2011) 역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토대로 자영업자들의 계층의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기도 했다.

계층균열에 대한 연구도 일부 시도되었다. 박찬욱(2006)은 2002년 대선을 대상으로 직업과 소득 등을 중심으로 계층균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유권자층에서의 보수적 투표성향을 확인했다. 강원택(2013)은 2012년 대선을 대상으로 직업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층별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층에서 보수적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논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주요 변수로 놓고 계층별 투표행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이 논문의 의미와 성과

이 논문이 기존 연구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한 첫 단계로서 사회경제적 균열 구조, 특히 계층균열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균열구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역주의와 이념균열 등 정치적 균열에 대한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지역균열이나 이념균열 등이 등장하게 된 정치상황적 이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된 반면, 지역균열이나 이념균열과 같은 정치균열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대한 분석

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에 시도된 계급이나 계층 균열구조에 대한 논의도 대부분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대한 연구와 동떨어져 각 계급 혹은 계층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에 주로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와 계급 혹은 계층의 정치적 선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기존 논의의 한계를 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대한 분석을 일차적으로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각 사회계층에 끼친 정치적, 이념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계층에 따른 정당-유권자 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계층별 이념균열을 초래하면서 지역균열을 대신할 새로운 정치균열로 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을 원용해 보다 정치한 분석을 시도한다. 즉 직업과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층을 상층과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등 4개로 구분한다. 즉 신중산층은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신중간계급으로서 중산층의 소득수준이거나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를 말하고, 구중산층은 자영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들로서 역시 중산층의 소득수준이거나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를 지칭한다. 하층은 노동자 혹은 소득 수준이 낮은 저학력층으로 구성된다. 정치학계 내에서 사회계층을 구분할 때 흔히 직업과 소득수준, 학력수준을 각각의 단일 변수로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각 계층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차별적으로 정치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계층별 이념차이와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외환위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선거의 계층별 투표행태에서 이념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균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세대를 통한 이념균열에 한정되어 있고, 계층별 이념적 차별성은 아직 부재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선거에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이념균열이 세대뿐만 아니라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균열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것이다.

둘째, 이 논문은 주로 2000년대 선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나타난 계층균열과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뒤, 이를 1997년 대선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02년 대선의 계층균열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균열구조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그 이후 선거에서도 계층균열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분석해 보겠다. 2002년 제16대 대선부터 2012년 제18대 대선까지 세 차례 대선과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12년 제19대 총선까지 세 차례 총선이 그 대상이다. 전국 차원의 선거에 대한 연속적인 분석과 그 선거에서 비교적 일관된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단일한 특정 선거에 대한 분석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대선과 총선의 차별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선은 해당시기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많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정진민, 1996: 200). 반면 총선의 경우 대선보다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맺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 즉 정당일체감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는 역으로 총선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대선보다 뒤질 수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총선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특정 지역에서 49%를 득표해도 쉽게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대선은 특정 정당에서 단 한 명의 후보가 출마하지만, 총선은 후보가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 후보 한 명의 득표력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 낮지만, 여전히 대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대선의 경우 비록 특정 지역에서 과반의 득표에 실패했다고 해도 이전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의 변화를 추적해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균열구조의 변화 혹은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대선보다는 총선, 특히 2004년 제17대 총선에 대한 분석에 주로 한정되었다. 그 결과 2002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대선보다 총선에서 지역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균열구조의 변화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였다.

셋째, 이 논문은 한국정당체계의 재편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정당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당체계 자체에 대한 인지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정당체계나 그 재편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이 논문은 권위주의 시대에 대중적 기반 없이 위로부터 이식된 정당들이라고 해도 이들 간에 집권을 향한 독자적인 경쟁방식이 존재하고, 이 정당 간의 균열선을 따라 유권자들이 정렬하고 있는 한 정당체계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또 이로 인해서 유권자들 내에서 지역균열선을 따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당일체감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⁸⁾

지금까지 정당체계의 재편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도입된 사례도 없었다. 대신 균열구조를 기준으로 특정 균열의 ‘지속성’과 ‘우위성’을 놓고 정당체계의 변화를 판단하는 경향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 경우 균열의 ‘지속성’과 ‘우위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새로운 이슈나 균열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우위에 놓여야 정당재편성에 대해 말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당재편성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론적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먼저 정당이 유권자와 맺고 있는 정렬(alignment) 즉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균열구조에 입각한 정당-유권자 연합의 해체(dealignment) 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균열구조에 따른 정당-유권자 간의 새로운 정렬(realignment)이 출현해야 한다.

나아가 정당균열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균열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새로운 균열선에 의해 기존의 균열선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새로운 균열선과 기존의 균열선이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을 토대로 “정당 간의 경쟁방향”(the

7) 현재호(2008)의 경우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당들의 선거 강령 분석을 통해 이들 간에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독특한 경쟁구도가 존재했고, 이 경쟁구도가 유권자 집단의 배열에 영향을 미쳐, 여야 간에 독자적인 정당-유권자 연합을 형성해 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8)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정당일체감에 대한 분석결과, 정당일체감은 후보자 호감도와 함께 투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박원호, 2013). 이는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역주의가 곧 정당일체감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주의가 정당일체감으로 연결되어 정치지도자나 정당에 대한 호오도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윤광일(2012) 참고.

direction of competition) 혹은 “정부 구성방식” (the process of government formation), 달리 표현하면 ‘집권을 위한 정당 간의 경쟁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즉 정당 간 경쟁의 최고 가치인 집권을 위해 정당 간의 동맹이나 연합 정치의 양식 등이 바뀌어야 한다.⁹⁾

이 논문은 정당재편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상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던 이론적 모호성을 어느 정도 탈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정당-유권자 연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가 대부분 여론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기존 여론조사가 이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추어 사전에 조율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유권자 가운데서 상층과 일반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응답을 많이 기피하는 성향을 갖는 등 계층별로 응답자 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본인의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정보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계층 분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념에 대한 척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즉 객관화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투표결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다. 또 이념문제를 객관화해 측정하기 위해 묻는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질문에서도 유권자들이 정책과 이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실제와 동떨어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 각 후보의 전국 득표율 혹은 지역별 득표율처럼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계층과 세대, 이념 등에 따른 투표결과는 선거결과를 통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계층과 세대를 통해 표출되는 이념적 차별성, 이념에 따른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일정한 수준의 오차는 불가피하다. 이 논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경향이나 추세를 읽어내기 위한 것이다.

9) 이 점과 관련해 메이어는 “정당체계의 변화는 이데올로기적·전략적 변화, 선거에서의 변화의 결과로서 정당 간의 경쟁 방향이나 정부 구성 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에 발생한다. 경쟁 구조와 방식은 본질적으로 남겨둔 채 단순히 정당지지의 사회적 토대의 재편, 일련의 새로운 이슈의 출현만을 포함하면 이것은 정당체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아니다” (Mair, 1997: 52)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 2 절 정당체계 분석을 위한 대안적 분석틀

1.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의 변화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에 대한 논의는 거시구조적(巨視構造的)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균열이 중위적(中緯的) 수준의 정치균열로 전환되고, 정당체계란 그 정치균열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립셋과 로칸의 균열구조론에서 출발한다(Lipset and Rokkan, 1967). 자본주의 사회가 일반화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는 립셋과 로칸이 지적한대로 자본과 노동의 균열, 즉 계급균열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구조가 존재하는 한 계급균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계급균열이 어떤 형식으로 표출되는냐는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거시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정치균열로 전환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 반대를 허용하는 정당화의 관문, 보통선거권을 뜻하는 통합의 관문,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대표성의 관문, 정치적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다수결의 관문 등 4개의 정치적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이 전환과정이 근대 민주주의의 수립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사회적 균열이 정당체계의 균열로 전환될 때 그 체계의 구성원들은 그 균열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유권자 연합을 형성하고, 이러한 유권자 연합이 각 정당의 지지기반이 됨으로써 결국 사회적 균열구조가 정치적 균열구조로 전환되고, 정당체계가 형성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Lipset and Rokkan, 1990: 219).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정렬을 이루고, 이 정렬에 따라 계급균열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균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정치균열을 따라 좌우 혹은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정당체계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와 탈공산주의 사회와 같이 20세기 막바지에 뒤늦은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등장한 국가에서 출현한 정당체계의 경우 사회경제적 균열과 정치균열의 조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곡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즉 서

구의 경우 오랜 민주화와 정치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균열에 따른 시민들의 정치적, 조직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정당체계가 형성되었다. 반면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전의 비민주적 체계 하에서 이미 동원되고 정치화된 시민들이 존재한 상태에서 정당체계가 다시 시민사회에 하향 부과되는 “뒤바뀐 과정”(a reversed process)(Mair, 1997: 180)을 거치면서 유권자와 정당 간의 사회경제적 균열에 따른 안정적인 조율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당체계는 “동결” 되지 못하고 선진국에 비해 극도의 유동성(流動性)을 보이는 것이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균열과 정치균열의 부조응, 그에 따른 정당체계의 높은 유동성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의 국민국가 건설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에 조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균열이 등장했다(강원택, 2011). 먼저 서구에서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국민혁명은 우리에게 분단 즉 민족 대 체제대결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 결과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이념적 균열을 야기했다. 또 서구의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계급균열과 지역균열이 발생했다.

하지만 계급균열은 분단에 따른 이념균열과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그 표출이 억압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분단이라는 체제균열이 한국전쟁과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립셋과 로칸이 말한 4가지 관문을 압도하는 또 다른 중대한 정치적 관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균열 이슈로 등장하고 민주화 이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급균열, 이념균열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균열이 정치적 균열로 전환되지 못했다. 남한에서 노동자 정당, 진보정당은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이데올로기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보수 정당들만이 살아남는 독특한 정당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여야 간의 정치적 대결 과정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이나 정책 대결은 배제되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여야는 민주화 이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독재 대 민주주의 대립구도,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영남과 호남, 충청의 갈등에 기반을 둔 지역 간 대결구도에 따른 정치적 균열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 즉 계급균열에 따른 정치적 균열구

조를 반영하려는 정치세력은 남북균열, 즉 반공이데올로기를 정면 돌파해야 했고, 공식적인 한국 사회의 정당체계에서 배제된 소위 “재야 세력” 내지 “반체제 세력” 으로 남아야 했다.

민주화 전후 우리 사회에서 등장한 보수적인 정당체계는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억압되고 정치적 균열구조와 조응하지 못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후 등장한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사르토리식으로 구분하면 정당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거리가 거의 없으면서 지역적으로 분점(分占된) ‘지극히 온건한 다당제’ (extremely moderate pluralism)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정당들 간의 이념적 간격이 적고 구심적 대결구도를 보였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던 김대중이 1990년대 중반 집권을 위해 추구했던 소위 “뉴DJ 플랜” 은 이와 같은 대결구도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보수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정당체계가 2000년대 이후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우선 1990년대 이후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그에 이은 서구 좌파 정당들의 탈(脫)혁명 선언 내지 탈(脫)공산주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공산주의 혁명세력의 위협론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그에 따른 남북 간의 잦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류 등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위협론을 희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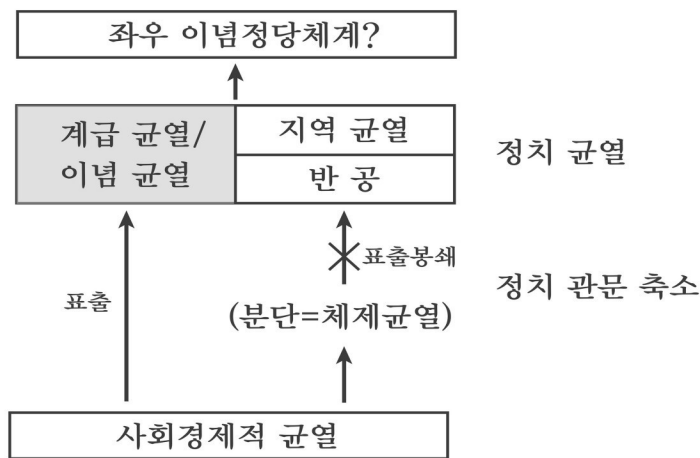
그 결과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완화되면서 남한 내 이데올로기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남북균열이 약화되면서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이데올로기 구조가 ‘정상성’ (正常性)을 회복하고 있다. 이 현상은 민주화 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의 등장과 맞물리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른 전략적 동원구조가 권위주의 정부 시기만큼 정치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신중간계급으로 불리는 중간층이 노동자와 함께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간층도 계층하강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이 시행되고 한국 자본주의가 발

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계급 혹은 계층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대한 계급 혹은 계층적 인식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는 계급 혹은 계층 간의 이념적 차별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과거 분단이라는 정치적 관문 때문에 정치적 균열구조 속에 투영되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즉 계급균열, 이념균열이 분단 즉 체제균열이라는 정치적 관문이 약화된 틈을 타 정치균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치적 균열구조의 등장 혹은 기존 정치균열 구조의 약화는 정당체계에도 변화를 야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 보수 정당들로만 이루어진 정당체계에서 이념균열 구조와 지역균열 구조의 길항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정당체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새로운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의 변화



이와 같은 변화의 가시적인 첫 결과는 2002년 대선 당시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가 100만 표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는 2004년 총선으로 이어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진보 정당의 원내 진입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기존의 이념대결 구도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와, 기존의 구심적(求心的) 대결구도가 다소 원심적(遠心的) 대결구도로 변화하는 정당 간의 분화를 야기했다. 각 정당, 특히 수적으로 영남에 비

해 열세에 있는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경우 지역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구조를 동원해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리고 새로 동원되는 균열구조는 계층균열 내지 세대균열을 통해 나타나는 이념균열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¹⁰⁾

이에 따라 정당체제도 ‘지극히 온건한 다당제’에서 사르토리가 말한 온건한 다당제(moderate pluralism)나 양당제(two-party system)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Sartori, 1976: 173-192). 그동안 왜곡되었던 정당체계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우균형을 찾는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국회에서 기존 열린우리당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민주당이 한미FTA나 무상복지 정책 등과 관련해 보여준 행태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동안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했던 한미FTA 반대나 무상복지 정책들을 민주당이 거의 전면 수용하면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다.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가장 보수적 성향의 새누리당까지 진보정당의 최대 관심사였던 경제민주화 같은 이슈를 부정하지 못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중도와 진보를 각각 대변하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정책연대나 후보단일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메이어가 말하는 “정당 간 경쟁의 방향성”(the direction of competition)과 “정부 구성”(the process of government formation)(Mair, 1997: 52)이라는 두 측면 모두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당체계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의 다양한 변화는 한국 정당체계가 기존의 보수 우위 정당체계에서 이념대결 구도가 우위에 있는 새로운 좌우 정당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10) 이와 같은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는 서구 정당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서구의 경우 1920년대 노동자 정당이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뒤 계급균열 구조가 전면화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신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한 소위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계급균열에 새로운 정치균열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급균열을 제외한 다른 정치균열이 먼저 출현한 뒤 계급균열이 뒤늦게 추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1) 손호철(2012)은 이에 대해 “진보정당 세력은 실패했지만 정책은 승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의미 있는 진보 정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진보적 의제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 주요 쟁점이 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2. 이념균열에 따른 정당재편성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과 관련된 정당체계의 문제를 정당-유권자 연합의 재편성, 즉 정당재편성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다. 실제 최근의 일부 연구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균열 구조가 이념대결 혹은 세대대결 구조로 변화했느냐 여부에 주된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선거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여전히 위력적이라는 점에서 정당체계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선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향후 정당재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이념균열이 지역균열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리고 있다(강명세, 2005; 박명호, 2004a).

물론 정당재편성이 수 십 년에 걸쳐 장기간에 이뤄지는 과정인 점을 고려할 때 2000년대 이후 단 몇 차례의 선거만을 놓고 정당체계의 재편성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서 미국의 주요 정당재편성 과정에 대해 선구적인 분석을 한 쉰퀴스트(Sundquist, 1973: 10)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상기하는 것은 우리 정당재편성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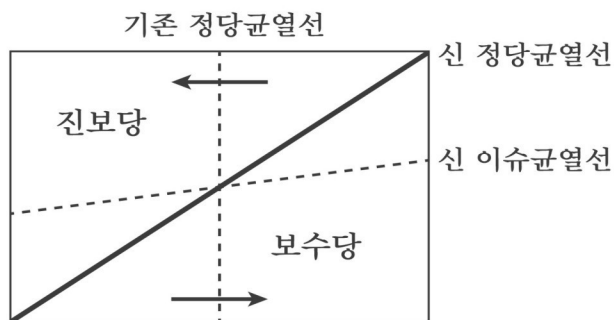
거의 모든 균열선(cleavage line)이 드러난다. 이 균열선은 얼마나 최근에 그려진 것인가 또는 본래 그려진 색의 강도에 따라 더 눈에 띄기도 한다. 게다가 재편성은 장기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의 겹침 종이 위에 있는 균열선은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보다 지금은 현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균열선이 그 위에 놓일 때 그것은 아직 정렬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정당재편성 과정에서 균열선은 복수로 등장하고 균열선의 강도는 제각각 다를 수 있다. 강도가 약한 균열선은 등장했다가 곧 소멸하기도 하고, 최초에 강도가 약했던 균열선이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정당재편성의 새로운 토대가 되는 정당-유권자 정렬이 이루어진다.

쉰퀴스트(Sundquist, 1973: 11-25)는 이와 같은 정당재편성 개념에 근거해 몇 가지 가설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의 핵심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존의

정당균열선에 따라 수직으로 나뉜 진보당과 보수당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이슈균열선이 횡(橫)으로 등장한다(그림 2-2). 이에 따라 기존 양당의 세력 일부가 새로운 이슈균열선에 따른 이합집산을 통해 기존 정당균열선과 새로운 이슈균열선의 중간쯤에서 새로운 정당균열선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이전의 정당균열선이 새로운 균열이슈가 등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새로운 정당균열선을 만들게 된다.

(그림 2-2) 쉰퀴스트의 정당재편성 시나리오



출처: 쉰퀴스트(Sundquist, 1973: 19)

실제 쉰퀴스트(Sundquist, 1973)와 번햄(Burnham, 1970; 1981; 1996), 페트로식(Petrocik, 1981; 1987)은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 입각해 미국에서 최소 3차례의 중대선거를 통해 정당재편성이 발생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1850년대 정당재편성의 경우 노예제 폐지라는 새로운 이슈균열선을 반영한 공화당이 등장해 기존의 휘그당을 대체하면서 이루어졌다. 이후 전개된 선거에서는 새로 정렬된 정당-유권자 연합에 기초해 공화당 우위체제가 수립된다.

1890년대 정당재편성은 금본위제와 보호무역 등 새로운 경제 이슈에 기반을 둔 인민당이 출현함에 따라 민주당이 분화를 거쳐 인민당을 흡수하면서 이루어졌다. 역시 이 재편성 이후 공화당 우위체제가 확립된다. 위의 두 차례 정당재편성에서는 기존의 정당 이외에 강력한 제3당이 등장해 기존 정당에 흡수되거나 혹은 기존 정당을 흡수해 정당재편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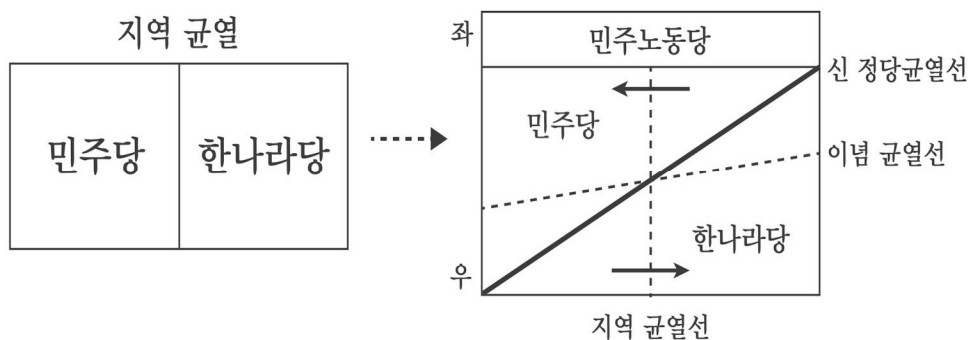
1930년대 정당재편성은 제3의 정당이 등장하지 않고 기존 정당의 단순한 이합집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경제공황이라는 새로운 이슈균열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 균열선을 따라 상호 양분되어 이합집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유권자 연합이 재정렬되었다. 1930년대 정당재편성은 이후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계를 확립한다.

쾨퀴스트의 이 시나리오를 다소 변형해 우리 정당 현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민주화 이후 정당체계는 수직으로 이루어진 지역균열에 따라 정당 균열선을 형성했다. 정당-유권자 연합 또한 지역균열을 따라 지역 정당 대 지역 유권자 간의 연합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균열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계급균열 혹은 계층균열이라는 정치균열로 전환되는 것을 억눌러온 정치적 관문, 즉 분단에 따른 체제균열이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크게 약화되었다. 또 외환위기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변에 따라 계급 혹은 계층에 따른 이념균열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 2-3)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균열선에 따라 수직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존 정당균열선을 좌우로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새로운 이념균열선이 추가되었다.

(그림 2-3) 이념균열 등장에 따른 정당재편성



이 새로운 이념균열선에 맞춰 2002년 국민승리21의 권영길 후보가 등장했

고,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이 새롭게 정당체계에 진입했다. 또 영남 지역의 진보 세력 중 일부가 호남 정당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호남 지역의 보수 세력 중 일부가 영남 정당인 한나라당 계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면서 새로운 정당균열선이 형성되었다. 즉 지역균열선을 따라 수직으로 형성되었던 정당균열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새롭게 정렬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당균열선의 양측에는 새로운 이념균열선에 따른 세력도 상당수 포함되었지만, 지역적 성향을 띠는 전통적인 세력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다. 즉 이념균열이 기존의 지역균열을 완벽하게 대체해 수평선으로만 분할된 새로운 정당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지역균열이 이념균열과 함께 상당기간 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균열로 남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재편성 과정은 2002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강도에 따른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즉 2002년 대선에서 영남의 진보·중도 세력이 진보적인 호남정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눈에 띄었다면 2007년 대선에서는 호남의 보수·중도 세력이 보수적인 영남정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많이 드러났다. 또 2012년 대선에서는 영남과 호남 양측에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교차지지 현상이 이전의 두 차례 대선 때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정당체계의 재편성 과정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정당재편성이 한, 두 번의 중대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대선거 전후에 걸쳐 상당기간 동안 점진적 재편성(secular realignment) 과정이 진행된다(Sundquist, 1973: 294-295)고 할 경우, 한국의 기존 정당체계가 점진적 재편성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방향성 또한 새로운 이념균열선을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실제 2000년대 이후 선거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이 대안적 분석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에 앞서 먼저 이 논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체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왜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서구와 마찬가지로 좌우 이념정당체계가 아니라 보수 우위의 지역주의 정당체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해 점검해보기로 하겠다.

제 3 장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과 위기

제 1 절 “1987년 체제”의 수립

1. “1987년 체제”의 성격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정당체계를 형성한 중대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거에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은 크게 네 개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계승한 두 개의 정당, 즉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보수 야당 노선을 견지해온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등이다. 새로운 진보 정당의 등장은 없었다. 그 결과 1987년 대선을 통해 형성된 정당체계는 흔히 “1958년 체제”의 연장 혹은 복원으로 해석된다(박상훈, 2009; 서복경, 2002).

“1987년 정당체계”를 굳이 195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연관성을 찾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네 개 정당의 연원을 추적하면 권위주의 정부 계승 정당과 권위주의 정부 하 보수 야당의 뿌리는 결국 1958년 제4대 총선 당시 등장한 여야 정당 즉 자유당과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민주당과 평민당 등 야당의 두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사실상 정당정치를 시작했다. 또 민정당과 신공화당 등 두 권위주의 계승 정당의 경우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거치며 새로 등장했지만 자유당과 독재적 기원을 함께 하며 자유당을 사실상 대체해왔다는 점에서 한 뿌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958년 수립된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는 진보 정당을 배제한 채 보수 정당들로만 구성된 보수 독점 체계이다. 이승만 정부는 제4대 총선을 실시하기 직전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조봉암 진보당 당수를 간첩 등의 혐의로 전격적으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해 버렸다. 정당의 정체성을 보수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대적인 남북대결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세력만 살아남게 된 것이다. 1987년 대선을 거치며 살아남은 정당들 역시 반공이데올로기를 위협하지 않는 보수 정당들뿐이었다.

셋째, “1958년 체제”의 보수 양당제를 유지한 균열구조는 ‘민주 대 반민

주'였다. 진보 정당을 인위적으로 없앤 뒤 자유당과 민주당이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행을 둘러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뿐이었다. “1987년 체제”의 정당들은 1958년부터 지속되어온 이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를 그대로 승계했다. 보수 우위 정당체계 하에서 여야 간의 경쟁은 정상적인 이념구조의 정당체계보다 훨씬 격렬했다. 제한된 이데올로기 공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상호 차별성을 갖기 위해 좁은 차이도 크게 부각해야 하는데다, 유권자 역시 압축적으로 몰려 있어 이데올로기 공간에서 정당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지기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²⁾

넷째, “1958년 체제”가 반공이라는 기형적 토대 위에 형성된 보수 정당들만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와 괴리된 정당체계를 이루었다. 당시 핵심적인 갈등구조였던 친일과 청산이나 토지개혁, 그리고 분단체제 해결 등의 과제는 정당체계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그 결과 토지개혁을 제외한 친일과와 분단 문제는 현재까지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1987년 체제”하의 보수 정당들 역시 시민사회와 유리(流離)된 채 존재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노동과 자본의 균열, 분단 문제 등은 또 다시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었다.

“1987년 체제”에서 “1958년 체제”와 달리 새롭게 등장한 것도 있다. 바로 지역주의 정당체계이다. 한국에서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로 그 연원을 추적할 수 있다.¹³⁾ 하지만 이 당시 지역 균열 구조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균열구조가 여야 균열과 함께 압도하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다 1987년 정당지도자들의 분화와 함께 가장 극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표 3-1)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를 형성한 정초 선거로 불리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지역별 득표 결과이다.

12) 서복경은 지역주의 정당체계 하에서 한국정당체계의 항상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여야 간의 유달리 격렬한 경쟁의 원인을 바로 이 협애한 이데올로기 구조, 즉 압축적인 유권자 배열에서 찾고 있다(서복경, 2002: 64-74).

13) 김만홍(1995)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최초로 동원된 것은 1967년 대통령선거에서이다. 당시 박정희 후보가 지역 균열을 통해 영남지역의 물표를 얻기 시작했고, 4년 뒤인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영남 및 호남과 각각 제휴해 지역균열을 정치적으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1960-70년대 지역균열의 강도나 배경 등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영호남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처음 등장한 시점을 이때로 보는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표 3-1) 제13대 대통령선거 결과 (단위: %)

구분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기타
전국	36.6	28.0	27.0	8.1	0.2
서울	30.0	29.1	32.6	8.2	0.1
경기	41.4	27.5	22.3	8.5	0.2
인천	39.4	30.0	21.3	9.2	0.1
부산	32.1	56.0	9.1	2.6	0.2
경남	41.2	51.3	4.5	2.7	0.4
대구	70.7	24.3	2.6	2.1	0.3
경북	66.4	28.2	2.4	2.6	0.5
광주	4.8	0.5	94.4	0.2	0.0
전남	8.2	1.2	90.3	0.3	0.0
전북	13.1	1.5	83.5	0.8	0.1
충남	26.2	16.1	12.4	45.0	0.3
충북	46.9	28.2	11.0	13.5	0.4
강원	59.3	26.1	8.8	5.4	0.3
제주	49.8	26.8	18.6	4.5	0.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이 결과를 보면 1987년 대선이 철저히 지역주의로 특징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대구/경북에서 70%에 달하는 몰표를 얻은 것을 비롯해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가 부산/경남에서 54%,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가 전라남북도에서 88%,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후보가 충청남도에서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네 후보는 후보 본인들의 출신 지역에서 배타적인 지지를 얻어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비경쟁구도를 형성한 반면, 수도권 같은 중립지대에서는 경합을 하는 대표적인 지역균열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선 결과는 이듬해인 1988년에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표 3-2)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단위: %)

구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기타
전국	34.0	23.8	19.3	15.6	7.4
수도권	33.3	24.9	19.0	16.6	6.3
부산/경남	36.2	45.6	1.5	8.6	8.3
대구/경북	49.3	26.5	0.8	14.6	8.6
호남	20.5	0.8	72.6	1.5	4.6
충청	36.9	15.5	2.1	39.9	3.1
강원/제주	39.8	24.4	5.0	11.8	19.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표 3-2)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민정당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50%에 달하는 득표를 했고, 통일민주당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46%, 평민당은 호남 지역에서 73%, 신공화당은 충청권에서 40%의 득표를 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비교적 고른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합 양상을 보였다. 총 의석수는 민정당이 125석으로 42%, 통일민주당 70석(23.4%), 평민당 59석(19.7%), 신공화당 35석(11.7%)이었다. 지역주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13대 대선과 제13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결과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 후보와 평민당의 지지율이다. 김대중 후보는 제13대 대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88.4%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수도권에서 27.0%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10%대나 그 미만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평민당 역시 호남 지역에서 얻은 72.6%와 수도권에서 얻은 19.0%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5% 미만의 엄청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정당이나 통일민주당의 경우 지역적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슷한 비교적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표면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후보와 평민당의 지역편중적인 득표가 두드러진 셈이다.

이는 곧 지역주의의 문제가 다름 아닌 호남의 문제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즉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불균형 발전 전략이 선택되면서 지역개발과 국가엘리트 충원이라는 두 측면에서 호남이 지속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호남 지역의 소외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결과 민주화 이후 처음 실시된 두 선거에서 김대중과 평민당에 대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몰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사회의 지역균열 구조는 정치적 중심을 형성해온 영남과 소외되어 있던 호남 간에 일종의 중심-주변부(core-periphery) 간의 구조적 대립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⁴⁾

요컨대 민주화 이후 처음 치러진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이라는 두 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가 자리를 잡았고, 이 체계가 향후 지속되면서 선거결과를 좌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당시 ‘재야 운동권’으로 대표되던 진보 진영은 19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와 비판적 지지, 독자후보론 등을 내세우는 세 개의 세력으로 갈라지며 김영삼과 김대중, 백기완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등 단일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또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독자적으로 한겨레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 민중의 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세력으로 갈라지는 등 분열을 거듭했다. 진보 진영의 분열은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상당수의 재야인사들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든 정당으로 흡수되었다. 진보 진영이 자력으로 설 수 있는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2. 보수 편향 정당체계의 형성 배경

한국사회를 30여 년 동안 지배한 군사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

14)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에 대해 이와 같이 경제적 불균등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시도로는 김만홍(1997), 손호철(1993), 최장집(1991; 1996) 등이 있다. 강원택(2003)과 김수진(2008) 등도 대체로 이 논의에 동의하고 있다. 지역균열 구조의 생성과 심화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한 글로는 박찬욱(2005: 84-87) 참고.

을 한 6월 민주 항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거친 뒤에도 왜 한국 정당체계에 서는 권위주의를 계승한 보수 정당들만 다시 등장했을까? 기존의 보수 정당들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 정당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분단 이후 억압되었던 노동정치의 활성화와 계급정치가 등장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왜 서구 혹은 해방 직후와 같이 진보와 보수 정당으로 구성된 이념 정당 체계가 형성되지 못했을까?

(1) 1980년대 말 한국사회 균열구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당시 한국사회의 균열구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과거 군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 대 반민주’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균열이 반공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억눌려온 만큼 민주화가 시작된 1980년대 말에 정치적으로 동원 가능한 균열구조는 비교적 다양했다.

먼저 사회경제적 균열 구조에서 나타나는 계급균열이다. 한국사회의 산업혁명이나 다름이 없는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대하고 계급균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강원택, 2011; 김수진, 2008; 박상훈, 2009; 서복경, 2002; 최장집, 2002 등). 1970년대 초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과 자본 혹은 노동과 국가 간의 대결은, 1970년대 말 이후 노동운동이 조직화되고 이념적 급진성이 강화되면서 특히 심화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마르크스주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노동자와 농민 등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사회변혁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까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계급균열은 우리 사회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아직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표출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산업화 과정은 계급균열 이외에 지역균열이라는 유산도 낳았다. 군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지속된 지역 간 불균등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해 영호남 지역 간의 지역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지역균열 구조가 처음 정치적으로 동원된 것은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이다(김만흠, 1995). 당시 박정희 후보가 지역균열을 통해 영남지역의 몰표를 얻기 시작했고, 4년 뒤인 1971년 대선에서 박정

회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영남 및 호남 유권자와 각각 제휴해 지역균열을 동원했다.

지역균열은 권위주의 정부가 추진한 호남지역에 대한 “배제의 정치”(최장집, 2005)와 맞물리면서 심화되었다. 호남 지역에 대해 인위적이고 차별적인 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정치와 관료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노골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호남 지역의 문제가 형성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겪으며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여기에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1979년 부마항쟁과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의 출신 지역 등으로 인해 야기된 부산/경남 지역의 문제도 지역균열의 또 다른 축을 형성했다(박상훈, 2009).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되어온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이다.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는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부가 진보정당에 대한 숙청을 완수하고 보수정당 독점 구조를 형성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뒤, 박정희, 전두환 두 군사정부를 통해 헌정이 유린되는 경험을 겪으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문제를 쟁점으로 1987년 6월 항쟁이 폭발하면서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6월 항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비민주적인 제도와 법률 정리 등 숙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밖에 남북분단 이후 형성돼 냉전 반공이데올로기의 진원지 역할을 하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 통치에 정당성을 제공한 민족균열 내지 체제균열 등이 민주화 이행 당시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균열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균열 가운데 어떤 것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것인지는 정치세력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모든 형태의 정치조직은 특정 종류의 갈등은 이용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갈등은 억압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조직은 편향성의 동원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슈들은 정치 영역 내로 들어오도록 조직되지만, 다른 이슈들은 정치 영역 밖에 머물도록 조직된다”(샤츠슈나이더, 2008: 128)는 샤츠슈나이더의 언급이 그대로 한국사회에도 적용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적이면서 절묘하고,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진 정치 전략이 바로 이 “편향성의 동원”이었다.

(2) 보수 정당들 만의 협약의 정치

한국 사회에서 “편향성의 동원”은 또 다른 “배제(排除)의 정치”로 나타났다. 즉 기존 보수 정당들의 암묵적 합의 하에 두터운 정치적 관문을 쌓고 특정한 정치균열만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저지한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공존해온 보수 야당과 진보적 성향의 소위 ‘재야 운동권’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압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결과이다(박상훈, 2009; 최장집, 2002 등). 하지만 민주화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과정에서의 정치 지형은 다시 권위주의 시대와 똑같이 뒤바뀌게 된다. 즉 냉전 반공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구현하고 있는 권위주의 정치세력과 보수 야당만이 협상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 보수 정당은 체제균열에서 비롯되는 반공이데올로기 이외에도 단순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로 대표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높은 정치적 관문을 쌓고 재야 운동권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았다. 즉 립셋과 로칸이 지적한 네 가지 정치적 관문 중 대표성과 다수결의 관문을 높여 새로운 세력의 의회 진입을 막았다. 재야 운동권의 배제는 곧 이들이 대표해온 기층 민중 세력을 배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바람에 6월 민주 항쟁 이후 7-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노동계 등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정당체계의 구성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전면에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정당체계의 카르텔 정당적인 성격은 이미 이때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권위주의 시대 계승 정당들이 일부 카리스마적인 지역 정치지도자들에 의존해 새로운 정당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¹⁵⁾

또 여야 보수정당들은 사회경제적 이해집단들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면서 스스로를 각계각층의 이해를 모두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포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이 서구와 달리 처음부터 포괄정당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

15) 한국 정당들의 카르텔 정당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김수진(2008), 서복경(2002), 은민수(2003), 장훈(2010), 최장집(2002), Kwak(2003) 등 참고.

하지만 보수 정당들의 포괄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을 다양하게 대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보니, 보수 정당들과 시민사회 간의 연계가 취약하고, 이들 정당은 조직적으로도 허약한 속성을 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조응하지 못하는 현상은 이후 시민사회와 정당 내 계파의 움직임 등에 따라 보수 정당 체계가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불안정한 체제가 되는 배경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들이 이념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오로지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반복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보수 정당들이 재야 운동권이 대표해온 노동자 등 기층 민중세력을 배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균열구조는 보다 간명해졌다. 우선 재야 운동권으로 상징되는 세력이 대표하고 있던 민족균열과 계급균열을 전략적 동원 대상으로 철저히 배제해 버렸다. 또 권위주의 정부를 계승한 정당들을 “협약의 정치” (최장집, 2002)의 상대자로 인정하면서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 역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체제균열 즉 반공이데올로기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균열만을 동원한 것이다.

재야 운동권은 이와 달리 보수정당들이 동원하기를 거부한 균열구조의 정치적 활성화를 추구했다. 5공 청산으로 상징되는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 하에서의 투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보수 우위의 정당체계에 수용되지 못한 통일운동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급진화하게 된다. 1987

16) 한국 정당들의 포괄정당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곽진영(1998), 서복경(2002), 은민수(2003), 장훈(2010) 등 참고. 우리나라 정당들의 포괄정당적인 성격은 계급성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서구에서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서구와는 전혀 다르다. 즉 서구에서 포괄정당은 계급균열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균열의 경계가 희석되면서 기존 계급대중 정당들이 계급성을 탈각하며 진행된 데 비해, 우리는 처음부터 계급성을 강제적으로 배제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념정당체계로의 재편 과정을 고려할 때 서구와 전혀 반대되는 “뒤바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7)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정치제도와 조직적 측면에서 분석한 글로는 곽진영(2009), 김용호(2001) 등 참고. 곽진영은 한국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당내 파벌·계파의 존재, 선거전문가 정당의 성격 등에서 찾고 있다. 김용호는 한국 정당의 정책적, 이념적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배경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심지연(2004a)은 한국정당의 술한 이합집산을 제도보다는 “위기와 통합”이라는 정치지도자들의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한다. 즉 통합을 한 세력들은 권력쟁취에 성공한 반면 분열을 한 세력들은 권력쟁취에 실패하면서,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이 없는 정당들이 오로지 권력쟁취를 위해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는 것이다.

년 6월 항쟁을 통해 일시적으로 결합되었던 운동권과 제도권 야당이 다시 분리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¹⁸⁾

(3) 한국사회의 예외성¹⁹⁾

그렇다면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민족균열과 계급균열 구조를 전략적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재야 운동권의 정치적 노력은 왜 실패했을까? 서구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함께 이루어진 계급정치는 왜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일까?

우선 서구에서 20세기 초반 노동자 정당이 뿌리를 내리게 된 데에는 그에 맞는 상황적 조건이 있었다(김수진, 2008: 77-78). 첫째, 19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들, 특히 반(半)숙련 노동자와 미(未)숙련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이들이 20세기 초 노동운동의 주력을 형성하게 된다. 즉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의 수립을 위한 주체세력이 형성되었다.

둘째, 세계 제1차 대전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엄청난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만들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갈망하게 만들었다. 특히 전쟁 기간 전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면서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지고, 노동세력이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었다.²⁰⁾

셋째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공산주의가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 등장했고, 혁명을 통한 사회의 변혁이 가능하다는 급진적인 계급의식이 노동자 대중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넷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산업화 과정에서 강력한 노동운동과 함께 보통선거권의 획득을 위한 지난(至難)한 투쟁이 있었다. 선거권을 받기 위한 투쟁

18) 최장집(2002)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이행이 재야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동에 의한 민주화”와 이를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는 “협약에 의한 민주화”가 결합되거나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 “예외성”이라는 표현은 1996년 발행된 립셋(Lipset, 1996)의 책 제목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에서 인용한 말이다. 국문 번역서의 제목은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로 되어 있다.

20)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정당체계가 사회주의 정당 대 반 사회주의 정당 간의 경쟁구도를 형성한 과정에 대해서는 김수진(2001) 참고.

은 곧 노동자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한 투쟁이었고, 이 투쟁은 자연스럽게 노동자 정당 운동으로 귀결되었다. 50여 년에 걸친 보통선거권 쟁취 투쟁을 하면서 노동자 정당 건설 투쟁과 일반 민주주의의 확대 투쟁이 사실상 동일시된 것이었다.

서구에서 노동자 정당의 성공을 위한 위와 같은 주·객관적 조건이 20세기 초 형성된 것과 달리,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노동의 정치세력화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놓여 있었다.

우선, 노동자 정당 수립을 위한 주체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열악한 조건이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지만, 해방과 분단 이후 수 십 년 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작업장 수준에서조차 철저히 탄압되었다. 그 결과 1987년 당시 전체 고용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동자 정당 수립에 필요한 주체세력이 거의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의 정치적 시민권이 제도적으로 복원되지 못했다. 노동자 정당의 주력집단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을 세우기 위한 투쟁의 전면에서 나서는 데 직접적인 제한을 갖게 된 것이다. 노동의 정치적 시민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 외환위기라는 해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겪은 뒤에야 정치적 협상 차원에서 허용되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사용자 측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노동조합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셋째, 위의 두 조건에 따라 1970년대부터 진행된 노동자들의 투쟁수준도 작업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주의적 한계를 갖게 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심세력은 학생과 교육받은 도시중산층, 특히 지식인 집단이 배후 지지 세력의 역할을 했다(최장집, 2002: 122-124). 서구와 같이 자유주의 부르주아나 노동자 세력이 민주화 운동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신중간계급이 중심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세력의 핵심적인 투쟁 이슈도 개인의 자유나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적 요구(자유주의 부르주아의 이슈)나 노동문제와 같은 계급정치의 문제(노동자 세력의 이슈)가 아니라 직선제

쟁취나 독재타도와 같은 일반 민주주의의 실천 문제가 된 것이다.

넷째, 서구에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이 노동의 정치세력화에 큰 기여를 한 반면, 한국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즉 권위주의 정권들은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남북 대결이 최고조로 치닫게 된 상황을 이용해 반공이데올로기와 반북 대결 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적 동원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서 체제균열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균열구조로 등장하고 계급균열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억압했다. 분리 독립 문제를 둘러싼 민족균열이 계급균열을 압도해버림으로써 계급정당이 출현하지 못한 아일랜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진, 2008: 81-85).

다섯째, 한국에서는 보통선거권이 산업화에 돌입하기 훨씬 전인 해방 직후에 이미 주어졌다. 이로 인해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정체성 확립이나 노동자 정당 건설과 연결되지 못했다. 수십 년에 걸친 권위주의 정부를 겪으면서 시민사회는 보수정당들에 의해 선점되었고, 노동자들은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보수 정당들에 의한 정치적 동원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무렵, 이들은 이미 보수정당의 포로가 된 상황이었다. 계급정당이 출현하지 못한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²¹⁾

여섯째, 여야 보수 정당들만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제도이다. 결선투표 없는 단순다수제로 대표되는 대통령선거 제도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로 대표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존 정당 이외에 새로운 정당의 진입 자체를 극히 제한했다. 특히 보수 정당들이 이후 지역균열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진보 정당의 진입은 원천 봉쇄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자 정당이 들어서는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았다. 이로 인해 1987년 민주항쟁을 겪은 뒤에도 노동자계급 정당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민주화 이후 1987년을 제외하면 대선에서 매번 후보를 냈지만 1%대의 저조한 득표에 그쳤다.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21) 미국에서 계급정당이 등장하지 못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분석으로는 Lipset(1996), 김수진(2008), 강명세(2006) 등 참고.

3.89%의 득표를 한 것이 최고 수준이었다. 또 총선에서도 매년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기존 정당체계에 도전을 했지만 2004년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결국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보수 정당들이 정치사회를 독점하는 구조가 반복된 것이다.

3.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 배경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민족균열의 강고함 속에 계급균열의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보수 정당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균열구조는 ‘민주 대 반민주’ 균열과 지역균열뿐이었다.

그런데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를 대표하는 야권에서 이중적인 분열이 진행되었다. 즉 민주화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 야당이 재야 운동권을 배제한 데 이어 또 다시 보수 야당 간의 분열과 배제가 이루어졌다.

보수 야당을 대표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각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만들어 별도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지층도 갈리게 되었다. 즉 김영삼이 부산, 김대중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보니, 대구/경북 출신의 노태우와 충청 출신의 김종필 간의 지역별 4자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독재심판이라는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도의 전선이 불분명해지고, 정치지도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른 대결 구도만 부각되었다.

이 시기 지역균열은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도와 일정 부분 중첩되면서 그 하위체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지역균열 구조의 최초 형성 원인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지역 간 불균등 발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때, 지역균열의 해소는 일차적으로 호남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도 하에서 호남에 대한 “배제의 정치”라는 군사 정부의 비민주적 잔재를 청산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야권이 이중의 분화과정을 거치면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갑

22) 김만홍(1995)에 따르면 지역균열은 1967년 대선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971년 대선에서 확립되었다. 필자는 당시 호남을 차별하는 지역균열 구조가 최초로 등장했다는 분석은 인정하지만, 이후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 속에서 지역균열 구조가 사실상 잠복했다는 점에서 지역균열 구조의 본격적인 확립은 “1987년 체제”에 이르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자기 해체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여야 정당들은 각자의 지역기반에서 최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 지역주의 담론이 확산되었다. 물론 이 시기 집권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주의 담론을 의도적으로 전파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3김으로 대표되는 세 야당도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적극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²³⁾

여야 보수정당들은 당시 “계층적·직능적·기능적 이익과 균열을 따라 대중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구정당체제의 틀 속에서 지역을 수직적으로 분획함으로써 국지화된 갈등 축을 따라 대중을 동원” (최장집, 2003: 107)했다. 이에 따라 “담합정당이 ‘하향식 균열모색정당’의 성격을 띤다. 정치사회를 분할장악한 채 시민사회의 이익과 균열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정치 균열을 창출해서 시민사회에 하향부과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를 ‘식민화’” (김수진, 2008: 105)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이 과정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다. 1987년과 1988년 두 선거를 거친 뒤에도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가 유효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노태우 정부에 대항해 5공 청산을 위한 입법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과 함께 기존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 하에서 ‘민주’를 대표해오던 김영삼이 1990년 노태우,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을 만들면서 보수 정당 사이에서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즉 김영삼이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권을 위해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를 버리고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스스로 선택하면서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갈등의 치환” (샤츠슈나이더, 2008)이 완성된 것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한국사회 균열구조는 다음과 같이 재정립된다. 기존에 권위주의 정부를 한편으로 하고, 보수 야당과 재야 운동권을 다른 한편으로 하던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는, 재야 운동권 대 제도 정치권(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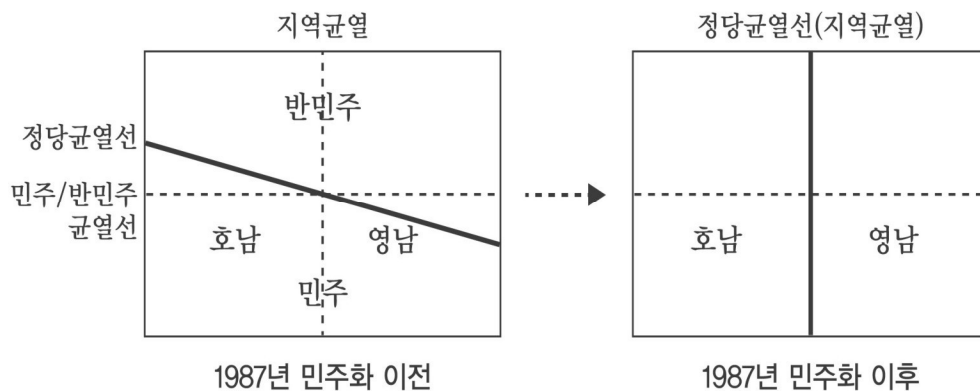
23) 손호철(1993)은 한국사회의 지역균열이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치권력을 유지해온 정치권 특히 ‘1노3김’의 전략적인 동원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야 보수정당) 간의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보수적인 여야 정당들 간에는 지역 균열이 새로운 정당균열선으로 자리 잡게 된다.²⁴⁾ 이후 재야 운동권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제도권의 보수 야당에 개별적으로 흡수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는 급속도로 약화된다. 결국 지역균열만 남은 것이다.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는 2000년대 들어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새롭게 등장하지만 그 형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균열구조와 맞물려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상의 분석에 기반을 뒀 1987년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과정을 정당체계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재편성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균열이 잠복한 가운데 정당 균열선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수평적 균열선을 따라 비스듬하게 횡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1987년과 1988년 두 차례의 중대선거와 1990년 3당 합당을 거치면서 민주 대 반민주 균열선이 잠복하고, 정당균열선이 오로지 지역균열이라는 수직축 하나만을 따라 가장 극적이고 급속하게 재편된 것이다. 이후 1990년대에 진행된 선거는 새롭게 정립된 정당체계의 연장선에서 치러졌을 뿐이다.

24) 손호철(2000)에 따르면 “1987년 체제”의 형성으로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형성한 “1961년 체제”가 비로소 해체되었다. 특히 보수 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세력이 1990년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시민사회가 수구 대 자유주의 대 민중세력으로 3분되었다. 갈등과 균열구조 또한 이에 조응해 환경과 여성, 교육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제 2 절 “1987년 체제”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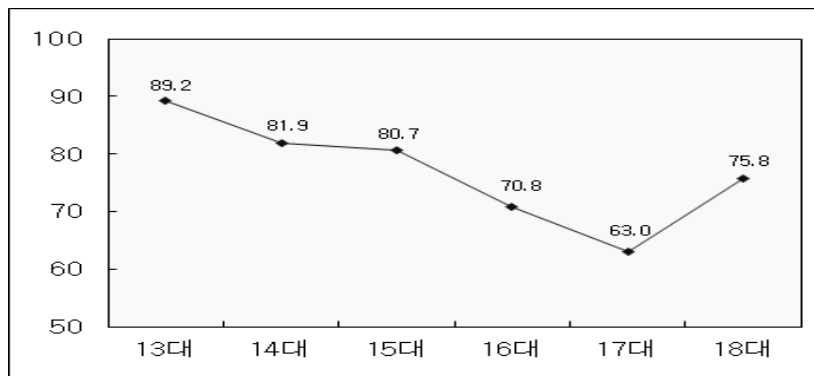
1. 기존 정당체계에 대한 유권자의 외면

(1)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민사회의 균열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균열을 시민사회에 하향(下向) 부과(賦課)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적 기제로서 정당의 기본적인 대표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1987년/1988년 중대선거 이후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가 속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에 띄는 정도로 급속히 하락한 투표 참여율이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89.2%를 기록한 투표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80.7%,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63.0%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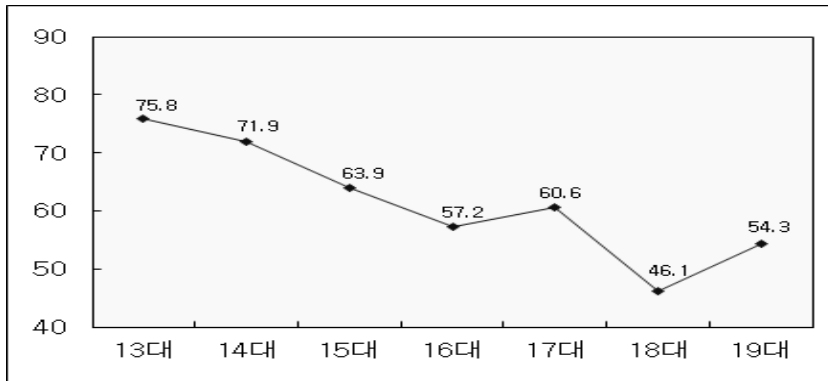
(그림 3-2)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의 하락은 좀 더 심각한 수준이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75.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57.2%,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절반에 미달하는 46.1%로 역대 최하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3-3) 역대 총선 투표율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정치 즉 “1987년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지역주의 구도가 크게 완화되고 세대와 이념에 따른 정당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된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4년 전 총선에 비해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또 2012년에 나란히 실시된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제18대 대선에서는 그 전 대선보다 무려 12.8%포인트가 상승했고, 제19대 총선에서는 그 전보다 8.2%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이는 투표율이 그동안 충분히 하락한 데 따른 반사효과일 수도 있지만, 이 세 차례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이념균열과 함께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 간의 세대균열이 가장 두드러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에 불신을 갖고 있던 젊은 층의 고학력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면서 투표율이 반등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실시된 선거 중 이념대결 구도가 완화된 선거 즉 지역균열 구도가 좀 더 기승을 부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그 전 선거보다 무려 7.8%포인트와 14.5%포인트가 다시 떨어졌다.

(2) 무당파 유권자의 급증

투표율의 급락과 함께 무당파(無黨派) 유권자의 증가 역시 뚜렷한 추세이다. 여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이후 무당파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2년 22.7%에서 시작해 1996년 총선에서 41.9%, 1998년 지방선거에서는 52.1%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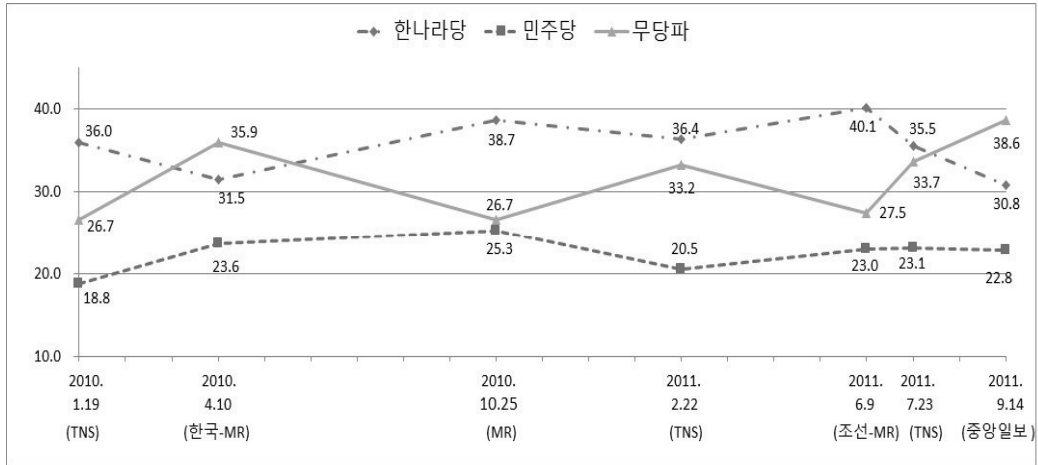
(표 3-3) 무당파 유권자 현황 (단위: %)

시기	무당파	시기	무당파
1992 대선	22.7	2004 총선	60.0
1996 총선	41.9	2006 지방선거	52.7
1997 대선	36.9	2007 대선	27.0
1998 지방선거	52.1	2008 총선	59.5
2000 총선	72.7	2010 지방선거	51.8
2002 대선	40.5	2012 총선	36.0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www.ksdc.re.kr)

2000년대 들어서도 무당파의 증가 현상은 지속되었다. 2000년 총선에서 72.7%로 최고를 기록한 뒤 다소 비율이 떨어졌지만 2004년 총선에서 60.0%, 2008년 총선에서 59.5% 등 정당지지율을 상회(上廻)하고 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당파 유권자는 2010년 1월 26.7%에서 출발해 2011년 9월 38.6%로 정당 지지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2010년~2011년 무당파 유권자 현황



출처: 채진원(2012: 318)

무당파 유권자의 증대는 투표율 하락과 함께 서구에서 정당과 유권자 간의 일체감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정당쇠퇴론의 대표적인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Dalton, 1984; Dalton, Beck and Flanagan, 1984 등). 특히 기존 정당이 계급성에서 점차 탈피하고 포괄정당화 현상을 보이면서 정당 간 차별성이 약화됨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투표참여율의 극적인 하락과 무당파 유권자의 상대적인 증대는 기존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과 실망감이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⁵⁾

무엇보다 보수 우위 정당체제로 인해 이념적으로 편중된 협소한 이데올로기 구조, 즉 이데올로기의 우측 공간에 압축된 유권자 배열에 따라 정당 간의 경쟁이 유달리 치열해지면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정쟁이 극심해졌다. 특히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제소 등을 남발하며 국회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politics by other means)(Ginsberg and Shefter, 1990)가 만연하였다.²⁶⁾ 이

25) 채진원(2012)에 따르면 무당파 유권자의 상당수가 젊은 층과 고학력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정치변화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진원은 또 이들 무당파 유권자의 상당수가 중도 성향을 띠고 있으며 기존의 이념적 대결구도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 정치에서 이념적 대결구도가 제대로 정립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이념대결 구도에서의 이탈자보다는 기존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로부터의 이탈자로 해석한다.

로 인해 기존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감은 더욱 증폭되는 효과를 낳았고 무당파층은 증가되었다.

또 1990년대 이후 기존 지역주의 정당들에 대한 도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제3당, 즉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나 박찬중의 신정당, 이인제의 국민신당 등이 지속적으로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들이 이름을 바꿔가며 술하게 이합집산하는 모습 등도 기존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역주의 정당-유권자 연합의 점진적 해체

(1) 영남 지역주의의 약화

지역주의 쇠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영남 지역에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했던 정당에 대한 지지의 확대이다. 이는 1987년부터 시작된 6차례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명확해진다.

먼저 1987년 제13대 대선부터 1997년 제15대 대선까지 김대중 후보의 영남 지역 득표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3-6). 김대중 후보는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6.9%, 대구/경북 지역에서 불과 2.5%를 얻었다.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10.9%, 대구/경북 지역에서 8.9%의 득표를 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13.4%, 대구/경북 지역에서 13.1%를 얻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영남권에서 김대중 후보가 득표한 최대치는 13.4%에 불과해, 영남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대선에서 나타난 득표결과

26) 미국 대통령과 의회 간의 무한대결이 낳은 권력 확장 경쟁과 이를 통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에 대해서는 Ginsberg and Shefter(1990) 참고.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행정부와 의회 권력 간의 대립이 낳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장집(2005)과 안병진(2004) 참고. 노무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커진 것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으로써 정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상실한 보수 기득권 세력이 저항의 마지막 보루로서 정치 영역 밖의 사법부 권력에 의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범치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선 박찬표(2007a), 오승용(2009a) 등 참고.

총선에서 김대중 정당에 대한 지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3-4) 김대중 후보에 대한 영남권의 지지 (단위: %)

구분	제13대 대선	제14대 대선	제15대 대선
부산/경남 지역	6.9	10.9	13.4
대구/경북 지역	2.5	8.9	13.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하지만 2002년 제16대 대선을 계기로 영남권에서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영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부터 영남 지역 유권자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민주당 출신의 노무현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0% 안팎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0%대의 적지 않은 득표를 하며 영남 지역 공약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선거결과는 2004년 총선에 그대로 반영되어 지역구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1%대의 안정적인 득표를 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2%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영남 지역 후보들 중에 노무현 후보만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인물이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올린 셈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지지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다시 회복세를 타서 2012년 대선에서는 호남 정당으로서 영남권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 즉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부산/울산/경남에서 40% 가까운 득표를 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0% 가까운 표를 얻는 등 전반적으로 영남권에서 30%대의 안정적인 기록을 세웠다.

(표 3-5) 호남 정당 및 그 후보에 대한 영남권의 지지 (단위: %)

구분	2002대선 노무현	2004총선 열린우리당	2007대선 정동영	2008총선 민주당	2012총선 민주당	2012대선 문재인
대구	18.7	22.3	6.0	4.9	16.2	19.5
경북	21.7	23.0	6.8	5.6	13.4	18.6
부산	29.9	33.7	13.5	12.7	31.8	39.9
울산	35.3	31.2	13.6	9.3	25.2	39.8
경남	27.1	31.7	12.4	10.5	25.6	36.3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전반적으로 호남 지지기반 정당과 그 후보에 대한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지지가 2002년 이후 대폭 올라갔다. 물론 과반수 유권자들이 여전히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그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하지만 영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과거와 달라진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호남 정당이나 호남 정당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 선거의 경우, 호남 정당이 진보적 의제를 설정하여 이념균열 구도를 강력히 가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지역 균열과 이념균열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반면 2007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부산/경남 지역에서 13.0%, 대구/경북 지역에서 6.4%만 얻었다. 이는 1997년 김대중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올린 득표율에도 못 미치는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정동영 후보의 출신지가 호남이라서 영남에서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의 경우 2002년 이후 선거 중에 이념균열 구도가 가장 완화된 선거였다(강원택, 2009a; 김민전, 2008; 박찬욱 외, 2008; 박찬욱, 2009; 이내영, 2009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분위기와 함께 민주당이 경제 문제와 관련된 진보적인 의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경제적 의제 즉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회고(回顧)적 투표” 즉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투표행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가상준, 2008; 강원택, 2010; 권혁용, 2008; 이갑윤, 2008; 이재철, 2008 등).

27)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정동영 후보가 단순히 호남 정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남 지역의 득표율이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정동영 후보는 2007년 대선에서 지역균열 이외에 이념균열을 통해 영남 지역의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를 동원하는 데 대체로 실패했다. 반면 영남 정당의 이명박 후보의 경우 유권자들의 보수화 분위기와 자신의 ‘성공한 CEO’ 이미지를 결합해 호남 지역의 보수적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기반을 넓혀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자세한 분석을 할 것이다.

(2) 호남 지역주의의 변화

호남 지역에서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당과 그 후보의 지지율에도 최근 의미심장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제16대 대선까지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김대중과 그의 정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거의 불변이었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88.4%, 제14대 대선에서는 91.9%, 제 15대 대선에서도 94.4%로, 대선 때마다 득표율이 올라갔다. 이 기록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93.2%의 득표를 하는 데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영남권 정당 후보의 득표율은 한 자리수를 넘지 못했다.

(표 3-6) 역대 대선에서 호남 지역 지지율 (단위: %)

구분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호남 정당	88.4 (김대중)	91.9 (김대중)	94.4 (김대중)	93.2 (노무현)	80.0 (정동영)	88.5 (문재인)
영남 정당	9.9 (노태우) 1.2 (김영삼)	4.3 (김영삼)	3.3 (이회창)	4.9 (이회창)	9.0 (이명박) 3.6 (이회창)	10.5 (박근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그런데 최근 호남 지역의 투표형태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민주당 출신 정동영 후보가 80.0%의 득표율에 그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5차례의 대선 가운데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9.0%로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올렸던 9.9%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회창 후보가 올린 지지율 3.6%와 합하면 12.6%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

이 변화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987년 체제” 수립 이후 처음으로 영남 정당 후보로서 호남 지역에서 두 자릿수를 득표하는 데 성공했다. 2012년 대선이 2002년과 비슷한 구도 하에서 진보 대 보수 후보들 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5년 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호남 지역을 떠나 호남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호남지역 출신까지 포함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훨씬 크다(표 3-7). 동아시아연구원(EAI)이 SBS·중앙일보와 함께 2007년 대선 직후 실시한 제6차 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동영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는 80%를 얻었지만 비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까지 포함하면 59.2%를 얻는데 그쳤다. 또 이회창 후보도 충청 지역에서는 29.0%의 지지를 얻은 데 비해 비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충청 출신 유권자들까지 포함하면 18.7%로 지지율이 줄었다.

(표 3-7) 제17대 대선 유권자의 출신지별 지지행태 (단위: %)

구분	정동영 민주당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서울	12.8	52.6	9.1
인천/경기	16.7	53.6	8.6
대전/충청	13.8	49.8(37.1)	18.7(29.0)
광주/전라	59.2(80.0)	19.0(9.0)	3.4
대구/경북	7.3	70.1(71.1)	10.5
부산/울산/경남	7.3	56.1	14.0
제주/강원	20.7	42.7	10.0

()는 지역별 지지율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선 제6차 패널조사
(2007년 12월 20일~23일)

반면 이명박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는 9.0%에 불과한 지지율을 보였지만, 호남 출신 유권자 전체로부터는 19.0%라는 지지를 기록했다. 또 이명박 후보는 충청지역에서는 37.1%의 지지율을 올렸지만, 충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충청 출신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운 49.8%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나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들이 비슷한 지지율을 보낸 것과 대조적이다. 즉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 사는 호남과 충청 출신 유권자들이 영남 출신들과 달리 고향의 유권자들보다 이명박 후보를 훨씬 지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18대 대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한국선거학회와 함께 선거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호남 지역 거주자들로부터는 8.3%에 불과한 지지를 받았지만, 호남 출신 유권자들로부터는 무려 20.2%의 지지를 얻었다(표 3-8). 이는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는 89.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호남 출신들로부터는 78.3% 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기존의 일방적인 민주당 지지에서 상당 부분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다른 지역에서는 거주지와 출신지 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²⁸⁾

(표 3-8) 제18대 대선 유권자의 출신지별 지지행태 (단위: %)

28)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출신지와 거주지에 따른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차이는 강원택(2010: 제2장)이 2007년 대선 당시 동아시아연구원의 유권자 4차 패널조사(2007년 11월 25일~27일)를 토대로 호남 출신 유권자들과 호남 거주자들의 이념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강원택은 대북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호남 출신 유권자들과 호남 거주자들의 이념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호남 거주자들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이념적 분화가 출신지역보다 거주 지역에 따라 형성되고 있으며, 호남 거주자보다 호남 출신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등 기존 지역주의에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분	박근혜	문재인
서울	47.6	51.7
인천/경기	49.7	49.0
대전/충청	52.4	46.9
광주/전라	20.2(8.3)	78.3(89.8)
대구/경북	76.7	20.9
부산/울산/경남	63.2	36.8
강원/제주	54.5	45.5

()는 지역별 지지율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7 대선후조사

2002년과 2004년 선거가 대체로 영남 지역 유권자들이 영남 정당-영남 유권자 연합에서 이탈하는 선거였다면, 2007년 대선 이후에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 역시 호남 정당-호남 유권자 간의 연합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 특정 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경우 고향 유권자들과 동일한 투표행태를 보였던 동조화(同調化) 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 동조화 현상의 약화는 선거 시기에 지역주의 균열구도를 가로지르는 이념균열 구조가 가동할 경우 특히 위력을 보이고 있다. 즉 이념균열 구조가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점점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3) 충청 지역정당의 소멸

충청도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정당의 소멸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눈에 띄는 현상이다. 김종필로 대표되는 충청 지역 정당은 1987년 제13대 총선 이후 충청 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17대 총선을 계기로 충청 지역 정당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더니 2012년 제19대 총선 이후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사라져 버렸다.

(표 3-9) 자유민주연합의 충청 지역 지지율 (단위: %)

구분	1996년 제15대 총선	구분	2000년 제16대 총선
신한국당	27.9	한나라당	23.2
국민회의	8.4	민주당	30.0
자유민주연합	46.9	자유민주연합	34.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2000년 제16대 총선까지 충청 지역에서는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30%대 이상의 높은 득표를 했다. 김종필의 정치연합 노선에 따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지지율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자민련의 지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지지율이 10%대로 뚝 떨어지고, 의석수도 4석으로 크게 줄었다(표 3-12). 그 결과 김종필의 9선이 무산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다.²⁹⁾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지지율이 30%대까지 다시 오르며 의석수도 18석까지 회복했지만,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의석수도 5석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충청 지역 정당은 결국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표 3-10) 충청 지역 정당의 충청 지역 지지율 (단위: %)

구분	자유민주연합 2004년 총선	자유선진당 2008년 총선	자유선진당 2012년 총선
대전	14.5	34.4	17.9
충북	6.3	13.7	5.3
충남	23.8	37.8	20.4

29)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충청지역 유권자들이 충청 정당이 아니라 호남 정당에 높은 지지를 보낸 배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욱(2004)은 충청권의 지역주의가 특정 정치지도자와의 감정적 유대에서 실리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형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충청 지역에서도 영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청 정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시기의 선거를 살펴보면 이념균열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던 때임을 알 수 있다. 즉 2004년과 2012년 두 총선에서는 각각 탄핵과 복지라는 이념균열 이슈가 대두되면서 진보적인 유권자 동원이 강력히 이루어진 반면 지역균열 구조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반면 2008년 총선에서는 이념균열 구도가 상당히 희석되면서 지역주의 균열구도가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충청 정당이 충청 지역에서 이전의 지지율에 버금가는 득표율을 회복한 것이다.

충청 정당은 영남정당이나 호남정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정당이지만 단 한 번도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정당이다. 그래서 항상 다른 지역정당과 연합해 생존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지역균열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균열 구도가 등장하면서 가장 취약한 지역정당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먼저 소멸해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던 지역균열 구조가 갑자기 2000년대 이후에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념균열 구조가 2000년대 이후 등장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념균열 구조가 등장한 것인가? 영호남과 충청 등 각 지역 주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해서 지역을 매개로 공고히 형성되었던 정당-유권자 연합이 갑자기 이념균열선에 따라 재정렬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부터는 2000년대 이후 이념균열 구조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이념균열, 계급균열의 표출을 막아온 반공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큰 변화가 야기되면서 계급 혹은 계층균열이 표출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이념균열 구조의 등장 배경에는 이념균열 구조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라는 균열구조의 총체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또 바로 이런 이유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념균열 구조는 단순히 세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계층선을 따라 표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제 4 장 균열구조의 변화와 신중산층의 부상

“1987년 체제”의 형성과 함께 한국정당체계는 사실상 “동결”(凍結)되었다.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 이름을 바꾸거나 합당을 하는 등 이합집산은 있었지만, 1987년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보수 우위와 지역주의라는 두 특성이 모두 그대로 반복해서 출현했다. 마치 서구에서 1920년대 형성된 정당체계가 그대로 “동결”되어 1960년대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었다. 그 결과 지역주의 보수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은 국회에 진입할 수 없는 일종의 카르텔 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2000년대 이후 기존 정당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역주의의 쇠퇴(衰退) 현상이다. 또 보수독점 현상 역시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의 진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시기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기존 정당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 이 배경에는 2000년대를 전후해 전개된 국제적, 국내적 상황변화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놓여 있었다.

우선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붕괴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기존의 이념균열 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했다. 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당체계가 외면해왔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그에 따른 계층 간의 이념균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존의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상징하는 3김 즉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의 정치지도자들이 한꺼번에 퇴장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분출했다. 이와 같은 제반 현상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이후 정당체계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 1 절 이념균열 구조의 변화: 반공이데올로기의 퇴조

1. 국제적/국내적 환경의 변화

(1)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정상회담

한국사회 정당체제의 변화는 무엇보다 분단 이후 50년 넘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념균열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에서 찾을 수 있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현실 공산주의 국가가 소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1년 말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즉 구(舊)소련의 해체를 끝으로 더 이상 현실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5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냉전 체제가 급격히 무너진 것이다.

서구와 동구, 남미 등에서 마지막까지 존재하던 공산당들도 이름을 변경하고 계급혁명 노선을 폐기하는 등 새로운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완성되고 더 이상 급진적인 혁명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붕괴를 노리는 세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혹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이 공산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붕괴로 끝난 것이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나타난 가장 극적인 효과는 역설적이게도 반공이데올로기의 퇴조이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적대적 공존관계에서만 그 존재기반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반공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세계사는 공산주의 국가의 소멸과 함께 반공이데올로기의 퇴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퇴조 현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반북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존재했다. 남북 분단 이후 이승만 정부로부터 시작되는 남한의 권위주의 정부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존재를 빌미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시민사회의 균열구조를 억압하고 이를 정당화해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산업화를 계기를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계급균열과 이념균열 등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표출되지 못하도록 억압적 통제를 해왔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는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정치적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정치균열이나 정당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남한 내 이데올로기 구조도 정당이나 유권자 두 측면에서 모두 보수적인 우파만 남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균열구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 앞서 언급한 “1987년 체제”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냉전 체제의 해체와 함께 남한에서도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인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의 한 축을 형성했던 김영삼·김대중이 차례로 집권하면서 그동안 억압되어왔던 체제균열 즉, 기존의 적대적 남북관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강원택, 2003; 주봉호, 2007).

김영삼 정부는 집권 이후 본격적인 대북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북한의 핵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쌀 15만 톤을 지원하고 이인모 노인 송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감돌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2월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세계일보, 1994)고 밝혔다. 실제 북한에서도 이에 호응해 남북한은 그 해 7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7월 초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김일성 주석 조문을 둘러싼 찬반논란과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등으로 남한 내에서 대북관계를 둘러싼 심각한 이념갈등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민주적 개혁이 진행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위협을 느낀 수구세력들이 보수 언론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격에 나서게 된다.

그 결과 이른바 “신(新)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게 된다. 권위주의 계승정당들과의 ‘3당 합당’을 통해 형성된 집권 여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김영삼 정부 내에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압도하면서 이념균열은 반공·반북 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한을 맹비난하고, 남한은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국면에 돌입했다.

김영삼 정부 후반 냉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직후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대북 포용정책을 처음으로 내세우며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남북한 평화가 유지되는 기반 하에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료와 쌀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방북 등을 적극 지원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했다. 그 결과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군사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남북 정상회담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물꼬가 트이면서 금강산 관광개발을 비롯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수차례 이어지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이 이어졌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는 북한 응원단이 방문하는 등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서로에 대한 심정적 적대의식이 많이 완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즉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크게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물론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 권위주의 정부들에 의해 술하게 반복된 것처럼, 근거 없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등 시민사회에 보수독점의 편향적인 이념균열 구조를 강요하는 일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된 것이다.

(2) 남한 선거와 북한 변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퇴조는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북한 변수의 약화로 나타났다. 흔히 “북풍”(北風)으로 불리는 북한 변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동운동 세력이나 야권을 탄압하고 정권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주요 시기마다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³⁰⁾

북한 변수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이종석, 2002). 먼저 북한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남한 정치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처럼 남한 지도부의 직접적인 제거를 시도하는 방식부터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같이 북한이 의도하지 않은 돌발적 상황이 남한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남한 정권이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즉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평화의 댐 건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남한 내부에서 긴장 국면을 조성하거나, 술한 간첩단 조작사건에서 보이듯이 야권에게 북한과의 연루 혐의를 씌움으로써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방식 등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와 같은 북한 변수들은 대부분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 권위주의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국면을 이용해 반대파를 억누르고 체제 안정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북한 변수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선거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김영태, 2007; 김형준, 2007; 임수환, 2007; 정준표, 1998; 주봉호, 2007). 1987년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현희를 대선 하루 전 국내로 압송해 반북·반공 의식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체제의 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함으로써 노태우 후보의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한항공 폭파사건 발생 전 여당의 여론조사에서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 후보에게 다소 뒤졌지만 사건 이후 전세를 뒤집고 확실한 승세를 굳힌 것이다(한겨레신문, 1996).

또 1992년 제14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간첩 이선실 사건과 남노당 이후 최대 지하당 조직이라 불린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

30) “북풍”은 북한의 정규군에 의한 군사적이고 공개적인 도발행위라는 제한적인 의미와 함께 국가안보 문제 전반이라는 광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김영태, 2007: 67). 이 논문에서는 북한 변수를 광의의 의미에서 “북풍”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룰 것이다. 즉 “북풍”은 유권자에게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된 불안감 내지 안정감을 조성해 선거를 비롯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집권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야권의 유력 후보였던 김대중의 연루설을 퍼트려 안정희구 성향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권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심리전 효과를 일정하게 거둘 수 있었다(임수환, 2007).

1996년 4월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진입한 사건은 남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수도권에서 여권이 앞서는데 큰 기여를 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무력시위로 인해 야권이 수도권에서 최소한 10석 정도는 잃었고,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여대야소(與大野小)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정준표, 1998: 134-139). 하지만 이 사건은 나중에 남한의 특정 정치세력과 북한이 공모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도 북한 변수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사건과 울산 부부 간첩 사건, 오익제의 김대중 지지 편지 등과 관련된 일련의 북풍 공세가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다.

하지만 이미 이 시기부터 북풍의 위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국제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북방외교, 김영삼 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북풍의 위력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다.

이는 이 시기 실시된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반영되었다(정해구, 1997). 1986년 국토통일원 조사에서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란 여론은 7.32%에 불과한 반면 “언젠가는 될 것” 혹은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은 71.88%에 달했다. 하지만 1994년 12월 민족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무려 67.5%가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1994년 조사에서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반수가 넘는 59.6%에 달했다. 이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반북·반공이데올로기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 변수가 남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남북한의 “적대적 상호 의존관계”(이종석, 2002)에 있었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상대의 존재를 명분 삼아 자신의 존립기반을 찾을 수 있었던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과 함께 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일면서 북한 변수의 영향력 또

한 변화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외환위기라는 또 다른 중대한 변수의 등장은 북한 변수의 중요성을 그만큼 떨어뜨렸다. 북한 변수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사건의 현저성(顯著性)과 함께 다른 변수에 비해 중요성(重要性)이 크다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외환위기가 북한 변수의 중요성을 잠식해버린 것이다.

북한 변수의 영향력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2002년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했지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해 상당 부분 희석되었고, 2007년 이후에는 북한 변수의 영향력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적대적 의존관계에 바탕을 둔 북풍의 효과가 더 이상 발효되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 핵 위기의 고조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대결 분위기까지 조성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처럼 일방적인 적대정책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간의 적대적 대결보다 경제와 안보 등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북한 문제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론을 둘러싼 남한 내 견해 차이의 문제로서, 과거 북한의 침공위협을 전제로 한 북풍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퇴조 현상은 한국사회 이념균열 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시민사회에 보수적 이념만 강요해온 기존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또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출을 억압하는 것이 더 이상 시민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정치적 균열구조로 전환되는 정상적인 정당체계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2. 새로운 세대의 등장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세대 간의 격차가 생애주기(生涯週期)에 따른 연령효과(age effect)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처럼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등 정치적 격변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나라에서는 정치의식 형성기에 겪은 역사적 경험에 따른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가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세대론자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사실이다(Manheim, 1952; 정진민, 1992; 2008; 2012 등).

실제 어수영(2004)과 어수영·한배호(1996)가 1984년부터 1990년, 1996년, 2001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한국인의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령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어수영은 이 중 1990년대 이후 세 차례의 조사에서 잉글하트가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를 구분하기 위해 도입한 12개 문항을 원용해 한국인의 가치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생애주기 효과보다 정치세대 효과가 세대 간 가치관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보수 우위 지역주의로 특징되는 “1987년 체제”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 세대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는 김대중 정부 후반기로,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이미 50년이 지난 때이다. 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소위 ‘386 세대’와 ‘386 이후 세대’가 각각 30대와 20대를 차지하던 시기이다. 즉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정치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이전 세대와 차별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각 세대가 보이는 정치성향 내지 특징에 따라 정치의식 형성기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유권자를 5개의 세대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¹⁾ 먼저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 출생한 ‘전전(戰前) 세대’, 1950년대에 태어나 정치의식 형성기에 유신을 겪은 ‘전후(戰後) 세대’, 1960년대 출생해 민주화를 경험한 ‘386 세대’, 1970년대 출생해 정치의식 형성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88만원 세대’, 386세대의 자녀로서 디지털과 촛불시위를 경

31) 유권자의 세대구분은 어수영(2006), 조중빈(2003), 정진민(1992; 2008; 2012), 황아란(2009) 등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정치의식 형성기의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 시점의 범위를 둘러싼 편차에 기인한다.

험한 ‘촛불 세대’ 등이다.

1950년대 이전 출생자들은 한국전쟁을 겪고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한 사회화 과정을 겪은 ‘전전(戰前) 세대’이다. 이 세대는 반공과 경제성장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도 희생할 수 있다는 시각을 일반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동원되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권위주의 정부의 강한 지지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전후(戰後) 세대’인 195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1970년대에 세대의식 형성기인 20대를 보내며 유신이라는 정치경험을 공유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권위주의 하의 억압적 통치를 경험하며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지속적으로 받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화 의지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다소 혼재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정치의식 형성기인 20대에 1980년 당시의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한 소위 ‘386 세대’이다. ‘386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특히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 과정에 마르크스주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좌파 이데올로기에 직접 노출된 세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감 역시 가장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는 권위주의 계승정당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보수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며 새로운 정치적 대안 세력을 모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1987년 체제”가 수립된 1990년대에 대학생활동을 경험하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취업난을 직접 겪은 소위 ‘88만원 세대’이다. 그만큼 이전 세대에 비해 성격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세대는 민주화가 진행되어 공고화되는 단계에 정치적 의식 형성기인 20대를 보낸 정치적 민주화의 수혜세력이다. 이 세대는 민주화의 쟁취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가 ‘386 세대’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반면 지역주의 보수 우위로 특징지어지는 “1987년 정당체계”에 대한 저항감은 상당히 높은 세대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함께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켜본 세대로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이들은 동시에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하에서 외환위기로 인한 취업난을 겪으며 신자유주의적인 적자생존의 시장경제 체제에 직접 노출되었다. 신자유주의 의식에 상당히 포섭된 측면이 있는 반면, 당시 집권 세력인 김대중 정부에 대한 피해의식 또한 팽배하다. 그래서 ‘386 세대’에 비해 젊은 층에 속하지만, 정치경제적 이념 차원에서 ‘386 세대’에 비해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끝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쫓불 세대’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대를 보냈다. 이들은 386세대의 자녀들로서 1970년대 출생자들에 비해 부모 세대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세대이다. 또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 등을 계기로 쫓불시위를 벌이는 등 정치적 참여의식이 높은 세대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주최 당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며 자신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등 광장문화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기존 한국정당체계의 토대를 이루어온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에 대해 기성세대에 비해 노출빈도가 대단히 낮고 그 영향권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다(정진민, 2012). 오히려 ‘386 세대’와 신세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나 정치적 참여 의지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물질적으로도 비교적 풍요로운 시기에 가치관 형성기를 보낸 탓에 탈(脫)물질주의적 성향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어수영, 2004).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정진민, 2008).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학교의 인가를 대폭 늘리면서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상당히 많아졌다. 또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이들 젊은 세대가 실질적인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유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정당정치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강원택, 2007).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1960년대 출생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2000년대 이들의 투표행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³²⁾ 새로운 세대 유권자들의 등장은 그동안 보수의 공간에만 놓여있던 유권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다 넓혀주었다. 2000년대 정당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라 정당-유권자 연합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즉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1960년대 이전 세대의 경우 보수적이고 지역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면서 “1987년 체제”에서 등장한 지역주의 정당들과 사실상 일체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에서 벗어난 1960년대 이후 세대의 경우 “1987년 체제”의 지역주의 보수 정당에서 이탈(dealignment)하며 정당체계 변화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념균열이 약화되고 지역균열이 더 큰 영향을 미친 2007년 대선이나 2008년 총선 등에서 젊은 층의 참여율이 떨어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김진하, 2008; 이현우, 2008a; 채진원, 2012 등). 다시 말해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이념균열이 세대균열과 함께 새로운 정치균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3. 소결

1990년대 현실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수십 년 간 한국 사회 지배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온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김영삼 정부 집권 이후 추진해온 대북관계 개선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실시로 이어졌다. 그 후 남북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는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32) 정진민(2012)은 젊은 세대가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 등 이념적으로 상반된 후보에게 번갈아 많은 지지를 보낸 점을 들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이념적 틀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젊은 세대가 이념보다는 실용적이고 타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논문 제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균열 구조가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따라 균일성을 보이지 못하는 등, 아직은 서구와 같은 수준으로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평가는 다소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386 세대’가 30대로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는 전전 세대 혹은 전후 세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겪거나 그 후 등장한 세대로서 이전 세대에 비해 지역주의와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지역주의와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정당체계와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는 북한 변수가 남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도 큰 변화를 낳았다. 즉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1997년에도 오익제 편지 등 북풍 공세가 벌어졌지만 남한 선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요컨대 2000년대 들어 기존 정당체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온 반공 위주의 이념균열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제 2 절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약화는 그동안 사회경제적 균열이 정치균열로 직접 표출되는 것을 억제해온 기제(機制)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라는 민족균열에 의해 가로막혀온 한국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그 모습을 드러낼 차례이다.

그런데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1980년대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는 전형적인 계급균열로 치달던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산업 사회로 경제구조가 급속히 바뀌면서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신(新)중간계급을 비롯한 중간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노동과 자본의 분화뿐만 아니라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자체의 분화와 하향화를 동시에 가져왔다. 이는 소위 “중산층의 몰락”이란 용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중간층의 위기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적 활성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반면 노동계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역량이 감퇴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변화의 주체가 되는 대신 신(新)중산층의 정치적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1. 서비스사회와 양극화

(1) 서비스사회와 신중간계급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 이후 2차 산업 중심의 공업 사회에서 3차 산업 중심의 서비스사회로 점진적으로 이행했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1985년 50.6%로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돌파했다(표 4-1). 서비스산업 취업자는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 2012년에는 무려

79.1%까지 올라갔다. 농림어업과 광공업 취업자는 1985년 각각 24.9%와 24.5%에서, 2012년 각각 6.2%와 16.7%로 뚝 떨어졌다. 서비스산업의 급증과 함께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수 급락이 눈에 띈 정도이다.

(표 4-1) 한국사회 산업별 취업자 비율 (단위: %)

구분	서비스업	광공업	농림어업
1985년	50.6	24.5	24.9
2000년	69.0	20.4	10.6
2012년	79.1	16.7	6.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산업별취업자> 각 연도별

서비스산업의 증대는 신중단계급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계급의 출현을 통해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계층 구성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신광영, 2006b: 86-90).³³⁾

가장 먼저 경영관리직을 들 수 있다. 제조업 부문 기업체가 거대화되고 독점화되면서 소유주가 모든 노동과정을 통제하기 힘들어지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피고용자인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경영, 관리직 및 기술직에 종사하며 소유주를 대신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말 그대로 관리한다. 이들이 받는 임금 수준도 일반 노동자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영에 종사하는 경영관리직 이외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도 등장했다. 의사, 변호사, 간호사, 교사 등이 대표적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 전문직 노동시장에 일종의 진입장벽을 쌓고 높은 급여와 전문 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누린다.

20세기 케인즈주의의 확산과 함께 복지 서비스가 국가의 역할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공공서비스 부문도 확장되었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정부 부문과 공기업 부문으로 구성되며,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적 노동시장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33) 새로운 중단계급의 출현은 계급론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단계급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유팔무 외(2005: 제2장)를 참고. 신중단계급의 성장에 따른 자체 분화현상과 그에 따른 정치적 지향의 차이에 대해서는 Kriesi(1998).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함께 사적 서비스 부문의 확대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대량생산과 함께 대량소비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부문이 발달한 것이다. 즉 판매, 유통 등 제조업과 연결된 서비스업과 함께 음식, 숙박, 관광, 미용 등의 업종이 새롭게 확산되었다.

새로 등장한 경영관리직이나 전문직, 일부 기술직과 일부 사무직, 그리고 사적서비스 부문의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자영업자들과 구분해 신(新)중단계급으로 불린다. 공공서비스 부문과 사적서비스의 다른 부문 종사자의 경우 부문 내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노동자계급이나 신중단계급이나 그 위치가 엇갈린다.

신중단계급의 경우 자본가와 같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 내 권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가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노동 상품으로 제공하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적인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신중단계급은 구(舊)중단계급이라 불리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함께 자본과 노동의 중간에 위치하며 자본과 노동의 직접적인 계급충돌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서비스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신중단계급이 급격히 증가했다. 1960년부터 2003년까지 계급구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구중단계급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경영관리직과 전문직 등 신중단계급이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표 4-2). 구중단계급에는 일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농민도 포함되어 있어 구중단계급의 급감은 농업의 위축 현상에 기인한다. 반면 1960년 5%가 채 안 되던 신중단계급은 2003년 현재 20.2%를 기록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신중단계급은 구중단계급과 거의 비슷한 규모에 도달했다.

(표 4-2) 계급 분포의 변화 (단위: %)

계급	1960년	1970년	1990년	2003년
자본가	3.90	3.84	5.10	7.4
구중간계급	74.11	56.98	35.15	27.6
신중간계급	4.75	8.64	17.38	20.2
전문경영	0.69	1.31	3.30	4.3
경영감독	2.16	4.07	7.67	8.5
전문인	1.90	3.26	6.47	7.4
노동계급	17.23	30.54	42.33	44.8
숙련노동	3.58	7.25	14.70	22.2
비숙련노동	13.65	23.29	27.60	22.6
계	100	100	100	100

출처: 조돈문(2011: 87)

노동자계급의 경우도 지난 60년 간 꾸준히 증가해 우리 사회의 절반 가까이 육박했다. 하지만 최근 신중간계급의 증가 추세에 비하면 비소유계급(노동자계급과 신중간계급)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또 노동자들의 탈숙련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숙련 노동의 비율이 꾸준히 증대한 것으로 드러났다.³⁴⁾

노동자계급의 숙련화와 함께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제조업의 상대적인 감소에 따라 생산직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표 4-3).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도 임금근로자 내부에서 화이트칼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이미 50%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는 1995년 50.8%에서 2000년 54.7%로 늘어난 반면 생산직 노동자는 1995년 41.8%에서 2000년 36.1%로 오히려 떨어졌다. 화이트칼라를 노동자가 아니라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신중간계급이 생산직 노동자를 압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34) 노동의 고급화 추세에 대해서는 조돈문(1994) 참고.

(표 4-3)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증가 추이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고위 임직원	전문가	기술공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기타	계
1995	50.8	2.8	8.3	16.0	18.1	5.5	41.8	7.4	100
2000	54.7	4.0	12.6	10.2	19.9	8.1	36.1	9.1	100

출처: 조효래(2006: 102)

(2) 서비스산업과 고용조건의 악화

서비스사회는 신중간계급의 등장과 함께 서비스 부문 내 노동의 양극화라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서비스업의 경우 농림어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부문 내 노동의 이질성이 상당히 커 서비스업의 증대는 곧 양극화의 촉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일부 부문들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부문들 간에 노동의 질과 임금 수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영관리직과 기술직, 전문직 같은 신중간계급의 경우 대체로 고임금과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만, 대형 마트 노동자 같은 단순 서비스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임금이나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이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생산자 서비스나 사회서비스와 같이 대규모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임금이 높은 반면, 주로 중소·영세업자들로 구성되는 개인서비스와 유통서비스는 임금 수준이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양극화는 곧 사회 전체의 양극화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산업이 증대하면서 피고용자 즉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모두의 분화(分化)가 크게 촉진되었다.

우선 고용조건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사회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김유선, 2006). 지난 2005년 8월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36.9%이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20.4%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19.6%이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37.9%로 대부분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도 서비스업의 경우 59.6%로 제조업의 38.4%보다

훨씬 높았고, 월평균 임금도 서비스업이 158만 원으로 제조업 168만 원보다 낮았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을 비교하면 6배 수준으로 제조업의 4.5배보다 높아 서비스 부문 내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표 4-4). 즉 서비스업은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로 인해, 제조업에 비해 중간임금 계층이 적고 대신 저임금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표 4-4) 시간당 임금 불평등

구분	불평등도(배)			임금계층(%)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저임금	중간	고임금
제조업	4.5	3.9	3.6	20.0	50.6	29.4
서비스업	6.0	4.2	3.9	29.2	40.7	30.2

출처: 김유선(2006: 122)

서비스산업 내에서의 노동의 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리며 한층 가속화되었고,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았던 신중간계급을 비롯한 중간층의 위기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2. 외환위기와 양극화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주권의 양도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1961년 경제개발 정책이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위기를 초래했다. 외환위기 직후 단 1년 만에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길거리는 노숙자들로 넘쳐났고 가정은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대우그룹을 비롯해 대마불사(大馬不死)라 불리던 재벌그룹들도 잇따라 해체되고, 기업들은 냉혹한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죄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박정희 정부 이후 개발독재 체제 하에서 압축적 성장과정을 밟아오던 한국 경제가 그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1987년 이래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군부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되었다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수립한 발전국가식 개발정책이 1997년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 국면에 접어들었다.³⁵⁾ 즉 외환위기 이전에 소위 “관치 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통해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 대신 시장 자율 즉 재벌이 직접 전면에 나서 성장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³⁶⁾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수립은 우리 사회에 시장만능주의를 확산시켰고, 빈익빈부익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던 경제적 상층은 물론 중간계급과 하층 등 계급구조에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뤄졌다. 자본가들 중 일부는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며 몰락했고, 중간계급과 하층 노동자들의 하향분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계급 내지 계층을 떠나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확산시켰다.

(1) 노동시장의 분화

서비스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확대되기 시작한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한층 가속화되어 부문과 영역을 떠나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³⁷⁾ 이 양극화 현상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非)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이다.

35) 손호철(2009)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 하에서 수립된 개발독재체제(“1961년 체제”)는 2단계 전환을 통해 해체되었다. 즉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정치체제의 전환(“1987년 체제”)을 이루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이라는 경제체제의 전환(“1997년 체제”)을 이루었다. 김호기(2009) 역시 손호철과 유사하게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발생했다며 “1997년 체제”가 “1987년 체제”보다 현 시기의 진단에 이론적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조희연(2009)은 “1997년 체제”가 “1987년 체제”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한 단계 높은 민주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주화의 연속선상에서 “1997년 체제”를 “1987년 체제”의 하위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1997년 민주적인 정권교체 이후 적극 수용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박정희식 성장 이데올로기와 수출지상주의, 재벌중심론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음을 논하는 시각으로는 유종일 외(2011)와 최태욱 외(2009) 등 참고.

36) 1990년대 이후 시장 위주의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위축되고 재벌 그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 글로는 윤영관(1999)과 고원(2005) 참고.

37)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분석과 그에 대한 해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는 이성백(2006) 참고.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의 조기실시와 파견근로제의 도입이 이뤄지자 기업들은 앞다투어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직을 포함한 신중간계급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직후 실업률이 정부 공식 통계에서도 한때 10%에 가깝게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곧 재취업을 하면서 실업률은 다시 3%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경제위기 이후 재취업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에서 정리해고된 인력이 서비스업 부분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1년부터 조사된 비정규직 현황을 노동사회연구소가 재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 비정규직은 736만 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55.7%에서 출발해 55-56%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847만 6천 명, 전체 임금 노동자의 47.8%까지 떨어졌다(표 4-5).³⁸⁾ 하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5) 비정규직 규모

38) 노동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004년 37.0%를 최고점으로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33.3%에 머물렀다. 노동사회연구소와 노동부의 분석결과에서 비정규직 규모에서 15% 포인트에 달하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형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즉 노동부는 통계청에서 그동안 발표해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정형 직군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며 모두 제외했다. 오직 비정형 직군만 비정규직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노동사회연구소는 정형 직군에 속한다 해도 임시일용직일 경우, 비정규직과 노동조건이 유사한 점을 중시해 비정규직에 포함했다. 또 통계청 부가조사에서 상용직 중에 비정규직으로 확인된 인원을 비정규직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형 직군이라도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비정규직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분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가 공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전에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해서 추정한 규모와도 비슷해진다. 즉 2001년 이전 비정규직 규모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해 1995년 41.8%, 1999년 51.6%, 2000년 52.1%이다(이병훈, 2009).

연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2
임금노동자 (천명)	13,217	14,149	14,968	15,882	16,479	17,510	17,733
정규직비율 (%)	44.3	44.6	43.9	45.8	48.1	50.6	52.2
비정규직 비율(%)	55.7	55.4	56.1	54.2	51.9	49.4	47.8

출처: 김유선(2007: 7; 2009: 48; 2012: 84)

이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표 4-6)에서 보는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하며 우리 사회 “신(新)빈곤”의 대표적인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³⁹⁾ 특히 여성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표 4-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단위: %)

연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2
정규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정규직	52.6	51.0	50.9	50.1	48.9	48.6	49.7

출처: 김유선(2007; 2009; 2012)

노동자 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규정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운 45%가 저임금계층에 해당한다(이병훈, 2009). 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정규직도 20.8%, 179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일정 기간의 훈련을

39) 근로빈곤층이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과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빈곤층을 의미한다(박보영, 2010). 이들은 기존의 빈곤층과 달리 일을 하면서도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구조화된 체제의 산물로서, 이전과 달리 계층 상승의 길이 사실상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신빈곤층의 경우 상위 계층과 생활공간에서부터 분리되는 등 사회적 고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빈곤이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거쳐 정규직이 되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고 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사실상 신분상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불균등한 구조로 인해 피고용자 내부 즉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는 물론 중간계급 내부에서도 소득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 자산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는 근로소득 이외에 비근로소득, 즉 자산의 양극화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소득의 지니계수(Gini 係數)는 0.3대의 수준을 유지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비근로 자산소득의 지니계수는 0.6 이상으로 두 배에 달했다(장한익·최을, 2006: 214-215). 2004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인데 비해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92를 기록해 무려 세 배 가까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가 과도하게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2005년 한 해 동안 땅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무려 346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 전체 임금노동자에게 지급한 총임금 342조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택의 경우도 2010년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자가 비율은 54.3%에 불과하다(표 4-7).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전세나 월세와 같은 거주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경우 그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전체 350만 가구 중 자가는 144만 가구에 불과해 41.2%에 머무르고 있다. 그보다 많은 58.8%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표 4-7) 주택보급율과 주택보유 형태 (2010년 기준)

구분	가구 수(천)	주택보급률(%)	자가 비율(%)
전국	17,339	101.9	54.3
서울	3,504	97.0	41.2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신(新)주택보급률”과 “자가 점유비율”

2001년 현재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인구는 전체 가구의 5.8%인 8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연간 3,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비율은 0.3% 정도로 약 4만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광영, 2004a: 166-167).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 소유는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금융자산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표 4-8).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신고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2011년 현재 51,231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10조 2,074억 원에 달했다(연합뉴스, 2013). 이 중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은 3,063명으로, 금액은 5조 3,697억 원이나 되었다. 이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벌어들인 기타 소득은 2조 177억 원으로 금융소득의 37.6%에 불과했다.

(표 4-8) 금융소득 신고자 내역 (단위: 명) (2011년 기준)

4천만~1억 원	1억~2억 원	2억~3억 원	3억~5억 원	5억 원 이상
33,694	9,211	2,847	2,416	3,063

출처: 연합뉴스(2013년)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의한 비근로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외환위기 이후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의 양극화 추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신동균, 2006: 76-78).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7년과 1998년 사이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극화 지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극화 지수는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2001년 이후에도 근로소득의 양극화 지수는 준 반면 가구총소득의 양극화 지수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는 곧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증가에 근로소득보다 비근로소득, 즉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증대를 통한 소득격차의 기여가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자산을 가진 계급과 자산을 갖지 못한 계급 간의 새로운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⁴⁰⁾

(3) 기업 부문 간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 경제부문 간의 양극화와 함께 맞물리고 있다. 우선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소위 “적하효과”(trickling effect)의 작용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의 성장은 곧 관련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수익증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적하효과는 효력을 상실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즉 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은 수십 조 원 대의 사상 최대 흑자를 내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관련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의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현상은 수출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인 개방 흐름을 타고 국내 재생산관계에서 이탈해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의 연계가 끊어지고, 이들 간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표 4-9).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비율은 1990년대 76.1%에서 2005년 45.9%로 하락하였다. 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수출은 매년 평균 11.6%씩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내수는 매년 0.02%의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표 4-9) 경제위기 전후 경제성장, 내/외수 증가율 (단위: %, 연평균 증가율)

구분	1970-1997	1998-2005	전 기간
경제성장률	7.8	5.8	6.9
수출증가율(통관기준)	20.8	11.6	18.1
내수증가율	6.7	- 0.02	4.8
수출-내수 상관관계	0.98	- 0.36	0.86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6a: 12)

40)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유산계급과 무자산계급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의로는 신광영(2003; 2005) 참고. 신광영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해짐에 따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논의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만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 업종에 따른 양극화도 심각하다. GDP 중 IT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IT산업과 비IT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하준경, 2006: 485-486). 이는 수출에도 반영되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 등 특정 소수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 제조업은 높은 부가가치 생산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2003년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 부문 간의 양극화는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즉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 6.1%에서 2000년 이후 62.6%로 급증한 반면 개인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9.9%에서 0.3%로 급락했다(김순영, 2006: 41). 1980년대에는 기업의 성장이 곧 가계의 부로 이어졌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성장이 가계의 부를 동반하지 못하는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열매가 일부 수출 위주의 대기업에 집중되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는 기업의 일자리에서도 드러난다. 사무자동화와 구조조정의 효과로 임금 수준이 좋은 대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요컨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양극화는 계급, 직종, 기업 부문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불평등을 구조화하며 이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노동의 분화에 따른 효과가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신중간계급과 일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다.

3.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

(1) 중산층의 개념 정의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홍두승, 2005: 5-17). 먼저 1960년대 중반 중산층 논의는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기하였다. 즉 중산층은 곧 구(舊)중간계급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내지 중소상공업자와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 두 번째 중산층 논의가 제기되었다. 정통성이 없는 신군부 세력이 집권 이후 사회 안정 세력으로서 중산층 육성이라는 과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중반 한국 사회 계급론 연구와 맞물리며 중산층의 실체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 제기된 중산층 논의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위기론”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소와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당시 논의에서 중산층은 사실상 중간소득 계층과 동일시되었다.

끝으로 2000년대 중반 한국사회학회를 중심으로 사회 안정과 경제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심 역할자로서 중산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실 중산층이란 용어는 마르크스주의나 베버주의의 전통에 입각한 전통 계급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가장 핵심적인 통치이데올로기였던 한국 사회에서 계급이란 사회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에서 중산층이란 용어가 불가피하게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처음 중산층 논의가 나온 맥락도 권위주의 정권 차원에서 근대화 정책을 위한 사회 안정 세력의 확보라는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팔무 외(2005: 131)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중산층 개념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이해방식이 존재한다. 먼저 중산층을 마르크스식으로 중간계급이나 뿌띠부르주아와 같은 계급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중산층을 베버나 네오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신, 구중간계급을 합한 중간계급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셋째, 중산층을 경제적 소득이나 생활 측면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경제적 중간계층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경제적 소득이나 재산, 생활수준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생활양식, 주관적 의식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포괄적으로 중간층을 보는 방식 등이다.

이에 따라 실제 연구에서 중산층을 어디까지 포괄할지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언론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민간 연구소의 경우 중산층을 중위(中位)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구간의 소득계층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연구자별로 중산층 분포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느냐를 놓고 중위 소득의 70-130% 혹은 50-150%로 규정하는 등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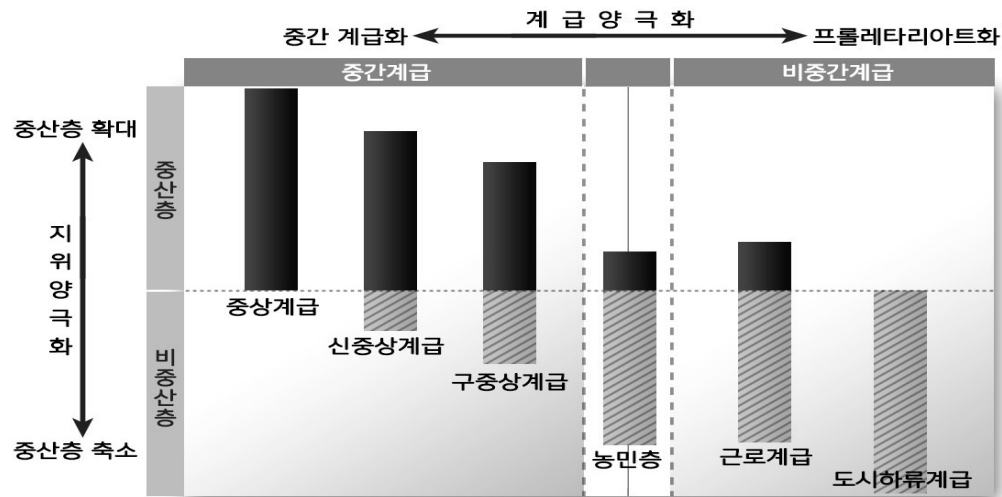
계급론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노동자계급을 어디까지 중산층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유팔무 외(2005)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을 제외한 신, 구중간계급을 합한 중간계급만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어,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중산층에서 배제되고 있다. 반면 같은 계급론적 입장을 취하는 신광영(2004a)의 경우는 중산층을 계급과 무관하게 소비를 중심으로 사회계층을 구분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광영에게 중간 정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인구층은 중간계급 이외에도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상층까지 중산층에 포함된다. 하지만 신광영의 경우 실제 분석에서는 직업적 구분에 따라 편의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중산층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최근 지위론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산층 개념은 홍두승(2005)의 분류기준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분위기이다. 홍두승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산층은 중간계급도 아니고 중간소득 계층도 아닌, 그러면서도 이들 속성을 함께 아우르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개념이다(홍두승·김병조, 2006: 5).

중산층은 단지 소득 수준만 중간 정도를 유지해서는 안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교육수준, 그리고 계급적 지위를 갖추고 유사한 생활양식을 공유해야 한다. 즉 계급적 지위에서 최소한 신·구중간계급에 속해야 하고,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택기준 20평 이상 자가 소유자이거나 30평 이상 전월세 세입자여야 하며, 2년제 이상의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춰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주변적 중산층, 세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핵심적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홍두승의 분류기준을 따를 경우 신, 구중간계급의 대부분이 중산층에 포함된다(그림 4-1). 하지만 신, 구중간계급 중에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하층은 중산층에서 배제된다. 또 농민과 노동자계급 중에서도 소득 및 자산, 그리고 교육 수준을 일부 충족할 경우 중산층에 포함된다. 물론 현재 농민이나 노동자계급 중에 중산층에 포함되는 계층은 상층 일부에 한정된다.

(그림 4-1) 중간계급과 중산층의 관계



출처: 홍두승 · 김병조(2006: 6)

중산층의 폭이 넓어질수록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는 줄어들고 중산층의 폭이 좁아질수록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는 심화된다. 이는 계급적 구분과 직접 관련 되지 않은 구분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나 도시 하층민도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경우 중산층 범주 내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상층 노동자계급의 경우 생산직 여부를 떠나 중산층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홍두승이나 신광영의 주장에 동의한다. 실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생산직 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상층 노동자계급의 경우 소득이나 교육 수준의 측면에서 중산층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계급, 특히 노동자계급의 형성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한 권위주의 정부가 장기간 집권하면서,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작 노동자계급에 속해 있으면서도 노동자계급 의식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중산층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상당수 그리고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 상층에 속하는 일부의 경우 스스로를 노동자 혹은 노동자계급에 귀속시키는 데 대해 심리적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⁴¹⁾

귀속의식은 곧 사회적 태도와 정치적 행동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면서도 ‘중산층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들의 실제 정치적 행동은 ‘계급배반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진보 정당보다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계급과 함께 중산층에 대한 분석은 현실정치를 이해하는 데 아직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2) “중산층의 몰락”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진행되고 중산층의 몰락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면서, 중산층 몰락의 1차적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중간 소득 계층의 감소와 분화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6a)가 중산층을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1997년 이후 8년 동안 중산층은 64.8%에서 59.5%로 5.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하위층은 3.7%포인트, 상위층은 1.7%포인트가 각각 늘어 중산층이 상하위층으로 각각 이동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남준우(2007)가 중산층을 중위 소득의 75-150%의 소득계층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중산층 비중은 1998년 42.3%에서 2001년 43.7%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해서 2004년 40.7%로 줄었다. 중산층 가구의 21.3%는 하위층으로, 14.2%는 상위층으로 각각 이동했다.

이정우·이성림(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4개의 기준에 따른 중산층 분석결과 1998년 들어 중산층은 1년 전에 비해 5%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만에 큰 변동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최근까지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과 문외솔 교수팀이 중위 소득의 50-150%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추정한 결과, 국내 중산층 가구는 2003년 61.2%에서 2011

41) 부산, 울산, 경상남도 소재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스로를 노동자계급이나 민중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2.4%에 달했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의식도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24.8%, 중산층이란 의식도 6.7%나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조직적 수준이 높아 계급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시민이나 중산층 의식이 30% 넘게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강수택(2003) 참고.

년 55.5%로 5.7%포인트 감소했다(한국경제신문, 2013). 반면 중위 소득 50% 미만을 버는 OECD 기준 빈곤층 가구는 8년간 15.5%에서 18.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중산층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포인트가 하락해 절반에 못 미치는 48.1%에 그쳤다.

중간소득 집단의 감소와 하위소득 집단의 증가로 소득분포 상 10분위 집단 간의 가구소득 격차도 확대되었다(이성균, 2008). 가구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집단의 가구주 근로소득은 1997년 최하위 집단의 4.8배에 머물렀으나 1998년 6.5배, 2006년에는 6.8배로 꾸준히 증가했다.

가구주 이외에 배우자 소득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졌다. 즉 1998년 최상위 집단의 가구주 소득과 최하위 집단의 가구주 소득 차이는 6.5배였지만,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그 차이는 7.4배로 증가했다. 또 2006년에도 가구총소득의 차이는 가구주 소득 간 차이인 6.8배보다 높은 7.9배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전후해 부부의 직업적 동질화 경향이 나타난 결과로, 현재의 불평등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세대를 잇는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표 4-10). 두 지수는 모두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며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하락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 양극화되며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지니계수는 1987년 0.31에서 1997년 0.2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32로 크게 오른 뒤 2005년 현재 0.31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소득5분위 배율도 1987년 5.0에서 1997년 4.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4로 대폭 오른 뒤 2005년 현재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0) 소득양극화 지수의 추이

구분	1987	1990	1997	1998	2000	2002	2005
지니계수	0.31	0.29	0.28	0.32	0.32	0.31	0.31
5분위배율	5.0	4.6	4.5	5.4	5.3	5.2	5.4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6b: 95)

중산층을 단순한 중간소득 수준의 집단이 아니라 계급적 지위라는 개념에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유팔무 외(2005)가 중산층을 신·구 중간계급 즉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 등을 합한 중간계급으로 정의하고 세 차례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산층은 1991년 67.2%에서 1995년 67.3%, 1998년 57.5%로 나타났다(표 4-11).⁴²⁾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중산층이 10%포인트 가까이 추락한 것이다. 반면 자본가와 하층 노동자는 오히려 그 비율이 늘어났다. 즉 자본가의 경우 1991년 3.3%에서 1998년 7.5%, 하층 노동자의 경우 1991년 28.5%에서 1998년 35.0%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간계급의 양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11) 계급별 지위 이동 실태 (단위: %)

구분	자본가	중산층	하층 노동자
1991년	3.3	67.2	28.5
1998년	7.5	57.5	35.0

출처: 유팔무 외(2005)

42) 유팔무 외(2005)의 해당 연도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1991년 동국대학교 조은, 강정구 교수와 한림대학교 신광영 교수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2,039명(유효응답자 1,98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 자료와 1995년 2% 인구센서스 자료이다. 그리고 199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년 간 실시한 노동패널자료, 즉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으로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와 13,738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조사 자료이다. 세 차례 조사 시기의 원 자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오차는 불가피하지만,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이 다시 이루어진데다, 비교적 일관된 수치를 기록한 점에서 비교평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 중산층의 지위 이동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중산층의 20.5%가 하강 이동, 즉 실업이나 하층 노동자로 전락한 경험을 한 반면, 자본가로 상승 이동한 비율은 0.9% 밖에 되지 않았다(표 4-12). 중산층 5명 가운데 1명이 일 자리를 잃거나 하층 노동자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와 지극히 상반된다(유팔무 외, 2005: 173-174).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중산층 지위에 있다가 하층 노동자로 하강 이동한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한 반면, 그 반대로 노동자계급이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한 비율은 24.1%에 달했다. 물론 중산층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하강 이동한 중산층이 상승 이동한 노동자보다 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많지만, 외환위기 이전에는 중산층의 하강 이동을 상쇄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중산층 부문별 하강 이동 실태 (단위: %)

IMF 이전 중산층 부문	IMF 이후 지위 변동				
	비취업	하층노동자	하강이동 계	수평이동	상승이동
화이트칼라	26.2	5.2	31.4	2.0	1.6
도시/농촌 생산 자영인	5.2	5.3	10.5	1.0	0.0
전문 자영인	8.3	0.0	8.3	2.1	0.0
판매/서비스 자영인	11.6	3.5	15.1	1.4	0.8
공공부문 종사자	4.0	0.0	4.0	2.0	0.7
민간부문 종사자	18.5	1.5	20.0	1.1	1.1
계	16.5	4.0	20.5	1.5	0.9

출처: 유팔무 외(2005: 176)

외환위기 이후 하강 이동을 한 중산층 부문은 화이트칼라가 31.4%로 가장 많았고 민간 부문 종사자도 20.0%에 달했다. 자영업자는 부문별로 8.3~15.1%에 이르러 모두 합하면 가장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가 신

· 구 중간계급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반면 중산층 중에서도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경우 불과 4%만이 하강 이동 경험을 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팔무 외의 분석에 따른 화이트칼라와 자영업자의 몰락 현상은 화이트칼라의 대명사로 불리는 경영관리직이나 기술직 등 직업별 실업상황이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영관리직의 경우 홍두승의 분석 개념에 따르면 중산층 중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영관리직 종사자들의 수가 외환위기 이후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표 4-13).⁴³⁾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월과 2000년 6월 관리직의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89%대로 뚝 떨어졌다. 외환위기 상황을 아직 느끼지 못하던 1996년 6월과 2000년 6월을 비교하면 84.8%대로 조금 더 낮아진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에 비해 관리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1명 혹은 1.5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표 4-13) 관리직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천명)

1996년 6월	1997년 6월	1998년 6월	1999년 6월	2000년 6월
545	519	495	461	46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직업별 취업자>

역시 상당수의 구성원이 중산층에 속하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도 1997년 6월 223만여 명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 213만여 명으로 10만여 명이 줄었고, 핵심적 중산층보다는 주변적 중산층이 많은 사무직원이나 판매서비스직 등의 종사자로서 중산층에 포함되었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보증수표 격이었던 경영관리직의 고용안정성은 외환위기

43) 한국사회학회가 2006년 8월 7일부터 20일간 실시한 <한국중산층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조동기(2006)가 홍두승(2005)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관리직과 전문직, 준전문직 중 상당수가 핵심적 중산층에 포함되었고 일부가 주변적 중산층을 차지했다. 또 관리직과 전문직 중에 중산층이 아닌 하층에 소속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신광영 2004a: 258-259). 보통 관리직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사이 20대의 일자리 이동가능성은 50대에 비해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신중간계급이 보통 4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들의 직업적 안정성이 젊은 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고용안정성은 달라졌다. 50대와 40대는 차이가 없고, 50대와 30대 사이의 차이도 확연히 줄어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만큼 신중간계급 관리직들의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진 것이다.

(표 4-14) 일자리 이동 가능성 분석

구분	1998~1999년	1999~2000년	2000~2001년
50대	1	1	1
40대	1.505	1.351	1.030
30대	1.811	1.690	1.350
20대	2.505	2.401	1.765

출처: 신광영(2004a: 258)

비정규직의 확산은 신중간계급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관리직/전문직 그리고 기술직/반(半)전문직을 포함한 신중간계급의 경우 2005년 무렵에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숙련 노동자/미(未)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소득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표 4-15). 즉 2005년 관리직/전문직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이하인 149만 원, 기술직/반(半)전문직 비정규직의 임금이 166만 원에 불과한 반면, 미숙련 노동자 정규직의 임금은 180만 원을 기록했다.

(표 4-15) 계급과 고용지위별 월 소득 추이 (단위: 만원)

구분	1998년	2001년	2005년
관리직/전문직	184(107)	218(109)	318(149)
기술직/반(半)전문직	150(65)	193(104)	287(166)
화이트칼라 노동자	131(80)	155(127)	230(137)
숙련 노동자	121(91)	138(116)	207(136)
미숙련 노동자	121(74)	120(94)	180(111)

() 안의 수치는 비정규직 월 소득

출처: 신광영(2006a: 21)

반면 구중간계급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외환위기 직후 부쩍 늘었다(표 4-16). 1997년 6월 자영업자 수는 429만 5,000명이었지만, 1998년 6월에는 442만 7,000명으로 13만 2,000명이 늘었고, 그 이듬해인 1999년 6월에는 456만 5,000명으로 13만 8,000명이 추가로 증가했다. 이는 신중간계급이나 상층 노동자 중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직을 한 사람들이 대거 자영업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 자영업자들까지 하강 이동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중산층의 위기를 가속화하게 된다.

(표 4-16) 자영업자 수의 변화 (단위: 천명)

1997년 6월	1998년 6월	1999년 6월
4,295	4,427	4,56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경영관리직으로 대표되는 신중간계급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과 그에 따른 높은 소득,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중산층의 상징적인 집단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해고의 1차적인 대상이 되자,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과 파장은 노동자들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다.

1980년대 고속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경제적 갈등의 완충지 역할을 했던 중산층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계급은 물론 중산층을 갈망하던 하위 층과 젊은 세대까지 총체적인 “희망의 위기” (신광영, 2004a)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⁴⁴⁾

(3) 중산층의 분화와 귀속의식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양극화와 함께 진행된 “중산층의 몰락” 현상은 중산층 귀속의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중산층 귀속의식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계층의식에 대한 평가이다. 중산층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하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 귀속의식을 절대적인 평가기준으로 삼기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서구에서는 중산층 귀속의식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중간계급 귀속의식에 대한 연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홍두승, 2005: 11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에 대한 연구는 물론 계급이란 용어의 사용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오면서 아직까지도 계급이란 학문적 용어의 복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사회학계 내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계급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현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계급의식보다는 중간계층 혹은 중산층에 대한 귀속의식 조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중간계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귀속의식의 경우 조사 당사자나 조사 대상, 조사 시기, 방법, 질문 방식 및 문항 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

44) 한국사회 중산층의 위기는 자신들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즉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과 같은 계급적 권리를 부정하며 제한적 민주주의만 용인한 결과이다. 관리직, 사무직, 행정직 종사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스스로 조직이 없어 저항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생산직보다 가장 먼저 정리해고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바로 그 결과이다. 신광영은 이 관점에서 현재 제기된 우리 사회 중산층의 위기를,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1987년 체제의 위기”라고 진단한다(신광영, 2004b: 55).

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시기별 조사결과는 추세 즉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정도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조사된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면 중간계층 귀속의식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과 하강의 진폭을 보이고 있다(표 4-17).⁴⁵⁾ 1995년 80%를 넘었던 중간계층 귀속의식은 외환위기 직후 72.1%로 크게 떨어졌다가 2002년 다시 80%를 회복했지만 2006년 다시 73%대로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사람들이 실업과 하강 이동을 경험하면서 중간계층 귀속감이 떨어졌다가, 경제상황의 반등 여부에 따라 중간계층으로의 귀속감을 회복하거나 다시 잃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17) 중간계층 귀속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연도	계층단계	계층귀속			계(%)
		중의 상(%)	중의 중(%)	중의 하(%)	
1995	7	10.0	40.0	32.0	80.7
1998	9	6.0	33.5	33.6	72.1
2002	9	12.0	43.6	24.5	80.1
2006	11	8.1	38.9	26.8	73.8

출처: 1995년/1998년 통계는 김병조(2000), 2002년 통계는 홍두승(2005), 2006년 통계는 조동기(2006)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중간계층에 속한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들의 경우 ‘중의 상’ 보다는 대부분 ‘중의 중’ 이나 ‘중의 하’ 에 몰려 있다. 특히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감소할 때마다 ‘중의 중’ 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중의 하’ 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의 하’ 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보자면 스스로 ‘하층’ 이라고 생

45) 김병조(2000)에 따르면 중간층의 단계수가 늘어날수록 중간층의 규모가 증가한다. 즉 계층을 5단계로 구분하고 중간층을 세 개 층으로 나눌 경우 중간층 귀속의식은 90%대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양 극단을 선택하기 꺼리는 심리의 결과로 추정된다. 반면 5단계라도 중간층을 2개 층으로 제한하면 중간층 귀속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각하지는 않지만 ‘중간계층’에는 다소 못 미치는 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홍두승, 2005: 13). 따라서 ‘중의 하’ 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중산층의 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떨어져도 여전히 70% 이상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추정된 객관적인 중산층의 규모 40~60% 수준과 비교해도 한참 높은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라는 객관적인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 비중산층 즉 하층에 속하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중간계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 ‘중의 하’ 층을 중간계층에서 제외하면 중간계층 귀속비율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의 규모인 40~60%와 비슷해진다.

중간 계층이 아니라 직접 중산층에 대한 소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간계층에 대한 귀속비율과 다른 큰 차이를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이 201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4%에 불과했다.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50.1%에 달했다. 중산층 귀속감을 갖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 이전에 중산층이나 상층에 소속되었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으로 각각 계층하락을 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19.1%나 되었다.

조동기(2006)가 2006년 한국사회학회가 실시한 <한국의 중산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두승과 유사한 지위 분류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핵심적 중산층은 35.4%, 주변적 중산층은 31.5%로 나타나, 중산층은 모두 66.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동일한 조사에서 자신이 중간계층에 소속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8%로 실제 중산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객관적인 중산층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1%에 불과했다.

이는 중산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간계층을 보는 시각과 상당히 차이를 보여준다. 즉 “당신은 우리 사회 어느 층에 속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당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신이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속에서 하층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그렇다고 아직 중산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있음을 의미한다.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소위 ‘중산층 문화’를 공유하는 계층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사회학회의 2006년 조사에서 하층의 59.5%가 스스로 중간계층이라는 인식을 보였고, 서울시정개발원의 2002년 조사에서도 하층의 84.8%가 스스로 중간계층이라는 답변을 했다(표 4-18). 서울대 인구발전연구소의 1992년 조사에서도 근로계급의 77.3%가 자신을 중간층으로 인식했다. 이는 말 그대로 중간계층 의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계급 의식이 희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18) 비중산층의 중간계층 인식 (단위: %)

계층	2006년 하층	2002년 비중산층	1992년	
			근로계급	하류계급
상층	0.0	0.4	0.0	0.0
중간 계층	59.5	84.8	77.3	56.2
중의 상	2.1	1.7	2.5	0.0
중의 중	24.9	33.1	40.3	20.8
중의 하	32.6	50.0	34.5	35.4
하층	40.5	14.8	22.7	43.8

출처: 2006년 자료는 조동기(2006), 1992년과 2002년 자료는 홍두승(2005)

반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바라보는 인식이 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495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30대와 40대는 중산층의 소득 기준으로 523만 원과 515만 원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해 2012년 중위 소득 350만 원의 150% 정도에 도달하고 있다.

조동기(2006)의 조사에서도 중산층이 되려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소득과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그만큼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부쩍 높아져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간계층에 대한 귀속 의식과 중산층에 대한 귀속 의식이 나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높아진 중산층에 대한 인식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계급의 분화만큼이나 심각한 분화 현상이 중산층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그 결과 중산층의 이질화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1980년대까지 중산층은 극히 모호한 계급 또는 계층이었지만 경제적 위치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위 상승을 열망하는 많은 서민에게 사회의 중간층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이동의 통로를 제공해주는 비교적 열려 있는(open) 계층이었다(구해근, 2007: 282).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중산층은 상류 중산층, 안정적 중산층, 불안정 중산층의 세 개의 집단으로 분화되었다(구해근, 2007: 275-277). 상류 중산층에는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오히려 더 굳건해진 고액 임금의 전문직과 관리직, 중소기업의 기업주 또는 독립 자산가 집단이 포함된다. 안정적 중산층은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신중간계급과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구중간계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안정 중산층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강 이동한 화이트칼라나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상류 중산층과 나머지 중산층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분화가 확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의 중산층이 실직과 임금삭감 등을 경험하며 불안정 중산층으로 전락한 반면 상류 중산층은 여유 자본으로 폭락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고금리 이자소득을 통해 자산을 증식했다. 그 결과 이들 간에는 단순한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소비행태와 주거지역, 자녀교육 전략 등 생활양식 전반에서 차별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임금노동패널 조사를 한 결과, 관리직과 전문직의 소득은 반(半)전문직과 기술직 종사자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무직과 판매직, 서비스직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광영, 2006a). 즉 화이트칼라의 구조적 분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중산층 내 상층과 하층 간의 이념적 분화가 발생하고 있다(김호기, 2008). 또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중산층과 주변 중산층 간의 새로운 차이

가 조성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장미혜, 2008).

상류 중산층은 상류계급과 함께 한국사회의 중요한 기득권 집단으로 등장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와 그에 따른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주도하고 다른 중산층 및 서민층을 견인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다른 하위 계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폐쇄적 장벽을 구축한다.

요컨대 최근 중산층은 내부 분화로 이질성이 커진데다 사회적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상류 중산층의 폐쇄적 성격이 강화되고 다른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면서 계층상승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열려 있는 사회통합적 계층으로서의 중산층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중산층의 동요는 곧 중산층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위기의식을 강화했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정치균열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는 그 후 전개된 사회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노동자계급보다는 신중간계급을 위시한 중간층의 정치적 활성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46) 유팔무 외(2005)와 신광영(2004a)의 경우 “중산층의 몰락”론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과장되게 유포된 담론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에 대한 분석결과, 중산층이 한 때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이후 본래의 규모를 점차 회복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외환위기 이후 실업은 대부분 노동자계급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간계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했다(신광영, 2004a: 232-234). 즉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 정부가 집계한 전체 실업자 수는 141만 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직업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간계급에 속하는 입법공무원과 관리직 종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 1997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불과 2만 7,000명 정도만 감소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노동자들이 68만 명도가 줄어 최대의 감소폭을 보였고, 판매서비스직 30만 명, 단순노무직도 24만 명 감소하는 등 6개월 만에 무려 120만 5,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를 잃거나 하층 노동자로 하강 이동을 한 중산층이 20%에 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중 1/4 내지 1/5은 1년 뒤인 1999년쯤 중산층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팔무 외, 2005: 176-178). 요컨대 중산층이 외환위기로 인해 받은 충격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판매자영인의 경우 27.7%로 복귀율이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는 19.1%, 민간 부문 종사자는 25.7%의 복귀율을 보였다. 반면 하층 노동자의 경우 실직률은 38.0%에 달해 중산층 중 실직하거나 하층 노동자로 전락한 화이트칼라의 비율 31.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전반적인 비율상으로 중산층이 아직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중산층이 사라져버렸다는 의미에서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4) 중산층의 정치적·이념적 성향

중산층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는 1980년대 중후반에 학계에서 세 가지 엇갈리는 입장이 나타났다(김성수, 2003; 김영태, 2006; 함인희·이동원·박선웅, 2001).

먼저 중산층의 보수적 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김진균·조희연(1985), 최장집(1985) 등 진보적인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취했던 입장으로, 이들은 중산층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만큼 본질적으로 정치질서와 사회 안정을 바라고 보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중산층의 진보개혁적 성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상진(1986; 1987) 등 중도적 그룹이 취했던 입장으로, 이들은 중산층이 비록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하위 계층에 비해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끝으로 중산층의 단일한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구해근(2007), 한상진(1987), 홍두승(2005; 2006) 등의 사회학자들은 중산층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치 이념적으로 이중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즉 중산층은 진보 혹은 보수라는

계급론적 관점에서 “중산층의 몰락”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경제위기 이후 정치적 해법을 논하는 데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계급을 제쳐두고 “중산층의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문의 관심은 경제위기 이후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경제위기가 각 계급 내지 계층에게 미친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있다. 즉 경제위기 이후 각 계급 내지 계층의 사회정치적 태도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정치적 귀결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중산층의 몰락은 실제 몰락한 중산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복귀했느냐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선 안정적 고용의 대명사였던 중산층의 지위가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크게 흔들림에 따라 중산층이 느낀 위기감은 실제 실업률이 나타내는 위기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중산층의 분화가 야기한 충격은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중산층 내부의 계층상승 경쟁을 보다 혹독하게 하거나 계층상승 경쟁을 포기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는 곧 중산층이나 혹은 중산층을 지향해온 하층 노동자 등에게 “중산층의 몰락”이 아닌 “중산층 신화의 몰락”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는 신허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 절에서 논한 이념적 균열의 변화와 맞물려 이들의 정치적 태도나 행동에도 이전과 다른 변화를 야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일한 이념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입장을 쉽게 바꾼다는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산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그 이후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 “중산층의 몰락”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산층의 정치 성향에 대한 연구가 다시 등장했지만,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연구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이외에도 우리 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태도를 통해 분석을 시도한 만큼 중산층의 전반적인 이념성향의 변화를 읽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주관적 이념성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 중산층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높게 나왔다.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한국갤럽이 2002년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사회인식 조사>를 홍두승이 중산층 분류기준(계급적 지위, 소득, 교육수준)에 입각해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핵심적 중산층이나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는 주변적 중산층 모두 보수가 진보보다 훨씬 많았다.

(표 4-19) 2002년 중산층의 이념적 성향 (단위: %)

이념성향	핵심적 중산층	주변적 중산층	비중산층	전체 평균
보수	44.2	50.4	48.8	48.4
중도	24.3	25.2	27.4	26.3
진보	31.6	24.4	23.8	25.3
계(N)	100.0(206)	100.0(254)	100.0(533)	100.0(1,023)

출처: 홍두승(2005: 124)

하지만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 보수가 44.2%로 전체 평균 48.4%에 미치지 못하고 대신 진보가 31.6%로 전체 평균 25.3%보다 다소 많았다. 핵심적 중산층이 주변적 중산층이나 비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것이다. 반면 주변적 중산층은 보수가 50.4%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이 2006년 한국갤럽과 함

게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4-20). 보수는 핵심적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많아진 반면 진보는 핵심적 중산층이 하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 핵심적 중산층은 보수와 진보가 비슷한 반면, 하층은 보수가 진보의 세 배 가까이 되었다.

(표 4-20) 2006년 중산층의 이념적 성향 (단위: %)

이념성향	핵심 중산층	주변 중산층	하층	전체 평균
보수	29.1	36.7	37.7	37.7
중도	46.3	41.1	48.5	45.4
진보	24.7	22.2	13.8	20.9
계(N)	100(592)	100(409)	100(390)	100(1,391)

출처: 장원호 · 김병조(2008: 246)

이와 같은 결과는 중산층이 산업화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보다 더 보수적일 것이란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핵심적 중산층의 상대적인 진보적 성향은 주요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되었다(표 4-21). 2002년 조사에서 북한 지원에 대한 반대가 핵심적 중산층보다 주변적 중산층이나 비중산층에서 10%포인트 안팎이나 높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도 핵심적 중산층에서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2006년 한국사회학회 조사에서도 핵심 중산층일수록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중산층에서부터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조사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찬성은 핵심적 중산층에서 비중산층보다 15.3%포인트나 높았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도 비중산층에서 핵심적 중산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왔고, 혼전성관계 등 일반적인 사회의식도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중산층이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즉 상속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은 핵심적 중산층이 가장 적었고, 법 및 제도의 계

급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도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지지하지 않았다. 2006년 조사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으로 갈수록 1가구 1주택 대형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반대해 보수적 성향을 드러냈다.

(표 4-21) 주요 쟁점에 대한 계층별 지지율 (단위: %)

분야	의견	핵심 중산층	주변 중산층	비중산층
북한관	북한 무조건 지원은 반대	63.6	71.3	74.7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49.5	57.9	62.3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55.8	49.6	40.5
노조관	근로자들의 파업 자제	48.5	54.7	61.5
	혼전성관계 반대	35.0	39.8	51.2
사회관	집안 어른 체면 고려	38.8	47.2	49.7
	법과 제도는 부자들 편향	70.9	75.2	79.5
경제관	상속제도 폐지	16.0	17.3	22.5
	분배보다 경제성장 중시	39.3	42.1	50.7

출처: 홍두승 · 김병조(2006: 12)

중산층을 다시 신중간계급과 구중간계급으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다(표 4-22). 2003년 한국갤럽의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전체 수준은 보수가 월등히 많았지만, 화이트칼라, 즉 신중간계급은 블루칼라나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중 진보는 33.3%로 학생(32.5%)과 비슷해 모든 계층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자영업자, 즉 구중간계급은 보수가 51.7%로 주부(53.5%)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2003년 4월 부문별 이념성향 (단위: %)

구분	전체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	학생	무직
진보	27.2	29.0	24.0	27.9	33.3	23.6	32.5	23.1
중도	26.3	33.8	24.3	27.5	25.6	22.9	33.2	26.9
보수	46.6	37.1	51.7	44.6	41.1	53.5	34.2	49.9

출처: 한국갤럽(2003)

신중단계급과 구중단계급의 관계는 앞에서 나타난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의 관계와 유사해 보인다. 즉 핵심적 중산층/신중단계급이 주변적 중산층/구중단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교육수준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른 진보성향을 구분한 2002년도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이상 학력 보유자들의 경우 고졸이나 중졸 이하에 비해 훨씬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표 4-23). 또 핵심적 중산층의 경우 대부분 대학 이상이었 고, 주변적 중산층은 고졸 이상이었으며, 비중산층은 중졸 이하의 학력자들까 지 포함해 다양한 학력 분포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중단계급의 학력수준이 구 중단계급의 학력 수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점과 유사하다.

(표 4-23)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별 진보 (단위: %)

계층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이상
핵심적 중산층	-	-	32.2
주변적 중산층	-	15.4	31.4
비중산층	18.2	24.4	37.7

출처: 홍두승(2005: 132)

요컨대 중산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이 여전히 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몰락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진보 쪽으로 좀처럼 이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보수화된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산층 내에서도 이념적 분화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화이트칼라, 즉 신중단계급일수록,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핵심적 중산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다. 주변적 중산층 또는 구중단계급은 하층과 비슷한 정도의 보수적 성향을 보이거나 쟁점에 따라서는 하층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물론 핵심 중산층 혹은 신중단계급의 진보성도 쟁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정치적 의식의 측면에서는 하층보다 훨씬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본인들이 기득권의 지위에 오른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층보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4. 노동계급의 정치적 상황 변화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조직을 강화하며 급속히 계급형성의 단계를 밟아왔다. 이 노력은 제2의 노총인 민주노총을 결성해 어용노조의 노선을 걸어온 기존의 한국노총을 노동계급 쪽으로 전인하는 등 큰 성과를 낳았다. 또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을 결성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한 적응 실패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자들이야말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피해자이지만, 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안 심리의 증대가 곧바로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량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진보정당의 분열과 이합집산 등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정치 역량은 후퇴하고, 이로 인한 실망감으로 기존 보수 정당의 지지기반을 넓혀주고 있다.

신중단계급을 위시한 중간층이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정치적 활성화의 길을 강화해온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 결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새로 형성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는 전통적인 계급균열 구조로 연결되지 못하고, 신중단계급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 위주의 ‘개혁적 진보’라는 그룹을 형성하며 한국 사회 특유의 ‘계급 없는 이념균열’ 구조를 낳게 되었다.

47) 한국에서 자본축적의 진행과 그에 따른 계급구조의 변화, 각 계급, 특히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취한 입장과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는 안승국(2003) 참고.

(1) 노동계급의 형성

노동자들의 계급 형성은 “구조적으로 정의된 노동계급이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로 형성되는 과정”(조돈문, 2011: 106)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생산관계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자리매김한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계급 이익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집합적 행동을 할 때 진정한 계급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급이 집합적 행동을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노동운동 단체 나아가 노동자 정당과 같은 조직적 자원(資源)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우 대중조직으로서 노동계급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조직적 자원을 기초로 자신들의 계급이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통해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계급형성에 조직과 이데올로기라는 두 자원(資源)이 필요하다.

한국 노동자들이 계급형성의 수준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해방 직후였다(조돈문, 2011: 109-118). 당시 노동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았지만, 조직률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거의 100%에 이르렀고,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를 중심으로 단일한 대오를 형성했다. 전평은 당시 새로운 국가형성을 둘러싸고 미 군정을 상대로 정치투쟁을 주도하며 총파업을 이끌 정도로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도 계급형성에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거센 탄압을 받으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해체되었다.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이름을 바꾼 ‘어용노조’들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노동통제 혹은 국가적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 시기 노동조합 조직률은 10-20%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민주노조는 명맥만 겨우 유지할 정도였다. 그 결과 계급으로서 노동자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계급형성은 재개되었다. 우선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 수가 뚜렷이 증가했다. 1949년 전체 인구의 12.5%에 불과하던 노동자는 1970년에 전체 인구의 30%, 199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2.3%에 달했다(표 4-24). 해방 당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던 농민을 제치고 노동자가 최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표 4-24) 노동자계급의 증대 (단위: %)

구분	1949년	1960년	1970년	1990년	2003년
전체 노동자	12.5	17.3	30.6	42.3	44.8
숙련 노동자	2.3	3.6	7.3	14.7	22.2
비숙련 노동자	10.2	13.7	23.3	27.6	22.6

출처: 조돈문(2011: 89)

또 제조업 공장 내에서 동질화된 노동과정의 반복과 권위주의 정부 이래 지속되어온 비인간적인 처우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계급으로 형성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⁴⁸⁾ 소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적 거주공간은 노동자들의 생활양식 공유와 노동자 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장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1970년대 이래 정치화된 지식인 집단이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노동자들과 결합해 민중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과 계급의식을 불어넣게 되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권위주의 정부는 이 과정에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며 억압과 탄압 위주의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국가가 노동자계급 형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지만, 이는 역으로 노동운동이 국가와 항상 직접 대면하게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곧바로 정치화하는 데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고 할 수 있다(정진상, 2006: 31-33).

권위주의 정부 시절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던 민주노조 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의 공간이 열리면서 7월부터 폭발적인 형태로 분출되었다(구해근 2002: 223-234). 울산에서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기 파업 투쟁은 7-9월 석 달 동안 3,341건에 달해 1960년대 초 이후 발생한 전체 파업 건수를 넘어설 정도였다. 그 결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1년 만에 4천여 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결성되었고 70만 명의 노동자

48) 1980년대까지 공장에서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노동과정이 조직되고 권위가 행사되는 과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일기와 수기 등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연구한 글로는 구해근(2002: 79-100).

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가파르게 상승해 1986년 12.3%에서 1989년 18.6%로 정점에 달하게 된다(표 4-25).

(표 4-25)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쟁의

연도	노동쟁의(건)	노동조합(개)	조합원(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A	B
1985	265	2,534	1,004	15.7	12.4
1986	276	2,658	1,036	15.5	12.3
1987	3,749	4,086	1,267	17.3	13.8
1988	1,873	6,142	1,707	22.0	17.8
1989	1,616	7,883	1,932	23.3	18.6
1990	322	7,698	1,887	21.5	17.2

노동조합 조직률: A는 비농업 정규직 노동자 총수에 대한 노동조합원 수 비율
B는 고용된 노동자 총수에 대한 노동조합원 수의 비율

출처: 구해근(2002: 229)

섬유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단지의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던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 후반 노동자 대투쟁은 중화학공업 위주의 대기업에 포진한 남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운동의 중심적 행위자들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 이 투쟁을 주도한 당사자가 외부 지식인 집단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억압을 당하면서도 정당한 투쟁조직을 갖지 못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투쟁 조직인 민주노조를 대거 결성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 노동자 대투쟁은 임금인상과 작업장 민주화, 그리고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결성이라는 요구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노중기, 2012). 노동자 대투쟁은 폭발적인 파업 양상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투쟁이라는 한계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평화적 투쟁이었

을 뿐, 노동자정당 건설이나 변혁이라는 정치적 전망은 전혀 부재했던 것이다.

노동자 대투쟁은 이와 같은 정치적 전망의 부재로 인해 민주노조의 시민권 획득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즉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도 4대 노동악법으로 불린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금지,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금지 등과 관련된 노동법 조항이 그대로 온존했다. 이 조항들이 폐지되고 민주노조가 시민권을 얻기까지는 그 후 10년 이상이 더 걸려야 했다. 이른바 “1987년 노동체제” (노중기, 2012)가 지속된 것이다.⁴⁹⁾

“1987년 노동체제” 기간 자본은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소위 “신(新)경영 전략”으로 불리는 새로운 노동통제 전략을 도입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분열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또 국가는 온존한 노동악법들을 이용해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해체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격을 가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8.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을 때까지 11.2%로 떨어졌다. 노동조합 수도 1989년 7,883개에서 1997년 5,733개로 1/3 가까이 줄었고 조합원도 같은 기간 193만여 명에서 148만여 명으로 50만 명 가까이 대폭 감소했다.

노동계급은 이에 대해 연대투쟁으로 응수했고, 그 결과 제조업에서 시작해 사무직과 전문직, 공공부문 노동자로 조직을 확대하게 된다.⁵⁰⁾ 즉 1990년 1월 제조업 생산직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600여개 노동조합, 20여 만 조합원으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약칭 전노협)를 건설한다. 이후 사무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 업종 노동조합 회의’와 현대그룹과 대우그룹 등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조회의’를 결성해, 전노협과 함께 이들 두 단체 등을 묶어서 1995년 민주노총을 출범시켰다. 민주노총 출범 당시 소속된 노동조합은 862개, 조합원은 42만여 명에 달하게 된다.

49) 노중기(2012)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외환위기를 맞아 새로운 노동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10년 동안 “1987년 노동체제” 기간으로 판단한다. “1987년 노동체제”는 지속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에 대해 국가와 자본의 차원에서 “노동 없는 민주화” 전략으로 응수하던 시기이다. 하지만 “노동 없는 민주화” 전략은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민주화 프로젝트”와 “선진화 프로젝트”가 결합된 새로운 노동체제, 즉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대체된다.

50) 이 기간 동안 생산직 노동조합과 사무전문직 노동조합,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건설과 연대, 산업별 노동조합 건설 현황에 대해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06), 조돈문·이수봉(2008), 최장집(2005) 참고.

새로 건립된 민주노총은 1996년 12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전국적인 총파업을 지휘하며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노동법 재개정을 약속받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 또 그 이듬해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폐지됨으로써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만에 민주노조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시민권을 획득한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건설을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당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춘 민주노총의 합류는 진보 정당 건설에 주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했고, 그 결과 다수 분파로 갈라져 있던 진보 진영이 합류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마련되었다(정영태, 2011). 민주노총과 진보 정치 세력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승리21을 조직해 대응했다가 2000년에는 진보세력 내 최대 정파인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이 모두 참여한 민주노동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한국의 노동계급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여 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을 통해 전국 단위의 노동운동의 구심체인 민주노총을 결성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표인 민주노동당을 건설하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 계급형성의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중요한 분수령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여전히 10%대 초반에 머무를 정도로 조직력이 떨어진데다,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진보정당이 국회 내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서, 기존 정당균열 구조를 진보정당의 활동에 유리한 계급균열 구조로 전환하는 데 실패한다.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계급형성 단계를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취약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적 개혁 바람이 불면서 계급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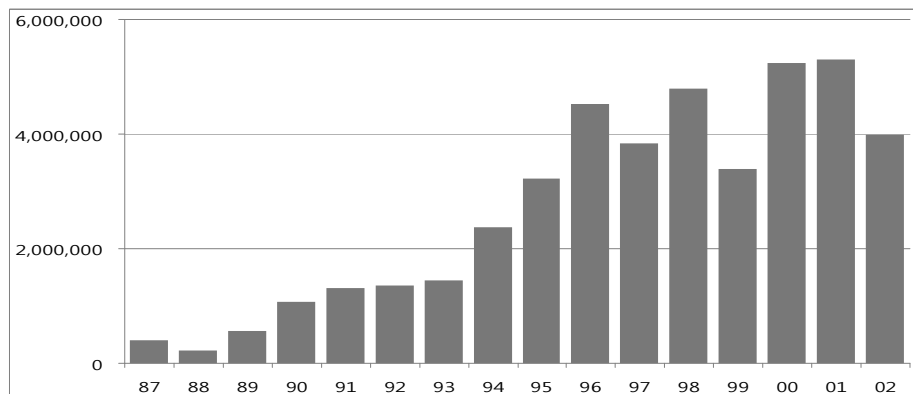
(2) 경제위기 이후 노동계급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확대된 민주화 공간에서 노동계급의 조직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계급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보수 정당들 간의 협약에 근거해 이루어진 제한된 민주화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오랫동안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수준에서 노동계급의 형성에 한계를 가져왔다.

특히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중간층 중심의 시민운동은 기존의 민중운동 담론을 빠르게 대체해 버렸다.⁵¹⁾ 즉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에서 노동운동이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화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시민’으로서 표출하는 공간을 열어놓았지만, ‘계급’으로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정성진, 2006: 37).

동시에 한국 경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까지 지속되어온 주변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했다.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한국경제의 주변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상시적인 이윤율 저하에 직면해 구조적 위기에 봉착을 한 것이다. 그러자 자본은 대내적으로는 정규직 대신 임시일용직의 고용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해외투자를 꾸준히 늘리기 시작했다(그림 4-2).

(그림 4-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해외직접투자통계

그 결과 1990년 10억 6천만 달러에 그쳤던 해외투자는 김영삼 정부 시기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1994년 23억 6천만 달러로 두 배, 1996년 45억 2천만 달러로 다시 두 배가 늘었다.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 2000

51)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의 영향력 퇴조 현상에 대해서는 신광영(2004c) 참고.

년 52억 4천만 달러, 2005년 71억 8천만 달러, 2007년 222억 2천만 달러, 2011년 255억 9천만 달러 등 기하급수적 증가 양상을 보였다.

자본 해외유출의 급증은 노동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교섭력의 증대, 역으로 노동의 교섭력 약화를 의미한다. 노사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본은 언제든지 해외로 탈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은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국내의 기업을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으로서는 “1987년 노동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IMF 외환위기는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노동조합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외환위기는 노동계급 형성을 둘러싼 투쟁의 주체들로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다. 이 외적 변수(外的 變數)가 준 충격은 예상 이상이였다.

우선 외환위기를 당한 직후인 1997년 실업자는 통계청이 밝힌 정부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56만8천 명에서 1998년 149만 명으로 90만 명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실업률 또한 2.6%에서 단 1년 만에 7.0%까지 폭증했다. 1960년대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량 해고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 정리해고 및 파견근로제의 도입과 함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교사 및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빅딜(Big Deal)을 시도했다(노중기, 2008). 즉 노동의 시민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정리해고에 반발하지 않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강요하였다.⁵²⁾ 그 결과 노동 현장에서는 경제위기를 빌미 삼아 정리해고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대규모 실업자는 이후 재취업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 결과는 이전과 비교

52) 민주노조가 국가 및 자본과 투쟁이 아닌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표를 이루려 시도한 합의주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노중기(2008) 참고. 노중기는 여기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이 들어올 것을 강요하면서 시작된 노정 간의 합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항상 실패로 끝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노정 간 합의가 실패로 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이 노정 간의 합의를 강제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하는 비정규직 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의 분열도 심화되었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 하에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해도 교섭력이 수직하강하며 구조조정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다. 임금상승률도 위기 이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높으면서 노동계급 간의 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1980년대까지 한국사회 노동자계급은 균질적 노동이 이뤄지는 노동과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주변적 지위라는 측면에서 동질성(同質性)을 기반으로 계급형성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급의 분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질성(異質性)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7년 노동체제”에서 조직된 민주노조 기반이 무너지고 걸음마를 내딛기 시작한 노동자계급의 해체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해고와 대량실업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계급은 1999년부터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며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경제위기를 구실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진 직접적인 배경에는 신중관계급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있다. 시민운동은 민주화의 공간이 열린 1990년대부터 민중운동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노동 문제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다.⁵³⁾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과 강력한 구조조정, 노동조합의 파업 실패, 시민사

53) 신광영(2011)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사관계가 구조적인 변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국가와 자본을 한 편으로 하고 노동을 다른 한 편으로 하는 양자 대결관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권의 수평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노사정 위원회가 수립되면서 그동안 유착되어 있던 국가와 자본이 분리되어 노동과 자본, 국가의 3자 관계가 잠시 유지되었다. 나아가 민주화의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운동이 민중운동과 분리되어 활성화되면서, 시민운동이 노동 문제에 개입하면서 기존의 노사관계가 노동과 자본, 국가 외에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4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가세로 노동운동은 활동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좁아졌다.

회의 파업반대 움직임 등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된 보수화 분위기를 반영한다. 실제 1991년과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 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계급에서 보수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표 4-26).⁵⁴⁾ 즉 노동계급을 비롯해 모든 계급에서 계급의식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표 4-26) 계급별 계급의식의 변화

계급	1991년	2003년	변화
자본가	.2564	-.0002	-0.2566**
구중간계급	.4137	.0684	-0.3453**
신중간계급	.4499	.1994	-0.2505**
노동계급	.4890	.2775	-0.2115**
계	.4437	.1836	-0.2601

주: ** $p < .01$, * $p < .05$

출처: 조돈문(2006: 29)

물론 모든 계급 중에서 노동계급의 보수화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노동계급과 다른 계급 간의 이데올로기적 격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1년 노동계급과 신중간계급 간의 계급의식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2003년에는 계급의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확대되었다.⁵⁵⁾ 이는 노동자계급이 그나마 다소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신중간계급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노동자들의 보수화가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54) 1991년 조사 자료는 “경제활동 및 생활 실태 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1,982명의 응답지를 통해 분석되었고 2003년 조사 자료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조사”로 전국 성인 남녀 1,820명의 응답지를 수집해 분석되었다. 조돈문(2006: 23-24) 참고.

55) 노동자계급 부문 간의 계급의식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실업, 빈곤, 불평등이라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계급의식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조합원들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 간의 차이가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 민주노총이 이데올로기적 대항기구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조돈문, 2006).

(정영태, 2008). 조합원들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와 진보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확대되어 보수 세력의 집권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다.⁵⁶⁾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의 주된 피해자로서 노동자계급의 불만이 가장 높으면서도 이들의 투쟁의식이 커지지 않고 반대로 보수화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이 고용보장에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돈문, 2008). 즉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연대투쟁은 물론 개별적인 생존전략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기업경쟁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 조돈문(2008)의 2003년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에도 실업을 겪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계급의식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을 경험한 뒤 재취업한 노동자들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생존자들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경쟁력 중심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실직자들은 반대로 저항감이 커지면서 계급적대 내지 반(反)신자유주의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동자들의 이질화와 분해현상, 자본의 교섭력 강화, 시민사회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의 입지 약화, 연이은 노동자 의식의 보수화 등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총체적 현상에 직면하여 민주노조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자본과 국가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수립한 “종속적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노동체제(노중기, 2012)에 대응한 ‘대항 헤게모니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다.⁵⁷⁾

56)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노동자 의식과 대조적이다. 당시 한국노총 소속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본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면서 대표적 보수정당인 민자당이나 그 후신인 한나라당에 대해 지극히 낮은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임영일·임호(1993), 이종래(2003) 참고.

57) 민주노총의 핵심적 구성원은 제조업의 정규직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제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노동자들로서, 외환위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인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직, 여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노동운동의 위기는 곧 민주노총의 위기일 수 밖에 없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이 향후 사업장 내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실업자, 신빈곤(특히 근로빈곤층) 문제 등 새로운 노동조건에 맞춰 노동문제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

노동자 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도 출범 초기의 기대와 달리 정치세력화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선 계속해서 10석 안팎의 의석만을 차지한 소수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유의미한 세력으로 남지 못했다. 게다가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대북 노선과 당내 정파적 대립 등의 문제로 분당과 합당, 재(再)분당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 정당으로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데 실패했다. 즉 한국정당체계에서 진보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균열을 적극 부각시켜 기존의 정당균열선을 지역균열에서 계급균열로 전환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진보정당의 등장 이후에도 보수 정당의 주된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머물게 되었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위기 상황은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신중간계급을 비롯한 중간층이 정치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도개혁” 성향의 목소리를 내며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지극히 대조되는 현상이다. 노동자 ‘계급’의 목소리가 한국 정당체계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도개혁적인 신중산층’, ‘시민’의 목소리가 채우고 있다.⁵⁸⁾

5. 소결

2000년대 이후 이념균열 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한국사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산업 사회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사회는 신중간계급의 양산과 함께 노동의 분화를 야기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분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었다. 자산의 양극화와 기업 부문 간의 양극화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강화했다.

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외부자의 증가가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영범·박준식(2011) 참고.

58) 한국사회에서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이슈들 그리고 노동계급의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비결정”의 영역에 머무는 현상, 즉 이들 사회경제적 문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온 결과 민주주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최장집(2005), 유철규(2004; 2005) 참고.

그 결과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말에서 표현이 되듯 우리 사회 계층구조에도 혁명적 변화가 발생했다. 1960년대 산업화 정책 이후 안정적 지위를 갖고 있던 중산층까지도 구조조정을 회피할 수 없었고 그 바람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이 몰락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이루어온 중산층이 안정적 중산층과 불안정 중산층으로 분화되면서 불안정 중산층을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중산층의 분화는 중산층의 귀속의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중간 계층에 속한다는 의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중산층에는 소속되지 못한다는 양면적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중산층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 중류층 의식은 형성되었지만, 사회적 지위하강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으로서 중산층 몰락의 또 다른 지표일 수 있다.

그리고 중산층 귀속의식의 변화는 이들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도 변화를 야기했다. 중산층은 경제발전의 수혜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는 것 이란 일반적인 전망과 달리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정치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영유하게 된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느 계층보다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비해 노동자계급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계급형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을 겪으면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계급형성의 단계에 들어섰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동질적인 노동과정을 거치면서 계급의식 역시 고양되면서 노동자 정당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계화 차원의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고스란히 맞게 되었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일부 조직된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을 항시적인 위기 상태에 직면하게 만드는 노동자 내부의 분화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노동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노동자의 형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제 3 절 정당체계 재편성의 주체: 신(新)중산층의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균열 구조에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세계적인 냉전체제 해체와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반공을 주축으로 한 이념균열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의 몰락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이로 인해 서구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균열구조로 전화(轉化)할 조건이 형성되었다. 균열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노동계급의 경우 계급으로 형성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부 통치를 겪으면서 사실상 계급 해체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계급형성의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거센 공세에 직면하면서 계급형성을 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급형성의 정체 혹은 중단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까스로 출범한 노동자 정당도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정파 다툼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기존 정당균열선을 계급정치를 위한 균열선으로 대치(代置)하는 데 실패했다.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정치사회적 흐름은 신(新)중산층의 정치적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먼저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시민운동을 들 수 있다. 시민운동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지식인을 비롯한 신(新)중간계급 위주의 신중산층이 주로 참여한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이었다. 또 2000년대 3김의 퇴장과 함께 정당개혁의 열풍이 불고 미국식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되면서 노사모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활성화가 노동자계급보다는 신중간계급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정당정치에서는 기존의 지역주의 균열 대신 신중산층이 중심이 된 우리 사회 특유의 ‘정치주의적 이념균열’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반영된 서구식의 계급정치가 아니라, 노동이 여

전히 배제된 채 정치적 개혁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보 대 보수를 가르는 독특한 이념균열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

1. 1990년대 시민운동과 신중산층

(1)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화

1) 시민운동의 급속한 성장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불가역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만들었다.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위주의 혹은 기득권 세력도 더 이상 어떠한 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기득권 세력 대 기층 민중운동 세력 간에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치열한 쟁투가 벌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사실상 주도했던 기층 민중운동 세력은 정치·경제적 권력의 급진적 재편을 포함한 확실한 변혁을 요구했고, 기득권 세력은 이를 자신들의 본질적 이해가 침해받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개혁으로 막으려 하면서 양자 간의 본격적인 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6.29 선언은 권위주의 정부가 아래로부터의 최소한의 개혁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이를 계기로 반독재민주화 운동 세력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보수야당을 비롯한 제도정치권이 기층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민주화 운동 세력에서 이탈하였고, 본격적인 권력쟁탈전이 벌어진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민중운동 세력은 후보단일화론과 비판적 지지론, 독자후보론 등으로 다시 갈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대선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집권하면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기득권 세력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 민주주의”(손호철, 1993)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민주화 대신,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막기 위해 위로부터 진행된 “수동적 혁명”(조희연,

2003)에 따른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밝게 된 것이다.⁵⁹⁾

민주화운동 세력은 이후 민주주의의 내용과 실현 방법을 놓고 다시 네 갈래의 길로 분화되었다(김정훈, 2004; 2006). 먼저 정당을 통해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세력과 사회운동 노선을 고수한 세력이다. 정당 진입 세력은 다시 기존 정당에 편입한 세력과 독자적인 노동자정당을 만들려는 세력으로 나뉘었고, 사회운동 세력 역시 계급적 노선을 견지하며 민중운동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새롭게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분리되었다.

시민운동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이다. 1989년 부동산 투기 근절과 경제정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선언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의 등장을 시작으로 1990년대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기존의 민주화운동 세력 내에서 가장 거리가 있던 이들은 비계급적 혹은 초계급적 목표를 지향하며 기존 민중운동과 스스로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은 온건 이념을 내세우며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적 요구를 했고, 변혁노선에서 이탈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보수 언론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운동권은 다시 분화되기 시작했다. 초기 경실련 중심의 보수적인 시민운동에 반대하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민중적 시민운동” 혹은 “진보적 시민운동”(조희연, 2003; 2008)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운동권이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단체로 나뉜 것이다. 또 시민운동이 환경과 여성, 소수자, 인권, 평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단체 내부의 분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로써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이원적 구조가 완전히 공고화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가 1970년대 후반 이래 지속되어온 민중운동이 꽃을 피운 시기였다면, 1990년대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서로 다른 전략적 목표 하에 경쟁적 공존을 추구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59) 1987년 보수적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으로는 임혁백(1990)과 성경룡(1993) 등 참고. 임혁백은 1987년 집권 엘리트 및 반대 세력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열하고, 전략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양측에서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보수적 민주화가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성경룡은 집권 엘리트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이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애초부터 독재타도와 형식적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 온건한 전략을 취한 사회운동이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온건책을 채택하도록 엄청난 규모의 힘으로 강제한 결과 타협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60) 우리나라 시민운동과 유럽 신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된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비롯해 두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배제 정책을 유지하며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를 추진하던 국가권력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해 분리대응 정책을 폈다. 즉, 급진변혁을 추구하는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탄압과 배제 정책을 사용하고, 온건개혁을 추진하는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섭정책에 나섰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배제와 포섭이라는 양면정책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김영삼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노동운동에게까지 제도적 포섭의 기회가 주어졌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구도를 유도했다(차성수, 1998).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노동운동의 상승세는 꺾인 반면에, 시민단체는 급속도로 성장했다(표 4-27). 시민단체는 199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4,023개, 지역 지부까지 모두 포함하면 2만여 개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시민단체 평균 회원 수도 6,284명, 연평균 예산규모는 3억7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종합적 시민단체’의 경우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었고 연평균 예산규모도 10억 원에 달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같이 규모가 큰 ‘전문적 시민단체’의 경우 회원 수가 수만 명, 예산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에 이르렀다.

(표 4-27) 2000년 주요 시민단체의 현황

구분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회원 수(명)	2만	1만	5만 3천	1만 5천
상근자 수(명)	56	48	50	28
연간 예산(원)	10억	8억	35억	10억

출처: 시민의 신문(2006)

2) 시민운동의 한계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태석(2006) 참고.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달리 본래적으로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다. 이념이나 전략 그리고 운동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기존의 민중운동과 달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주의 국가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운동이다. 즉 시민운동은 “그 이념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자, 그 활동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일정하게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조건에서 그 조건들을 활용하면서 전개되는 체제 내적 운동’ 이다” (조희연, 2003: 235-236).

시민운동의 추진 주체 역시 전문가와 지식인, 화이트칼라 등 신중간계급으로서 고학력자들로 구성된 신중산층이 중심을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한편으로는 민중운동 세력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정당을 구성하는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신중산층의 정치적 동원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⁶¹⁾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새롭게 호응과 지지를 보낸 층은 대부분 과거의 사회운동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거리를 유지했던 온건개혁적 혹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지식인, 전문가, 시민과 언론이었으며, 계급적으로는 대개 신중간계급이었다” (유팔무, 1997: 91).

실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90개 주요 사회운동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단체 회원 중에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사무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판매생산직의 경우 10%대에 머무르고 있다(표 4-28).

(표 4-28) 사회운동 단체 회원의 직업구성 (단위: %)

61) 조대엽·김철규(2007)에 따르면 시민운동이 1990년대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민중운동 세력의 대안 상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열린 시민사회의 공간과 함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 따른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물질적 기반이 향상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신중간계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들의 급진적 선택이 시민운동으로 귀결되었다.

구분	여성운동	환경	인권	사회복지	구사회운동
전문사무직	33.1	51.6	74.8	55.2	53.2
판매생산직	11.8	13.9	14.5	14.4	21.6
농어민	8.5	3.4	0	1.9	1.6
주부	42.8	11.3	2.8	14.1	14.6
학생 및 기타	3.8	19.3	2.6	13.7	8.3

출처: 김호기(2001: 64)

시민단체들이 동원한 전략적 이슈도 정치개혁과 법치주의 강화, 부정부패 척결, 시민의 권리 강화 등 신중산층의 높은 지지를 받는 이슈에 집중되었다(표 4-29). 이와 같은 개혁이슈는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평가와 함께 폭넓은 지지를 획득했다. 반면 국가권력이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던 노동의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전략적 이슈에서도 배제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운동 전략은 주로 기존 정치권을 상대로 정책개혁이나 입법 청원을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소위 ‘영향력의 정치’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온건한 운동 전략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개입이 반복되어온 노동운동과 스스로를 차별화하게 되었다. 즉 노동운동과 달리 신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이 된 것이다.⁶²⁾

(표 4-29)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비교

62) 조희연(2004)은 초기 경실련이 중심이 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과 참여연대나 일부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된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을 구분하며 시민운동의 시기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대엽·김철규(2007)와 김정훈(2004)은 이 두 성향의 단체들이 모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주의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건/개혁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정태석(2006)에 따르면 경실련 중심의 “보수적 시민운동” 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운동”이 유럽 신사회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진보적 시민운동은 유럽 신사회운동처럼 신중단계급 위주의 자유주의 운동이면서,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때로는 기존 제도에 대해 “비관론적이고 급진적인” 도전을 하는 운동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민중운동	시민운동
쟁점	노동, 농민, 빈민, 반미, 통일 등	경제정의, 부정부패추방, 환경, 여성, 소수자, 인권, 평화 등
전략적 목표	정치권력의 교체, 경제민주화, 불평등구조 개혁 등	정치개혁, 시장경제 효율성 증대, 생활양식의 변화 등
주체	노동자, 농민 등	중간층, 전문직, 자유직 등
전략적 노선	급진적 변혁운동	온건개혁, 합법성
운동방식	파업, 시위, 농성	언론홍보, 강연회, 서명, 거리행진

시민운동의 온건 개혁적 성향은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자유주의 개혁정치 세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시민운동이 자본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권력은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시민운동은 국가와 함께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묵시적 동맹’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맹을 연결하는 굳건한 지지기반으로 신중단계급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국가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 하면서 중간층과 노동계급의 동시 몰락이 현실화되고 신중산층 위주의 시민운동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국가와 시민운동,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⁶³⁾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 뒤 국가와 신중산층 위주의 시민운동의 관계는 민주화 이전 국가와 민중운동 간의 관계처럼 적대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

63) 이종희(1999)는 시민운동이 자유주의 개혁정부 하에서 정권과 자본의 “관리주의 담당자” 역할을 했으며 기층 민중에 계급적 성격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희연(2001; 2003; 2004)도 시민운동이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부 하에서 국가의 수동혁명적 합리화에 협조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사실상 머물렀다고 비판하고,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저항적 사회운동으로서 급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대화(2004)는 노동운동이 민중적 정체성은 확고히 갖추었지만 시민적 대의에 취약하고 지역운동 기반 역시 취약해 대안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와 그 주도성을 주장한다. 최현(2007)도 노동운동이 공공성의 담지자로 변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익집단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라고 선협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다.

(2)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그 한계

1) 시민단체 주도의 낙선운동

1990년대 10여 년의 시민운동의 성과가 집대성된 결과가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낙천낙선운동(약칭 낙선운동)이었다. 낙선운동은 기존의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제3자의 입장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해오던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의 주체로 직접 등장한 사건이었다. 즉 낙선운동은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단순한 의정감시활동이나 공명선거 운동 수준을 넘어 부정부패 관련 정치인 등에 대한 퇴출을 시도하며 처음으로 직접 정치권에 개입한 것이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낙선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함으로써 1990년대 10년 동안 시민운동의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낙선운동에 대한 기존 정치권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시민운동 단체를 민중운동과 분리해 적극 옹호하던 기득권 세력과 보수 언론은 낙선운동 이후 시민운동 단체에 대해 “김대중 정권의 2중대”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호응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낙선운동을 위한 총선시민연대(약칭 총선연대)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처음 412개였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총선이 끝나고 해체될 무렵에는 무려 1천여 개로 폭증하였다(김호기 2001). 1987년 6월 직선제 쟁취를 목표로 수립되어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 이후 가장 큰 운동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⁴⁾

낙선운동의 성과도 높았다. 먼저 1차 공천반대자 66명, 2차 공천반대자 47명 등 모두 113명의 낙천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그 중 52%가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공천자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낙선 대상자는 86명이었다. 이 가

64) 낙천낙선운동의 구체적인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박원순(2002) 참고.

운데 68.6%인 59명이 총선에서 낙선되었다.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95%가 넘는 낙선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높은 낙선율을 보여주었다(표 4-30).

(표 4-30) 낙천낙선운동 결과 지역별 낙선율

구분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강원	합계
낙선자(명)	19/20	15/18	6/8	16/35	3/5	59/86
낙선율(%)	95.5	83.3	75.0	45.7	60.0	68.6

출처: 김호기(2001: 197)

낙선운동의 성과는 결국 시민들의 높은 지지에서 비롯되었다.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낙선운동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낙선율이 높았던 것은 시민운동의 주된 지지기반인 신중산층의 정치적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요컨대 낙선운동은 1990년대 급속히 성장한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시민운동의 정점을 기록한 운동이었다. 1980년대 학생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민중운동이 사회변혁의 주도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면, 1990년대에는 그 역할을 사실상 중간층,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에 토대를 둔 시민운동이 대체한 것이다.

그리고 낙선운동은 대규모 사회운동 조직이 주도가 되어 그 구성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20세기 마지막 운동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촛불시위와 함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2) 촛불시위와 ‘새로운 주체’

시민운동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신중산층의 정치적 활성화는 2000년대 이후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즉 낙선운동의 경우 총선연대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단체의 주도 없이 시민들의 자각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한 촛불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처음 발생한 촛불시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 시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시위과정을 통해 시위의 주도권이 ‘사회운동 조직’에서 ‘시민’이라는 ‘새로운 주체’로 소리 없이 이동하였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서 시민이 주도하고 사회단체가 뒤따라가는 시민운동이 된 것이다.

촛불시위의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받는 것은 참여 주체의 변화이다(윤성이, 2009).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동원된 소극적 시민이 아니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 화이트칼라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전문직,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촛불의 정체성을 단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촛불시민’은 단일한 거대 주체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시민, 대한민국 주권자, 열혈 항일 애국지사, 당당히 권리 찾는 소비자, 어른 정치에 저항하는 청소년, 자식 걱정하는 엄마아빠, 신념에 찬 반신자유주의자,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소박한 서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정체성과 욕구를 담은 큰 그릇이다”(신진욱, 2009a: 74-75).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한 촛불시위의 이념은 분명했다. 당시 구호로 등장했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처럼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에 걸맞게 국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이 원리에 맞지 않는 정치과정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성원으로서 정당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정치의식을 보인 것이다. 촛불시위의 의제도 민주와 반민주, 신자유주의와 복지, 재벌개혁, 정치제도나 경제제도의 개혁 등 거대 담론의 영역이 아니라, 쇠고기 수입과 같은 일상 생활정치의 문제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촛불시위의 또 다른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운동이라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을 통해 뜻을 모으고, 이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라인은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들에 의해 형성된 공론장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김종엽, 2009b; 송경재, 2009; 장우영, 2010; 2012).

촛불시위가 특정한 사회운동이나 정치 조직에 의해 주도되지 않다보니, 이슈가 소멸하면 운동도 곧바로 사라졌다. 하나의 이슈를 위해 모였다가 그 이슈가 해결되면 곧바로 해산한 것이다. 노동조직이든 시민단체든 대규모 단체가 주도해 대중적 동원을 시도했던 이전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2000년대 촛불시위의 이와 같은 특성을 요약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론장(公論場)을 형성한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사안별로 오프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제기하고 참여한 것이다.

촛불집회의 이런 양상은 이전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다. 촛불시위 전개방식도 과거와 같은 시위를 반복했지만, 엄숙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유희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 점에서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했다”든지 “새로운 저항의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신진욱, 2009b) 혹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주체”(신광영, 2009)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촛불시위의 바로 이런 새로움으로 인해 촛불시위에 대해 다소 과도한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박상훈, 2008). 예컨대 기존 정치와 촛불시위를 대비해 아날로그 정치 대 디지털 정치, 근대적 정치 대 탈근대적 정치, 전통적인 정당정치 대 참여적 생활정치, 대의 민주주의 대 직접 민주주의 등으로 이원론적으로 재단하고 촛불시위를 과도하게 한 쪽으로 위치지우는 경향이다.

하지만 촛불시위가 말 그대로 정체성이 전혀 없는 무정형적(無定形的)인 다수 대중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젊은 층이 많이 참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기숙·박혜윤(2008)과 조기숙(2009)은 촛불집회 당시 집회에 참가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이나 저소득층보다는 중위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층이 많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념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중에서도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의 진보성이 뚜렷했다. 특히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경우 탈(脫)물질주의 성향이 매우 높고 활발한 정치참여

를 보여주고 있었다.⁶⁵⁾

동일한 자료에 의한 이현우(2008b)의 분석에서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진보적인 이념성향이 높고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덕진(2008)도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촛불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다만 탈물질주의 변수보다는 사회의 질과 관련된 변수가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욱(2010)의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촛불시위의 참가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적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참여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참여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기숙·박혜윤과 이현우, 장덕진, 김욱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 중간층, 그 중에서도 신중간계층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에 가까운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고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지며 진보적 성향을 가진 화이트칼라층이다.

이들의 중간층적인 성향은 촛불시위의 의제와 촛불시위의 전개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촛불시위의 의제가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의 복원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되어 있을 뿐 변혁적 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예컨대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대미 종속적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는 소파 개정 등을 통해 대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수준일 뿐이었다. 미국이나 미국식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며 새로운 한미관계의 수립을 요구하는 반미적 문제의식은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나 쇄고기 협상 문제의 경우도 정치적 기본권과 민생 문제와 관련된 절차적 수준의 문제제기였을 뿐이었다.

물론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쇄고기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 몰입교육을 비롯한 교육 문제, 의료산업과 공기업 민영화 문제, 신자유주의 반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함께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들 역시 사회적 공공성

65) 조기숙·박혜윤은 이 경험적 분석을 통해 2008년 촛불 집회는 물질주의적인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탈물질주의적 시민이 충돌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갑윤(2010)은 이에 대해 2008년 촛불시위는 연령과 이념, 지역에 따른 기존의 정치적 균열이 생활과 문화로 확대된 결과일 뿐,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간의 새로운 균열의 등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김욱(2010)은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일면만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즉 2008년 촛불시위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균열과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간의 새로운 균열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 관점에서 제기되었을 뿐, 시장경제의 원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아니었다.⁶⁶⁾

촛불 참가자들의 바로 이런 중간층으로서의 한계로 인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이 지속적으로 배제해온 노동의 문제는 촛불시위의 의제에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문제 등이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이는 극단적인 상황 전개를 통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다. 단순한 기업 내 노사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아직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컨대 2000년대 이후 국민적 저항은 대중 시위를 주도한 주체만 시민단체에서 시민으로 교체되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1990년대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특히 신중관계급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의 주도적 흐름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그 결과 노동은 일부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시민사회 내에서 아직 시민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2. 미국식 정당개혁과 신중산층

(1) 국민참여경선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1) 미국식 예비경선제의 문제

미국에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예비경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이다(안병진, 2004; 장훈 2002 등). 유럽에서의 1968년 학생운동과 베트남전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도 반체제(反體制) 운동이 강화되는 등 사회정치적 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시점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의 문제점이 전당대회 폭력사태 등을 통해 극적인 형태로 폭발했다. 그 결과 196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당 내에서 정당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6)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는 급진적 성향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은 조기숙(2009)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즉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경우 일반 국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이들에게 진보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높은 정치적 관심, 참여의식, 부당한 현상의 타파 등을 의미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 유권자들을 대폭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여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기존에 실시되던 예비경선제를 점차 모든 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예비경선 도입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대선 후보 결정과정의 민주성이 현저하게 제고되었다.

하지만 참여의 확대가 곧 참여의 질적 수준까지 높인 것은 아니었다(장훈, 2002: 194-196). 예비경선제의 확대실시 이후 고소득 및 고학력층의 참여 과다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다. 즉 예비경선에서 고졸 이하나 흑인 유권자의 참여비율은 본(本)선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나 연간 2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예비경선 참여율이 본선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중산층 이상의 예비경선 참여율이 높고, 이들의 과잉대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예비경선이 확대 실시된 이후 여성과 흑인, 젊은 층의 참여도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예비경선 확대실시 이전인 1968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13%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후 대폭 증가해 절반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흑인도 1968년 당시 5%에서 20%대까지 꾸준히 올라갔다. 하지만 대졸 학력자의 경우 참여율이 20%를 상회하고 있고, 대학원 이상 졸업자들의 비율은 40-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고학력자들의 경우 예비경선 전면 실시 이전이나 이후나 큰 변동 없이 여전히 유권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특정 계층과 집단의 과잉대표 현상을 낳고 있다.

예비경선의 대표성 문제는 무엇보다 낮은 투표율에서 기인한다. 즉 예비경선에 정치적 관심이나 정치적 활동 경험이 적은 “주변적 투표자들”(peripheral voters)의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핵심적 투표자들”(core voters)은 과잉대표되고 “주변적 투표자들”은 과소대표되는 현상이다(백창재, 1999).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예비경선제의 도입으로 정당조직이 약화되면서 하층 계급의 동원기제로서 정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김용호, 2008; 안병진, 2004; 장훈 2002 등). 즉 후보자가 예비경선제를 거치면서 정당조직을 건너뛰어 직접 유권자와 관계를 맺다보니, 정당 엘리트와 정당조직의 역할이 축소된

다. 예비경선은 물론 이후 본선 과정에서도 기존 정당조직보다 후보자 개인의 조직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선거전문가가 대거 동원되고, 홍보활동을 위한 돈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시된다. 그 결과 정당은 일반 대중조직에 기반을 뒀 하층계급을 동원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노동자와 하급 중산층, 저학력 유권자 등을 포함한 비엘리트 층은 정치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후보자와 직접 연결된 고학력의 중산층 엘리트 위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된 것이다.

실제 예비경선제라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당초 의도와 달리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정당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그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이데올로기에 맞아야 하겠지만, 일단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전체 모집단의 규모가 작다보니 이들 소수 참여자의 목소리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반영되는 단점이 있다.⁶⁷⁾

2) 국민참여경선제와 ‘노사모’

미국의 예비경선제는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처음 도입되어 거의 모든 정당으로 확산되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직후보 결정과정에 도입되었다.⁶⁸⁾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외환위기 후 경제상황과 겹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정치개혁 필요성이 한창 고조된 시점이다. 각 정당 내에서 ‘3김’의 확고한 지위는 1987년 이후 확립된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제한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종료와 함께 3김의 퇴진이 확실시되자 3김 정치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

67) 백창재(1999)가 1980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비선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정치·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집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과잉대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중이 예비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백창재는 이에 따라 오히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이슈에 따라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이 정치적으로 동원되어 과잉대표되는 것이 선거결과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1980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최고학력 집단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중졸 이하의 최저학력 집단의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저학력층을 예비선거에 집중 동원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68) 국민참여경선제가 2002년 이후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마다 중요한 후보 선출방법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동운(2008), 김형호(2011) 등 참고.

아졌다.

당시 정치개혁은 우선적으로 정당개혁 즉 3김에 의해 사당화되어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된 정당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결과 민주당에서 당 총재직 폐지와 함께 대권과 당권의 분리,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쇄신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경선제는 민주당 쇄신안의 핵심내용이다. 당원 및 대의원과 일반 유권자의 비율이 3:2:5로, 일반 유권자를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이나 포함시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미국식 예비경선제였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2002년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한 참여열기도 대단히 뜨거웠다. 3만 5천여 명의 일반 유권자를 모집하는 데 무려 184만 명이 응모해 48 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이현출, 2003: 39).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이인제가 거론되었다. 이인제는 새천년민주당 조직을 장악하고 당내 엘리트로서의 입지를 확보한 권노갑을 필두로 한 동교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참여경선제를 거치면서 이인제가 낙마(落馬)하고, 대신 당내 기반이 거의 없던 노무현이 소위 “노풍”을 일으키며 대통령 후보로 전격 선출되었다. 그리고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참여경선제의 의미와 실효성은 한껏 부각되었다.

하지만 국민참여경선제는 미국 예비선거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한국에서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간층 이상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사회적 하층의 참여에 대한 기여도는 미지수이다.

이는 2002년 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서 정치동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사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⁶⁹⁾ 2002년 5월 20일 현재 4만 5천여 명의 노사모 구성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사무직과 정보통신, 교사, 공무원 등 화이트칼라나 전문직에 속하고 자영업 11.9%, 건설/제조업 7.76%, 서비스업 5.56%, 농림어업 0.87% 등으로 나타났다(표 4-31).

69) 노사모의 구체적인 결성계기와 활동 내역 등에 대해서는 노혜경 외(2002) 등 참고.

(표 4-31) 노사모의 직업별 분포도

구분	인원수(명)	구성비(%)
사무직	7,941	17.47
대학(원)생	7,605	16.73
자영업	5,417	11.90
건설/제조업	3,532	7.76
서비스업	2,526	5.56
정보통신(개발)	1,928	4.24
유통/운송업	1,675	3.68
교사	1,327	2.92
정보통신(기획, 마케팅)	1,303	2.86
가사	1,290	2.83
방송/예술인	901	1.98
의료인	817	1.79
공무원	812	1.78
초중고생	597	1.31
언론인	410	0.90
종교인	395	0.86
농업/어업/임업/축산업/광산업 등	391	0.87
광고업	303	0.66
법조인	120	0.26
군인	70	0.15
정치인	50	0.11
기타	5,298	11.64
계	45,486명	100.0

출처: 강원택(2002b: 95)

상당수가 대졸 이상 고학력으로 신중산계급의 지위를 차지하는 신중산층임을 추정할 수 있다. 과거 지구당 당원의 대부분이 정당 엘리트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동원에 용이한 자영업자나 주부, 중소기업인 등인 점에 비춰 전혀 다른 것이다. 이 구성은 2002년 6월초 8만 4천 명으로 회원들이 대폭 증가된 뒤에도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호, 2004). 노사모 회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신중산층에 걸맞게 다소 진보적인 자유주의적 개혁관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⁷⁰⁾

1990년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정치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신중산층으로서 노사모의 정치적 활동은 눈부셨다.⁷¹⁾ 노사모는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을 계기로 그 세를 급속히 확장했다(윤재관, 2003). 2000년 5월 209명에서 출발해 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제 논의를 시작한 2001년 12월에는 회원 수가 5,865명으로 증가했다. 노사모가 국민참여경선제에 본격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원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2년 3월 22,307명, 6월에는 47,961명에 달했다.

노사모 회원들은 국민참여경선이 시작되자 16개 시도 지역 경선장을 함께 돌며 축제를 벌이는 등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또 본인들이 선거인단에 적극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1인 10통 편지쓰기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신원, 2002). 그 결과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지원자 184만 명 가운데 무려 20%가 넘는 40만 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호, 2004: 76).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당내 입지가 불안했던 노무현 후보는 공식적인 당보다는 노사모와 인터넷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유권자와 직접 소통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사모와 인터넷을 통해 결합할 수 있는 계층은 정치의식이 높은 386세대와 젊은 유권자가 다수였다. 노동자계급과 같은 기층 대중보다는 정치의식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은 신중산층 위주의 유권자들

70) 월간 『말』이 노사모 회원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서 노사모 회원들은 재벌규제, 호주제 폐지, 주5일 근무제 등의 이슈에 대해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했다(『월간 말』, 2002). 또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54%가 반대했다. 노사모 회원들은 노무현 이외의 정치인으로는 김근태와 천정배, 추미애 의원 순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1) 시민단체의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 퇴출대상 정치인을 상대로 한 네거티브 운동이었다면, 노사모 운동은 새로운 정치인을 ‘추대’하는 적극적인 당선 운동이었다. 정치기획구조를 중심으로 한 양자의 비교연구로는 이성철·백운순(2002).

의 정치에 대한 참여를 늘리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⁷²⁾ 계급정치 대신에 신중산층의 정치적 동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2) 지구당 폐지의 정치적 결과

지구당 의무 설립규정은 5.16 쿠데타 직후인 1963년 처음 만들어졌다(김용호, 2008).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신생정당의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전국 131개 지구당 중 3분의 1 이상을 만들어야 정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정당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지구당 의무 설립규정은 전국 지구당 중 5분의 1 이상으로 낮춰졌고, 나중에는 10분의 1까지 완화되었다.

그런데 10년간의 민주적 정당체계의 실험을 하고 1997년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맞물리며 고비용 구조 개선과 정당의 투명한 운영에 정당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지구당이 정치개혁의 첫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구당은 그동안 통, 반책까지 조직하면서 1년에 1억 원 이상의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한 정치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돈 먹는 하마” 혹은 “정치부패의 산실”로 지목되었다. 또 지구당 위원장이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다보니 지구당이 위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퇴행적인 모습을 반복해왔다.

이와 같은 지구당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두 입장이 대립했다. 우선 대중정당 강화론의 입장에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늘리고 상향식 공천을 확대해, 지구당의 민주화와 활성화를 주장하는 논의가 제기되었다(최장집, 2005; 2007; 박상훈, 2007; 박찬표, 2007b 등). 반면 미국식 원내정당으로의 개편론의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의 정당구조를 폐기하고 지구당을 축소해 지지자 중심의 수

72) 최장집은 이와 같은 점에서 국민참여경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에게 “중산층 편향적 정향”이 있다고 비판한다(최장집 외, 2007: 142).

평적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만들자고 주장했다(임성호, 2003; 정진민 2003b; 2005).⁷³⁾

그런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지구당의 폐지를 선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중앙당의 경량화를 주장하는 원내정당론과 결합하면서 2004년 지구당이 전격적으로 폐지되었다(이정진, 2008; 2010).

하지만 지구당의 폐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전진영, 2009). 우선 지구당 폐지는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0여 일 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경우 진성당원제를 유지하며 다른 당에 비해 지구당을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적인 강제를 통해 지구당을 폐지당한 것이다. 지구당 강제 폐지 규정이 정당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오로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지구당 폐지문제를 결정하는 바람에 정당조직의 약화라는 더 중대한 가치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최장집, 2007; 김용호 2008; 전진영, 2009; 윤종빈, 2011). 즉 지구당은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중요한 이슈를 둘러싸고 유권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유권자로부터 정치적 충원을 하는 풀뿌리 제도이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 없이 이 조직을 없앴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나라 정당조직의 기반이 더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지구당을 대신해 도입된 당원협의회 제도에 대해 직접 정당 활동을 하는 상당수 당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7.6% 즉 10명 중 무려 7명 정도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소통의 기능을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윤종빈, 2011). 이들에 따르면 지구당 폐지로 인해 기존 간부와 당원의 이탈만 초래했을 뿐, 당초 기대했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다수 유권자의 참여와 개방은 달성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졸속으로 이루어진 지구당 폐지는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정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대의정치의 근간(根幹)이라 할 수 있

73) 한국의 정당조직 유형과 관련해 대중정당과 원내정당론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강원택(2009b) 참고.

는 대중정당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그 바람에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까지 당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정당조직보다는 미디어에 의존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김용호, 2008). 미디어 정치가 일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한계를 갖는다. 우선 일반적인 언론매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인 속성을 갖는데다, 전달자의 시각에 의해 정보가 선별적으로 전달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특정 언론매체와 특정 정당이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특정 정당의 정보가 제대로 일반 유권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2000년대 이후 획기적인 대국민 접근 수단으로 간주되어온 인터넷의 경우 아직도 그 이용자 그리고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한정적이다. 즉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에 따라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인터넷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활용하는 데 정보 격차 혹은 불평등 구조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정 외, 2008; 민영, 2011). 저학력층과 저소득층, 중장년층, 여성 등의 인터넷 활용이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저학력과 저소득, 중장년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구당 폐지를 통해 나타난 기존 정당조직의 약화는 국민참여경선과 함께 정당이 과도하게 미디어정치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사실상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 계급을 포기하고, 고학력, 중간소득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신중산층을 상대로 한 정치라는 편향적인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3. 소결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균열구조 즉 이념균열과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총체적인 변화와 함께 신중산층을 정치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들이 잇따라 주어졌다. 먼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중운동이 했던 사회적인 정치의식 고양의 역할을 대신했으며 그 주된 동원의 대상은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하층보다는 신중간계급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이었다. 이들은 2000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02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한 촛불시위의 가장 주체적인 참여자이기도 했다. 시민운동은 이전의 민중운동과 달리 우리 사회의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고 이 목표는 안정적 개혁이라는 신중산층의 기대와도 맞물렸다.

또 국민참여경선제와 지구당 폐지와 같은 미국식 정당개혁 운동은 신중산층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 제도들이 사회적 하층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안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고학력, 중위 소득의 신중산층의 참여는 높이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로 ‘노사모’는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결성된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신중산층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사모’는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정치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이루어진 신중산층의 정치적 참여를 가속화하고, 신중산층을 정치적 주체로 해서 기존 정당체계의 재편성을 야기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제 5 장 계층균열 구조와 정당재편성

우리는 앞 장에서 2000년대 이후 이념균열 구조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경우 보수화의 길로 가고 있는 반면 신중간계급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지난 2000년 이후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계층별 투표행태와 이념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계층은 홍두승의 중산층 분류법을 원용해 직업과 소득, 학력에 따라 상층과 신(新)중산층, 구(舊)중산층, 하층 등 4개로 구분한다. 홍두승의 경우 상층과 중산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상층을 소득수준에 따라 중산층과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이념성향이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대표되는 상층에서도 계급투표 성향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산층 역시 홍두승은 사회적 지위에 보다 중점을 두어 핵심적 중산층과 주변적 중산층으로 나누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계급적 지위를 중시해 직업을 기준으로 신중산층과 구중산층으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먼저 상층의 경우 직업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오로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이다. OECD에서 중산층 기준을 중위 소득의 50~150% 정도로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 가계 평균 소득의 150~200% 정도 이상일 경우 상층으로 분류할 것이다. ‘진짜 상층’의 경우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상층의 기준을 조금 높게 잡았다.

신/구 중산층의 경우 신/구 중간계급에 속하면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나 중산층 수준의 소득, 둘 중 한 조건을 만족하면 신/구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신중간계급은 흔히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기업체 사무직이나 공무원, 전문직 등을 말하며, 구중간계급은 자영업자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농림어업 종사자를 말한다. 중산층 수준의 소득이란 해당 연도 가계 평균 소득의 50%에서 150~200%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하층은 직업적으로 노동자일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 또 직업적으로 신/구 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고졸 이하의 학력이면서 동시에 중산층 수준의 소득 미만인 사람들을 하층으로 분류할 것이다.

제 1 절 계층균열에 기초한 정당-유권자 연합

1. 새로운 계층균열 구조의 출현

(1) 2002년 제16대 대선

2000년대의 선거에 대한 분석에 앞서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에서 나타난 계층별 투표행태를 각각 분석해 이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2000년대 들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계층별 투표행태, 즉 계층균열이 출현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은 영남과 호남을 각각 대표하는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지도자가 퇴장한 뒤 처음 치러진 대선인 만큼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된 선거였다. 투표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2002년 대통령선거 결과 (단위: %)

구분	이회창 한나라당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기타
전국	46.6	48.9	4.5
수도권	44.6	50.9	4.5
대구/경북	75.5	20.2	4.3
부산/경남	65.3	29.4	5.3
호남	4.9	93.2	1.9
충청	41.3	52.5	6.2
강원/제주	49.2	45.3	5.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표면적으로 나타난 대선 결과는 영호남 지역주의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서 30% 안팎을 얻는데 그친 반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70% 안팎의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 호남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과 비슷한 93%에 달하는 기

록적인 득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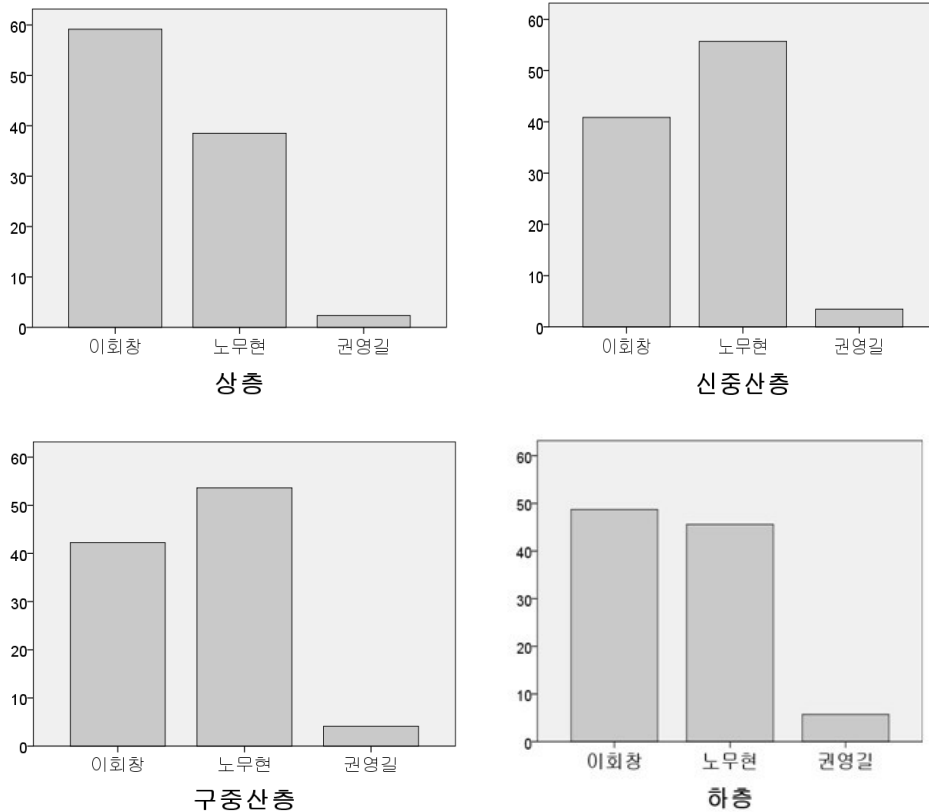
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는 지역균열 뿐만 아니라 세대를 통한 이념균열이 확연하게 표출되었음을 이미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강원택, 2003; 김주찬·윤성이, 2003; 마인섭, 2003; 백준기 외, 2003; 박찬욱, 2006; 이정진, 2007; 정구중, 2006; 진영재·김민욱, 2007 등). 이 논문에서는 2002년 대선에서 세대를 통한 이념균열뿐만 아니라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 또한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선거학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함께 대선 직후 실시한 선거후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층별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⁷⁴⁾ 통계청 기준 2002년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전체 평균 가계소득이 2,591,845만 원인 점을 감안해, 2002년 중산층 분류의 소득기준으로는 월 소득 200~399만 원을 사용했다. 그 결과 전체 1,261명의 대상자 중 상층이 9.8%, 신중산층 33.7%, 구중산층 19.1%, 하층 37.3%로, 신중산층과 하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그림 5-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층의 경우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59.6% 대 38.5%로 압도하고, 신중산층은 이회창 후보 지지가 40.9%인데 비해 노무현 후보 지지는 55.6%로,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중산층도 42.1% 대 53.7%로 신중산층과 비슷하게 노무현 후보를 더 지지했다. 반면 하층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48.8% 대 45.6%로 근소하게 앞서, 상층과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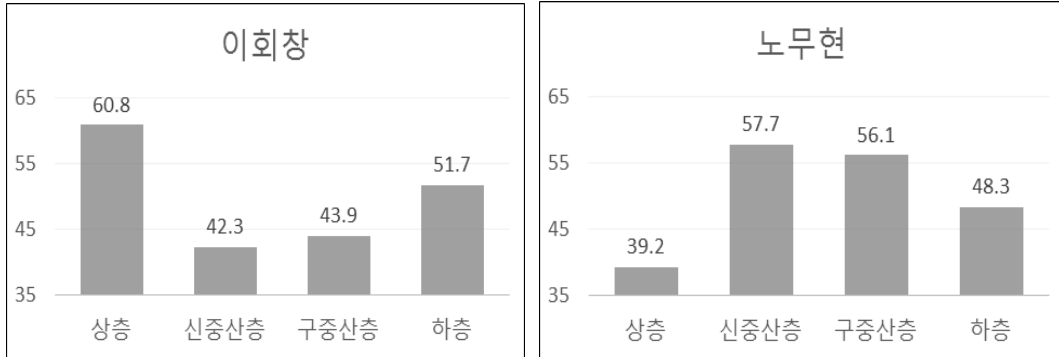
(그림 5-1) 제16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74) 한국선거학회의 선거후조사는 대선 직후인 2002년 12월 20일에서 27일까지 8일 동안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5\%$ 이다. 2002년 KSDC의 대선후조사 결과는 실제 투표결과와 차이가 있어 성과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웨이트 가중적용을 실시했음을 알린다.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만 놓고 후보별 지지계층으로 나누어서 보면, (그림 5-2)처럼 이회창 후보의 경우 상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데 이어 하층과 구중산층, 신중산층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는 신중산층에서 가장 높았고 구중산층, 하층, 상층의 순이었다. 상층의 계층 투표 성향이 확연히 나타난 가운데 신/구 중산층, 특히 신중산층의 진보적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고 있다. 반면 하층의 경우 ‘계급배반’적인 투표행태가 보이고 있다. 아노바(ANOVA) 분석 결과도 두 후보에 대해 상층과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계층별 지지행태가 유의확률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 제16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단위: %)



ANOVA 분석 결과 $F=4.85^{***}$, $p<0.01$. $N=1,051$

두 후보에 대한 계층별 지지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 흥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표 5-2).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회창 후보 대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73.6% 대 26.4%로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계층별 지지도를 보면 신중산층에서 지지율이 역전되었다. 즉 이회창 후보가 44.8%인데 비해 노무현 후보가 55.2%로 나타났다.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산층이 노무현 후보에게 과반의 지지를 보낸 것은 표본 수가 적은데 따른 오차일 가능성도 있지만, 신중산층의 계층투표 행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제16대 대선 대구/경북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이회창	83.3	44.8	65.5	86.2	73.6	$F=7.00^{***}$ $p<0.01$
노무현	16.7	55.2	34.5	13.8	26.4	
N(=144)	6	29	29	80	100.0	

반면 상층은 이회창 후보에게 83.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비해, 노무현 후보에게는 16.7%의 지지만을 보내 지역주의 투표성향과 계층투표 성향이 겹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더욱 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있을 정도로 계층 간 투표행태의 차이

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후보가 신중산층에서 유일하게 지역 평균 30.7%를 웃도는 37.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구중산층도 지역 평균과 근접한 30.0%의 지지를 노무현 후보에게 보냈다. 반면 상층은 대구/경북 지역과 유사하게 이회창 후보에게 지역 평균을 훌쩍 넘는 82.4%의 지지를 보내는데 비해, 노무현 후보에게는 신중산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6%의 지지를 보내는데 그쳤다.

(표 5-3) 제16대 대선 부산/경남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이회창	82.4	62.9	70.0	71.7	69.3	F=1.05 p>0.10
노무현	17.6	37.1	30.0	28.3	30.7	
N(=179)	17	62	40	60	100.0	

영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라 영남을 고향으로 하는 영남 출신자들의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신중산층의 계층투표 행태가 보다 뚜렷하다(표 5-4). 즉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층의 4배, 하층의 2배를 넘고 있다. 반면 상층의 노무현 후보 지지율은 지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이어서 역시 지역주의 투표 성향과 함께 계층투표 성향이 강하게 개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노바(ANOVA) 분석에서도 p값이 0.00으로 대단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값도 점점 커져 계층투표에 대한 설명력은 더욱 높아졌다.

(표 5-4) 제16대 대선 영남 출신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이회창	88.9	53.8	63.4	77.9	67.9	F=8.04*** p=0.00
노무현	11.1	46.2	36.6	22.1	32.1	
N(=377)	27	119	82	149	100.0	

호남지역의 계층별 투표행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5-5). 호남 지역의 상층만이 유일하게 이회창 후보에게 14.3%의 지지를 보냈고, 다른 계층에서는 이회창 후보 지지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영남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남지역 상층이 계층투표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표 5-5) 제16대 대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 평균	ANOVA
이회창	14.3	0	0	0	0.9	F=4.97*** p<0.01
노무현	85.7	100.0	100.0	100.0	99.1	
N(=108)	7	36	26	39	100.0	

그야말로 영남지역의 신중산층과 호남지역의 상층이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벗어나 상호 교차투표를 한 것이다.

이번에는 계층과 지역이 각각 이회창·노무현 두 후보에 대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표 5-6)은 계층과 지역의 두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이회창·노무현 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종속변수로 해서 실시한 아노바 분석 결과이다. 계층의 p값은 0.02, 지역의 p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영향력이 대단히 유의미한 수준에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지만, 계층 또한 유의확률 5% 이내에서 투표행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변수를 통제하고 계층 변수의 효과만을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대단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는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투표 행태가 투표결정에 지역 변수 만큼이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6) 제16대 대선 계층과 지역 변수의 효과

구분	F	유의확률	자유도
계층	3.23**	0.02	3
지역	22.81***	0.00	5
R ²	0.183		
N	1,047		

그렇다면 각 계층별로 서로 다른 투표행태, 특히 상층과 신중산층이 서로 엇갈리는 투표행태를 보이는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2002년 대선은 지역 균열과 함께 세대별 이념균열이 부각된 선거이다. 따라서 계층별로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층별 이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표 5-7). 1점을 ‘매우 진보’로 5점을 ‘매우 보수’로 분류해 각 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념 점수를 물어본 결과,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은 각 계층의 투표행태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유의확률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5-7) 제16대 대선 계층별 이념평균 (1~5)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평균	ANOVA
이념평균	2.82	2.75	2.76	2.95	2.84	F=3.92***
N	124	425	241	471	1,261	p<0.01

신중산층이 2.75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고, 구중산층은 2.76으로 신중산층과 유사하다. 반면 하층은 2.95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고, 상층은 신중산층과 하층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각 계층별로 이념적 차이를 뚜렷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층이 가장 보수적인 점이 서구와 분명히 다른 특징이다.

요컨대 2002년 대선을 둘러싼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신중산층이 지역을 떠나 전국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나타냈다. 그 결과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중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노무현 후보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보인 상층의 경우 역시 이념적으로 유사한 이회창 후보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이러한 계층별 투표행태는 이전 선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투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계층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별화되는 점은 2000년대 들어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념이 2002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세대뿐만 아니라 계층을 통해서도 차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에 따른 계층별 차별적인 투표행태 즉 계층균열 현상이 2002년에 처음 등장한 것일까 아니면 그 전에도 존재했던 것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부터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나타난 계층별 투표행태를 분석한 뒤 2002년 결과와 비교해 보겠다.

(2) 2002년 이전의 대선

1997년 대선은 우리나라가 IMF 즉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한 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치러진 선거였다. 또 호남에 기반을 둔 김대중 후보가 충청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소위 ‘DJP 연대’를 이루어 집권하는데 성공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0년 ‘3당 합당’으로 ‘호남 대 비호남’ 구도를 이루어 정권을 잡았다면, 김대중 후보가 ‘DJP 연대’를 통해 ‘영남 대 비영남’ 구도를 이루어 집권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의 영향력도 컸지만 그만큼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강고하게 남아있던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선거결과를 살펴보자.

(표 5-8) 1997년 대통령선거 결과 (단위: %)

구분	이회창 한나라당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이인제 국민신당	기타
전국	38.7	40.3	19.2	1.8
수도권	38.3	42.0	18.1	5.6
대구/경북	66.9	13.1	17.7	2.3
부산/경남	53.8	13.7	30.0	2.5
호남	3.3	94.4	1.5	0.8
충청	27.4	43.9	26.6	2.1
강원/제주	41.6	27.9	28.4	2.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결과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인 반면 서로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각각 독점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대중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94.4%의 압도적인 득표를 했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53.8%와 66.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영호남 지역의 투표성향이 뚜렷이 드러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대중 후보는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에서 27.8%의 득표 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43.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 후보와 연합정치를 펼침으로써 얻은 효과로 분석된다. 충청 지역의 지역주의 또한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 선거에서는 지역주의 균열 이외에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투표 성향과 유권자들의 여야 성향 등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Park, 1999). 또 미약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 나타났던 이념균열이 세대를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강원택, 2003).⁷⁵⁾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2002년과 같은 계층균열은 존재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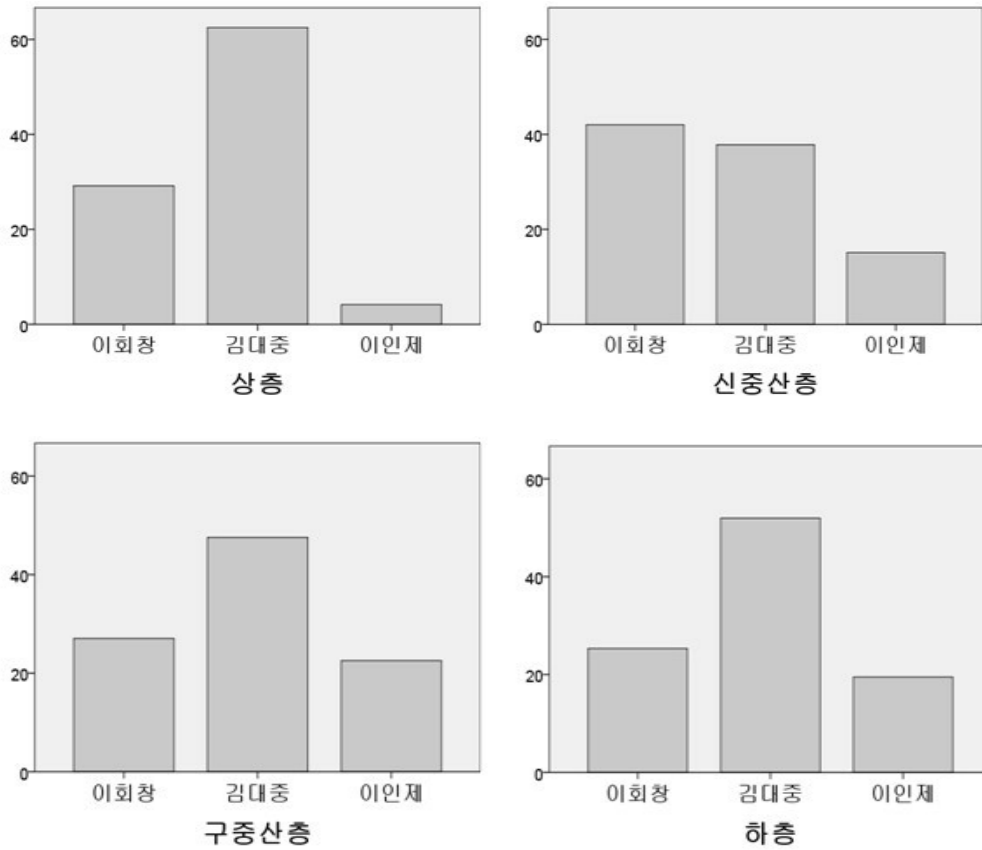
75) 박찬욱(Park, 1999)에 따르면 1997년 대선에서도 이념균열 조짐이 있었지만 김대중이 “DJP 연대”나 “뉴DJ 플랜”과 같은 보수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념균열은 희석되었다.

먼저 한국선거연구회의 주관 하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선거 직후 실시한 선거후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층분류를 해보았다.⁷⁶⁾ 1997년 통계청 기준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의 가계소득 전체 평균이 2,210,855원인 점을 고려해 중산층 소득의 최하 기준은 150만 원 이상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의 질문지가 최고 소득 구간을 250만 원 이상으로만 정해놓아 최고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직업을 기준으로 기업체의 중역이나 임원(이사급 이상), 중소기업 사장, 부농을 일단 상층으로 분류했다. 나머지는 직업과 소득, 학력을 기준으로 신/구 중산층과 하층으로 각각 나누었다. 그 결과 전체 729명의 대상자 중 상층은 3.7%, 신중산층은 36.2%, 구중산층은 36.5%, 하층은 23.6%로 나타났다.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상층의 경우 김대중 후보에게 62.5%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 이회창 후보에게는 29.2%, 이인제 후보에게 4.2%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 반면 신중산층은 김대중 후보 37.8%, 이회창 후보 42.0%, 이인제 후보 15.1%를 지지해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구중산층은 다시 김대중 47.5%, 이회창 27.0%, 이인제 22.5%의 비율로 김대중 후보를 더 지지했고, 하층 역시 51.9%, 25.3%, 19.5%의 비율로 김대중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신중산층만 여당의 이회창 후보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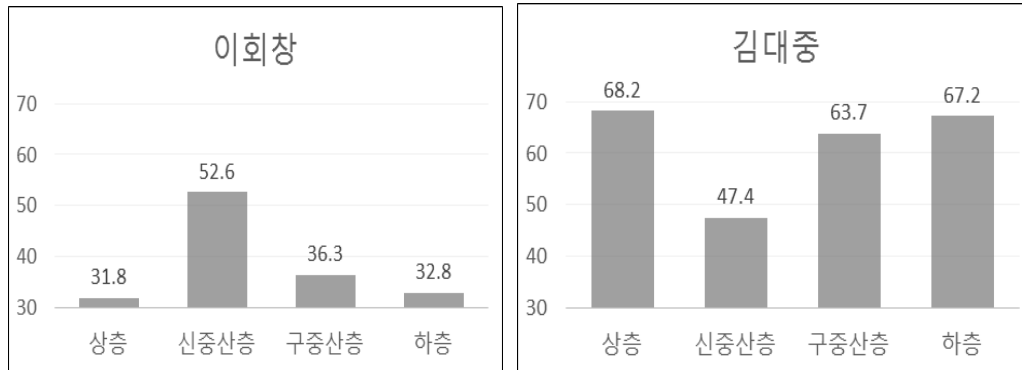
(그림 5-3) 제15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76)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선거후조사는 선거일 다음 날인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만 놓고 후보별 지지계층을 살펴보면 김대중 후보의 경우 상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데 이어 하층과 구중산층, 신중산층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그림 5-4). 2002년 대선에서 진보적 성향의 야당 후보가 신중산층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상층으로부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것과 완전히 뒤집힌 결과이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도 신중산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데 이어 구중산층과 하층, 상층의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2002년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상층이 보수 성향의 이회창 후보를 더 지지한 것과 완전히 뒤바뀐 결과이다. 즉 제16대 대선에서는 각각 보수적/진보적 투표 성향을 보였던 상층/신중산층이 제15대 대선에서는 서로 위치를 맞바꾼 것이다.

(그림 5-4) 제15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5.59^{***}$, $p<0.01$, $N=513$

상층과 신중산층이 위치를 바꾼 제15대 대선에서도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에 대한 계층별 투표행태는 제16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유의확률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15대 대선에서 지역별 계층투표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표 5-9). 김대중 후보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상층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이회창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고, 이회창 후보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신중산층의 경우도 호남에서 김대중 후보만 지지해 영호남 지역의 계층별 교차투표 현상도 보이지 않았다. 부산/경남에서는 상층의 표본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국적으로는 계층별 투표행태가 다소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적어도 영호남 지역에서는 일관된 지역주의 투표현상을 보인 것이다.

(표 5-9) 제15대 대선 영호남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후보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평균	ANOVA
대구/경북	이회창	60.0	81.5	75.0	87.5	80.4	F=0.64 p>0.10
	김대중	40.0	18.5	25.0	12.5	19.6	
	N(=56)	5	27	8	16	100.0	
호남	이회창	0.0	0.0	2.0	0.0	1.0	F=0.35 p>0.10
	김대중	100.0	100.0	98.0	100.0	99.0	
	N(=101)	2	20	49	30	100.0	

각 계층별로 본인들의 이념성향을 평가한 결과도 계층별 투표행태만큼이나 혼란스럽다. (표 5-10)에서 보듯이 1점을 매우 진보, 5점을 매우 보수로 구분해 각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을 조사한 결과, 각 계층 간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표행태와 관련한 규칙성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표 5-10) 제15대 대선 계층별 이념평균 (1~5)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평균	ANOVA
이념평균	3.13	3.06	3.04	3.14	3.07	F=0.30
N	23	253	247	138	661	p>0.10

김대중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한 상층과 하층의 경우 이념평균이 각각 3.13과 3.14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회창 후보를 가장 높게 지지한 신중산층의 경우 이념평균이 3.06으로 구중산층(3.04)과 함께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었다. 각 계층의 이념성향은 2002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표행태에서는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전혀 상반되는 결과이다.

결국 1997년 대선에서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는 이념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1997년 대선에서 계층 간 차별적인 투표행태는 이념이 아니라, 이념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 당시 “외환위기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정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주요 선거 이슈에서 모든 계층이 거의 동일한 답변을 했다. 다만 “‘DJP연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만 신중산층이 유일하게 다른 계층과 다른 의견을 냈다(표 5-11). 즉 모든 계층에서 ‘DJP연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신중산층만 41.7%대 58.3%의 비율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이다. 지역주의 연합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표 5-11) ‘DJP연대’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 평균	ANOVA
찬성	60.9	41.7	53.3	57.1	50.5	F=3.23** p<0.05
반대	39.1	58.3	46.7	42.9	49.5	
N(=535)	23	187	199	126	100.0	

1997년 대선 당시 모든 계층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념과 무관한 정치적 이슈들에서 계층 간 차별성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1997년 대선에서 계층별 지지행태는 계층별 이념성향과 전혀 무관하고 각 지역에서도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반복되면서 계층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1997년 대선의 계층별 투표행태가 혹시 그 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2년 제14대 대선 당시의 투표행태에 대해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만을 놓고 분석해 보겠다. 두 대선에서 일관된 투표행태가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원인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제15대 대선 투표자들에 대한 선거후조사에서 제14대 대선 당시 지지 후보에 대해 묻은 결과 (표 5-1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김영삼 후보는 신중산층과 상층에서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데 이어 하층과 구중산층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김대중 후보는 구중산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데 이어 하층, 상층, 신중산층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제14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	ANOVA
김대중	40.0	38.7	52.2	45.4	45.4	F=2.27* p<0.10
김영삼	60.0	61.3	47.9	54.6	54.6	
N(=498)	20	173	186	119	100.0	

제15대 대선의 투표결과와 비교하면 김대중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던 상

층이 제14대 대선에선 김영삼 후보 지지로 돌아섰고, 하층 역시 김대중 후보보다 김영삼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김대중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던 신중산층은 제14대에서도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고, 이회창 후보보다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구중산층은 제14대 대선에서도 유일하게 김대중 후보를 더 지지했다.

신중산층과 구중산층이 두 대선에서 비교적 일관된 여야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두 계층의 주관적 이념평균에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두 계층의 엇갈린 지지행태는 이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2006)가 한국선거연구회 주관 하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조사한 1992년 대선후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 논문과 유사하게 직업과 소득수준, 학력 등을 기준으로 신중산층과 구중산층, 기타 중산층, 하층 등 4개의 계층으로 유권자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도 역시 비슷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표 5-13).⁷⁷⁾ 즉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에 대한 구중산층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작은 것을 제외하면, 김영삼 후보가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계층 간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5-13) 제14대 대선 계층별 지지후보 (단위: %)

구분	신중산층	구중산층	기타 중산층	하층	전체
김영삼	48.1	42.7	47.4	59.6	50.4
김대중	24.3	39.9	42.1	27.3	30.3
N(=1080)	374	321	19	366	80.7

출처: 김영태(2006: 67)

요컨대 1997년 제15대 대선과 1992년 제14대 대선 당시의 계층별 투표행태는 차이가 드러나도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이념적 차이도 통계적으로 무의미한데다, 유사한 이념성향을 가진 신/구

77) 한국선거연구회의 제14대 대선에 대한 대선후조사는 1992년 12월 12일부터 27일까지 보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상대로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산층이 서로 엇갈리는 투표행태를 보이는 등 이념과 계층을 관련짓기는 더욱 쉽지 않다. 당시 계층별 투표행태는 엄밀하게 말해서 계층균열 혹은 계층균열 구조라고 명명하기에는 부족했고, 설령 계층균열 현상이 존재했다고 해도 이념보다는 정치상황적 이슈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가 이념성향과 연관되면서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 지역에서 교차투표 경향까지 나타나 지역균열을 일부 상쇄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계층균열이 세대균열과 마찬가지로 이념균열을 따라 새롭게 등장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계층균열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후 선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날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계층균열 혹은 계층균열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2002년 대선 이후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균열 현상을 차례로 분석해 볼 것이다.

2. 계층균열 구조의 일반화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전국적 차원의 선거로는 대선이 두 차례, 총선이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대로 대선과 총선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유권자 투표행태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두 선거를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대선에서 나타난 계층균열

1) 지역균열/이념균열의 부침(浮沈)

2002년 대선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대 노무현 민주당 후보 간의 사실상 1:1 대결구도를 이루었다면 2007년 대선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우위 하에 다자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는 다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 간의 양자대결 구도가 이루어졌다. 세 차례 대선에서 계층균열이 작용했다고 할 경우 상층은 한나라당 계열 후보, 신

중산층은 민주당 계열 후보를 일관되게 지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계층균열에 대한 분석에 앞서 먼저 각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별 투표결과를 통해 기존의 지역균열이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7%의 득표로 26.1%의 득표에 그친 정동영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긴 것이다.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격차가 큰 선거이다. 직전 선거인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가 2.3%포인트,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1.6%포인트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거의 일방적인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14) 2007년 대통령선거 결과 (단위: %)

구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전국	26.1	48.7	15.1
수도권	24.0	52.2	12.9
부산/경남	13.0	56.2	20.1
대구/경북	6.4	71.1	15.8
호남	80.0	9.0	3.6
충청	22.6	37.1	29.0
강원/제주	22.4	48.6	16.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지역별로도 이명박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충청권에서 37.1%의 비교적 낮은 지지를 얻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과반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물론 호남에서도 비록 9.0%의 득표에 그쳤지만 영남권 후보로서는 198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정동영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80.0%의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20%대 초반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영남권에서 정동영 후보가 기록한 지지율은 노무현 후보가 2002년 거둔 득표율에 크게

못 미치고, 김대중 후보가 1997년 얻은 득표율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와 함께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치러진 1992년 대선 수준과 유사하게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계층투표에 의해 많이 상쇄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에 따라서 2007년 대선에서는 지역균열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념균열이 약화된 선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강원택, 2009a; 김민전, 2008; 박찬욱 외, 2008; 이갑윤·이현우, 2008; 박찬욱, 2009; 이내영, 2009a; Park, 2009 등).

이에 비해 2012년 대선은 10년 전 2002년 대선과 대단히 유사한 상태에서 치러졌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2002년 대선과 유사하게 여야 후보 간의 1 대 1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선거결과도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간에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투표 결과를 보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에서 각각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등 지역주의 투표 양상이 나타났다(표 5-20). 하지만 부산/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얻은 29.4%를 훌쩍 넘어 40% 가까운 득표를 했다. 또 박근혜 후보도 5년 전 이명박 후보보다 높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영남 정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기록했다. 영호남 정당 후보들이 각각 상대방 지역에서 이전 선거에 비해 선전을 한 것이다. 외견상으로도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2002년 대선 이상으로 상당 부분 완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15)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 (단위: %)

구분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국	51.6	48.0
수도권	49.6	50.0
대구/경북	70.5	19.1
부산/경남	61.1	38.4
호남	10.5	90.0
충청	54.4	45.1
강원/제주	58.8	40.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201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된 결과, 2007년 대선과 달리 이념균열이 세대를 통해 보다 뚜렷하게 표출된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 나타났다(노환희 · 송정민, 2013; 박찬욱, 2013; 오현주 · 김정아, 2013). 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상층의 일부 계층투표 결과도 확인되었다(강원택, 2013).

요컨대 2002년 대선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이념균열이 강화되었다면, 2007년 대선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고, 2012년 대선에서는 2002년 대선과 같이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이념균열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이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부침(浮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대선에서도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계층투표 경향이 200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드러났을까? 지금부터 계층별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2) 전국 차원의 계층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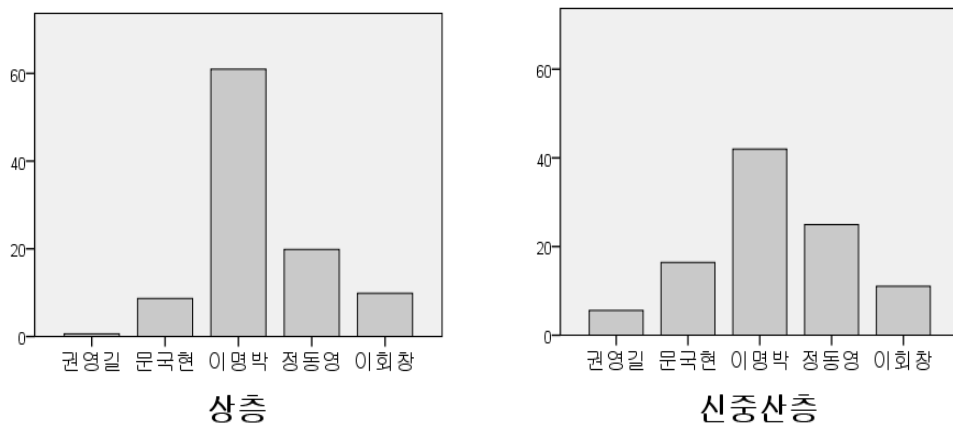
먼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나타난 계층별 투표행태를 동아시아연구원이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대선 직후 실시한 제6차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겠다.⁷⁸⁾ 계층분류 기준 중 소득은 통계청의 2007년 전국 2인 이상

78) 동아시아연구원의 패널조사는 대선 전인 4월 25일부터 전국의 성인 남녀 3,503명을 패널로 6차례에 걸쳐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선 직후인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를 동안 실시된 제6차 패널조사에서는 2,111명이 참여했다. 동아시아연구원 패널조사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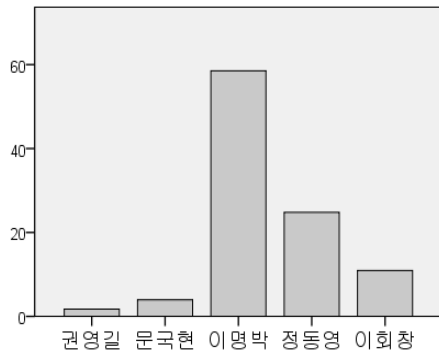
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이 3,200,005원인 점을 고려해, 상층은 600만 원 이상, 중산층은 200~599만 원, 하층은 200만 원 미만으로 잡았다. 그 외에 직업과 학력을 적용해 앞의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에서 유의미한 1,308명 중에 상층은 9.3%, 신중산층 30.2%, 구중산층 22.9%, 하층 37.6%로 나왔다.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모든 계층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5). 전국 차원에서 계층 간의 후보별 지지행태의 차이에 대한 변별력이 다소 약해진 것이다. 상층은 이명박 후보 60.6% 대 정동영 후보 19.7%의 지지를 보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40% 포인트가 넘었다. 반면 신중산층의 경우 이명박 후보에게 41.9%의 지지를 보내, 모든 계층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신중산층은 또 정동영 후보 24.9%,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16.5%,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5.7% 등 진보 진영의 후보들에게 골고루 지지를 보냈다. 구중산층은 이명박 후보 58.4% 대 정동영 후보 24.7%로 상층과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였고, 하층은 이명박 후보 50.0% 대 정동영 후보 31.2%로 신중산층과 보다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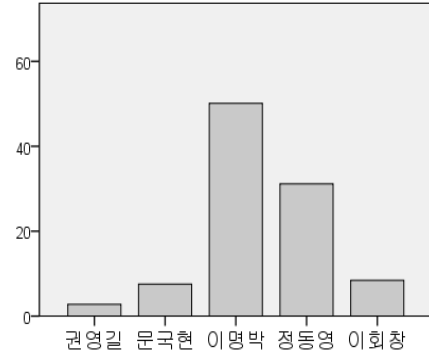
(그림 5-5) 제17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실제 투표결과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어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한 자료라는 사실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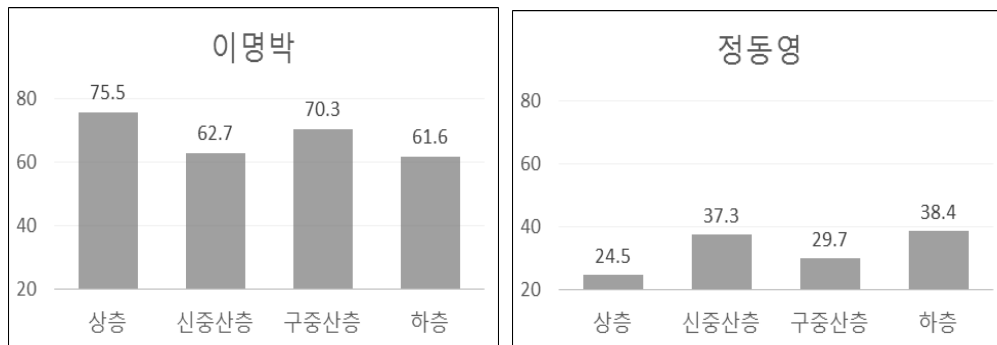
구중산층



하층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만 놓고 후보별 지지계층을 나누어 보면 이명박 후보는 상층과 구중산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하층과 신중산층에서는 낮은 지지를 받았다(그림 5-6). 반면 정동영 후보는 하층과 신중산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상층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상층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정동영 후보보다 세 배 가까운 지지를 보내면서 2002년도에 이어 또 다시 계층투표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구중산층도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이에 비해 신중산층은 일관되게 진보성향 후보 쪽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하층은 이번 선거에서는 신중산층과 유사한 행태를 드러냈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 격차에 따라 계층별 지지율 차이는 유의확률 5% 이내에 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가 모든 계층으로부터 물표를 받다시피 했지만, 2002년 대선에서 출현했던 상층 대 신중산층 간의 계층균열 구조가 2007년 대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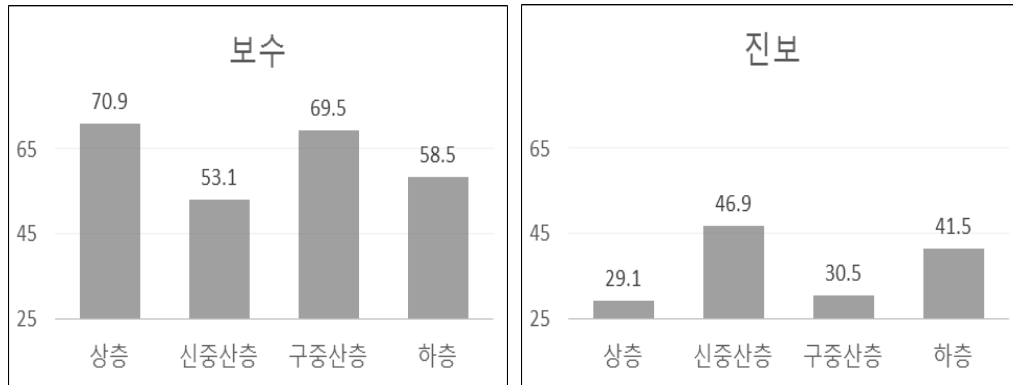
(그림 5-6) 제17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3.279^{**}$, $p<0.05$, $N=909$

이번에는 이명박·이회창 두 후보를 보수후보군으로 묶고, 정동영·문국현·권영길 세 후보를 진보후보군으로 묶어 지지계층을 파악해 보았다(그림 5-7). 보수후보군은 상층과 구중산층에서 70.9%와 69.5%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진보후보군은 신중산층과 하층에서 46.9%와 41.5%라는 높은 지지를 받아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신중산층과 하층은 자리를 바꾸어 신중산층의 진보후보군에 대한 지지가 하층보다 높아졌다. 즉 진보·보수 두 후보군에 대한 지지율 격차가 상층은 41.8%포인트인 반면 신중산층은 6.2%포인트에 불과했다. 이회창과 정동영 두 후보만 비교할 때보다 보수와 진보 후보군으로 묶었을 때,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p 값이 0.00으로 나타날 정도로 계층별 지지행태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층균열이 통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그림 5-7) 제17대 대선 진보·보수 후보군에 대한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8.43^{***}$, $p=0.00$, $N=1182$

각 계층별 진보·보수 후보군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층별 이념 평균에서도 확인되었다(표 5-16). 0을 매우 진보, 10을 매우 보수로 규정한 0~10점 척도에서, 신중산층은 5.15로 가장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상층을 비롯한 나머지 계층은 신중산층에서 조금 떨어진 5.51~5.76 구간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신중산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으

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중산층의 진보후보군에 대한 선호와 상층의 보수후보군에 대한 선호가 신중산층과 상층의 이념적 성향에 기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표 5-16) 제17대 대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0~10)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ANOVA
이념평균	5.51	5.15	5.62	5.76	F=7.77***
N	145	446	295	422	p=0.00

요컨대 기존 연구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지역균열이 보다 강화되면서 세대를 통해 나타난 이념균열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균열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02년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투표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신중산층의 진보적인 투표행태는 이 계층의 이념적 성향에 기반하고 있음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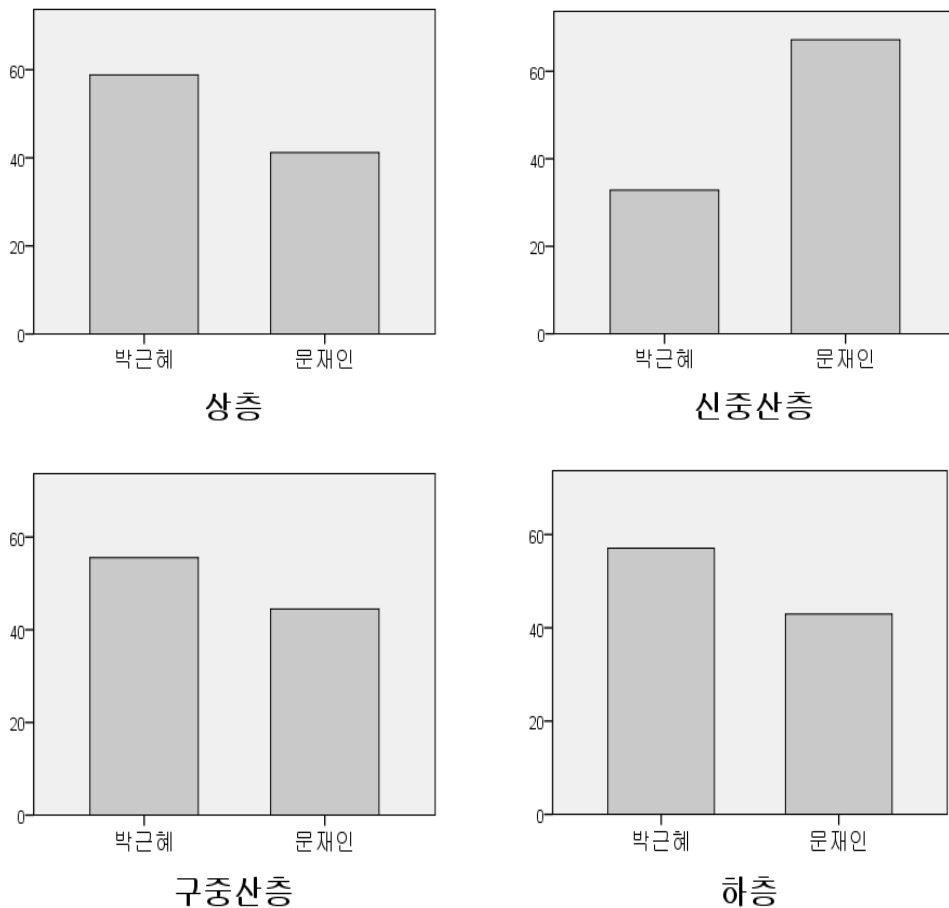
이번에는 2012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선거후조사 자료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서 나타난 계층별 투표행태를 분석해 보겠다.⁷⁹⁾ 2012년의 통계청 기준 소득10분위별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 월평균 소득이 4,076,876 원인 점을 고려해 계층구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은 상층 700만 원 이상, 중산층 250~700만 원, 하층 250만 원 미만을 적용했다. 그 결과 4개의 계층으로 분류된 720명 중 상층이 15.7%, 신중산층이 33.6%, 구중산층이 21.5%, 하층이 29.2%로 나왔다.

먼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를 놓고 계층별 투표행태를 살펴보면, 상층은 박근혜 후보에게 58.8%, 문재인 후보에게 41.2%의 지지를 보냈다(그림 5-8). 신중산층은 박근혜 후보에게 32.8%의 낮은 지지를 보낸 대신, 문재인 후보에

79)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선거후조사는 선거 직후인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584명)와 무선 전화(616명)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8\%$ 포인트이다. 현대정치연구소의 자료도 선거후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서 웨이-가중적용을 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음을 밝힌다.

대해 67.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구중산층은 박근혜 후보 55.6%, 문재인 후보 44.4%로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했고, 하층도 박근혜 후보 57.1%, 문재인 후보 42.9%로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했다. 신중산층만 진보 성향의 문재인 후보를 두 배 이상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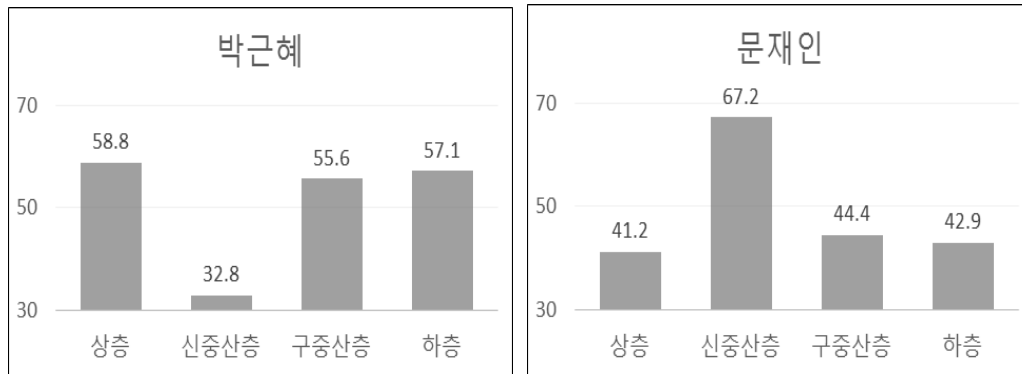
(그림 5-8) 제18대 대선 계층별 투표행태



후보별 지지계층을 살펴보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상층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 하층과 구중산층, 신중산층 순으로 득표를 했다(그림 5-9). 반면 문재인 후보는 신중산층에서 67.2%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구중산층, 하층, 상층의 순으로 득표를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신중산층의 진보 후보에 대한 선호 현상이 매우 두드러졌다. 상층은 박근혜 후보를 큰 격차로 지지해 보수적

성향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계층투표 역시 아노바 분석의 p값이 0.00으로 나와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제18대 대선 후보별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12.45^{***}$, $p=0.00$, $N=673$

2012년 대선에서 각 계층별 지지행태의 차이는 주관적 이념평가에도 반영되었다(표 5-17). 0점을 매우 진보, 10점을 매우 보수로 한 11점 척도에서, 상층은 5.52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신중산층은 4.42로 모든 계층 중에 가장 진보적이었다. 구중산층은 상층과 유사하게 5.21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고, 하층은 5.02로 비교적 중도성향에 가까웠다. 계층별 이념차이는 투표행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제18대 대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0~10)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평균	ANOVA
이념평균	5.52	4.42	5.21	5.02	4.93	$F=6.69^{***}$ $p=0.00$
N	112	241	148	198	699	

즉 2012년 대선에서도 전국 차원에서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계층투표가 확인되었고 이는 각 계층의 이념성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각 계층별 투표행태와 이념격차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2002년 이후 실시된 세 차례의 대선에서 상층은 2002년 이회창 후보, 2007년 이명박 후보에 이어 2012년에도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며 계층투표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에 비해 신중산층은 상층과 정반대로 2002년 노무현 후보, 2012년 문재인 후보로 이어지는 진보적 계층투표 성향을 보여주었다. 신중산층은 2007년 대선에서도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등 진보성향의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이념에 기반을 둔 계층균열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며 일반화된 것이다.

3) 지역 차원의 계층투표

2002년 대선에서는 전국 차원의 계층투표가 지역 차원에도 반영되어 영호남 지역의 교차투표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도 영호남 지역의 교차투표가 발생했을까?

먼저 2007년 제17대 대선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5-1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수적인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정당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호남에서 상층의 경우 보수후보군에 대해 62.5%를 지지해, 진보후보군에 대한 지지율 37.5%를 25%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물론 이 수치는 표본 수가 적은데 따른 오차일 가능성도 있지만, 상층의 계층투표 성향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보수 성향의 호남 지역 상층이 지역균열을 넘어 이념균열을 따라 보수후보군에게 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는 교차투표를 한 것이다. 반면 호남의 신중산층과 하층은 보수후보군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지지를 보냈다. 호남지역에서 계층 간의 투표행태 역시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제17대 대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보수후보군	62.5	18.9	26.7	10.9	20.0	F=4.51*** p<0.01
진보후보군	37.5	81.1	73.3	89.1	80.0	
N(=130)	7	37	30	55	100.0	

반면 영남지역에서는 일단 진보·보수 후보군에 대한 계층별 지지율 차이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5-19). 하지만 진보후보군에 대한 신중산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의 경향성은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신중산층의 진보후보군에 대한 지지는 31.5%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왔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신중산층은 16.7%로 지역 평균 14.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제17대 대선 영남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구분	후보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부산/ 경남	진보후보군	28.6	31.5	21.4	23.5	25.9	F=0.45 p>0.10
	보수후보군	71.4	68.5	78.6	76.5	74.1	
	N(=185)	21	54	42	68	100.0	
대구/ 경북	진보후보군	14.3	16.7	9.5	18.6	14.7	F=0.52 p>0.10
	보수후보군	85.7	83.3	90.5	81.4	85.3	
	N(=129)	14	30	42	43	100.0	

즉 호남에서 상층을 비롯한 보수적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차투표를 한 반면, 영남지역에서 신중산층의 진보후보군으로의 이동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전국 차원에 비해 영남지역 신중산층의 계층투표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2007년 대선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흐르면서 신중산층을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반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젊고 진보적이며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투표에 불참한 반면, 나이 들고 보수적이며 한나라당 지지자일수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하, 2008).⁸⁰⁾ 즉 2007년 대선에서는 영남의 신중산층보다

80)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투표불참 현상은 2008년 총선에서도 이어졌다. 동아시아연구원이 2008년 총선 당시 패널조사를 토대로 기권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5석을 잃고 대신 진보 정당들이 5석을 얻는 것으

호남의 상층이 보수 정당을 선택해 이동을 한 선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대선에서는 지역별 계층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2012년 대선에서는 각 지역의 계층별 투표행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상층의 보수적 성향과 신중산층의 진보적 투표성향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영남 지역을 살펴보면 신중산층일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표 5-20). 부산/경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60%를 얻어 박근혜 후보에 대해 20%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다. 보수적 성향의 상층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 27.2%포인트나 더 높아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상층과 신중산층 두 계층이 아니라 네 계층의 투표행태를 비교한데다 문재인 후보의 지역평균 지지율이 45%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탓인지 계층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신중산층으로부터 27.8%를 받아 상층의 9.1%에 비하면 무려 세 배 넘는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계층균열에 대한 통계적 의미는 부산/경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지역 모두에서 상층과 신중산층이 일관되게 보수적/진보적 투표행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0) 제18대 대선 영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부산/ 경남	박근혜	63.6	40.0	52.4	68.8	54.5	F=1.99 p>0.10
	문재인	36.4	60.0	47.6	31.2	45.5	
	N(=99)	11	35	21	32	100.0	
대구/ 경북	박근혜	90.9	72.2	84.6	88.9	84.1	F=1.12 p>0.10
	문재인	9.1	27.8	15.4	11.1	15.9	
	N(=68)	11	18	13	27	100.0	

호남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표 5-21). 박근혜 후보에 대한 호남지역의 평

로 나타났다(이현우, 2008a).

균 지지율은 12.7%로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호남의 상층은 18.2%, 구중산층은 25.6%, 하층은 14.3%의 지지를 보냈다. 이 세 계층에게는 신중산층에 비해 보수적 이념이 보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신중산층은 불과 4.2%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지역균열과 진보적 성향의 이념균열이 중첩되면서 보수적 성향의 박근혜 후보에게 매우 적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호남지역에서도 계층투표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모든 계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21) 제18대 대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박근혜	18.2	4.2	25.0	14.3	12.7	F=1.23 p>0.10
문재인	81.8	95.8	75.0	85.7	87.3	
N(=71)	11	24	8	28	100.0	

요컨대 2012년 대선에서는 영호남 두 지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교차투표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국 차원의 선거 양상은 2002년 대선과 유사했지만 지역 차원의 계층별 투표는 2002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이전 선거에 비해 지역적 차원에서 계층균열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층과 신중산층의 대조적인 투표행태가 완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산/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를 앞서는 등 신중산층이 진보적인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고, 상층 역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극히 저조한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균열 구조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 계층과 지역 변수의 영향력

지금까지 세 차례의 대선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적 차원에서 계층

투표 현상은 매 선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호남 두 지역에서의 계층투표 역시 2002년 대선에 비해 2007년이나 2012년 대선에서 네 개의 계층을 비교했을 때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균열의 양상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계층과 지역이라는 두 변수는 대선 후보 선택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과 지역의 두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정하고, 진보후보(군)과 보수후보(군)에 대한 지지를 종속변수로 해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아노바 분석을 세 차례 대선에 대해 모두 실시해 보았다(표 5-22). 계층은 상층과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등 4개(자유도 3)로 나누었고,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제주 등 6개 권역(자유도 5)으로 나누었다. 2002년 대선의 후보군은 이회창과 노무현, 2007년 대선의 후보군은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을 진보후보군으로 묶고, 이명박과 이회창을 보수후보군으로 묶었다. 또 2012년 대선의 후보군은 박근혜와 문재인 등 2명이다.

(표 5-22) 대선에서 계층과 지역 변수의 효과

구분		제16대	제17대	제18대
F (p)	계층	3.23** (0.02)	7.39*** (0.00)	8.05*** (0.00)
	지역	22.81*** (0.00)	14.96*** (0.00)	13.52*** (0.00)
R ²		0.183	0.149	0.171
N		1,047	1,268	688

아노바 분석 결과 계층 변수의 p값은 2002년 대선에서 0.02,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는 0.00으로 나타났다. 세 차례 대선에서 모두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데 계층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지역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계층 변수의 효과가 대단히 높게 나타난 것은 계층 변수가 투표행태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결정요

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2년 대선의 p값이 0.02인 것을 감안하면 계층의 영향력은 2007년 대선에서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고, 2012년 대선에서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2년 대선 이후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계층 변수의 영향력이 지역 변수 만큼이나 대단히 유효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계층 변수의 영향력이 대선이 실시될 때마다 지속되고 있어 계층균열이 말 그대로 구조화되었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지역 변수의 영향력을 테스트한 p값은 세 차례의 대선에서 모두 0.00을 유지해 지역 변수의 강력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변수의 설명력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아노바 분석결과 F값이 2002년 22.81에서 2007년 14.96, 2012년 13.52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분석 대상이 선거마다 동일하지는 않아 직접 비교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투표결정 과정에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성 내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계층 변수의 F값은 2002년 3.23에서 2007년 7.39, 2012년 8.05로 상대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어 투표행태에 대한 설명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선을 통해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계층균열이 구조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계층균열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이념성향임도 알 수 있었다.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은 지역균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계층투표 행태가 2000년대 총선에서도 나타나고 있을까? 총선은 정당 수가 많아 표가 분산되는 데다 대선에 비해 후보 요인이 크게 작용해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2004년부터 후보 요인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는 정당별 비례대표 투표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균열은 여전히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 2000년대 총선의 정당별 투표에서 나타난 계층별 투표행태를 분석해 보겠다.

(2) 총선에서 나타난 계층균열

1) 지역균열/이념균열의 부침(浮沈)

2004년 제17대 총선에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신생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에 비해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경제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역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그 해 말 실시된 대선에 대한 전망적 투표가 엇갈리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간신히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총선에서 여당에 쏠리는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2012년 총선에서는 다소 균형 잡힌 선거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세 차례 총선에서 계층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먼저 각 총선에서 지역균열이 정당투표에 미친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탄핵이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 돌풍을 몰아치며 152석을 획득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으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2당에 그쳤고, 민주당은 9석, 자민련은 5석으로 밀려났다.

제17대 총선 결과를 의석수만 놓고 보면 이전 선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부산 1석, 울산 1석, 경남 2석, 민주노동당이 경남과 울산에서 2석을 얻은 것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이 영남권을 사실상 싹쓸이를 했다. 또 호남 지역에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전 의석을 차지했다. 기존의 영호남 지역균열 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제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정당별 투표 결과를 보면 기존의 지역주의 구도가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50% 안팎의 득표에 그친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34~45%에 달했다. 또 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자민련은 충청에서 높은 득표를 했지만 역대 선거에서의 지지율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15%대에 그쳤다. 그리고 지역주의 균열구조가 완화된 틈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파고들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10%를 웃도는 고른 득표를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표 5-23) 제17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구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수도권	35.9	39.0	13.3	7.1	2.1
대구/경북	60.1	22.6	11.8	1.3	1.0
부산/경남	46.9	32.6	14.8	1.6	0.7
호남	2.8	55.3	11.7	25.8	0.8
충청	25.0	41.8	11.7	2.7	15.6
강원/제주	38.1	40.2	13.1	3.9	1.3
전국	35.8	38.3	13.0	7.1	2.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제17대 총선에서 지역균열의 약화는 이념균열의 강화라는 상반된 효과를 낳았다. 즉 탄핵을 중심으로 한 이념균열 현상이 세대를 통해 투표에 반영되며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다(문우진, 2005; 2009; 윤종빈 2005; 박명호, 2004a; 2004c; 정혜숙·임영규, 2006; 최준영·조진만, 2005 등).

2008년 총선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둔 지 불과 4개월 만에 치러졌다. 새 정권이 출범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인만큼 여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고, 실제 선거결과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한나라당은 153석에다가 탈당세력인 친박연대의 14석까지 합하면 2004년 총선에 비해 약진을 했다. 반면 4년 전 과반을 훌쩍 넘었던 민주당은 81석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민주노동당도 5석으로 줄면서 제3당의 지위를 18석의 자유선진당에 내주었다.

지역별로도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영남권의 68석 중 51석, 민주당은 호남에서 31석 중 25석,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의 24석 중 14석을 차지해 2004년 총선에 비해 지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표 5-24)는 지역균열이 각 지역의 정당별 투표에도 반영되었음을 나타낸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에 대한 지지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 66.8%보다 높거나 그와 비슷한 78.0%와 64.2%를 기록했다. 또 자유선진당으로

이름을 바꾼 충청 정당 역시 충청권에서 29.3%로 제17대 총선에 비해 두 배 가까운 득표율을 보였다.

(표 5-24) 제18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단위: %)

구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수도권	27.1	40.5	4.9	4.4	10.9
대구/경북	5.3	50.4	3.4	3.7	27.6
부산/경남	11.3	44.1	4.5	8.8	20.1
호남	66.8	7.3	1.2	9.0	1.9
충청	18.2	28.6	29.3	4.8	9.2
강원/제주	21.8	42.0	5.8	7.0	12.3
전국	25.2	37.5	6.8	5.7	13.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이에 비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4년 전 13.0%에서 5.7%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역균열이 강화되고 이념균열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진데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의 성격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가 2007년 대선처럼 많이 이탈해가면서 이념균열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원택, 2009a; 박찬욱, 2009; 이내영, 2009b; 정한울·권혁용 2009).

2012년 총선은 제18대 대선을 불과 8개월 남겨두고 실시된 선거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것이다. 따라서 총선 역시 대선과 관련한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강원택, 2012b; 장승진 2012). 또 2012년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2007년 제17대 대선처럼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회고적 평가의 영향 역시 받을 수밖에 없었다(장승진, 2012).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적 성향의 야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며 새누리당과 사실상 양당 구도를 이루었다. 실제 선거결과를 보면 새누리

당이 152석을 얻어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했고 민주통합당은 127석으로 거의 양당 체제를 이룬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을 얻었다.

지역별 정당투표율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에서 50% 이상의 과반을 얻었고, 민주당 역시 호남 지역에서 68.0%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영호남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영남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004년 총선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되었고, 새누리당의 호남 지지율도 이전에 비해 비교적 상승했다. 또 충청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자유선진당을 압도하면서 충청 지역주의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즉 2012년 총선에서도 지역균열은 드러났지만 그 위력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25) 제19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단위: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수도권	42.4	37.9	10.7
대구/경북	67.9	14.8	6.6
부산/경남	52.1	28.3	10.4
호남	7.3	68.0	15.6
충청	37.9	33.3	7.7
강원/제주	48.0	35.1	8.1
전국	42.8	36.5	10.3

특히 2012년 총선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와 경기도 교육감 선거부터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둘러싼 진보 대 보수의 대결 구도가 아직 작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역균열은 다소 완화된 반면 2008년 총선에서 다소 약화되었던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다시 부각되었다는 것이 기존 연구결과이다(박명호, 2012; 박원호, 2012a; 박찬욱·강원택, 2012 ; 윤광일, 2012; 정병기, 2012; 한귀영, 2012).

즉 2000년대 총선의 구도를 다시 정리하면 2004년 총선에서는 지역균열이 약화되고 이념균열이 강화되었다가, 2008년 총선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다. 하지만 2012년 선거에서는 다시 이념균열이 강화되면서 지역균열이 약화된 선거라는 분석이다.

2) 전국 차원의 계층투표

2004년 총선에서 이념균열이 강해졌다면 이념균열에 따른 계층균열의 실태는 어떠했는지 한국선거학회 주관 하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실시한 선거후조사 자료에 근거해 계층별 투표행태를 분석해 보겠다.⁸¹⁾

그런데 2004년도 여론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먼저 응답자의 소득에 대해 5분위 단위로 질문을 한 결과, 상층에 해당하는 소득 80%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0.8%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소득 5분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소득수준을 낮춰서 답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층을 소득 60% 이상으로 적용하고 중산층은 소득 20~60%, 하층은 소득 20% 미만의 구간으로 정했다. 여기에 직업과 학력을 고려해 계층을 분류하자 전체 1,013명 가운데 상층은 22.4%, 신중산층 24.2%, 구중산층 34.2%, 하층 19.2%로 나왔다. 상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오고 하층이 적게 나온 것이다. 상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는 신/구 중산층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돼, 상층이 실제보다 중산층적인 행태 즉 진보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하층 중 일부가 중산층에 포함되면서 중산층이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통계적 오류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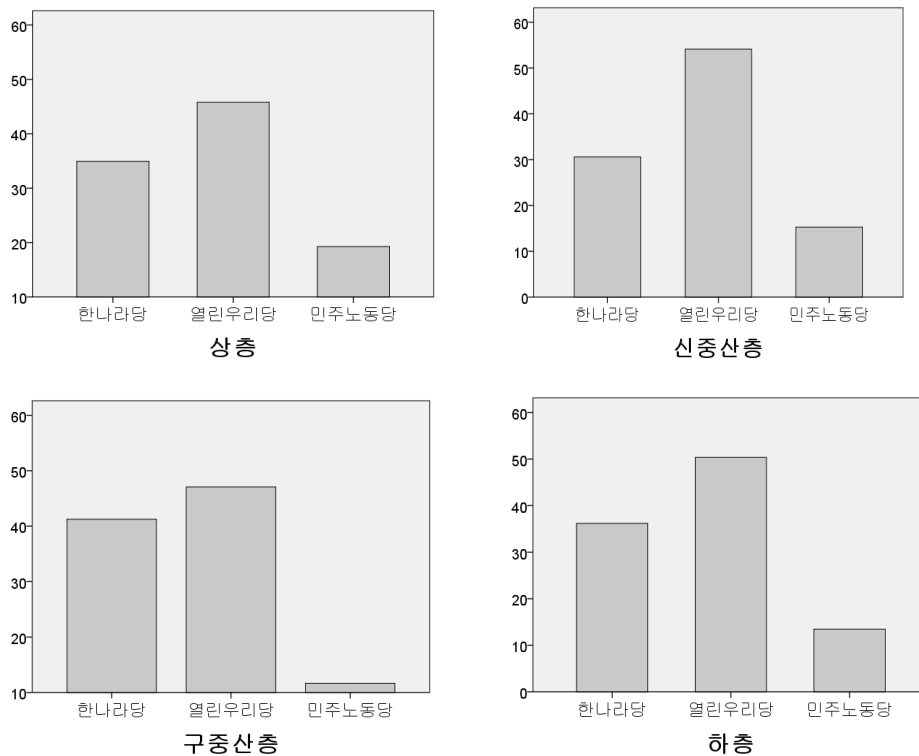
또 200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비례대표 지지결과가 열린우리당 49.1% 대 한나라당 36.3%로 나왔다.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13%포인트나 된다. 하지만 실제 득표율은 열린우리당 38.3%, 한나라당 35.8%로 2.5%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 계층별 지지행태를 보면 상층과 중산층, 하층 등 계층을 막론하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계층분류 기준 문제로 상층과 중산층 간의 차별성이 지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층 간의 변별력이 더욱 취약해진 것이다.

81)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선거후조사는 선거 직후인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다단계층화추출법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모집한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5\%$ 포인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통계적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계층의 지지율 차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선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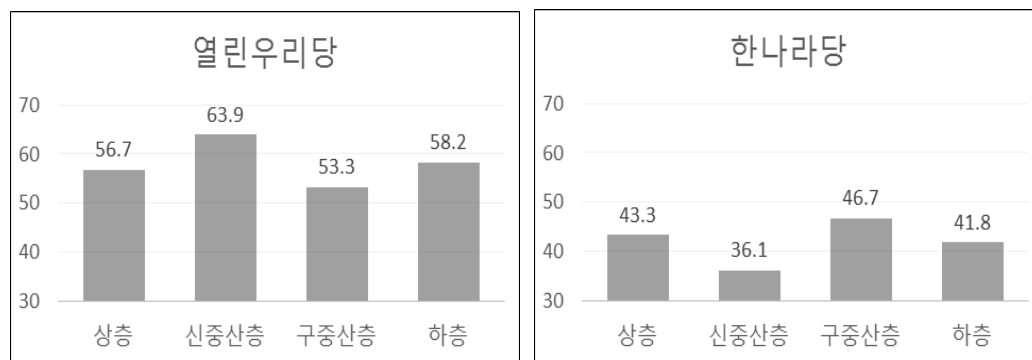
먼저 (그림 5-10)에서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상층의 경우 열린우리당 45.8%, 한나라당 34.9%의 지지를 보내 두 당 간의 차이는 10.8%포인트였다. 신중산층은 열린우리당에게 54.1%의 높은 지지를 보낸 반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30.6%에 그쳐, 두 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23.5%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구중산층의 열린우리당 지지는 47.1%, 한나라당 지지 41.2%로, 두 당 간의 차이가 5.9%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하층은 열린우리당 50.4%, 한나라당 36.2%의 지지를 보여, 지지율 격차가 14.2%포인트로 신중산층 다음으로 컸다. 즉 모든 정당이 열린우리당을 더 지지한 가운데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신중산층 > 하층 > 상층 > 구중산층의 순이었다.

(그림 5-10) 제17대 총선 계층별 투표행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당만을 놓고 정당별 지지계층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신중산층 > 하층 > 상층 > 구중산층의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그림 5-11). 반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구중산층 > 상층 > 하층 > 신중산층 순이었다. 통계적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신중산층은 일관되게 진보적 성향의 열린우리당에게 1순위 지지를 보낸 반면 한나라당에게 가장 낮은 지지를 보냈다. 이에 비해 상층은 2002년 대선보다 다소 진보적으로 평가되면서 구중산층이 원래 상층의 자리를 대체했다. 즉 구중산층이 한나라당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고 열린우리당에게 가장 낮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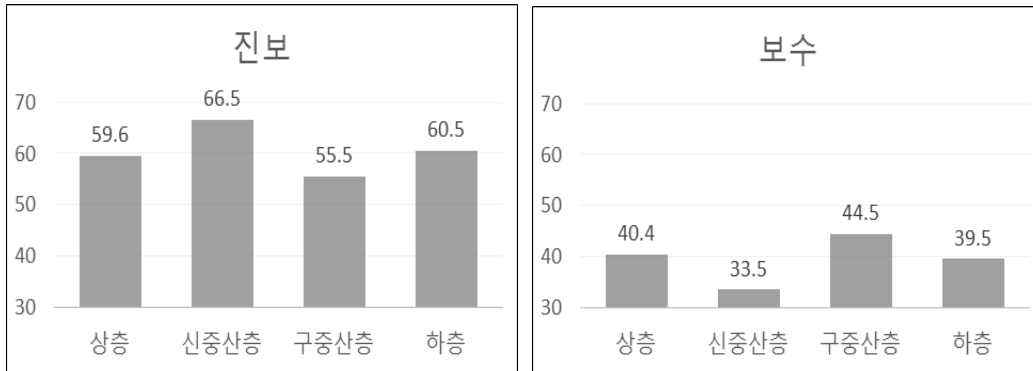
(그림 5-11) 제17대 총선 정당별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1.33$, $p>0.10$, $N=612$

이번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을 진보정당군으로 묶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보수정당군으로 묶어서 각 계층의 정당군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율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5-12). 계층별 지지행태는 양당을 비교할 때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장 지지율 격차가 큰 계층은 신중산층으로 두 정당군에 대한 지지율 차이는 무려 33%포인트에 달했다. 하층에서 지지율 차이는 21%포인트, 상층은 19.2%포인트, 구중산층은 11.0%포인트로 나타났다. 두 정당군에 대한 지지율 차이도 양당을 비교할 때와 동일하게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신중산층 > 하층 > 상층 > 구중산층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5-12) 제17대 총선 진보·보수 정당군에 대한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1.56$, $p>0.10$, $N=671$

신중산층의 진보적 성향은 각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에서도 드러났다(표 5-26). 0점을 매우 진보, 10점을 매우 보수로 나눈 척도에서 신중산층의 이념평균은 4.54로 가장 진보적이었다. 다음은 상층이 4.69, 구중산층 4.72, 하층 4.77 순으로 신중산층과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로는 계층별 차이가 무의미하지만 신중산층이 투표행태 뿐만 아니라 이념평균의 측면에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6) 제17대 총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0~10)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평균	ANOVA
이념평균	4.69	4.54	4.72	4.77	4.67	F=0.38
N	204	222	283	158	867	p>0.10

요컨대 2004년 총선에 대한 분석결과 신중산층은 투표행태나 주관적 이념평균이란 측면에서 일관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상층의 경우 이념적으로 신중산층 다음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표행태에서는 하층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모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예상대로 상층이 보다 진보적 성향을 띠고 중산층이 보다 보수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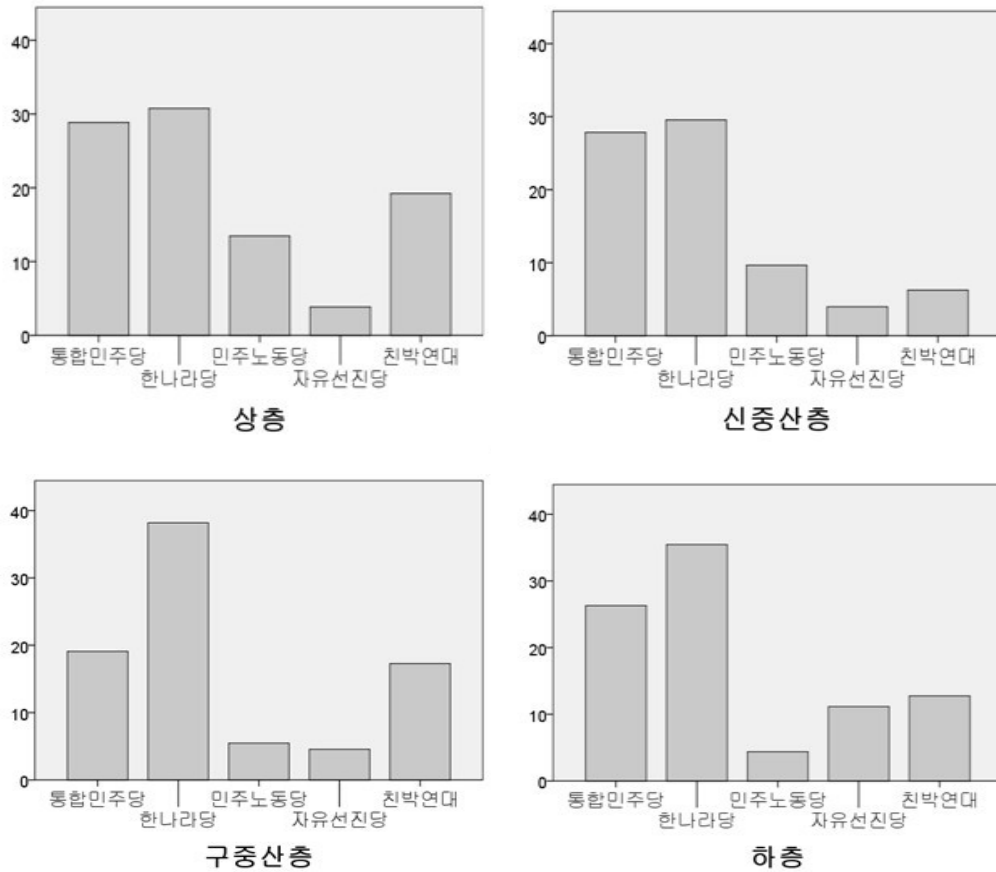
을 띠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계층분류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4년 총선에서 지역균열이 약화되고 이념균열이 강하게 등장한 것으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어긋난다(곽진영, 2006; 문우진, 2009; 박명호, 2004a; 2004c; 정혜숙·임영규, 2006; 최준영·조진만, 2005). 이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분석에서 신중산층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진보적 투표행태와 이념평균은 실제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층의 경우 분석결과보다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자 간의 간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즉 2002년 대선 이후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표되고 있는 계층균열이 자료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 대한 분석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석결과 이상으로 현존할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총선에서 계층균열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동아시아연구원이 총선 직후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총선 제2차 패널조사를 토대로 살펴보겠다.⁸²⁾ 먼저 계층분류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08년 통계청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월 평균이 3,390,738만원인 점을 고려해, 상층을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중산층을 300~600만 원, 하층을 300만 원 미만으로 잡았다. 여기에 직업과 학력을 추가해 계층을 분류한 결과 전체 유효 대상자 915명 가운데 상층은 11.5%, 신중산층은 35.0%, 구중산층은 22.3%, 하층은 31.3%로 나타났다.

먼저 (그림 5-13)에서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모든 계층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 한나라당 30.8%, 통합민주당 28.8%, 친박연대 19.2% 순으로 지지했다. 신중산층은 한나라당을 29.5%로 가장 많이 지지했지만, 통합민주당에게 27.8%로 비슷한 지지를 보냈고, 진보신당 11.9%, 민주노동당 9.7%, 창조한국당 8.0% 순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보냈다. 구중산층은 한나라당 38.2%, 통합민주당 19.1%, 친박연대 17.3%, 하층은 한나라당 35.5%, 통합민주당 26.3%, 친박연대 12.7% 순으로 지지를 보내 상층과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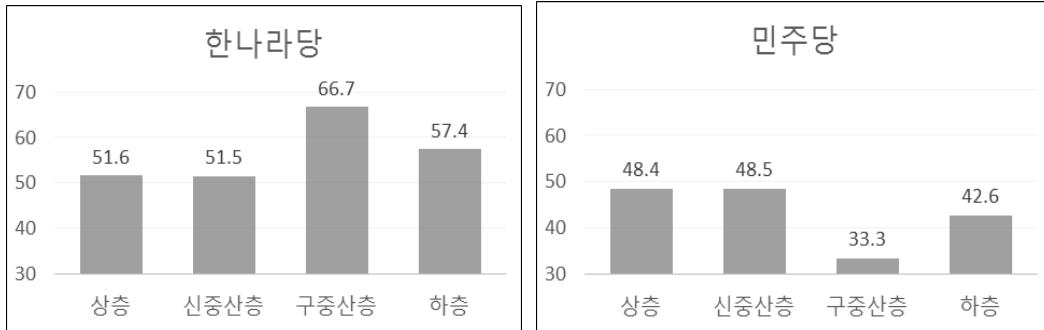
82) 2008년 총선 패널조사는 2008년 3월부터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370명을 상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제2차 조사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이루어졌으며, 조사 응답자는 1,153명으로 표집오차는 $\pm 2.9\%$ 포인트이다. 이번 조사결과도 실제 투표결과와 차이가 있어 가중치를 적용했다.

(그림 5-13) 제18대 총선 계층별 투표행태



이번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당만 분리해서 정당별 지지계층을 살펴보았다(그림 5-14). 한나라당은 구중산층에서 6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다음으로 하층, 상층, 신중산층에서 50%대의 유사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산층과 상층, 하층에서 40%대의 지지를 얻고, 구중산층에서 33.3%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통계적으로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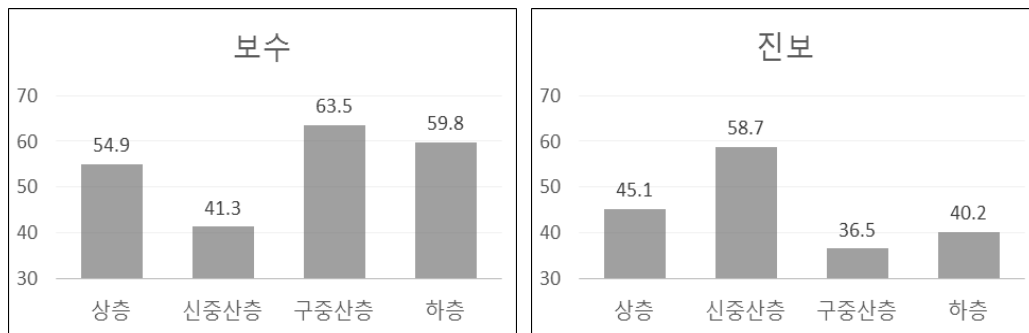
(그림 5-14) 제18대 총선 정당별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1.26$, $p>0.10$, $N=350$

이번 총선에서 여러 정당이 참여해 표가 분산된 점을 고려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을 보수정당군으로 묶고, 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진보정당군으로 묶어서 계층별 지지행태를 알아보았다(그림 5-15). 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당만 비교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나타났다. 아노바 분석 결과 p 값이 0.00으로 계층 간 차이를 부인하는 대안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100%에 이르렀다.

(그림 5-15) 제18대 총선 진보·보수 정당군에 대한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6.33^{***}$, $p=0.00$, $N=576$

신중산층은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진보정당군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보수정당군을 가장 적게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산층만 17.4%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유일하게 보수정당군보다 진보정당군을 더 지지하며 진보적 성향을 보

여준 것이다. 반면 구중산층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적 성향을 많이 드러내면서 보수정당군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진보정당군에게 가장 적은 지지를 보냈다. 물론 상층과 하층 역시 구중산층 못지않은 보수적 투표행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두 정당군에 대한 지지계층을 보면, 보수정당군은 구중산층 > 하층 > 상층 > 신중산층인 반면, 진보정당군은 신중산층 > 상층 > 하층 > 구중산층 순이었다.

진보·보수 정당군으로 나누었을 때 나타난 계층별 투표행태는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7). 즉 0점을 매우 진보, 10점을 매우 보수로 주관적 이념을 측정한 결과, 신중산층이 5.15, 상층이 5.31, 하층 5.60, 구중산층 5.70으로 나타났다.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이고 구중산층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준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계층별 이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가 이념성향에 기인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계층균열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표 5-27) 제18대 총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0~10)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평균	ANOVA
이념평균	5.31	5.15	5.70	5.60	5.44	F=3.13**
N	69	232	120	273	694	p<0.05

요컨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투표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진보 성향의 표가 분산되는 등 계층균열이 작동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진보·보수 정당군으로 묶어서 계층별 투표행태를 살펴본 결과 계층균열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인데다 전국적 차원에서 진보정당군에 대해서도 보수정당군에 비해 더 높은 지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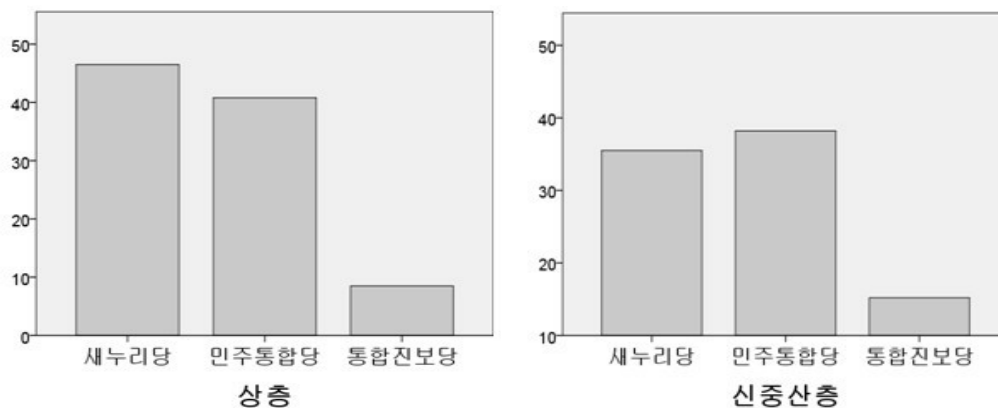
이번에는 2012년 총선에서 나타난 계층균열 현황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선거후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⁸³⁾ 통계청 기준

83)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총선후조사는 선거 후인 5월 3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성,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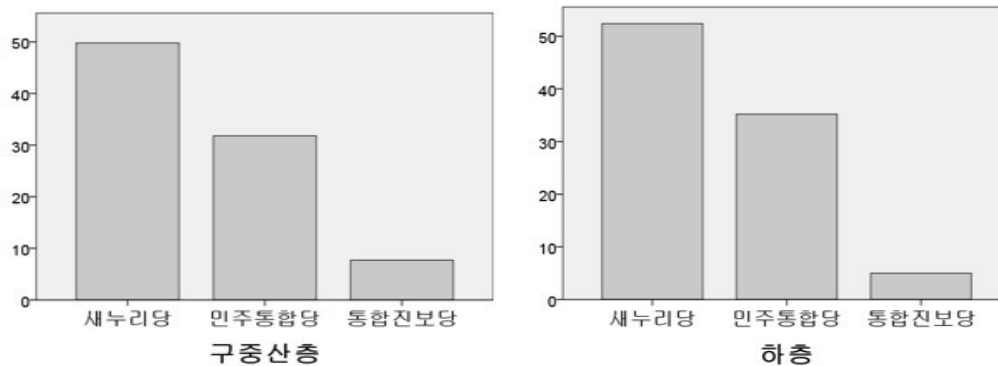
2012년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10분위별 가계수지 월 평균 소득이 4,076,876 원인 점을 감안해, 상층의 소득 수준은 700만 원 이상, 중산층 소득은 300-700만 원, 하층은 300만원 미만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직업과 학력을 적용해 계층 분류를 한 결과, 전체 유효 대상자 1,409명 중 상층은 4.4%, 신중산층 15.0%, 구중산층 18.4%, 하층 31.0%로 나왔다.

먼저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상층은 새누리당에게 가장 높은 46.5%를 지지했고, 민주당 40.8%, 통합진보당 8.5%를 지지했다(그림 5-16). 신중산층은 민주당에게 38.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고, 새누리당에게 35.5%, 통합진보당에게 15.2%를 지지해 상대적인 진보성을 드러냈다. 반면 구중산층은 새누리당 49.8%, 민주당 31.8%, 통합진보당 7.7%를 지지했고, 하층도 새누리당에게 5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고, 민주당 36.2%, 통합진보당 5.0%를 지지해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그림 5-16) 제19대 총선 계층별 투표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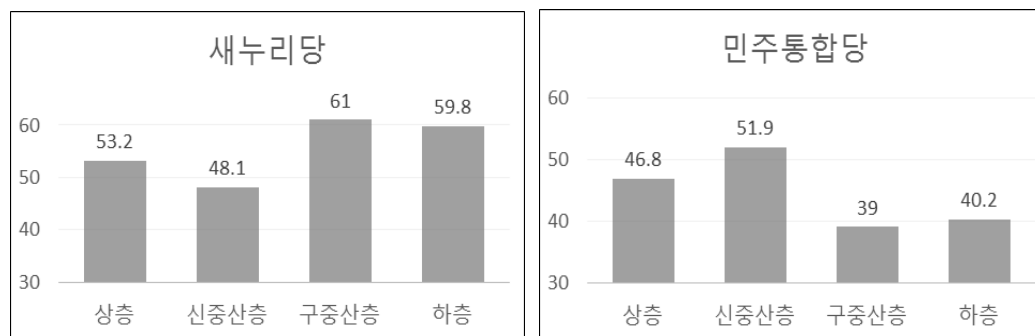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 선정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47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집오차는 $\pm 2.2\%$ 포인트이다. 이 조사결과도 실제와 차이가 있어 가중치를 적용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두 당만 놓고 지지계층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신중산층에서 48.1%로 가장 저조한 지지를 받은 사실이 눈에 띈다(그림 5-17). 구중산층에서 가장 높은 61.0%의 지지를 얻었지만 하층이나 상층의 지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신중산층에서 51.9%로 새누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신중산층의 진보성이 두드러지고 구중산층 및 하층의 보수성향이 드러난 이번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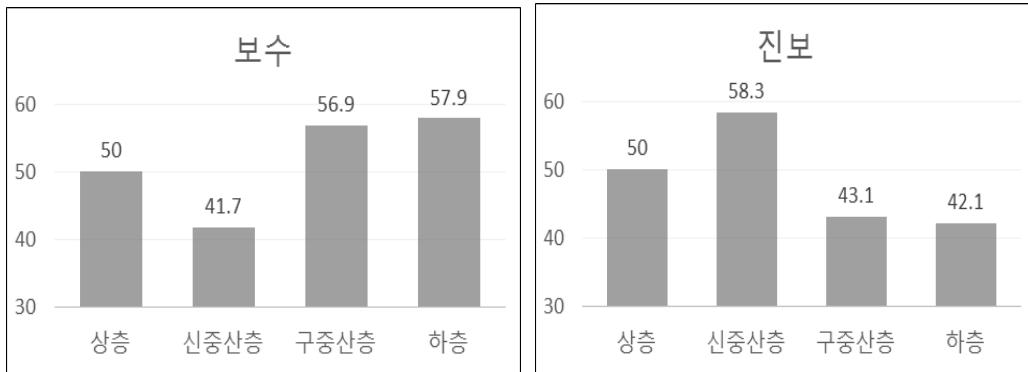
(그림 5-17) 제19대 총선 정당별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2.71^{**}$, $p<0.05$, $N=838$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며 여야 대결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흐른 점을 감안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을 보수정당군으로 묶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군으로 묶어서 계층별 지지행태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그림 5-18).

(그림 5-18) 제19대 총선 진보·보수 정당군에 대한 지지계층 (단위: %)



아노바(ANOVA) 분석 결과 $F=5.30^{***}$, $p<0.01$, $N=947$

먼저 진보정당군에 대한 지지에서 상층과 신중산층이 순위를 바꾸었다. 신중산층이 진보정당군에 대해 58.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 보수정당군에게는 41.7%로 가장 저조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은 진보정당군과 보수정당군에게 동일한 비율의 지지를 보였다. 지지행태로만 보면 신중산층 다음으로 진보적인 모습이다. 반면 하층과 구중산층은 보수정당군에게 가장 높고, 진보정당군에게 가장 낮은 지지를 보내 보수적인 성향을 비슷한 정도로 드러냈다.

이번에는 계층별 투표행태와 이념성향을 비교해 보았다(표 5-28). 0점을 매우 진보, 10점을 매우 보수로 구분해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가를 측정한 결과, 상층이 4.55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 이전 선거에 비해 상층의 진보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다른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투표행태와 주관적 이념평균이 대체로 일치한다. 즉 신중산층이 4.68로 진보적이고, 구중산층이 4.75, 하층이 5.24 순으로 하층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계층별 이념차이는 또 다시 투표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표 5-28) 제19대 총선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균 (0~10)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평균	ANOVA
이념평균	4.55	4.68	4.75	5.24	4.94	F=10.27*** p=0.00
N	90	308	376	634	1,408	

요컨대 200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세 차례의 총선에 대한 분석 결과 신중산층의 진보적인 투표성향과 이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004년 총선의 경우 통계자료의 문제점으로 인해 계층투표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군과 보수정당군에 대한 계층투표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층투표를 뒷받침하는 이념적 차별성도 확인했다. 2002년 이후 세 차례 대선에서 출현한 계층균열 구조가 총선에서도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3) 지역 차원의 계층투표

그렇다면 각 총선에서 지역별 계층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검토해 보자. 먼저 2004년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영남 지역의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당투표 지지율을 보면 신중산층의 높은 지지율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표 5-29). 즉 부산/경남 지역에서 신중산층의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58.3%로 한나라당 지지율보다 높았다. 신중산층이 이념균열을 따라 진보적인 열린우리당에 적극적으로 교차투표를 한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신중산층의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33.3%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계층 간의 차별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호남 지역에서는 상층만이 유일하게 한나라당에 대해 정당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상층이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교차투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지역균열이 약화되고 이념균열이 두드러진 선거였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계층균열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통계자료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층과 신중산층의 대조적인 투표행태는 여전히 드러났다.

(표 5-29) 제17대 총선 각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부산/ 경남	열린우리당	50.0	58.3	41.9	43.5	49.2	F=0.71 p>0.10
	한나라당	50.0	41.7	58.1	56.5	50.1	
	N(=118)	28	36	31	23	100.0	
대구/ 경북	열린우리당	27.8	33.3	27.0	28.6	28.0	F=0.03 p>0.10
	한나라당	72.2	66.7	73.0	71.4	72.0	
	N(=75)	18	6	37	15	100.0	
호남	열린우리당	87.5	100.0	100.0	100.0	98.1	F=1.93 p>0.10
	한나라당	12.5	0.0	0.0	0.0	1.9	
	N(=52)	8	15	19	10	100.0	

이번에는 2008년 총선에서 지역별 계층투표 결과이다(표 5-30). 먼저 영남지역의 계층별 투표행태를 보면 부산/경남에서 신중산층은 진보정당군을 무려 73.1%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정당군과의 지지율 격차가 50%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이다. 신중산층이 지역균열을 넘어 부산/경남의 유일한 진보정당군 지지층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 가장 보수적 성향을 보인 구중산층의 경우 진보정당군에게 불과 5.3%의 지지만 보내는 등 다른 계층의 경우 지역균열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중산층의 진보성이 두드러진 이번 총선의 계층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제18대 총선 영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부산/ 경남	진보정당군	44.4	73.1	5.3	29.8	38.2	F=10.68*** p=0.00
	보수정당군	55.6	26.9	94.7	70.2	61.8	
	N(=118)	28	36	31	23	100.0	
대구/ 경북	진보정당군	33.3	22.2	8.3	14.3	15.3	F=0.86 p>0.10
	보수정당군	66.7	77.8	91.7	85.7	84.7	
	N(=59)	3	9	12	35	100.0	

이에 비해 대구/경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층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계층이 보수정당군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냈다. 다만 신중산층의 진보정당군 지지율이 22.2%로 지역평균 15.3%에 비해 높은 점이 비교적 일관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상층은 이번 선거에서 신중산층과 비슷하게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진보·보수 정당군에 대한 호남지역에서의 계층별 투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5-31). 상층이 진보정당군에 대해 100%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표본 수가 4명밖에 안 될 정도로 적은데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층이나 구중산층의 보수정당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념균열보다 지역균열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심리가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념에 따른 계층투표 현상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표 5-31) 제18대 총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진보정당군	100.0	72.2	83.3	90.9	83.9	F=1.39 p>0.10
보수정당군	0.0	27.8	16.7	9.1	16.1	
N(=56)	4	18	12	22	100.0	

2008년 총선의 경우 지역균열이 강화되고 이념균열이 약화되면서 계층균열

역시 들어설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영호남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층 간의 교차투표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 특히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중산층의 진보정당군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념균열의 영향력이 다시 높아진 2012년 총선에서의 지역별 계층 투표 행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부산/경남 지역에서 신중산층의 진보정당군에 대한 지지율은 47.8%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표 5-32). 적지 않은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진보정당군에 대한 지역평균 지지율이 33.9%에 달할 정도로 다른 계층의 지지율도 높아진 탓인지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신중산층은 진보정당군을 33.3%나 지지해, 지역평균 14.3%의 거의 두 배 반에 달하는 교차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이나 하층은 각각 0.0%와 9.3%만 진보정당군을 지지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계층균열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에서도 신중산층일수록 진보정당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상층일수록 보수정당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32) 제19대 총선 영남 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부산/ 경남	진보정당군	33.3	47.8	37.5	28.2	33.9	F=1.19 p>0.10
	보수정당군	66.7	52.2	62.5	71.8	66.7	
	N(=110)	12	23	48	85	100.0	
대구/ 경북	진보정당군	0.0	33.3	14.3	9.3	14.3	F=1.86 p>0.10
	보수정당군	100.0	66.7	85.7	90.7	85.7	
	N(=59)	1	15	28	54	100.0	

그런데 영남 거주자가 아니라 영남 출신들의 계층별 지지행태를 살펴본 결과 계층균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5-33). 영남 출신 신중산층은 영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진보정당군에 대해 40.0%라는 높은 지지를 보낸 반면, 보수정당군에 대해서는 60.0%로 가장 적은 지지를 보냈다. 영남 출신 신

중산층이 보수정당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 투표를 한 것이다. 영남 출신 상층은 신중산층과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여 이전 선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국 지지율에서도 상층이 진보정당군과 보수정당군을 반반 지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영남 출신 하층은 진보정당군을 가장 적게 지지하며 기존 상층이 보여주었던 가장 보수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영남 출신들의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33) 제19대 총선 영남 출신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진보정당군	35.0	40.0	25.3	20.4	25.8	F=2.61* p<0.10
보수정당군	65.0	60.0	74.7	79.6	74.2	
N(=291)	20	45	79	147	100.0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계층균열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표 5-34). 상층의 경우 지역평균의 두 배가 넘는 16.7%가 보수정당군을 지지하며 일부 교차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중산층은 0.0%, 하층은 7.6% 등 보수정당군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진보정당군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 계층투표의 통계적 의미가 희석되었다. 다만 상층일수록 보수정당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표 5-34) 제19대 총선 호남지역 계층별 투표행태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지역평균	ANOVA
진보정당군	83.3	90.0	100.0	92.4	92.6	F=.815 p>0.10
보수정당군	16.7	10.0	0.0	7.6	7.4	
N(=108)	6	20	16	66	100.0	

2000년대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별 계층투표의 결과는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 차원의 계층투표에 비해서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2012년 총선에서 영남 출신 신중산층의 진보적인 교차투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대구/경북 지역과 호남지역 보수층의 교차투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얻지 못했다. 이는 지역균열의 근원지인 영호남 지역에서 계층균열이 지역균열을 대체할 만큼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남 양 지역에서 상층과 신중산층의 교차투표 현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향후 계층균열이 지역균열을 넘어설 수 있는 전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4) 계층과 지역 변수의 영향력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계층과 지역의 두 변수가 진보·보수 정당군을 선택하는 투표행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표 5-35)는 계층과 지역의 두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진보정당군과 보수정당군을 종속변수로 해서 2004년 이후 세 차례 실시된 총선에 대한 아노바 분석 결과이다. 2004년 총선의 경우 종속변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이고, 2008년 총선의 종속변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을 묶은 진보정당군과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을 묶은 보수정당군 등 두 정당군에 대한 지지이다. 2012년의 종속변수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묶은 진보정당군과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을 묶은 보수정당군 등 두 개의 정당군에 대한 지지이다. 독립변수인 계층과 지역 변수는 대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4개의 계층(자유도 3)과 6개 권역(자유도 5)이다.

(표 5-35) 총선에서 계층과 지역 변수의 효과

구분		제17대	제18대	제19대
F (p)	계층	0.80 (0.50)	7.57*** (0.00)	8.05*** (0.00)
	지역	15.35*** (0.00)	11.38*** (0.00)	13.52*** (0.00)
R ²		0.120	0.205	0.171
N		612	570	688

먼저 2004년 총선에서 지역 변수의 p값은 0.00으로 정당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층 변수의 p값은 0.50으로 나타나 계층의 정당 투표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계층투표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즉 통계자료의 문제로 인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2004년 총선의 경우 세대를 통한 이념균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선거로서, 중대선거일 가능성을 점검하는 연구가 많이 제기될 정도로 의미 있는 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계층균열 효과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2004년 총선을 제외하면 2008년 총선과 2012년 대선에서 계층과 지역 변수의 p값은 모두 0.00으로 대단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 대한 분석결과와 동일한 값으로, 지역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도 계층 변수가 대단히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계층 변수의 p값이 지역 변수와 동일한 0.00을 보인 것은 계층균열의 효과가 지역균열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계층 변수의 F값 역시 2008년 7.57, 2012년 8.05로 2007년 대선이나 2012년 대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며 상승하고 있다. 대선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계층 변수의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지역 변수의 F값은 계층 변수의 F값보다는 높지만 선거 때마다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변수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2004년 총선에 비하면 2008년이나 2012년 총선에서 지역 변수의 설명력이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요컨대 계층 변수는 2002년 대선 이후 대선과 총선을 막론하고 투표행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자 안정적인 변수로 자리 잡은 반면, 지역 변수의 영향력은 총선에서도 다소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3. 소결

지금까지 우리는 2002년 대선에서 계층균열이 처음 등장한 이후 우리 사회

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선거과정의 계층별 투표행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처음 출현한 계층균열은 상층과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즉 상층은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기득권 유지와 연계된 이회창 후보에게 더 높은 지지를 보낸 반면, 신중산층은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며 현상타파를 선언한 노무현 후보에게 더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는 직전 선거인 1997년 대선이나 1992년 대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는 특히 지역균열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호남 두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영남 지역의 신중산층이 호남정당 후보인 진보적 성향의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호남 지역의 상층이 영남정당 후보인 보수적 성향의 이회창 후보에게 상호 교차투표를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이념균열을 따라 상층과 신중산층이 전형적인 계층투표를 선보인 것이다.

상층과 신중산층의 투표행태의 차이는 두 계층의 주관적 이념평균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계층별 주관적 이념평가에서 상층이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들 계층의 투표행태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2002년 대선에서 각 계층이 이념성향에 따라 차별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면서 진보적 성향의 후보와 신중산층, 보수적 성향의 후보와 상층 간의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이 형성된 것이다. 기존의 지역에 따른 정당-유권자 연합에 이어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계층균열 구조가 등장한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나타난 정당-유권자 연합은 이후 실시된 대선과 총선에서도 강도를 달리하며 차례로 나타났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6) 2000년대 대선에서 계층투표 현황

구분		2002년		2007년	2012년
계층별 진보 후보 지지현황		신>구>하>상		신>하>구>상	신>구>하>상
전국 차원 계층투표의 통계적 유의미성		유의미 (양자 대결)		유의미 (양자대결, 진보/보수후보군)	유의미 (양자 대결)
지역별 교차투표 유의미성	대구/경북	O	영남출신 계층투표 O	X	X
	부산/경남	X		X	X
	호남	O		O	X

먼저 2000년대 치러진 세 차례 대선을 보면 모든 선거에서 진보후보(군)에 대한 지지도가 신중산층이 가장 높고 상층이 가장 낮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인 투표행태, 상층이 가장 보수적인 투표행태를 보인 것이다. 전국 차원에서 계층투표의 통계적 의미를 따져보아도 모든 선거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차원에서 볼 때 계층균열이 명확히 작용했음을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균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영호남 지역에서의 교차투표는 선거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일관되지 않았다. 즉 2002년 대선에서는 영호남 양측에서 상층과 신중산층의 유의미한 교차투표가 발생한 반면 2007년 대선에서는 호남의 상층이 교차투표를 했고, 2012년 대선에서는 영호남 두 지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차투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세 선거에서 모두 영호남, 양 지역의 신중산층과 상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진보적 혹은 보수적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5-37) 2000년대 총선에서 계층투표 현황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계층별 진보정당군 지지현황		신>하>상>구	신>상>하>구	신>상>구>하	
전국 차원 계층투표의 통계적 유의미성		무의미 (보수/진보정당군)	유의미 (진보/보수정당군)	유의미 (양자 대결, 진보/보수정당군)	
지역별 계층투표 유의미성	대구/경북	X	X	X	영남 출신 계층투표 O
	부산/경남	X	O	X	
	호남	X	X	X	

2004년부터 실시된 세 차례 총선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통계적 문제점이 많은 2004년을 제외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먼저 진보정당군에 대한 계층별 지지현황을 살펴보면, 신중산층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데 비해 다른 계층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표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중산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계층의 진보정당군 지지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국 차원에서 계층균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져보아도 통계적 문제점이 있는 2004년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선에서는 진보정당군 대 보수정당군의 대결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자대결로 보아도 계층투표가 뚜렷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계층투표는 대선처럼 총선마다 조금씩 달랐다. 2008년 총선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신중산층의 교차투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2012년에는 영남 지역이 아니라 영남 출신으로 보았을 때 신중산층의 교차투표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상층과 신중산층이 보수적 혹은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향해 보다 많은 교차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6차례에 걸친 선거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념균열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선거에서는 계층균열도 함께 부각되면서 지역균열이 약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영호남 지역에서도 계층에 따른 교차투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정권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같은 비이념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경우 이념균열이나 계층균열은

다소 약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여야 정당의 지지기반인 영호남 지역에서 방어심리가 작용하며 강한 지역균열을 드러내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지역균열과 이념균열 혹은 지역균열과 계층균열이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두 균열이 서로 일종의 길항관계(拮抗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균열과 이념균열 혹은 지역균열과 계층균열, 둘 중 어떤 균열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든지, 다른 균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약화된 형태로 잠재되었다가 다시 다음 기회에 부상을 하며 경쟁하는 모습이다.

또 이념균열이 약화된 모습을 보일 때조차도 전국적 차원에서 진보후보군(진보정당군)과 보수후보군(보수정당군)으로 구분해서 투표행태를 분석할 경우 어김없이 신중산층의 진보적 투표성향이 드러나면서 계층균열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계층과 지역 두 변수가 투표선택에 미친 효과에 대한 아노바 분석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계층분류의 문제점이 있는 2004년 총선을 제외하면, 2002년 대선부터 2007년, 2012년 대선과 2008년, 2012년 총선 등 모두 다섯 차례 선거에서 계층 변수의 p값이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2002년 대선의 계층 변수 p값만 0.02로 유의확률 5% 이내를 보여주었을 뿐 나머지 선거에서는 모두 p값이 0.0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 계층 변수의 F값 역시 점차 커지고 있어 계층 변수의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역 변수의 p값은 모든 선거에서 0.00으로 나타나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아직 막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계층균열이 일반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계층균열의 출발점은 2002년 대선이다. 바로 이 점에서 2002년 대선은 당장 새로운 정당체계의 재편성을 가져온 중대선거는 아니었지만,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정당재편성을 위한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⁸⁴⁾

84) 이정진은 유사한 관점에서 2002년 대선에서 진보개혁 이슈가 지역 대신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지배적 정치균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이 새로운 유권자 동원 메카니즘을 통해 정치적 지지층을 새롭게 형성한 사례로 평가한다(이정진, 2007: 130). 박찬욱(2006) 역시 2002년 대선이 “재편선거가 될 의미 있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제 2 절 계층균열 구조와 이념

우리는 앞 절에서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이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되었음을 실제 선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계층균열이 각 계층별 이념성향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실제 각 선거에서 이념은 어떻게 계층에게 작용했는지 계층균열과 이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계층별 이념성향은 어떤지 분석해 보았다.

1. 계층별 이념균열의 특수성

(1) 유권자의 이념성향

계층별 이념성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일보와 함께 2002년과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네 차례, 2012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한 차례 등 모두 다섯 차례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념에 대한 조사결과를 사용할 것이다.⁸⁵⁾ 이 중 한국정치학회가 2004년에 실시한 자료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질문 중 소득을 묻는 문항이 없어서 정확한 계층분류가 어려웠다. 또 2012년 한국정당학회가 이념에 대해 조사한 자료도 소득에 관한 질문이 연소득 7,000만 원까지 밖에 없어서, 상층을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면 상층이 19%나 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 경우 2004년 총선에 대한 분석처럼 신중산층에 속해야 할 상당수가 상층에 포함되면서 상층이 매우 진보적인 성격을 띠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2004년 여론조사 자료는 계층별 분류에는 사용하지 않고 전체 유권자의 이념평균과 분포에 관련된 분석에만 한정적

85)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2년 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63명,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4년 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26명,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실시한 2008년 조사는 1,039명,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가 실시한 2012년 조사는 1,039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이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실시한 대선후조사는 2012년 대선 직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으로 사용하고, 2012년 자료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자료를 주로 사용해 분석할 것이다. 2012년 한국정당학회의 자료는 2002년이나 2004년과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유권자에 대한 이념조사에서는 일반 국민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이념평균을 0점에서 10점 혹은 1점에서 11점까지 진보에서 보수로 분류해 응답하도록 했다.⁸⁶⁾ 또 이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대북관계와 한미동맹 등과 관련된 정치 분야, 대기업 규제와 복지, 한미FTA 등과 관련된 경제 분야, 평준화 교육정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와 관련된 사회 분야, 환경과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된 탈물질 분야 등 4가지 정책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1점이 매우 진보~4점이 매우 보수인 4점 척도이다.

일반 유권자들의 계층별 이념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응답자들의 계층을 분류했다. 중산층 수준 소득의 경우 통계청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월평균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2002년에는 가계 월 소득 201~500만원, 2008년에는 가계 연 소득 3000~7000만원, 2012년에도 가계 월 소득 300~699만원으로 분류했다.⁸⁷⁾ 여기에 직업과 학력을 적용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계층을 나누었다. 그 결과 2002년 한국정당학회, 2008년 한국정치학회, 2012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각 계층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5-38) 각 시기별 계층 분포도 (단위: %)

구분	2002년	2008년	2012년
상층	5.3	11.6	6.8
신중산층	28.7	21.2	22.1
구중산층	20.4	24.8	26.5
하층	45.6	42.5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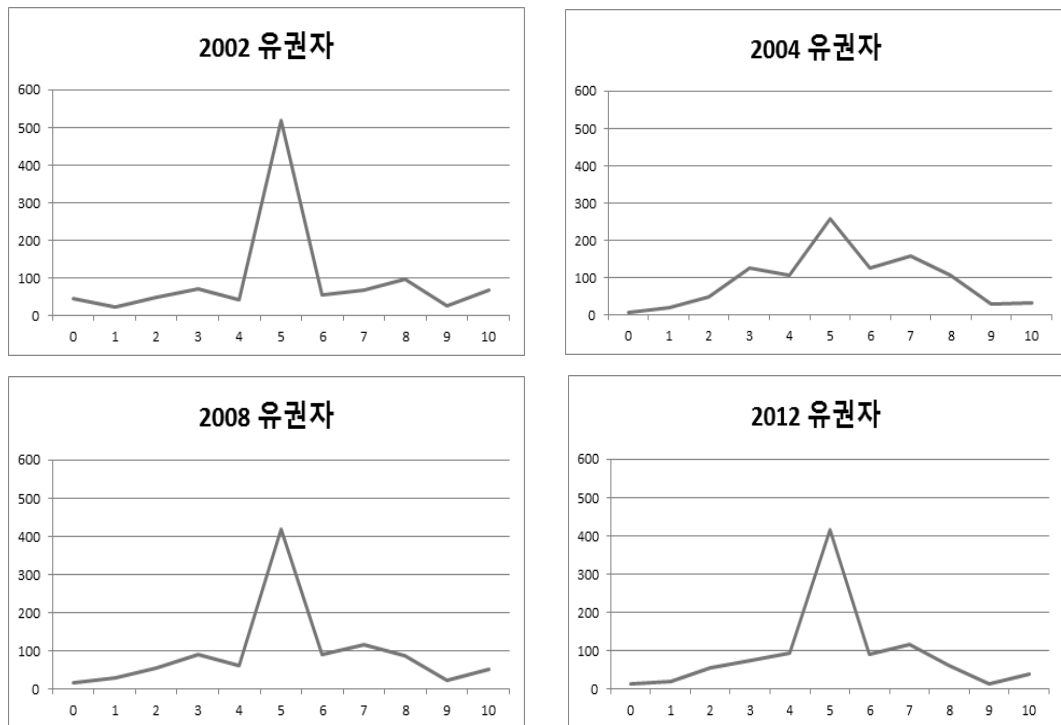
86) 이 논문에서는 비교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이념평균을 0~10점으로 조정해 사용하겠다.

87) 통계청 기준 2002년과 2008년, 2012년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전체 월평균 가계소득은 각각 2,591,845원과 3,390,738원, 4,076,876원이다.

2004년 한국정치학회 조사까지 포함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유권자의 이념평균을 분석한 결과, 2002년 5.27에서 2004년 5.42로 다소 우측으로 이동했다가, 2008년에는 5.33, 2012년에는 5.25로 다시 좌측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도에서 다소 오른쪽으로 기운 방향에서 소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림 5-19)는 조사 대상 4개년도에 나타난 일반 유권자들의 이념분포를 그래프 상에 그린 것이다.

(그림 5-19) 일반 유권자의 이념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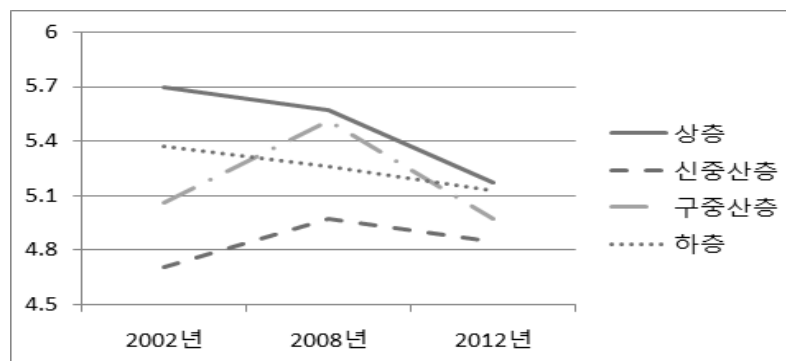
* 0(매우 진보)~10(매우 보수)의 척도에 따른 이념분포도.

2002년에 중도를 중심으로 높은 봉우리를 형성한 반면 좌우 분포는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4년에는 전체적인 이념평균은 조금 보수화되었지만 중도의 봉우리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좌우에 대칭형 봉우리를 형성할 정도로 좌우 층이 두터워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념의 양극화 현상이 나

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2008년과 2012년에 오면 다시 중도층이 늘면서 봉우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2002년에 비하면 중도층은 적은 편이고, 좌우 층도 2002년에 비해 다소 두터운 편이다. 이념의 양극화가 2004년에 비하면 다소 완화되었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우측의 봉우리가 좌측 봉우리보다 다소 높거나 두터워 보수층이 조금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20)은 계층분류가 어려운 2004년을 제외하고 3개년도의 계층별 이념평균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그래프 상으로 상층의 보수성과 신중산층의 진보적 성향이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

(그림 5-20) 계층별 이념평균



상층은 여론조사를 시작한 2002년 5.7로 가장 보수적인 위치에 있다가 꾸준히 진보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5.17로 중도인 5를 상회하며 모든 계층보다 위쪽에 놓여있다. 또 신중산층은 전반적으로 중도 성향인 5를 하회하며 모든 계층보다 아래쪽에 일관되게 위치하고 있다. 2008년 4.71에서 4.97로 다소 보수화되었지만 2012년 다시 4.85로 진보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구중산층은 2008년 큰 폭으로 보수화되었다가 2012년 다시 진보성을 강화하는 등 이념적으로 큰 동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하층은 2002년 이후 완만하게 진보적 성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도 5를 상회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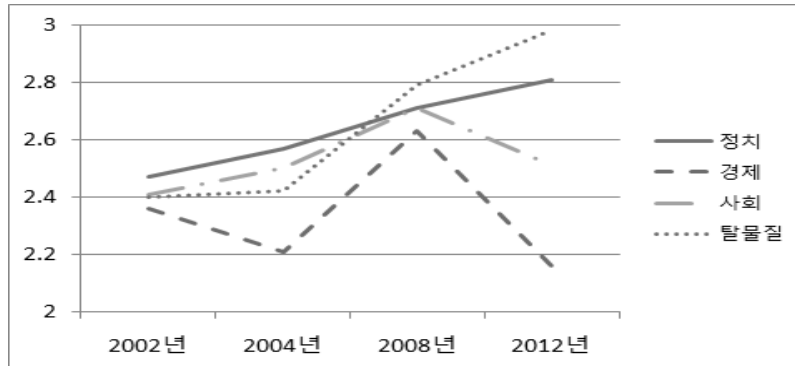
요컨대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이고 상층이 보수적인 가운데 그 중간에서 구중산층과 하층이 자리를 맞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노동계급을 비

롯한 하층이 가장 진보적 성향을 띠는 서구와 다른 한국적 특성이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2000년대 이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각 계층의 투표행태 내지 주관적 이념평균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각 선거를 통해 분석된 계층균열 현상이 다시 한 번 계층별 이념평가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만 계층별 이념 간 거리를 살펴보면 2002년 상층 5.7, 신중산층 4.71로 0.99였지만 2012년에는 상층 5.17, 신중산층 4.85로 0.32로 줄어들었다. 2002년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등 정치 분야를 둘러싸고 계층 간의 이념갈등이 강화되었던 반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치 분야를 둘러싼 갈등보다는 경제 분야에 치중하면서 계층 간 이념갈등이 약화되는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2007년 대선부터 계층균열 현상이 다소 약화되는 선거행태와 유사한 측면이다.

이번에는 각 정책 분야별로 나타나는 전체 유권자들의 이념평균을 살펴보았다(그림 5-21).

(그림 5-21) 정책분야별 유권자 이념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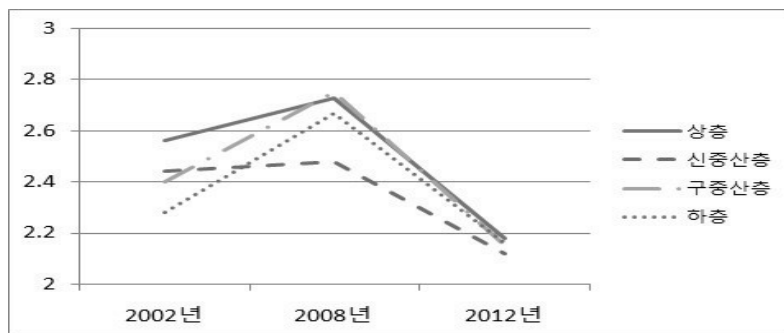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 및 사회 분야이다. 2004년 진보 쪽으로 이동했다가 2008년 보수화, 2012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진보화되고 있다. 반면 정치 및 탈물질 분야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이념수준이 지속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와 사회, 정치, 탈물질 분야로 대표되는 정책 분야별 유권자들의 이념 격차는 계층 간 이념거리와 달리 2002년 0.11에서 2012년 0.82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이념이 경제에서는 진보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을 띠 수 있는 이념의 다차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⁸⁸⁾

각 정책분야에 대해 계층별로 나누어서 이념성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5-22)는 경제 분야에 대한 계층별 이념평균을 나타낸다. 경제 분야는 계층 간 이념거리가 2002년 0.28에서 2008년 다시 0.27로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에는 0.06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비정규직 보호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 공기업 민영화 등 최근 나타난 이슈에 대해 계층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에서 견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2) 경제 분야의 계층 간 이념평균



신중산층의 경우 2002년까지는 하층이나 구중산층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가장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중산층 역시 어느 정도 기득권을 차지한 경제 분야에 관한 한 2000년대 초까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었지만, 그 후 외환위기 효과 즉 경제적 양극화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경제 분야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계층 간의 이념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2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성장이나 복지냐의 질문에 대해 신중산층과 구중산

88) 유권자들의 이념이 보수와 진보로 일관되지 않고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념의 다차원성이라는 관점에서 2012년 제19대 총선을 분석한 글로는 박원호(2012a) 참고.

층, 하층은 각각 2.41과 2.39, 2.44로 복지를 더 중시하는 방향에 몰려 있지만, 상층의 경우 2.53으로 성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 5-3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2년과 2012년 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동일한 설문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거시경제 문제에 관한 한 오히려 보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복지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2002년에는 신중산층을 비롯해 모든 계층이 중도 2.5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찬성하는 쪽에 섰지만, 2012년에는 모든 계층이 2.5보다 큰 수치를 보여 반대가 우세했다.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2002년에는 상층만 반대했지만, 2012년에는 모든 계층이 반대로 돌아섰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관점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분배를 강조하는 듯하면서도 성장을 강조하는 다소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5-39) 경제정책에 대한 계층 간 이념평균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2002년	복지예산	2.15	1.97	2.17	2.03
	대기업 규제	2.67	2.44	2.19	2.14
2012년	복지예산	2.65	2.63	2.96	2.90
	대기업 규제	2.87	2.76	2.89	2.89

그 이유는 복지와 분배가 중요해졌지만, 그 해결방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라는 생각이 모든 계층에서 우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진보 진영에서 적극 제기한 소득분배와 복지의 확대라는 문제가 국민적 의제로 등장하는 데는 성공했다. 국민들도 이 문제의 해소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조차 이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경제문제에 관한 한 진보적인 해법을 모르거나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 이데올로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제는 진보적이지만, 해결책은 전통적인 성장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뒀 나오고 있는 것이다.⁸⁹⁾

물론 경제 분야와 관련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균열현상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조성대(2008)는 정당 간 경쟁구도의 분석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와 같은 정치 차원의 이슈와 함께 재벌규제와 복지지출 등 경제적 이슈가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특히 경제적 이슈의 경우 지역 균열과 동일한 수평축에서 균열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와 달리, 지역주의를 가로지르는 수직축의 균열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균열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정당재편성을 가져올 획기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분야의 이념균열 구조는 아직 보수 우위의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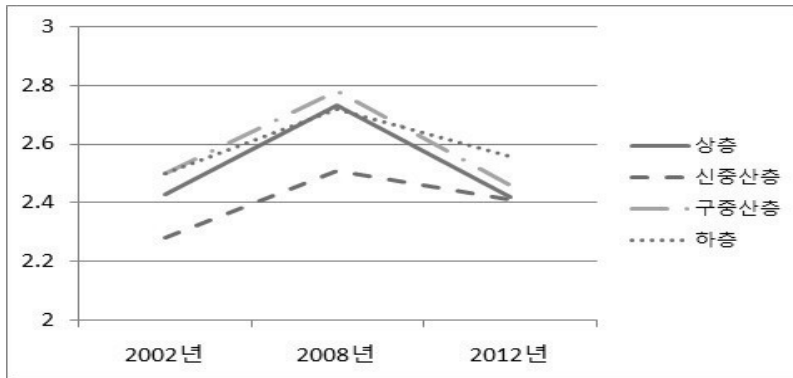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심어주었던 막연한 적대의식을 깨트렸다. 이로써 반공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을 전면적으로 흔들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기존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대립하는 새로운 경제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이슈화된 때가 처음이다. 이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지만, 보수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편승하면서 단순히 재원마련을 둘러싼 방법론의 문제로 쟁점이 치환되어 버렸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경제적 차원에서 이념균열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 분야를 둘러싼 계층 간 이념성향을 살펴보았다(그림 5-23). 사회 분야에서는 계층 간 이념거리가 2002년 0.22에서 2008년에는 전반적으로 보수화 분위기가 이는 가운데 이념거리가 0.27로 증대했다. 2012년에는 다시 진보화 흐름이 일면서 이념거리는 0.15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과 같은 전통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계층이 2008년에는 반대했다가 2012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계층 간 이념거리도 2008년 0.25에서 2012년 0.28로 확대되었다. 다만 체벌과 같이 새로 추가된 이슈들에서는 기존 이슈보다 계층 간 차이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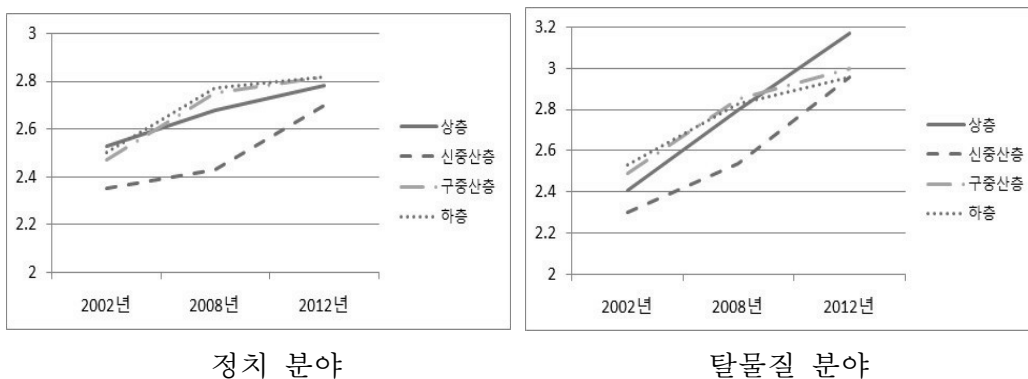
89) 강원택(2009a)은 정치 차원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386세대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념적 혼돈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02년 노무현에게 물표를 줬던 386세대가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지지로 돌아섰음을 분석한 바 있다.

(그림 5-23) 사회 분야의 계층 간 이념평균



정치 분야에서는 2002년 계층 간의 이념거리가 0.17이었지만 2008년 0.27로 확대되었다가 2012년에는 전반적인 보수화 흐름 속에 0.12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림 5-24). 정치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반공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서 대선의 주요한 이슈가 될 정도로 분명한 이념적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 이후 남한의 경제사정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적 대결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대북지원과 한미동맹이라는 전통적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보수적인 관점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중산층에까지 대북문제에 대한 보수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각 계층 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림 5-24) 정치, 탈물질 분야의 계층 간 이념평균



최근 정치 분야에서의 이념적 보수화와 계층 간 차별성의 감소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이전처럼 다시 부활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남한 내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5-2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탈물질 분야의 보수화는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다.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된 탓인지 2002년 이후 모든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층이 탈물질 분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계층 간의 이념거리도 0.23에서 0.31, 0.21 등으로 상당한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성장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강조되는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일반 유권자의 계층 간 이념적 차이는 200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탈물질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다. 정치 및 사회분야에 대한 계층별 이념거리는 2008년까지 점차 확대하다가 최근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차원의 계층별 이념 차이는 처음부터 재벌개혁 등의 이슈를 놓고 먼 거리를 유지하다가 역시 2008년을 고비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차원의 이념균열은 외형과 달리 기본적으로 보수 우위의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슈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성장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함께 탈물질 분야도 보수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계층별로는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인 반면 상층이 일관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상층의 계급성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반면 신중산층의 진보성은 고학력, 중간 소득자가 진보적 성향을 띠는 한국적 특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나타나는 계층균열 현상과 동일한 결과이기도 하다.

(2) 국회의원의 이념성향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즉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0(진보)~10(보수)의 11점 척

도에서 전체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평균을 보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5-40). 제16대 국회에서 전체 의원 이념평균은 4.9로 비교적 중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제17대 국회에서는 4.6으로 좌측으로 다소 이동을 했다가, 제18대 국회에서는 5.5로 다시 우측으로 크게 이동하며 보수화 움직임을 뚜렷이 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다시 좌측으로 이동해 전체 평균 5.0으로 중도 수준으로 돌아왔다.

(표 5-40) 국회의원들의 주관적 이념평균

구분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전체 평균	4.9	4.6	5.5	5.0
한나라당 계열	5.4	5.4	6.0	6.1
민주당 계열	4.0	4.0	4.4	3.4
이념거리	1.4	1.4	1.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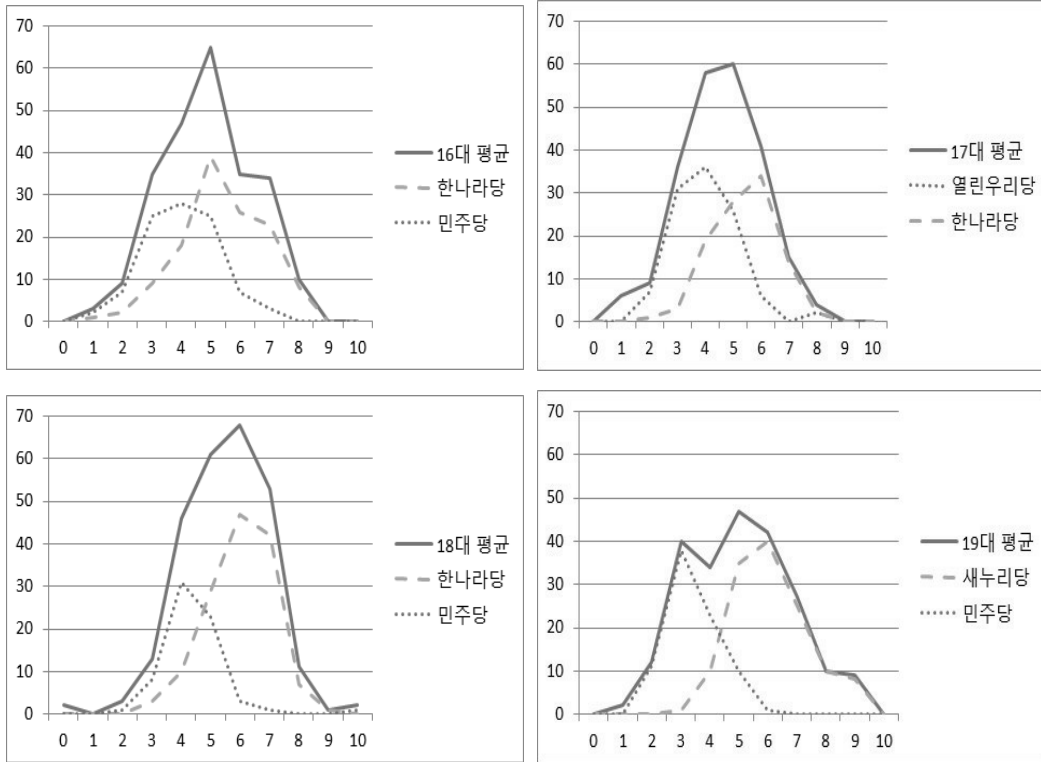
각 정당별 이념평균을 보면 한나라당은 제16대 5.4에서 제18대에 6.0, 제19대에 6.1로 점점 더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제16대에 4.0에서 제18대 4.4로 다소 보수화되었다가 제19대에는 3.4로 큰 폭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며 진보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이에 따라 양당 간의 이념 간 거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제16대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의 거리를 보이고 있지만, 제17대 1.4, 제18대 1.6, 제19대 2.7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제17대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이념거리는 제16대와 동일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들어오면서 전체 의원들 간의 이념거리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당 간의 이념적 간격이 커질 경우 정당 간의 갈등도 심화되겠지만 정당별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국회도 이제 이념에 따라 진보와 보수 정당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정당별 이념분포도를 비교해보면 이념 격차를 더욱 확연히 볼 수 있다(그림 5-25).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은 일관되게 좌측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계열 정당은 우측 공간에 정렬하고 있다.

(그림 5-25) 제16~19대 주요 정당 이념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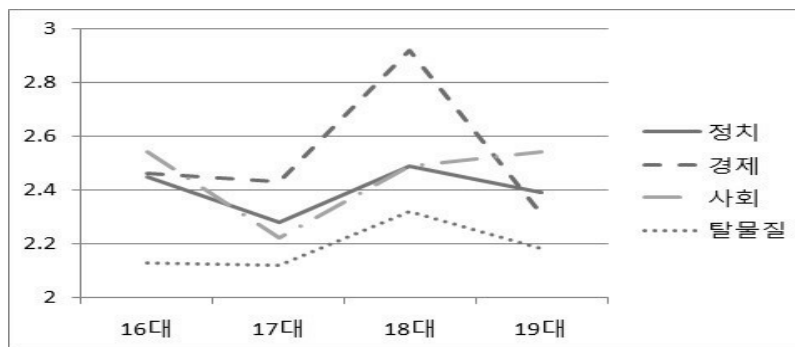
제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이념분포도는 1-8, 민주당은 1-7로 길게 늘어 있었지만, 제17대 국회에서는 양당 모두 2-8로 줄어들고, 제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3-9, 민주당 2-7, 제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3-9, 민주당 2-6으로 이념분포의 간격이 줄어들었다. 또 한나라당의 이념분포도가 우측으로 이동한 반면, 민주당은 점차 좌측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제16대 국회에서 양당의 최빈치는 4와 5로 1의 간격을 보였지만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서는 4와 6으로 간격이 2로 확대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3과 6으로 간격이 3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제16대와 제17대 국회에서는 양당이 형성한 봉우리가 비교적 완만하고 두툽한 반면,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는 양당이 형성한 봉우리의 폭이 좁고 간격이 벌어져 양당 의원들이 진보와 보수로 각각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는 양당 간의

의석 수 차이로 인해 봉우리의 높이가 달랐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를 형성하고 있어 양당 간의 이념적 충돌이 격심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이념성향을 알아보았다(그림 5-26). 각 당 의원들에게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와 경제, 사회, 탈물질 등 4가지 정책분야별 질문을 주고 각 당 의원들의 이념성향을 1(진보)에서 4(보수)까지 파악해 보았다.

(그림 5-26) 정책분야별 국회의원 이념평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분야에 대한 이념수준도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유사하게 제18대 국회에서 보수화되었다가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진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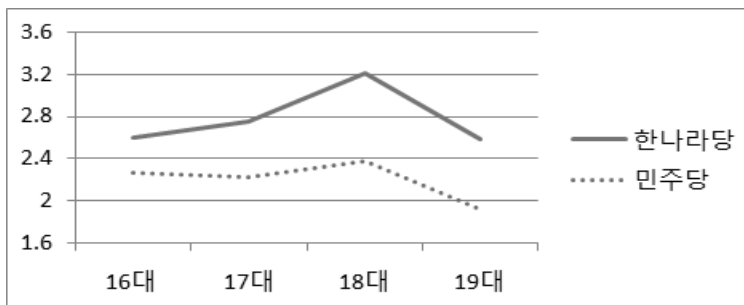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경제 분야의 이념 이동성이 매우 심한 점이다. 경제 분야의 이념수준은 제16대 2.46으로 다소 중도적인 지점에서 출발했으나 제18대 국회에서 2.92로 보수성을 매우 강화했다. 그러다가 다시 제19대 국회에서는 2.31로 정치나 사회 분야보다 훨씬 진보성을 띠는 쪽으로 이동했다.

또 탈물질 분야를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세 분야의 이념적 거리를 살펴보면 제16대 국회에서는 불과 0.09의 차이를 보였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0.23으로 그 간격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책분야별 이념거리가 확대되면서 이념적 다차원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분야에 대한 정당 간의 이념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먼저 경제 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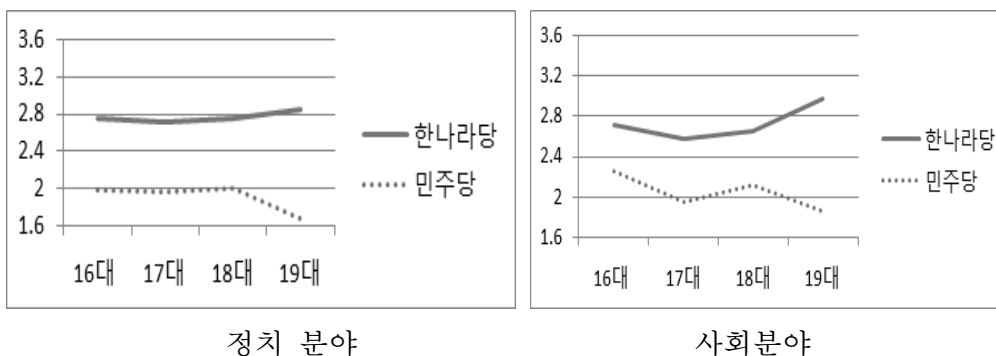
대해 살펴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거리가 제16대 국회에서는 0.34로 매우 작았지만 제17대에서 0.52, 제18대 0.84로 갈수록 확대되었다(그림 5-27). 제19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2.38에서 1.92로 보다 진보성을 강화하고, 한나라당도 3.21에서 2.58로 진보성을 강화했지만, 양당 간의 격차는 아직도 0.66으로 비교적 큰 편이다. 즉 그동안 이념적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 분야가 양당 간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5-27) 경제 분야 이념 거리



정치 분야에 대한 양당 간의 이념적 거리는 제16대부터 0.77로 지극히 멀어 그동안 우리 사회 이념균열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왔다(그림 5-28). 그런데 정치 분야의 이념거리는 제19대에는 1.14로 이전에 비해 더욱 커졌다. 또 사회 분야의 경우도 제16대 국회에서 0.45, 제17대 0.62, 제18대 0.54의 거리를 보였지만 제19대에 들어 1.11로 정치 분야만큼이나 거리가 벌어졌다.

(그림 5-28)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 이념 거리



탈물질 분야에 대한 양당 간의 이념 차이도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간의 이념거리는 제16대 0.25에서 제17대 0.40, 제18대 0.50, 제19대 0.55를 보였다.

요컨대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서 대북관계와 한미관계 등 정치 분야를 둘러싸고 주로 나타나던 이념균열은 제18대와 제19대 국회 들어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 그리고 탈물질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 양당 간의 각 분야별 이념 격차도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균열선이 제19대 국회에서 뚜렷한 갈등선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일반 유권자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념적 차이를 보이며 계층 간 이념균열을 형성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2008년 이후 2012년이 되면서 일반 유권자들의 이념은 대체로 진보 성향을 강화하면서 계층별 이념 거리가 줄고 있는 데 반해 국회의원들은 이념적 거리가 오히려 확대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념적 양극화가 보다 심화된 것이다⁹⁰⁾.

특히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의 이념거리를 비교하면, 보수 진영 정당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평균이념이 지지자들보다 우측에 위치한 반면 진보 진영 정당의 경우 지지자들보다 의원의 평균이념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이지호, 2009). 이는 보수 세력의 경우 지지자들이 정당을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반면 진보 세력의 경우 정당이 지지자를 설득하며 견인해가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 분야일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이익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을 이끌어가는 반면, 진보 정당의 경우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강조하는 유권자들의 모순적 태도에 비해 보다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념균열을 경험하지 못한 데 따라 진보적인 정책들이 현실화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일반 유권자와 국회의원 모두 2000년대 이후 이념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제19대 국회

90) 이내영(2011)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사회 이념적 양극화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선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들어 주요 정당 간의 이념거리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념균열이 주요한 정당균열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토양을 확보했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 2000년대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층의 계급성이 분명한 가운데 신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고학력, 중위 소득 중간층의 진보적 성향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구중산층과 하층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체로 상층과 마찬가지로 보수화되는 분위기이다.

계층 간의 이념적 분화가 2000년대 초반 정치적인 문제, 주로 대북 관계나 한미관계의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났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대북/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보수화 분위기 속에 이념적 차별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경제 분야에 대한 격차 역시 기본적으로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보수 우위의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외관상의 격차와 달리 매우 근접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즉 대체로 모든 정책 분야에서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실제 선거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의 이념이 어떻게 계층별 지지 정당이나 후보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정치 이념과 계층균열: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

각 계층별 이념성향의 차이는 당연히 선거 시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 혹은 이슈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한 이념적 간극의 차이는 어떤 분야의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부각되었느냐에 따라 각 계층별 지지 정당 혹은 후보의 선택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먼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보수적 성향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고,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이 두 선거에서는 정치 분야의 이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 분야의 이념은 앞서 살펴본 대로 2008년 이후 보수화와 함께 계층 간 이념차이가 좁혀지고 있지만, 2002년에는 상당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 2002년 한국정당학회가 1점을 매우 진보~4점을 매우 보수로 정해 실시한

이념조사에 따르면, 대북 지원에 대해 상층은 2.67로 가장 보수적인 반면 신중산층은 2.45로 가장 진보적이었다. 두 계층이 중도 2.5를 기준으로 각각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이념 거리도 0.22로 정치 분야에 대한 계층 간 평균 이념거리 0.17보다 컸다. 한미동맹에 대한 상층(2.30)과 신중산층(2.16)의 이념거리도 0.14로 적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상층(2.63)과 신중산층(2.42)의 이념 거리는 0.21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정치 분야에 대한 계층 간 이념 차이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선거 이슈에 따라 계층별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실시한 대선후조사에서 당시 “지지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을 물어보았다(표 5-41). 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행정수도 이전, 북한 핵시설 재가동,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 5가지를 꼽았다.

(표 5-41) 후보 지지에 영향을 준 사건 (단위: %)

구분	북한 핵시설 재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철새 정치인 영입	기타	N
상층	8.1	6.5	16.3	17.1	3.3	48.7	124
신중산층	10.8	9.2	20.0	19.5	6.1	34.4	425
구중산층	11.2	7.9	19.8	23.6	5.0	32.5	241
하층	14.4	8.1	17.4	22.0	2.8	35.3	471
전체평균	12.0	8.2	18.6	21.0	4.4	35.8	1,261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상대 후보와 무관한 일방적인 사안이라면, 북한 핵시설 재가동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이회창이라는 강력한 보수 후보와 차별화를 이루는 지점이어서 이념적 지지층 동원이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계층에게 공통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친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제외하고, 계층별로 전체 평균 이상의 영향을 준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중산층에게는 여중생 사망사건과 철새정치인 영입이 높은 영향을 주었고, 구중산층에게는 철새정치인 영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층에게는 북한 핵시설 재가동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영향을 미쳤지만, 상층에게 영향력 상위 순번에 드는 사건 중 평균 이상의 영향을 준 사건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각 사건이 계층별 이념성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보수적인 하층에게는 북한 핵시설이 보다 큰 영향을 미쳐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 성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던 이회창 후보에 대한 하층의 높은 지지율과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가장 진보적인 신중산층에게는 여중생 사망사건이 강하게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미국 우위의 한미관계에 대한 변화를 주장한 노무현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신/구 중산층 모두에게 철새정치인 영입은 중요한 관심사였다.

즉 중산층 이하 계층들에게는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와 행정수도 이전 이외에도 대북/대미 관계, 철새정치인 등 정치적인 사건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2002년 정치 분야에 대한 이념차원 분석에서 나타난 신중산층과 구중산층의 진보적 성향, 하층의 보수적 성향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계층과 달리 상층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이들의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였을까. 상층의 경우 2002년 대선에서 신중산층과 함께 전형적인 계층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 특히 주목 대상이다. 상층의 투표결정에 대북/대미 이슈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경제문제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표 5-42)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단위: %)

구분	물가	고용안정	경제성장	주택/부동산	지역화합	N
상층	19.5	18.7	24.4	6.5	10.6	124
신중산층	25.9	26.9	16.5	6.6	5.9	425
구중산층	34.9	21.6	18.3	5.0	4.1	241
하층	43.4	16.0	13.0	4.5	4.5	471
전체	33.5	21.0	16.3	5.5	5.5	1,261

상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경제성장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물가, 고용안정, 지역화합 순으로 골랐다. 김대중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IMF 관리체제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위기 상황을 경제성장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강하게 보여, 성장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담지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계층은 물가안정 내지는 고용안정을 1, 2순위 과제로 꼽았다.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각 계층이 각자 처한 경제적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⁹¹⁾

상층의 경우 대북/대미 관계와 관련된 이념평균이 하층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온 만큼 북한 핵시설 재개나 여중생 사망 사건 같은 정치적 사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경제성장 문제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박정희 정부 이래 일관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장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회창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2002년 대선에서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를 낳은 가장 큰 이슈는 정치 분야의 이념이었다. 특히 대선 전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북한 핵시설 재개는 각각 진보와 보수라는 입장에서 계층별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라는 점에서 경제 분야의 이념도 영향을 미쳤지만 상층에만 제한적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도 경제적 이슈보다는 정치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

91) 상층이 네 번째 중요한 과제로 지역화합을 10.6%나 선택한 것도 특징적이다. 다른 계층들의 경우 주택/부동산을 골라 여전히 민생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쳤다. 무엇보다 이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탄핵문제였다(박명호, 2004a; 2004c; 윤종빈, 2006; 정혜숙·임영규, 2006 등). 2002년 대선에서 대북관계 혹은 대미관계와 같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로 진보/보수가 나누는 이념 균열이 작동했다면, 2004년에는 탄핵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리게 되었다.⁹²⁾ 따라서 계층에 따라 탄핵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표 5-43).

(표 5-43)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계층별 찬성 여부 (단위: %)

구분	찬성	반대	무응답/모름	N(=1,013)
상층	27.3	69.6	3.1	220
신중산층	20.5	76.4	3.1	237
구중산층	25.7	66.5	7.8	319
하층	23.6	69.8	6.6	182

그런데 신중산층은 예상대로 탄핵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나머지 계층 간엔 그다지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물론 상층이 탄핵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찬성을 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즉 탄핵 이슈가 선거 전반을 휩쓸면서 계층별 차이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적어도 계층균열을 작동시키기에는 탄핵문제만으로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핵 이외의 다른 정책이슈와 관련한 각 계층의 태도를 비교해 살펴보았다(표 5-44).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요 쟁점 이슈로 “경제안정 및 지역발전”과 “물갈이와 정치개혁”, “탄핵심판” 등을 꼽았다. 나머지 이슈는 10% 미만으로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물갈이와 정치개혁” 요구는 결국 탄핵을 단행한 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문제와 탄핵문제

92) 강원택은 2002년 기존의 지역주의 균열 이외에 새롭게 떠오른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거부의 쟁점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잠재되어 있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균열구조가 새롭게 변형되어 부활한 것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강원택, 2003: 319-328). 정혜숙·임영규(2006)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탄핵에 대한 태도를 민주 대 반민주 혹은 진보 대 보수의 대결구도로 파악한다.

를 별도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44) 17대 총선 쟁점에 대한 계층별 평가 (단위: %)

구분	경제안정 및 지역발전	물갈이와 정치개혁 + 탄핵심판	물갈이와 정치개혁	탄핵심판	기타	N (=1,013)
상층	33.9	52.9	25.6	27.3	13.2	197
신중산층	35.9	53.5	28.2	25.3	10.6	219
구중산층	42.8	45.9	28.0	17.9	11.3	307
하층	41.5	46.6	28.7	17.9	11.9	172

그 결과 진보적 성향을 보인 신중산층과 상층은 가장 큰 쟁점으로 절반 넘게 탄핵문제를 선택했고, 경제문제를 선택한 사람은 30%대에 불과했다. 반면 구중산층과 하층은 경제문제와 탄핵문제를 거의 대등한 비율로 평가했다.

2004년 총선 당시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통해 IMF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잠시 경제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가 확산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이로 인해 2004년 말에 이르러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피해를 맨 처음 실감하기 시작한 하층과 구중산층이 경제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양극화의 직접 혜택을 입거나 아직 양극화 문제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 상층과 신중산층은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치문제보다는 아직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정치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진보정치 세력이 2002년 이후 의제를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수립된 이후 권위주의가 완화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⁹³⁾ 이 점을 감안하면 정치문제에 관심이 높았던 상층과 신중산층이 열린우

리당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보낸 배경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이외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제문제에 조금 더 높은 관심을 보인 구중산층과 하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낮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2004년 총선에서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가 모든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경제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하층과 구중산층보다는 신중산층에 더 큰 영향을 주어 탄핵을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에 따른 이념균열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지역균열을 넘어 독자적으로 여소야대 국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점진적으로 표출되면서 경제문제가 중요한 이념균열 이슈로 서서히 대두하고 있었다. 즉 정치적 차원의 이념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경제적 차원의 이념이 새로운 계층균열을 형성하며 교차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구중산층과 하층의 보수화가 보다 빨리 전개되기 시작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계층별 이념균열이 한 정책 이슈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의 주요 관심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경제 이념과 계층균열

(1)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이 정치적 이념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은 선거였다면 2007년 제17대 대선부터는 경제적 이념의 영향력이 위력을 발휘했다. 이 시기 선거과정에서는 정치 이념이 경제 이념에 의해 대체되면서 정치 이념이 사실상 소멸되다시피 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일방적인 지지를 보낸 선거였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유권자들의 회고적 평가

93) 김정훈(2005)은 유사한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개혁열망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 실질적인 경제 민주주의 심화, 새로운 가치의 확산 등 세 가지로 나타났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우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반면 실질적인 경제 민주주의의 심화나 새로운 가치의 확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즉 경제투표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가상준, 2008; 강원택, 2008; 2010; 권혁용, 2008; 이갑윤, 2008; 이재철, 2008; 정한울 2008; 정한울 · 권혁용, 2009 등).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2007년 대선 직후 실시한 선거후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층을 분류해 살펴보았다.⁹⁴⁾ 2007년 통계청 기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10분위별 월평균 가계소득이 3,200,005원인 점을 고려해 중산층 소득 기준은 250~499만 원을 적용했다. 여기에 직업과 학력을 적용해 계층분류를 하자, 유효 대상자 753명 중 상층은 12.6%, 신중산층 21.5%, 구중산층 18.1%, 하층 47.8%로 나왔다.

계층별로 분석해도 2007년 대선에서 경제투표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 우선 (표 5-45)에서 보듯이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을 살펴보면 BBK 의혹사건이 3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BBK 의혹은 여야 두 후보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어떤 방향의 영향이 더 컸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BBK 의혹을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심판이 24.8%로 계층을 떠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두 달 전에 이루어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1.8%, 열린우리당 해체는 2.0% 등으로, 정치적 이념 사안이 선거 이슈에 끼어들 여지가 거의 부재했던 것이다.

(표 5-45) 지지후보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사안 (단위: %)

9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한 대선후조사는 선거 직후인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2.8\%$ 포인트이다.

구분	BBK 의혹 사건	참여정부 국정실패 심판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	이회창 후보 탈당출마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열린우리당 해체	N
상층	38.9	27.4	7.4	5.3	3.2	1.1	95
신중산층	35.2	26.5	7.4	4.3	2.5	1.9	162
구중산층	36.8	25.0	11.0	3.7	2.2	0.0	136
하층	40.0	23.3	10.3	8.3	1.1	3.1	360
전체평균	38.2	24.8	9.4	6.2	1.8	2.0	753

노무현 정부의 국정실패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에 선거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2007년 대선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문제가 되었다(표 5-46). 일자리 창출이 절반 안팎을 차지했고, 부동산 문제까지 합하면 경제 문제가 무려 60~70%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경제 문제가 계층을 떠나 선거 이슈를 집어삼킨 격이다. 반면 2002년 대선 당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이념균열선 역할을 했던 대북정책은 모든 계층에게 거의 무관심 대상이 되었다.

(표 5-46) 2007년 대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이슈 (단위: %)

구분	일자리창출	부동산	정치개혁	교육	대북정책	N
상층	44.2	18.9	21.1	9.5	2.1	95
신중산층	45.7	16.7	11.7	9.5	2.5	162
구중산층	39.7	20.6	11.0	12.5	4.4	136
하층	51.9	18.1	13.1	6.1	1.7	360
전체평균	47.4	18.3	13.4	8.5	2.4	753

그런데 보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문제에 대한 계층별 태도에서도 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표 5-47). 동아시아연구원과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의 6차 패널조사에서 하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차기 정부의 중점과제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1순위, 경제성장을 2순위로 선택했다. 하층만 경제성장

을 1순위,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2순위로 선택했다.

(표 5-47)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 (단위: %)

구분	경제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삶의 질 개선	국민통합	정치개혁	남북관계 개선	N
상층	44.1	36.6	4.1	5.5	3.4	2.8	145
신중산층	46.2	33.2	7.2	4.9	3.1	1.1	446
구중산층	50.0	33.7	3.4	5.4	2.7	1.0	294
하층	30.1	39.8	8.8	5.9	6.6	4.0	422
전체평균	41.6	35.8	6.5	5.4	4.2	2.2	1,307

또 소득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에도 0점(찬성)에서 4점(반대)을 기준으로 한 척도에서 전체 평균이 2.24로 나타나 모든 계층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이었지만 평균 점수는 2.49로 적어도 반대를 하지는 않았고 신중산층과 하층은 2.24와 2.05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계층이 대기업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동일한 4점 척도에서 상층이 2.96으로 가장 반대했고, 가장 진보적인 신중산층도 2.83으로 역시 반대하는 입장에 가까웠다.

이는 앞서 일반 유권자의 이념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문제에 관한한 이념적으로 보수적 틀 안에서 사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경제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지만, 그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성장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이념에 관한 한 진보세력이 독자적인 의제설정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념균열선이 보수 후보에게 치우치게 형성되었고, 이명박 후보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상층은 물론 비우호 계층인 신중산층까지 상당 부분 동원하는 데 성공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다. 계층균열을 다소 희석시키면서 보수 우위의 균열구조를 만든 것이다.⁹⁵⁾

95) 2007년 대선에서는 2002년과 같은 세대와 이념균열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김민전, 2008; 박찬욱 외, 2008; 이내영, 2009a 등). 이 평가는 적절하지만, 경제이념과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입장은 대선 이후 불과 4개월 뒤 치러진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2008년 총선 패널 2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층별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 과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선 직후 조사와 거의 동일한 답변을 얻었다(표 5-48). 즉 경제적 양극화가 46.1%, 경제성장이 32.2로, 두 사안이 78.3를 차지했다. 계층별로도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정치개혁이나 남북관계 개선 같은 정치적 사안은 각각 4.4%와 1.9%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대상이 되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4개월 만에 갑자기 정치 분야에 관심을 돌려야 될 상황이 전혀 제기되지 못했던 것이다. 대선에서 나타난 경제이념 위주의 이념균열 즉 보수 우위의 구도가 확립되면서 계층균열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5-48)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단위: %)

구분	경제양극화 완화	경제성장	국민통합	삶의 질 개선	정치개혁	남북관계 개선	N
상층	44.6	36.1	9.6	6.0	1.2	0.0	83
신중산층	53.8	28.3	2.9	5.6	3.2	1.1	279
구중산층	45.3	37.4	5.0	1.4	5.8	2.2	139
하층	40.5	32.2	8.9	6.8	5.6	3.0	338
전체평균	46.1	32.2	6.3	5.5	4.4	1.9	839

물론 (표 5-4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제기되었던 대운하사업이나 영어 몰입교육, 그리고 주요 국무위원 인사 등과 같은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물론 신중산층의 반대가 다른 계층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

관련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이념균열이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강원택(2009a)과 조성대(2008)는 2007년 대선에서 경제 분야까지 이념균열이 확대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박찬욱(2009)도 진보와 보수정당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이념균열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한 배경에 대한 연구로는 이내영·정한울(2008) 참고.

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이 이와 같은 정책적 이슈보다는 경제 이념을 보다 중시해 보수적으로 총선에 접근하는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표 5-49) 이명박 정부 첫 정책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인사 정책		대운하 사업		영어 공교육		N
	잘했다	못했다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상층	43.3	61.2	32.9	59.8	43.3	53.0	83
신중산층	24.8	73.4	26.7	67.3	34.2	63.7	278
구중산층	33.1	64.7	34.5	58.3	45.7	47.9	140
하층	42.1	51.6	29.0	52.2	49.4	42.3	336
전체평균	34.9	61.2	29.5	59.0	43.1	51.4	837

총선이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점유와 보수정당군의 압도적 승리로 끝난 뒤 평가는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5-50). 즉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신중산층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39.9%에 불과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9.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다른 계층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넘어 신중산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군보다 진보정당군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신중산층의 진보적 성향이 선거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50)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만족	불만족	N
상층	50.0	48.6	72
신중산층	39.9	59.7	233
구중산층	61.2	37.2	121
하층	55.5	44.5	274
전체평균	50.7	48.8	700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망에 대한 평가가 총선 전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다(표 5-51). 총선 전에는 신중산층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경제적 양극화와 노사 갈등 등에 대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취했다. 다른 모든 계층은 경제 성장과 양극화, 노사갈등 등 모든 현안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비관적 전망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더 보여주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모든 계층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노사갈등 등에 대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으로 돌변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표 5-51) 이명박 정부 하 향후 전망 (단위: %)

구분	성장과 일자리창출		경제적 양극화		노사갈등	
	개선	악화	개선	악화	개선	악화
상층	47.1(56.6)	10.0(8.4)	20.3(38.1)	39.1(31.0)	31.4(37.3)	34.3(32.5)
신중산층	42.1(47.0)	9.0(10.4)	23.3(27.3)	44.0(36.7)	22.8(22.4)	44.4(35.7)
구중산층	59.5(73.4)	13.2(4.3)	29.5(50.4)	38.5(20.1)	30.6(41.7)	36.4(34.5)
하층	59.9(56.8)	5.8(5.1)	36.3(38.7)	23.4(19.3)	44.0(36.9)	27.6(23.5)
전체평균	52.6(56.3)	8.6(7.0)	29.2(36.8)	34.5(26.4)	33.4(32.9)	35.4(30.3)

()는 총선 전 전망임

이는 아마도 총선에서 보수정당군이 3분의 2에 달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주도 하에 성장일변도 정책을 취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즉 유권자들이 진보적 혹은 보수적 경제 이념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하지만,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잠재적 기대심리에 따른 우려로 해석된다. 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도 분배와 경제적 양극화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권자들의 경제 이념이 보수 우위에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요컨대 4개월의 간격을 두고 동시에 실시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났던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2002년~2004년 선거 당시에는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치적 이념선을 따라 진보정당군과 신중간층, 보수정당군과 상층이 연합해 정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2007~2008년 선거에서는 정치 이념이 잠복하고 경제 분야 이념이 부각되면서, 보수 우위의 이념균열이 작동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계층이 보수정당군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신중산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보정당군에 대한 지지를 지속하는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2)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2012년 선거의 특징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가 일찌감치 자리 잡으면서 양 세력이 최대한 결집된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감세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지원 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 종부세 폐지 등 부유층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상층이 2010 지방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에서 응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진보세력은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등 복지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의제들을 제시하며 2010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까지 겹칠 경우 진보 진영이 승리하거나 박빙의 우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선거에서는 2002년 대선이나 2004년 총선과 달리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그 배경에 대해 2012년 선거에서는 비록 정권 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보다는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결과이다(강원택, 2012b; 장승진, 2012). 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선거 국면에서 복지로 대표되는 진보적 이슈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데 따라 패배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한귀영, 2012).

이 논문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이념을 토대로 계층별 투표행태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 보겠다. 2012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직후 실시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총선후조사” 자료를

사용하겠다.⁹⁶⁾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조사 자료에서 계층분류를 위한 중산층 소득 수준으로는 2012년의 통계청 기준 전국 2인 이상 소득10분위별 가계소득 월평균 소득이 4,076,876인 점을 고려해 250~699만 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직업과 학력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유효대상자 527명 중 상층은 5%, 신중산층 16.8%, 구중산층 13.5%, 하층 17.4%로 나타났다.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대선후조사” 자료를 사용하겠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자료의 분석에서 계층분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은 상층을 700만 원 이상, 중산층을 300~699만 원으로 잡았다. 그 결과 유효대상자 941명 중 상층이 4.7%, 신중산층이 15.2%, 구중산층이 18.3%, 하층이 40.2%의 비율을 보였다.

먼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총선후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각 계층의 회고적 평가를 분석해 보았다(표 5-52) 그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신중산층이 가장 박한 점수를 주었고,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상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었다. 두 계층의 이념성향의 차이가 회고적 평가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52) 이명박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 (단위: %)

구분	이명박 국정운영		4년간 국가경제	
	잘했다	못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상층	32.2	67.8	12.2	48.9
신중산층	20.5	79.1	8.7	55.8
구중산층	29.3	70.8	9.4	56.3
하층	31.5	68.3	8.7	56.7
전체평균	28.5	71.3	9.1	55.9

96)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실시한 선거후조사는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이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선거후조사 자료는 1절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이번에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총선후조사” 자료를 통해 총선에서의 이슈를 살펴보았다(표 5-53). 국가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서 예상한 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경제 문제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모든 계층이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첫 번째 순위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하층과 구중산층에서 각각 74.7%와 70.4%가 두 과제를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층과 신중산층은 각각 60.0%와 57.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상층과 신중산층은 대신 정치개혁을 18.0%와 20.8%가 각각 지목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거 당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혹과 언론사 파업, 김용민의 막말 파문 등이 벌어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문제와 비교해 그 비율은 매우 낮았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정치이념도 2.5%에 그쳐 2007~08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관심권 밖이었다.

(표 5-53)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 (단위: %)

구분	경제성장	복지확대	정치개혁	교육	재벌개혁	남북관계개선	N(=527)
상층	44.0	16.0	18.0	8.0	8.0	6.0	50
신중산층	35.7	22.0	20.8	11.3	5.4	1.2	168
구중산층	52.6	17.8	13.3	3.7	7.4	2.2	135
하층	47.1	27.6	8.6	5.7	5.2	2.9	174
전체평균	44.6	22.2	14.6	7.2	6.1	2.5	97.2

그런데 총선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면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새누리당을 꼽았다(표 5-54). 회고적 평가와 어긋나는 역설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을 묶어 보수정당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묶어 진보정당군으로 분류할 경우, 신중산층과 상층은 보수정당군보다 진보정당군을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층과 구중산층은 여전히 진보정당군보다 보수정당군에 대해 훨씬 높은 점수를 주었다.

(표 5-54) 우리 사회 당면과제를 잘 해결할 정당 (단위: %)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보수정당군	진보정당군	N
상층	32.0	32.0	32.0	44.0	50
신중산층	34.5	30.4	35.1	44.7	168
구중산층	46.7	28.9	47.4	34.1	135
하층	52.9	24.4	54.1	29.6	172
전체평균	43.4	28.2	44.2	37.0	525

정당에 대한 평가는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55). 신중산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박근혜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다. 신중산층은 안철수 후보 32.8%, 박근혜 후보 27.3%, 문재인 후보 16.9%를 지지해,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박 후보 지지율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신중산층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하층과 구중산층, 상층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 수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표 5-55) 차기 대선에서 지지 후보 (단위: %)

구분	박근혜	안철수+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N
상층	36.7	35.6	28.9	6.7	90
신중산층	27.3	49.7	32.8	16.9	308
구중산층	44.7	29.5	21.0	8.5	376
하층	49.7	28.0	21.4	6.6	636
전체평균	42.6	33.7	24.3	9.4	1410

이번에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대선후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겠다. 총선 8개월 뒤 실시된 대선에서도 모든 계층이 차기 대통령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총선과 동일하게 경제 문제를 꼽았다(표 5-56). 경제성장과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를 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71.8%로 모든 선거이슈를 빨아들였다. 특히 경제성장을 선택한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총선 때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신중산층의 경우 경제성장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강하게 내세운 사회통합을 두 번째 순위로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상층과 신중산층이 상대적인 관심을 보인 사회통합과 정치개혁 등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 다음으로 20%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한층 주목을 받았다. 역대 진보세력이 강점을 보였던 대북관계는 여전히 관심권 밖에 있다.

(표 5-56) 차기 대통령의 시급한 해결과제 (단위: %)

구분	경제성장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사회통합	정치개혁	남북관계	N(=941)
상층	55.4	5.4	14.2	13.9	7.1	3.6	56
신중산층	43.2	9.8	10.9	15.8	9.8	2.7	183
구중산층	56.8	10.0	9.1	6.3	11.8	1.8	220
하층	57.3	9.5	8.5	9.8	7.9	3.2	482
전체평균	54.2	8.6	9.0	10.5	9.5	2.7	91.8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5년 전에 비해 갈등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이었다(표 5-57). 갈등이 심해졌다는 답변은 평균 80.8%에 달한 반면 다소 줄었다는 답변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고소득층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상층에서 갈등이 심해졌다는 답변이 85.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취함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5-57) 5년 전에 비해 고소득자/저소득자 간의 갈등 (단위: %)

구분	심해졌다	비슷하다	다소 줄었다
상층	85.4	12.5	1.8
신중산층	82.0	18.0	0.0
구중산층	79.1	20.0	0.5
하층	80.6	17.6	1.4
전체평균	80.8	18.0	0.8

적어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2007~2008년에 이어 또 다시 경제문제, 특히 경제성장의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으로 신중산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 총선 당시 이미 보수정당군과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고, 이 결과는 대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 진보 진영에서 제기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진보 진영의 문제인 후보보다 보수 진영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58). 경제적 양극화가 경제성장 중심의 경제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의 문제 때문에 심화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표 5-58) 대선 후보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한 선호도 (단위: %)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 평균
박근혜	35.7	27.3	40.5	46.3	40.6
문재인	25.0	26.2	22.7	20.7	22.5
차이 없음	39.3	43.5	36.8	33.0	36.9
N(=941)	56	183	220	482	100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문제를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보수적인 경제 이념이 여전히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유권자들의 이념과 관련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복지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지만, 이에 대한 접근은 계층을 떠나 ‘성장을 통한 복지확대’

라는 보수적인 성장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 이후 쌓인 진보 세력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5-59). 이번 대선을 “친노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로 보는 데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모든 계층에서 과반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반면 민주당이 제기한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란 주장에는 모든 계층에서 과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았다.

(표 5-59) ‘친노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론’이 투표에 미친 영향 (단위:%)

구분	상층	신중산층	구중산층	하층	전체 평균
영향 있었다	68.1	62.4	61.9	57.0	61.6
영향 없었다	30.1	36.0	36.8	36.8	35.5
N(=719)	113	242	155	209	97.1

출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대선후조사 자료

요컨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가로지른 가장 큰 이슈는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당시에 이어 여전히 경제 문제였다. 하지만 5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제문제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든 계층에서 우세한 상황에서 진보적 정치세력이 이기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다. 즉 신중산층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보 진영과 정당-유권자 연합을 형성했지만, 2007년 이후 급격히 보수화하고 있는 하층과 구중산층의 경우 다수가 상층과 같은 이념지형 내에서 보수 진영과 정당-유권자 연합을 이루었다.

4. 소결

이 절에서 우리는 2002년 대선부터 나타난 계층투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계층의 이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투표행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층은 일관되게 보수적인 이념, 신중산층은 일관되게 진보적인 이념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계층별 이념성향은 2002년을 전후해 대북 문제를 둘러싼 정치 분야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들어 정치 분야의 이념이 보수화 경향을 보이면서 계층 간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분야의 이념에 비하면 여전히 계층별 간극은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는 현존하는 변수로 언제든지 새롭게 점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와 복지의 확대 등 진보적 의제가 제기되면서 모든 계층이 진보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라는 기존의 보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성장 이데올로기의 범주 속에 갇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분야에 관한 한 계층 간 이념분포도 이념 척도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보수적인 공간에 밀집되어 있으며 계층 간의 이념거리도 대단히 작은 것으로 보인다. 즉 유권자들의 보수화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것이다.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한 계층 간 이념적 차별성은 2000년대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중심 이슈로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선거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처럼 대북문제나 탄핵, 정치개혁 등의 정치 분야가 핵심 이슈가 되었을 경우, 계층 간 이념적 차별성이 강화되면서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표되는 계층균열이 부각되었다. 즉 상층과 보수적 정당 혹은 후보, 신중산층과 진보적 정당 혹은 후보 간의 정당-유권자 연합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지역균열은 약화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당-유권자 연합 역시 다소 약화되었다.

이에 비해 2007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에 이르는 시기에는 경제 분야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보수 우위의 이념균열선이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신중산층까지 보수 진영에 일부 가담하면서 계층 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약화되고 보수정당군 혹은 보수 후보의 우위로 선거결과가 나타났다. 즉 신중산층과 진보 진영 간의 정당-유권자 연합이 약화되고 보수 진영 쪽으로 전반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계층균열 혹은 이념균열이 약화되면서 지역균열 현상도 다시 부각되었다. 영호남 지역에서 상층과 신중산층의 교차투표 현상이 2002년에 비해 다소 약화된 것이다.

요컨대 2002년 대선에서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이 지역균열과 엇갈린 형태로 한국정당체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균열구조로 등장한 뒤, 이어진 선거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분야별 이념에 따라 계층별 투표행태의 차이를 낳고 있다. 물론 계층균열이 아직 지역균열을 확고히 대체하거나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보수적인 경제 이념이 부각되면서 계층균열이 다소 약화되고 그 반대급부로 지역균열이 다시 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금 단계에서 한국정당체계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은 이미 정당정치의 행태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당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정당정치의 변화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제 3 절 한국 사회의 정당재편성

앞에서 우리는 2002년 대선 이후 이념균열이 세대 차원을 넘어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균열 구조를 따라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 선거마다 반복되어 출현하며 새로운 균열구조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계층균열 구조를 따라 기존의 정당-유권자 연합 또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즉 기존 정당-유권자 연합이 영남 정당과 영남 유권자, 호남 정당과 호남 유권자 사이에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은 상층과 보수 진영 정당, 신중산층과 진보 진영 정당 간의 연합이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과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의 등장은 정당체계의 변화 혹은 정당재편성을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 제2장에서 논한 대안적 분석틀 가운데 그 변화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정당재편성론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보겠다.⁹⁷⁾

정당재편성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건 새로운 균열구조와 그에 입각한 정당-유권자 연합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균열구조가 서 있는 계층균열이나 이념균열이 정당 차원이나 유권자 차원에서 분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계층균열이 이념균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념균열이 비교적 명확한 정치균열로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이슈에 따라 계층균열이 기존의 지역균열에 의해 쉽게 흔들리고 정당재편성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적어도 유권자 수준에서 계층균열이나

97) 한국정당체계의 변화를 논하면서 미국의 정당재편성론을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정당재편성론이 서구에서의 논의보다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 등 정당체계 변화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논의는 정당체계 변화의 구체적 과정보다는 그 기준을 둘러싼 논의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또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를 통한 정당재편성이 발생해도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등 정당체계의 외관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역균열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당의 수도 1987년 민주화 직후와 동일하게 다수인 상태여서, 외형상으로 정당체계의 변화에 대해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정당재편성의 관점에서 정당-유권자 연합의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정당체계의 변화보다 일차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이론적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이념균열은 다소 불완전하다. 유권자들의 이념균열이 정책 분야에 따라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 분야와 관련될 경우 피아를 가르는 비교적 분명한 “균열선”(cleavage line)(Sundquist, 1973)이 나타나지만, 경제 분야와 관련될 경우 보수 우위 즉 보수 편향적인 균열선이 등장한다. 보수 편향적인 균열선이 등장하면 계층균열 역시 약화되고 기존의 지역균열이 강력히 부상(浮上)한다.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이 그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반증한다. 분야별 이념에 따라 유권자가 진보 정당에서 보수 정당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큰 편이다.

그렇다면 정당-유권자 연합을 이루는 또 다른 축인 정당 간의 이념균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의 경우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정당의 이념균열이 유권자들에 비해 조금 더 강한 편으로, 정당이 유권자들을 이끌어가는 이념균열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 간의 이념균열이 뚜렷해 이념균열선이 새로운 이슈균열선으로 뚜렷해진다면 (그림 2-3)에서 보듯이 정당균열선이 새롭게 전환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당 간의 이념균열선이 분명해지면 정당 간의 경쟁방식 또한 변화될 것이다. 새로운 이념균열선 혹은 그에 맞는 정당-유권자 연합에 기초해 정당 간의 동맹이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⁹⁸⁾ 즉 이념균열선을 사이에 두고 같은 쪽 정당군(family parties)끼리는 동맹을 하고, 반대쪽 정당군끼리는 경쟁을 하는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기존 지역주의 정당체계에서 지역에 따른 정당 간의 동맹 혹은 경쟁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균열구조에 맞게 계층 간의 연대나 이념적 동맹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 간 경쟁방식이 바뀔 것이다.

1. 정당균열선의 전환 여부

민주화 이전 정당과 유권자가 정렬한 정당균열선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소멸되면서 정책적 경쟁

98) 이는 메이어(Mair, 1997)가 말한 정당체계의 변화에 해당한다. 메이어는 정당체계가 “정당 간의 상호작용의 체계”(Sartori, 1976: 44)라고 정의할 때, “정당의 경쟁 방식 혹은 정부 구성방식의 변화”(Mair, 1997: 52)가 발생해야 비로소 정당체계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도는 사라지고 지역균열 구도만 남았고, 지역균열 구도는 곧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 즉 정당균열선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념균열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정당균열선도 지역균열선에서 이념균열선 쪽으로 점차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정당들이 새로운 균열구조가 출현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보여주는 적응능력(adaptation)일 수도 있다. 예컨대 영남 정당은 보수성을 강화하면서 보수정당으로, 호남 정당은 진보성을 강화하면서 진보 정당으로 새롭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정당균열선이 바뀌려면 정당 간의 이념균열선이 명확해야 한다.

(1) 정당 간의 경쟁 구도

1) 민주화 이전 정당균열선

현대 국가에서 정당 없는 정치는 상상하기 어렵다(Ware, 1996: 1).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정당이야말로 바로 이 대의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정당은 시민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이해집단들의 균열구조를 정당정치에 반영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가 정당정치의 균열구조에 반영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 정당들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정당균열선을 형성하고, 이를 오히려 시민사회에 이식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최초의 정당균열선으로 자리 잡은 이후 1987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민주 대 반민주’ 균열선이다.

해방 이후 처음 등장한 한국의 정당체계는 비록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당체계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로 이념을 위주로 형성되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부터 여운형이나 김규식, 김구 등의 중도적 성향, 이승만과 송진우의 한민당 계열 우익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좌우 배열을 이루었다(이정식, 1996; 이충식, 1995). 정당균열선이 이념균열선과

중첩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계층 집단의 지지를 둘러싼 정당 간의 경쟁도 치열했다. 특히 좌익 정당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집단에 대한 정치적 동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 여성, 학생 등 각종 사회경제적 집단이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조직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정당체계에서 좌파정당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좌익 성향의 사회경제적 집단에 대한 탄압도 극심해지며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집단은 해체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위 어용단체가 되어야 했다(조희연, 2008). 한국노총이 전평을 대체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당들 간의 균열선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념 위주의 좌우 구도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 해방 이후 최대의 사회경제적 균열 이슈로 등장했던 친일과 청산과 토지개혁을 둘러싼 대립은 반공 대 친공이라는 새로운 대결구도에 묻혀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서복경, 2002). 정당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집단 간의 정렬이라는 기본적인 정당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좌파 정당을 배제한 채 반공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보수 정당들 간의 전형적인 권력쟁탈형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즉 이념적으로 유사한 정당들만 남다보니 정부형태나 제도적 절차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 대 반민주’라는 독특한 정당균열선이 형성된 것이다.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따라 정치적 균열구조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반공이라는 정치적 균열구조가 역으로 사회적 균열구조를 재규정하는 왜곡현상이 나타났다(박상병, 1997).

수출 지향적인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는 보다 다양화되었다(김수진, 2008; 서복경, 2002 등). 기존에 형성된 ‘여촌야도(興村野都)’로 상징되는 도농(都農) 균열구조가 나타났고, 산업화에 따른 대대적인 이농 현상과 노동자들의 증가 등에 따른 계급균열이 발생했다. 또 1971년 대선에서 영남 출신의 박정희 후보와 호남 출신의 김대중 후보가 맞붙으면서 지역균열 현상도 출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와 함께 경제성장론을 내세우며 여타의 사회경제적 균열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철저히 억눌렀다. 사회적 갈등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이를 억압한 것이다. 특히 산업현

장에서 나타나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경제성장의 최대 암초로 규정하고, 노동에 대해 강력한 억압과 통제, 그리고 배제 전략을 구사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치적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정상적인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노동자 정당은 고사하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조차 탄압을 받은 것이다. 사회계층 집단, 특히 노동자 집단의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면 “빨갱이”로 몰리며 불온시하는 경향까지 생겨났다.

노동의 정치적 대표성을 배제하는 국가의 억압 일변도의 정책은 전두환 정부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형성된 반공이데올로기에 이어 경제성장 담론으로 치장된 성장주의 혹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까지, 사회경제적 균열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기의 지배이데올로기로 동원되었다.⁹⁹⁾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정치균열 역시 이승만 정부 시기에 형성된 보수 정당들 간의 권력쟁탈전, 즉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쿠데타 전력으로 인한 정통성 문제로 이전보다 훨씬 강렬해졌다. 즉 보수 야당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 여당은 경제성장의 시급성으로 응수한 것이다.

어떤 형식이 되었든 보수 정당들 간의 경쟁구도에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따른 이슈는 배제되었고, 특히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시도는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충실하려는 집단은 체제 밖으로 밀려나 소위 재야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당-유권자 연합이 이뤄질 수 없었고, 정당균열선 역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와 유리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따라 형성된 것이다.

2) 민주화 이후 정당균열선

99) 현재호(2008)가 각 정당의 선거강령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반공주의와 함께 발전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박정희 시대 형성된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낳고 있는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서는 유종일 외(2011) 참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당 간의 균열선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우선 40년 넘게 지속된 정당 간의 ‘민주 대 반민주’의 경쟁구도가 그 시효에 도달한 것이다. 유신체제의 수립으로 사라졌던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정당 간의 경쟁은 더 이상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 각 정당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선거강령에 대한 분석결과, 박정희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에 이르는 권위주의 시기 가장 두드러진 대립각을 형성했던 “민주주의 대 발전주의” 혹은 “기본권 대 경제수행능력” 간의 갈등이 민주화 이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호, 2008; 현재호, 2004b; 2006; 2008). 즉 이 시기 정당 간 경쟁구도에서는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사라지고 대신 모든 정당이 효율적인 경제수행 내지는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정치, 사회 등 다른 이슈 차원에서의 정당 간 차이도 대폭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지역균열을 제외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당 간의 경쟁구도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거나 대단히 협소해진 것이다. 여야 정당 간의 상호 인식도 바뀌었다. 권위주의 시기에는 서로 상대를 제거해야 될 적으로 보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의 경쟁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야 정당 간의 이와 같은 경쟁구도의 변화가 곧바로 사회경제적 균열에 따른 정치균열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또 권위주의 정부 시절 성장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배제해온 사회계층 집단, 특히 노동자 집단을 정치에 포섭한 것도 아니었다. 노동자 배제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노동자들이 어용단체로 간주해온 한국노총 대신에 스스로 민주노총을 결성해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997년까지 또 다른 10년이 필요했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뒤에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된 것은 IMF 외환위기라는 가장 극적인 외적 계기를 통해서였다. 기본권 중에서도 기초에 해당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민주공화국 수립 이후 50년 만에 뒤늦게 획득한 것이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입은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힘으로 처음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처음으로 노동자 유권자와 정당 간의 정치적 연합이 부분적이지만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배제적 정치는 왜 지속되었던 것일까? 우선 한국 보수정당들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연유한다. 한국 정당은 시민사회와의 연계가 대단히 취약해 대중정당으로서의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 출범 초기부터 명사(名士)정당, 포괄정당, 선거전문가 정당 등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왔다(김수진, 2008; 박찬표, 2003; 2007b; 은민수, 2003; 장훈 2010 등).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강력한 국가에 기대어 ‘카르텔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었다.¹⁰⁰⁾ 사회경제적 집단과 정당 간의 연합은 애초부터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정당 경쟁구도를 형성했던 정치세력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부를 유지하던 정치세력과의 협약에 의한 민주화가 진행된 탓도 있지만, 보수 야당을 이끌어간 정치세력들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1987년 대선에서 경쟁을 했던 4명의 대선 후보들이 이후 차례로 혹은 공동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 정치권력의 쟁탈을 위한 술한 이합집산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념적, 정책적 속성은 변화하지 않았고 노동자 배제정치는 지속된 것이다. 이 과정에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형성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 결과 지역균열이 ‘민주 대 반민주’를 대체해 새로운 정당균열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 극적으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기존 지배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정당균열선을 사실상 강제로 이식해온 반공이데올로기의 퇴조가 역력했다. 또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와 정당의 개혁 노력에 따라 정당균열선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각 정당들의 선거강령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정당 간의 경쟁구도가 북한과 미국 등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이후로 모든 정당이 정부의 효율성보다는 사회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이지호, 2008; 현재호, 2004b;

100) 서구에서는 정당의 성격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에 따라 명사정당에서 계급대중정당, 포괄정당, 그리고 선거전문가 정당 내지 카르텔 정당으로 일종의 시계열적 발전과정을 밟았지만, 우리의 경우 계급대중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성격이 사실상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 2008). 즉 기존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복지주의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선거강령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1997년 이후 각 정당들이 좌우 이념선을 따라 일관되게 정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지호, 2008). 기존에는 각 정당들이 좌우 척도를 떠나 이념적으로 상호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997년부터는 정당 간 위치가 좌우 척도에 따라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앞의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제16대 국회 이후 이념적으로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 정당 간의 경쟁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¹⁰¹⁾

(2) 제17대 국회와 정당균열선

2004년 수립된 제17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우선 총선 한 달 전에 벌어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무려 152석을 획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단점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반면 제16대 국회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간신히 체면치레를 하는 정도에 그쳤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겨우 10석도 안 되는 의석을 각각 확보했다.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세 정당이 그야말로 존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또 제17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해 가장 진보성을 띤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실시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념조사 결과 제17대 국회의 이념성향은 4.57로 나타났다. 이는 제16대 국회의 4.90이나 제18대 국회의 5.48에 비해 진보성이 강화된 것이다.

게다가 제17대 국회에 처음으로 노동자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진입했다. 비록 10명에 불과한 적은 의석이었지만, 계급정당을 공공연히 표방한 정당이 국회

101) 주변 환경 특히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당 내부의 이데올로기 구조가 변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로는 장훈(1993; 1994; 1995; 1996) 참고.

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 수가 절반을 겨우 넘는 15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 연대를 이룰 경우 많은 변화가 예상되었다. 특히 제16대 대선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념균열 구조가 본격적으로 발현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7대 국회는 지역주의에 따라 형성된 정당균열선을 이념에 따른 정당균열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好機)였던 것이다. 하지만 제17대 국회는 기대와 달리 정당균열선의 대체에 실패하고 도리어 지역주의가 재부상(再浮上)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정당균열선 전환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모호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표적인 정치개혁 세력으로 인정을 받아 집권에 성공했지만 적어도 경제와 노동정책 등 사회경제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치세력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¹⁰²⁾

노무현 정부는 IMF 외환위기와 그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 정치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2만 달러 국민소득을 외치며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 수용했다(유종일, 2006; 2009). 그 결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의제로 선정하고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미FTA를 추진한다든지, 비정규직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이다.¹⁰³⁾

사실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모호성은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수준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인 측면, 특히 대북정책이나 한미관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등에서는 상당히 진보적 혹은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박정희 정부 이래 지속되어온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 이래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노동자 배제 정치를 일관되게 답습했다(박태주, 2008; 이병훈, 2011; 이선향,

102) 노무현 정부 시기 전반적인 개혁정책에서 나타난 이념적 혼선 등에 따른 실패에 대한 분석으로는 강원택·장덕진(2011),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2008) 등 참고.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모호성은 열린우리당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경제분야에 관한 한 이념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명호, 2004b).

103)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 걸쳐 수용된 과정과 대처, 그 결과 나타난 양극화 심화 등의 현상에 대해서는 최태욱 외(2009) 참고.

2011). 집권 초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분출하자 입장을 선회해 다시 탄압일변도로 돌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무현 정부 시기 구속된 노동자 수는 노태우 정부 이래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폭증양상을 보이게 된다.

(표 5-60) 역대 정부별 연간 구속 노동자 수 (단위: 명)

구분	집권 5년 구속자	연평균 구속자
전두환 정부(1982-1986년)	65	13
전두환 정부(1987년)	362(1년)	362
노태우 정부(1988-1992)	1,973	395
김영삼 정부(1993-1997)	632	126
김대중 정부(1998-2002)	892	178
노무현 정부(2003-2007)	1,053	211

출처: 조돈문(2011: 132)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구속된 노동자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노사갈등 혹은 노정갈등이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으로 두 정부가 남북관계나 국회개혁 등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의 정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노동자 대투쟁이 분출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하에서 자유주의적인 기본권과 관련된 권리는 많이 신장되었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노동권이나 복지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신광영, 2006c). 특히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층 집단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탄압 정책의 지속은 사회경제적 균열 구조의 활성화를 또 다시 억압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와 무관한 정당 간의 경쟁구도 역시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와 조응하는 구도로 바뀔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이슈를 정치적 동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제17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정당에 비해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띤 정당으로 평가받았지만,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계층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침묵을 지키는 일종의 “비결정”(非決定)(최장집, 2005) 전략을 취했다.

이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공식적인 논평과 성명에서 나타났다(서복경, 2004). 총선 이후 4개월 동안 각 당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과 성명 중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전체 290건 중 114건, 39.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555건 중 48건(8.6%)을 차지했고, 열린우리당은 204건 중 7건(3.4%)만 기록해, 사회경제적 이슈의 정치적 동원에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5-61) 각 당 논평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이슈 비중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횟수(/전체)	7/204	48/555	114/290
비율(%)	3.4	8.6	39.3

출처: 서복경(2004: 156)

민주노동당은 노동/노사 문제, 주택문제, 기업과 거시경제 등에 대해 노동계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재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업과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 침묵을 하거나 노사문제에 대해서 자율교섭만 강조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때 자신들의 최대지지 세력이었던 신중산층을 비롯한 중간층의 막연한 진보성만 바라보며, 정당-유권자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분명한 계급적 입장을 드러내며 공세를 취하는 민주노동당과 공조보다는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다. 반면 스스로의 입장을 “좌파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재벌 위주의 성장 위주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뒤에는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대연정’(大聯政)을 취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이와 같은 입장은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김민전, 2010). 즉 제17대 국회 5년 동안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보다는 한나라당과의 공조에 더 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3당이 모두 합의 처리한 법안 1,155건을 제외한 나머지 1,033건 중 80.7%에 달하는 834건을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했다. 한나라당이 반대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의 처리한 법안은 1,033건 중 136건으로 13.2%에 불과했다.¹⁰⁴⁾

(표 5-62) 제17대 국회 각 당 공조처리 법안

공조 정당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처리 건수(건)	834	136
처리 비율(%)	80.7	13.2

출처: 김민전(2010: 171-172)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진보연대가 작동한 것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두 해에 집중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 초반 4대 법안(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제/개정, 과거사진상규명 관련 법안 제정 등)을 비롯해 정치와 사회 관련 개혁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당시에만 양당 간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연패하고 과반 의석을 상실하면서 급속도로 보수화되는 제17대 국회 중반부터는 ‘민주노동당과의 진보연대’ 보다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 주를 이루었다.¹⁰⁵⁾

열린우리당이 사안에 따라 한나라당 및 민주노동당과 번갈아 공조를 하면서

104) 열린우리당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무시 내지 불인정 전략은 국회 본회의 법안처리 이전 단계인 상임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이 노동, 농업, 임대주택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등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 중 국회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채택되거나 통과된 법안은 열린우리당의 의제와 중복되거나 전경련 등과 같은 거대 이익단체의 반대가 없는 경우로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진영(2007) 참고.

105) 노무현 정부가 민주노동당과의 진보연대보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추구했지만, 이 시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법안 가결률은 역대 국회 최저 수준에 달했고, 특검임명 요청도 김대중 정부 때의 10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24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등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가장 팽배했다. 오승용(2009b) 참고.

제17대 국회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대 한나라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균열선이 등장했다(박찬표, 2008).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공조한 사안은 김대중 정부 이후 한나라당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 등 대외관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문제가 된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적절한 선에서의 규제 문제였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주화 이후 폐기한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재벌과 노동집단에게까지 확대하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방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갈등관계를 형성했다.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관상으로는 3당이 모두 복지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큰 차이가 있다. 즉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박정희 정부 이래 지속된 경제성장의 확대를 통한 분배라는 성장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따라서 분배의 문제도 사실상 시장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국가주도로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취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내수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¹⁰⁶⁾

물론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제17대 국회에서 지나치게 국지적이고 협소한 노동자계급의 이슈,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스스로 정치적 동원 대상을 제한하는 부정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이 제17대 국회에 형성한 새로운 균열선은 이념균열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불과 10석을 갖고 있던 민주노동당이 새로 형성한 균열선은 기존 보수정당들이 형성하고 있던 경쟁구도에 그저 “부가적인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열린우리당의 외면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기존의 정당균열선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보수정당에 비해 상당한 진보성을 보였지만 경제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일반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106)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복지 문제와 관련해 단 한 차례의 법안공조를 이룬 바도 없다. 강병익(2009) 참고.

로 기존의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 17대 국회에서 기존의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균열선을 이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균열선으로 대체할 능력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최장집(2007: 111)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런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의 정당 간 경쟁은 이 중심적 정책목표나 정책내용의 잔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정당들은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취할 것인가, 기존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수행과 정에서의 기술적인 차이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정당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이념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수 정당들과의 이념적 대립각을 세우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먼저 이념문제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와 제17대 국회는 정당재편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균열에 따른 정당균열선을 이념균열에 따른 정당균열선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개혁주체들이 사회경제 분야에서 이념적으로 취약한 데 있다. 겉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분배·복지의 증대 필요성을 주장해 진보적인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과거 노동의 배제를 기본으로 한 재벌 중심의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를 정치균열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침묵이나 방관을 하며 “비결정”의 영역에 머물렀다. 제17대 국회에서 진보 성향 정당 간의 ‘진보 연대’가 아니라 보수 성향 정당 간의 ‘보수 연대’가 주류를 이룬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진보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균열선이 흐려지면서 지역균열선이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이 발생했다.¹⁰⁷⁾ 전반적으로 이념균열선이 취약해 지역균열선과 달리 확고히 서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정당 간의 이념균열 역시 일반 유권자들

107)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의식이 중산층에서 서민의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정치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는 고원(2009) 참고.

의 이념균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정당 경쟁방식의 변화

이번에는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의 등장에 따른 정당 간 경쟁방식의 변화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실 정당 간 경쟁방식은 정치지도자들의 집권에 대한 강력한 욕구에 의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1) 지역정당 간 연합정치

1) ‘3당 합당’ 과 ‘호남 대 비호남’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인데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소선거구 단순다수득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내각제 국가들처럼 정당 간의 동맹 혹은 연합정치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지역균열에 입각한 독특한 균열구조로 인해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게다가 보수정당 편향적인 구조로 인해 정당 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집권을 위해 상대를 바꾸는 정당 간의 연합이 훨씬 쉬웠고 실제로 빈번이 이루어져 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총선이나 대선을 목전에 두고 정당 간의 통합이나 선거 연합을 이룬 것이다.¹⁰⁸⁾ 지역균열 구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정당 간 혹은 후보자 간 연합은 오로지 지역균열선을 따른 지역 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민주화 이후 첫 번째 형성된 정당 간 연합은 1990년의 ‘3당 합당’ 이었다. ‘3당 합당’ 은 당시 집권여당인 민정당과 두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당 대 당 통합을 통해 새로운 민주자유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이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3당 합당’ 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충청권에 기반을 둔 3당이 합당함으로써, 그야말로 ‘호남 정당 대 비호남 정

108) 민주화 이후 2007년까지 여야 정당들은 16차례의 통합과 3차례의 연합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재 · 박준식(2008) 참고.

당’이라는 지역적 구도를 만든 것이었다.

‘3당 합당’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가 수립되었지만, 아직은 권위주의 정부 이후 지속되어 온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역균열과 혼재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비록 지역균열이 등장했지만 ‘민주 대 반민주’ 균열을 복원해 권위주의 세력을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력히 남아 있던 때였다. 그런데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권위주의 정부를 계승한 민정당과 공화당 등 두 당과 합당을 하면서 오히려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가 일시에 무너지고, 지역균열만 남게 된 것이다.

요컨대 ‘3당 합당’은 순전히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균열선을 일거에 바꾸어버린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3당 합당’이 가능했던 것은 여소야대 국회를 극복해야 하는 노태우 정권의 필요성과 국정 참여를 통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김종필의 기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김대중이라는 호각지세의 라이벌을 넘어서야 하는 김영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⁹⁾ 그리고 정당균열선의 급격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보수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균열구조로부터 유리된 채 독자적인 정치균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민주당 내에서 김영삼을 따라 합당 대열에 참가하지 않고 이탈한 세력들은 지역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정당균열선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진보적인 재야세력과 연대해 김대중의 평민당과 합당하는 새로운 정치연합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김대중 계열의 정당이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확립하게 된다. 반면 김영삼이 합류한 민자당 내에서는 온건 보수적인 세력이 들어가면서 구 권위주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권위주의 시기에 비해서는 보다 온건한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3당 합당이 정당 간의 이념적 성향 강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은 것이다(강원택, 2012a).

‘3당 합당’은 이후 진행된 총선에서 당초 원하는 만큼의 목표에 미치지

109) 문용직(1993)은 3당 합당의 배경에는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 등 세 정치지도자들의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김대중의 경우 역시 합당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호남 지역과의 특수 관계로 인해 움직이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당초 3당의 총 의석수에 현저히 부족한 결과였다. 그렇지만 김영삼은 그 해 12월에 열린 대선에서는 집권에 성공한다. 지역정당 간의 연합정치를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 간의 연합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보다 큰 승부처인 대선에서 집권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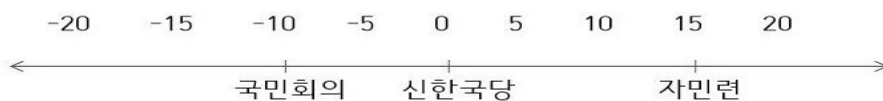
2) ‘DJP 연대’와 ‘영남 대 비영남’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대해 김대중은 ‘DJP 연대’로 응수했다. ‘DJP 연대’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이 충청을 기반으로 한 김종필과 연합정치를 펴 집권을 한 것이다. 그런 만큼 ‘3당 합당’만큼이나 철저히 지역연합적 성격을 갖는다.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를 통해 호남을 고립화시키는 ‘3당 합당’에 대응해, 영남을 고립화시키는 ‘영남 대 비영남’ 구도를 역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역시 집권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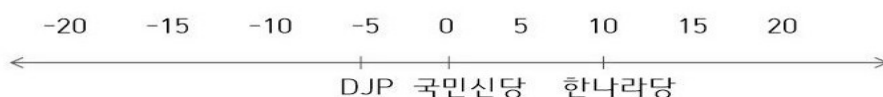
‘DJP 연대’의 지역주의 연합정치의 성격은 김대중의 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간의 정책적, 이념적 격차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5-29)는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 당시 각 정당의 선거강령에서 나타난 정당별 평균을 일차원 공간 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9) 주요 정당별 선거강령 이슈에 따른 공간적 위치

1996년 총선



1997년 대선



출처: 현재호(2004a: 153)

1996년 총선 당시 김대중의 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민련은 -10과 15로 한국 정당체계에서 좌우 양극을 차지했고 신한국당은 중간인 0보다 조금 우측에 위치해 있었다. 거리상으로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사이가 신한국당과 자민련보다 더 가까운 상황이었다. 1997년 ‘DJP 연대’는 바로 이 거리를 뛰어넘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연합정치를 펼친 것이다. 그 결과 김대중은 다소 우측으로, 김종필은 신한국당을 건너뛰어 큰 폭으로 좌측으로 이동해 -5 정도에서 ‘DJP 연대’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꾼 신한국당의 위치는 10으로, 자민련이 떠난 우측 공간으로 밀려나 보수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이후 김대중 정부와 이념적 대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DJP 연대’는 정책적, 이념적 차이를 건너뛰어 지역정당 간 연합정치를 시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당초 양당 간의 정책적, 이념적 차이가 크다보니 공동정부 구성 이후에도 대북정책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흘러나왔고, 그 결과 불과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결렬되기에 이르렀다.¹¹⁰⁾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정당 간의 경쟁구도에서는 그나마 민주주의 내지는 경제성장과 관련한 정책 경쟁이 일부라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구도가 사라지고 보수 정당들 간의 지역적 연고에 따른 차이만 남아있는 정당체계에서 집권을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정당 간의 경쟁방식은 오로지 지역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당 간의 경쟁방향은 연합정치를 용이하게 하도록 이념이나 정책을 보다 밀착시키는 구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DJP 연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연합정치를 펼 시점을 전후해 소위 ‘뉴DJ 플랜’을 제시하며 좌파 색깔을 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고, 그 결과 ‘DJP 연대’를 성사했던 것이다. ‘3당 합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5-29)에서 보는 것처럼 1996년 당시 신한국당과 자민련도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세력이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한 당으로 뭉침으로써 이념적 거리를 스스로 좁혔던 것이다.

(2) 이념에 기초한 후보 단일화

110) DJP 연합정치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호(2004a) 참고.

2000년대 이후 정당을 가르는 균열선이 지역균열 하나만 있을 때와 달리 진보와 보수의 이념균열이 일반화되고 정당 간 경쟁구도가 다원화되면서 정당 간의 경쟁방식 혹은 정부구성 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 지역균열에 따라 지지층이 지역에 의해 서로 엇갈리는 정치세력 간의 연합 정치가 제15대 대선까지 유효했다면, 이제는 이념적으로 지지층이 겹치는 정치세력 간에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했다. 즉 이념이 유사한 후보 혹은 정당 간의 연합정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DJP 연대’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 간에 이념적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지역 간 연합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지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먼 후보나 정당 간의 연합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후보나 정당 차원에서 연합을 한다고 해도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따라갈 유인이 전혀 없는 것이다.

1) 2002년 대선 후보 단일화

이념에 따른 후보 단일화의 시발점은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의 단일화이다.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 이회창, 진보 대 보수 후보 간의 1:1 대결 구도가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호남을 기반을 하는 민주당 후보이고, 정몽준 후보는 영남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지내온 후보였다. 후보 단일화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정몽준 후보는 비록 영남 출신이었지만 지지기반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표 5-63). 따라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이전의 3당 합당이나 DJP 연합과 같이 지역균열에 기반을 둔 연합정치로 해석할 수는 없다.

(표 5-63) 정몽준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단위: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지지율	24.5	28.2	18.0	24.5	21.9	14.9	17.5	20.6
N(=1,040)	231	253	33	105	119	116	171	12

출처: 한국갤럽 2002년 대선 가상대결 지지도¹¹¹⁾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5-64). 먼저 두 후보는 20-30대 젊은 세대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50대 이상 나이든 세대로부터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반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나이든 세대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젊은 세대로부터 낮은 지지를 얻었다.

(표 5-64) 노무현 · 정몽준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 (단위: %)

구분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N
20대	26.9	29.4	19.8	248
30대	24.2	29.5	26.9	266
40대	16.4	21.6	39.3	230
50대	9.7	11.4	48.0	296
전체	19.0	22.6	34.0	1,040

젊은 세대가 이념적으로 나이든 세대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띠면서 두 후보는 이념적으로도 보수보다는 진보에 가까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나 국민통합21 지지자들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노동당 지지자 중에도 노무현 · 정몽준 두 후보에게 각각 10%와 15.9%의 지지를 보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율 29.3%에 근접할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지역균열을 대신해 이념

111)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는 2002년 11월2일 하루 동안 전국의 만20세 이상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0\%$ 포인트이다.

균열 구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념적으로 지지층이 유사한 진보/중도 세력들이 연합해 강력한 보수 세력에 맞서려 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유사한 정당이나 후보 간에 지역을 기준으로 연합정치를 펴던 이전 방식과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2) 2007년 대선 후보 단일화

이념적으로 유사한 후보나 정당 간의 단일화 시도는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도 시도되었다. 정동영 민주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간에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물론 두 후보의 단일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정동영·문국현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있다. 정동영·문국현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명박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시급성이나 절박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후보 외에 이회창 후보까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념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두 후보가 또 다시 단일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즉 2002년과 마찬가지로 이념균열에 기초한 연합정치를 시도했다.

먼저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SBS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2007년 대선 패널 제5차 여론조사>(2007년 12월 11일-12일)에서 나타난 두 후보의 지역적 지지율을 보면, 정동영 후보는 호남 출신 민주당 후보답게 호남에서 과반이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영남에서는 10% 미만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표 5-65). 문국현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다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보이고 있다.

(표 5-65) 정동영·문국현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단위: %)

구분	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제주
정동영	14.0	11.1	55.8	7.1	8.9	17.3
문국현	8.5	9.3	8.0	4.6	7.3	12.3
N(=2,208)	1,088	216	226	239	358	81

문국현 후보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후보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국현 · 정동영 두 후보의 단일화 역시 지역연합으로 볼 수는 없다. 대신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스스로 밝힌 이념성향을 보면, 정동영 · 문국현 두 후보는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이명박 후보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66) 정동영 ·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념성향 (단위: %)

구분	정동영	문국현	이명박	N(=2,206)
진보	14.4	27.2	27.5	596
중도	7.5	18.3	48.5	666
보수	4.4	8.6	60.7	944

또 각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보면 정동영 · 문국현 두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많이 분류가 된 반면, 이명박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이념성향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정렬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67) 유권자가 판단한 각 후보들의 이념성향 (단위: %)

구분	정동영	문국현	이명박	이회창
진보	32.7	25.5	20.7	12.3
중도	20.6	25.5	13.0	11.2
보수	13.8	13.8	33.8	43.8
N	2,351	2,293	2,367	2,356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2007년 대선패널 제4차 여론조사>(2007년 11월25일-27일)

정동영 · 문국현 두 후보는 세대별 지지율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젊은 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나이든 세대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대선 후보 단일화 정치는 2012년에도 이어졌다. 문재인 ·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기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앞의 두 대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두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두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30-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15% 전후의 낮은 지지를 얻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대의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표 5-68).

(표 5-68) 문재인 · 안철수 후보의 지역별 지지율 (단위: %)

구분	서울	인천/경기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제주
문재인	19.1	20.7	23.0	44.1	14.5	21.2	21.3
안철수	26.6	25.1	20.4	36.1	15.4	20.5	28.0
N(=1,000)	208	285	99	104	104	159	41

출처: 코리아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¹¹²⁾

112) 문화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이를 동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는 또 세대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지지를 받았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를 지지한 반면 5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일수록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했다(표 5-69). 물론 안철수 후보가 20대에서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인 반면, 문재인 후보는 40대에서 안철수 후보를 다소 앞서는 차이도 드러났다. 하지만 대체로 두 후보 모두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표 5-69)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 (단위: %)

구분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N
20대	21.7	42.6	24.3	189
30대	30.3	35.1	23.0	206
40대	29.1	21.7	35.8	218
50대	18.6	12.7	58.7	187
60대 이상	12.1	10.4	70.8	200
전체	22.6	24.5	42.3	1,000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표 5-70). 두 후보 모두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70% 이상이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0)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이념성향별 지지율 (단위: %)

구분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N(=870)
진보	33.8	32.7	24.8	367
중도	23.6	26.8	34.5	249
보수	10.2	12.1	70.4	253

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에 의한 유·무선(각 500명씩)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pm 3.1\%$ 포인트이다.

결국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2002년 노무현·정몽준 두 후보 단일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¹¹³⁾ 즉 세대와 이념별 지지층이 겹친 두 후보가 호남 정당과의 동맹을 통해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 후보에게 대항하기 위해 연합정치를 펼친 것이다.

요컨대 정부구성을 위한 정당 간의 경쟁이 기존에는 ‘3당 합당’이나 ‘DJP 연합’과 같이 지역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연합정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는 지역 지도자가 빠진 상태에서 지역을 기본 토대로 하고 여기에 이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 간 경쟁방식의 변화는 정당경쟁의 방향성 또한 바꾸고 있다. 사르토리(Sartori, 1976)는 정당체계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로 “얼마나 경쟁적이나” (how competitive)가 아니라 “정당 경쟁의 방향성” (direction of competition)을 제시한 바 있다(Ware, 1996: 170). 과거 지역연합 정치에서는 이념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구심적(求心的) 경쟁을 했다면, 이념에 따른 정당 간의 경쟁에서는 서로 간의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하는 원심적(遠心的) 방향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념적으로 유사한 정당끼리 연합정치를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좌우 정당체계에 근접한 양당제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3. 소결

이 논문은 정당재편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세 가지 기준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새로운 균열구조에 입각해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이 출현해야 한다. 또 새로운 균열구조를 따라 정당균열선이 전환되어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에 맞게 정당 간의 경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정당재편성은 점진적인 재편성(secular realignment)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의 출현 문제이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되기

113) 고학력, 고소득층 위주로 구성된 안철수 지지자들의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류재성(2013) 참고.

시작한 이념균열 구조에 따라 상층-보수 진영 대 신중산층-진보 진영 간의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이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유권자 연합에서 이탈(dealignment)하는 현상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은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특정 이슈가 선거과정에서 부각될 때마다 특정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층균열을 희석시키고 있다. 분야별 이념에 따라 진보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큰 편이다.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이 재정렬(realignment)의 방향은 설정했지만 공고화되지 못하고 정당재편성을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정당 차원에서의 균열선 전환 역시 불충분한 수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정당 간의 이념균열이 유권자들 수준만큼이나 불완전한데서 기인한다. 한국전쟁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시작된 노동배제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경제 집단과 정당정치가 상호 조율하는 구조를 이루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계층균열이 등장하고 있지만 노동이 빠진 채 상층과 신중산층 간의 균열구조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노동의 배제는 이념적으로도 보수 우위 즉 보수 편향적인 균열구조를 낳았다. 최근 정당정치에서 진보적 성향이 다소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아직 기존의 보수적 이념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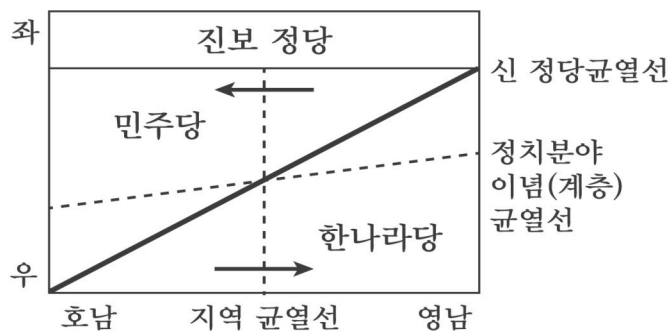
반면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에 기반을 둔 정당 간 경쟁방식의 변화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정당체계가 형성되면서 정당정치는 이념이 배제된 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집권을 위한 정당 간의 경쟁도 오로지 지역을 토대로 지역정당 간의 연합정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이념균열 구조가 등장하면서 정당정치는 기존의 지역연합 정치에 이념을 토대로 한 경쟁을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각각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성을 강화하면서 자기 지역을 넘어 지지층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역으로 이념에 기반을 둔 정당-유권자 연합의 형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는 기존 지역주의 정당이 지역균열의 외연(外延)을 넘어 정당-유권자 연합을 확대 내지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고, 이 시도가 정당재편성을 추동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이념균열선이 정당과 유권자 차원에서 아직 유동적(流動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렬(realignment)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장의 대안적 분석틀에서 제시한 정당재편성의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 분야의 이념이 부상하면서 유권자 동원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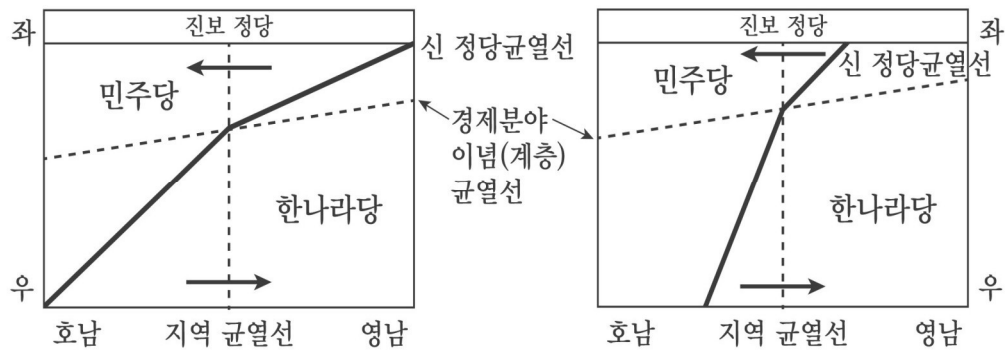
(그림 5-30) 정치이념에 따른 정당재편성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가르는 정당균열선 역할을 한 지역균열선을 다시 횡(橫)으로 가로지르는 정치적 이념 혹은 계층 균열선이 등장한다. 그 결과 기존의 지역균열선과 새로운 이념균열선이 중첩된 새로운 정당균열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된다. 영호남 지역에 위치한 유권자 중 일부가 지역균열선을 넘어 좌우로 교차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층과 신중산층이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유권자 연합에서 이탈(dealignment)해 새로운 정렬(realignment)을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분야 이념이 부상하면서 유권자 동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그림 5-31) 경제이념에 따른 정당재편성



(가)

(나)

새로운 이념균열선은 위로 올라가 보수 편향적인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보 정당의 영역이 앞서의 경우보다 훨씬 좁아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가르는 새로운 정당균열선도 기존의 지역균열선에 보다 기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경제 분야 이념균열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보수 편향의 구도가 확고해지면서 (그림 5-31)의 (가)에서 (나)의 방향으로 정당재편성이 바뀌고 원래의 지역주의 정당체계에 가깝게 회귀하는 것이다. 영호남 지역에서 기존의 정당-유권자 연합을 벗어나는 이탈 현상도 훨씬 적어지게 된다.

위 도식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균열선이 확고하게 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새로운 이념 혹은 계층 균열선은 이슈에 따라 상하로 크게 동요하고 이에 따라 정당재편성도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다. 이념 균열선이 보다 위로 올라가 보수 편향적인 방향으로 될 경우 정당균열선은 기존의 지역균열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처럼 형성되고, 이념균열선이 아래로 내려올 경우 정당균열선은 이념균열선과 일치하는 수평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 향후 정당정치의 향배, 특히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조성되면, 이념균열선이 새로 정립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정당재편성의 방향은 그에 맞추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등장한 새로운 계층균열 구조는 우리 사회 정당체계의 재

편성을 야기하고 있다. 적어도 새로운 정당체계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이 확고하게 재정렬(realignment)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대선에서 정당재편성의 방향을 알리는 첫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후 선거는 새로운 중대선거를 예고하는 점진적 재편성(secular realignment)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당재편성이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할 때 점진적 재편성이 전진과 후퇴 등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최종적인 자리를 잡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대선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

제 6 장 결 론

“1987년 체제”로 불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정당체계는 보수편향과 지역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모든 이념균열의 표출(表出)이 가로막히면서 정치사회에는 오직 보수 정당만 살아남는 독특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 보수 정당들끼리 협애한 이념 공간 내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정당 간의 경쟁은 훨씬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각 당 정치지도자들의 출신지역이 박정희 정부 이후 단초를 보였던 지역균열과 일치하면서 지역을 둘러싼 경쟁이 노골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당체계에서 정당 간 경쟁방식도 서구와 같이 이념에 기초한 동맹이나 연합 대신, 동일한 보수 정당임을 전제로 오로지 집권을 목적으로 정당 지도자들 간에 합종연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 간 경쟁이 이념적 차별성을 드러내며 원심적 방향으로 전개되기보다, 합종연횡을 위해 이념적 유사성을 드러내며 구심적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를 수립한 ‘3당 합당’과 영남 대 비영남의 구도를 수립한 ‘DJP 연대’라는 연합정치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민주화 이후 오로지 지역을 중심으로 정렬된 정당-유권자 연합의 산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듀베르제가 말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일상화되었다. 사르토리외의 정당체계 분류방식을 따라 정당의 수와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정당 간의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어 이데올로기적 분극화라는 수평축은 의미가 없고, 정당 수에 따른 분류기준인 수직축만 남은 지극히 온건한 형태의 다당제를 형성한 것이다. 이 다당제조차도 오로지 집권을 위해 이 정당저 정당 가리지 않고 쉽게 이합집산을 하면서 불안정한 체계를 이루어 정상적인 차원의 정당체계라 불리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수 우위의 지역주의 정당체계도 2000년대 들어 재편성의 국면을 맞기 시작했다. 우선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유권자 연합이 해체(dealignment)되기 시작했다. 즉 2000년대 이후 세 차례의 대선과 세 차례 총선에서 나타난 계층별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 상층과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념 지향적인 투표성향이 나타나면서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지역 정당-지역 유권자 연합이 허물어지고 있다. 영호남이라는 지역을 떠나 상층은 보수 정당, 신중산층은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을 향해 일관된 투표행태를 보이면서 영호남 지역에서도 계층에 따른 상호 교차투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어 계층균열이 지역균열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집권을 위한 정당 간의 경쟁방식도 지역연합에서 서구처럼 이념에 기초한 동맹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보수 진영 정당들은 보수 진영 정당들끼리, 진보 진영 정당들은 진보 진영 정당들끼리 후보 단일화나 합당, 동맹 등을 맺으면서 상대 진영과 이념적 차별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중도 성향의 정당들이 2002년 이후 2012년까지 선거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보수 정당들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단일한 정당으로 통합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 결과 2002년과 2012년 두 대선에서 나타난 정당 간 경쟁구도는 사실상 양당 구도를 이루었다. 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 간의 1:1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사르토리의 정당체계 분류에 따르면 두 대선에서 나타난 구도는 최소한 미국식의 온건한 양당제 구도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이념적 분극화의 정도가 약한 두 개의 정당만이 존재한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아직 여럿 존재하고 이들의 지위가 매 선거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당제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이른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정당체계가 확실히 재편성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당재편성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정당체계는 2002년 대선 이후 점진적 재편성(secular realignment)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정당체계의 토대가 되는 정당-유권자 연합이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계층별 정당-유권자 연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선거과정에서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새 정당체계의 정당균열선 내지 정당-유권자 연합을 이루는 이념균열

구조가 공고하지 못하고 정책 분야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즉 정치적 이념 측면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경제적 이념 측면에서는 보수주의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진보와 보수 간의 명확한 경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념균열 발전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분야의 이념이 두드러진 선거에서는 이념균열선이 명확해지면서 지역균열선과 팽팽한 길항관계(拮抗關係)를 이루어 새로운 정당균열선이 지역균열선을 넘어 형성되고 있다. 미국식 정당재편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분야의 이념이 두드러진 선거에서는 이념균열선이 보수 편향적으로 형성되면서 새로운 정당균열선이 지역균열선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고 과거의 지역주의 정당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이념균열선이 공고하지 못한 탓에 정당-유권자 연합 역시 일관되게 정렬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정당재편성이 안정적인 재정렬(realignment)을 이루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기존의 정당-유권자 연합에서 이탈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점진적 재편성 국면에 있고, 향후 새로운 중대선거를 거쳐야 정당재편성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한국정당체계의 재편성을 추동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는 신(新)중산층이다.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신중산층은 1987년 민주 항쟁 당시에도 소위 “넥타이 부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민주적 개혁을 추동한 바 있다(최장집, 2002). 이 신중산층이 민주화 이후 잠복해 있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의 등장을 계기로 이념균열선을 따라 다시 부상(浮上)한 것이다.

신중산층은 이미 서구에서 신(新)사회운동의 등장과 함께 진보적인 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낸 바 있다(정태석, 2006). 우리나라를 비롯해 탈공산주의 국가와 제3세계에서 민주화를 추동한 주요 세력이었고, 2000년대 중동혁명 과정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서 다시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Economist, 2013; Fukuyama, 2013). 터키와 브라질 등 중동과 남미에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와 분배에 실패

한 정부를 향해 새로운 정치개혁의 요구를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신중산층의 가장 큰 힘은 높은 교육수준이다. 이들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로서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고도의 정보수집과 높은 이해능력을 보이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이들 간 소통능력을 키워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지를 더욱 높이는 기능을 했다. 특히 중위 수준의 소득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신중산층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기대를 보이며 사회적 하층에 비해 정치참여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신중산층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신중산층(middle class)이 20억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럽연합안보연구기구는 신중산층이 2009년 18억 명에서 2020년 32억 명, 2030년이면 49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Fukuyama, 2013).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 국가에서 신중산층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중산층은 향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정치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신중산층이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정당체계의 핵심적인 토대를 형성해온 균열구조의 총체적인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보수 편향의 정당체계를 떠받쳐온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급속히 쇠퇴했다. 1960년대 이후 출생한 새로운 세대가 정치사회의 주된 역할을 맡기 시작한 것도 이 과정을 가속화했다. 새로운 세대는 기존 정당체계의 토대를 이루었던 반공이데올로기나 지역주의 모두로부터 대단히 자유롭다. 이로 인해 한국 정당정치의 이데올로기 구조가 정상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변화를 이끈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사회경제적 변화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보, 기아 등 규모 상으로 상위권 안에 들던 중견 기업들이 잇따라 퇴출되었고 제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거나 통폐합되는 등 금융과 기업 부문의 혁명적인 재편을 겪었다. 대우그룹의 해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마불사라 불리던 재벌그룹까지도 외환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계층구조상 다

수를 이루며 안정적인 사회적 토대를 형성했던 중간층이 노동자계급과 함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경제정책은 중간층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신(新)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시장경쟁의 논리를 우리 사회의 기본 작동원리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신(新)중간계급에게까지 비정규직이 일상화되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웃도는 극심한 노동 분화를 낳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부문 간의 양극화 역시 확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중간층 내부에서도 ‘부동산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졌다.

경제적 양극화의 보편화는 중간층의 급속한 분화를 야기했다. 즉 1980년대 이래로 우리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산층이 “상류 중산층” 내지 “안정적인 중산층”과 몰락위기에 놓인 “불안정 중산층”(구해근, 2007)으로 갈리는 소위 “중산층의 몰락” 내지 “중산층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중산층의 위기는 비단 중산층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승을 기대한 하층과 젊은 세대의 심리적 위기를 수반했다. 이에 따라 당장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한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 상층부와 젊은 세대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이념적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정치과정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하층보다는 중간층의 정치적 활성화를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신중산층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정치의식 형성기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소위 “386 세대”를 중심으로 그 이후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사회 개혁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3김(三金)의 퇴장과 함께 가속화된 미국식 정치개혁과 1990년대 이후 강화된 시민운동은 무엇보다 신중산층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식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와 후보자 중심의 선거 방식, 지구당의 폐지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은 사회적 하층

의 참여율을 떨어뜨린다는 부작용 속에서도 ‘노사모’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중산층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했다.

또 199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평화, 환경, 노동 등 거의 모든 사회적 분야로 확대된 시민운동은 보수 정당들의 헤게모니에 맞서 노동운동이 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했다. 즉 개혁적인 정치의제를 제시하고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변화의 보루 역할을 하며 신중산층을 진보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촛불시위의 주된 주체 역시 고학력, 중간 소득 위주의 신중산층이나 그 자녀들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당을 위한 정치 운동은 기층 대중조직과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과 이데올로기 양 측면에서 본격적인 계급형성 단계에 돌입했던 노동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었다. 국가와 자본의 일관된 탄압과 새로운 노동정책의 도입 등으로 조직화가 정체된 가운데 외환위기로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극심한 노동 분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 대결에 앞서 노동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노동자계급이 계급형성 단계에 돌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급해체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 놓인 것이다.

또 기대를 모았던 진보 정당 역시 원내 진입 이후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진보 정당은 2004년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원내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10석 안팎의 지극히 제한된 의석만을 얻고 있는데다 잇따른 정당 분열 상황까지 겪으며 2004년 원내 진입 이후 가장 큰 위기 국면을 맞았다. 진보 정당의 원내 영향력은 고사하고 지도력 결핍으로 노동운동을 이끌어내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조건이 조성되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계층균열 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중산층의 진보적인 성향이 투표행태에 반영되면서 이념균열에 따른 정당-유권자 연합이 형성되고, 정당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정당재편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분야의 이념균열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춰 계

층 간의 균열선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념균열선이 동요하다가 결국 기존의 지역주의 정당체제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의 이념균열선을 명확히 하려면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소득 분배와 경제 양극화 해소에 대해 진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책대안에 따라 사회경제 집단의 정치적 동원을 이루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혹은 진보세력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당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경제적인 이념, 즉 박정희 군사 정부 이래 줄곧 추진되어온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은 민주화 이후에도 “시장주의”, “시장 자율”, “민주주의” 등의 명목 하에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온갖 특혜를 받으며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 역할을 했던 재벌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주의 혹은 시장 자율은 결국 과거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장 혹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 국가의 개입문제를 논할 경우 경제성장에 반하는 정책이거나 급진적인 세력으로 몰리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를 추진해온 소위 진보개혁 세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층을 비롯한 상당수 유권자들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변화를 갈구하면서도 상층 편향적인 경제노선을 지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즉 경제문제가 대선 과정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최근 선거에서 스스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보수 진영 정당을 향해 지극히 자연스럽게 투표를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보 진영 정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신중산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경제문제에 관한 한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 이외에 진보적인 의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권위주의 정부시절부터 지속되어온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좌파” 정부로 불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까지 경제성장을 구실로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이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진보적 경제정책의 실체가 우리 사회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것이다. 새로운 진

보적 정책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유권자들의 정렬은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북한의 침공위협을 빌미로 한 남한 내 민주주의 탄압 즉 북한 변수가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한 사실에서 유추가능하다.

경제적 보수주의의 팽배는 사실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표출을 억압해온 기존의 “노동배제의 정치”에서 비롯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파 정치세력에 대한 억압은 곧 노동배제와 동의어로 취급될 정도로 노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고,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경제정책에서 노동이 빠진 채 오로지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만 외쳐온 것이다.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표출억압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중간계급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배제는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각 부문의 내부 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계급갈등을 상쇄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2000년대 이후 상층이 일관되게 계급투표를 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자들은 계급배반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는 모습이 단적인 예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층균열이 노동자계급을 제외한 채 상층과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과 노동 혹은 상층과 하층 간의 계급균열이 이루어진 서구와 전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다.

한국사회의 정당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정당-유권자 사이에 일종의 새로운 정당일체감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주의 정당체계는 비록 정치사회로부터 시민사회로 “이식”(移植)된 것이지만, 정당지도자와 지역 유권자 간의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오랜 기간 특정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지역주의 정서를 통해 특정 정당과 유권자 간의 정당일체감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당이 사회경제 집단에 기반을 둔 강력한 대중조직을 토대로 시민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토대를 둔 정당-유

권자 연합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은 오랜 기간 사회경제 집단의 정치적 동원을 거부하고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비결정”(非決定)의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스스로 시민사회로부터 유리(流離)되어 왔다. 뿌리가 없는 정당은 언제든지 쉽게 이합집산이 가능하고, 정당체계 역시 변화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곧 정당재편성이 완결되지 못하고 과거 지역주의 정당체계로 회귀함을 의미할 것이다.

서구에서 정당체계의 동결(凍結) 즉 정당재편성의 완결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시민사회의 정치적 동원이 끝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립셋과 로칸에게 정당조직 동결의 결정적인 요소는 1920년대 조직의 기원이 아니라 강한 대중조직의 확립이다. 강한 대중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에서 정당은 동결되지 않고 정당체계의 혁신을 위한 여지가 상존한다”(Lijphart, 1990: 147)는 레이파트의 말이 의미하는 바일 것이다.

시민사회와 유리된 한국 정당의 속성을 살펴보면 한국정당체계는 단 한 번도 “동결”된 적이 없이 ‘부유(浮遊)하는 체계’라는 생각이 가능할 정도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한국정당체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한국정당체계의 재편성이 완결되어 진정 “동결”될 수 있는 시점은 한국정당이 사회경제적 집단에 뿌리를 둔 강력한 대중조직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정치적 동원에 성공해 새로운 정당-유권자 연합을 형성하는 그 때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계층균열 구조를 밝혀낸 것이다. 이 계층균열이 이념균열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낸 것 또한 중요한 성과이다. 이념균열 구조에 대한 논의를 세대를 넘어 계층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토대로 2002년 대선 이후 한국정당체계가 점진적 재편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재편성의 주체는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신중산층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2004년 제17대 총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당재편성에 대해 기존 지역균열과 새로운 이념균열의 우열을 논하며 정당재편성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었다.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계층균열 구조와 정당재편성 문제는

향후 선거에 대한 분석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은 또 이념에 따른 계층균열 구조에 대한 분석을 단순히 선거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실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의 신중산층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게 된 역사적 배경, 즉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균열구조가 형성된 정치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외환위기라는 두 역사적 사건을 결부지은 것이다. 이는 립셋과 로칸이 국민국가 건설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균열구조가 등장한 사실을 밝힌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균열구조와 정당재편성은 보다 구조적인 근원을 갖는 만큼 불가역적이고 불가피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 논문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 것으로는 신중산층과 상층 이외 다른 계층의 이념적 성향에 차이가 나는 배경, 정치·경제 분야 이념균열의 변화 양상, 노동의 정치의 향배, 정당과 시민사회, 특히 정당과 사회경제적 집단과의 새로운 관계 등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해 정당재편성 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 연구서

-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33-57.
- 강명세. 2005.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 정당체제의 재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249-270.
- _____. 2006.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서울: 백산서당.
- 강병익. 2009. “정당체계와 복지정치: 보수-자유주의 정당체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0권, 109-146.
- 강수택. 200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사회의식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58호(2003 여름호), 66-90.
- 강원택. 2002a.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16대 총선: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중첩?”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Ⅳ: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_____. 2002b. “세대, 이념과 노무현 현상.” 『계간 사상』 제54권, 80-102.
- _____.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집문당.
- _____. 2004.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집 제2호, 143-165.
- _____. 2005.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193-217.
- _____. 2007.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서울: 집문당.
- _____.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14권 1호, 31-58.

- _____. 2009a.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 · 이내영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 선거』. 동아시아연구원.
- _____. 2009b. “한국 정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당 조직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2호, 119-141.
- _____.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파주: 나남.
- _____. 2011. “한국에서 정치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3호, 99-129.
- _____. 2012a. “3당 합당과 한국정당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171-193.
- _____. 2012b. “왜 회고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129-147.
- _____. 2013. “사회계층과 투표 선택.” 박찬욱 · 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 강원택 · 장덕진 엮음. 2011. 『노무현 정보의 실험: 미완의 개혁』. 서울: 한울.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6.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1987-2003』. 파주: 한울.
- 고원. 2005. 『한국의 경제개혁과 국가: 우리 시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극복방안』. 파주: 한국학술정보.
- _____. 2009. “한국의 계급불평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3호, 29-60.
- 곽진영. 1998.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영의 유형과 그 변화: 한국, 일본, 미국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75-202.
- _____. 2002. “정당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틀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한국정당학회보』 제1권 제1호, 65-88.
- _____. 2004. “정당체계.” 심지연 편저.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_____. 2006.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와 정당체계: 변화 아니면 결빙?”
『의정연구』 제12권 제2호, 109-136.
- _____. 2009.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115-146.
- 구해근. 2002. 신광영 옮김.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 _____. 2007.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계급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
『경제와 사회』 통권 제76호(2007년 겨울호), 255-289.
- 권혁용.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투표.” 이현우·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동아시아연구원.
- 김만흠.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 215-237.
- _____. 1995. “한국의 정당정치와 지역주의.” 『한국정당정치론』. 파주:
나남.
- 김민전. 2008. “2007 대선, 그리고 정치균열의 진화.” 이현우·권혁용 편저.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동아시아연구원.
- _____. 2010. “17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나타난 정당 간 정책연합.”
의정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31호), 161-191.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제34집, 241-268.
- 김성수. 2003.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 중산층의 역할: 민주화 운동 참여
동기에 대한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135-162.
- 김수진. 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서울: 백산서당.
- _____. 2008.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서울: 백산서당.
- 김순영. 2006. “불평등과 한국의 민주주의.” 『아세아연구』 제49권 4호,
37-67.
- 김영범·박준식. 2011.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분석: 고용 양극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83호, 216-243.

- 김영태. 2006. “중산층의 투표행태: 1992년-2002년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산층, 개혁적인가』(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제2차 포럼 자료집). 한국사회학회, 57-75.
- _____. 2007.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2호, 65-77.
- 김용호. 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파주: 나남.
- _____. 2004. “네티즌 포폴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인가?: 「노사모」 사례 연구.” 『2004 IT정책 연구자료집: 정보기술과 정치·사회의 변화』. 한국전산원.
- _____. 2006. “2002년 대선 이후 한국정치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1호, 235-246.
- _____. 2008.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1호(통권 12호), 195-210.
- 김육. 2004. “한국 지역주의의 지역별 특성과 변화 가능성: 대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제1호, 83-105.
- _____.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 _____. 2010. “촛불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통권 17호), 33-59.
- 김유선. 2006. “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석.” 『동향과 전망』 통권 제68호(2006년 가을·겨울호), 110-138.
- _____. 2007. “2007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2007.8) 결과.” 『노동사회』 통권 제127호, 12-47.
- _____. 2009.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8) 결과.” 『노동사회』 통권 제149호, 44-80.
- _____. 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8) 결과.” 『노동사회』 통권 제167호, 80-120.

- 김은정 외. 2008. “우리나라 정보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2007년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1권 제3호, 75-101.
- 김재한. 1994. 『정당구도론』. 파주: 나남.
- 김정훈. 2004. “시민운동 논쟁과 참여연대.” 홍성태 엮음.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 참여연대 창설 1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아르케.
- _____. 2005. “참여정부 2년 평가 - 망령과의 싸움과 잃어버린 개혁.” 『문화과학』 통권 제41호, 240-249.
- _____. 2006. “민주화 세대는 어디에 있는가?” 『황해문화』 통권 제53호(2006년 겨울호), 57-79.
- 김종엽 엮음. 2009a.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서울: 창비.
- 김종엽. 2009b. “촛불항쟁과 87년 체제.” 김종엽 엮음.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서울: 창비.
- 김주찬·윤성이. 2003.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2호, 87-103.
- 김진균·조희연. 1985.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
- 김진하. 2008.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5-31.
- 김형준. 2007.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연구』 제10권 2호, 47-63.
- 김형호. 2011. “2007년 대선의 국민참여 경선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보자 선출권의 포괄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고봉논집』 제48집, 219-243.
- 김호기. 2001.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유토피아 사이에서』. 서울: 아르케.
- _____. 2008. “중산층과 이중적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편. 『기रो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서울: 인간사랑.

- _____. 2009. “87년 체제인가 97년 체제인가: 민주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김종엽 엮음.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서울: 창비.
- 남준우. 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4호, 1-24.
- 노중기. 2008. “민주 노조 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민주 노조 운동 20년: 쟁점과 과제』.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12.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경제와 사회』 통권 제96호(2012년 겨울호), 178-209.
- 노혜경 외. 2002. 『유쾌한 정치 반란, 노사모』. 서울: 개마고원.
- 노환희·송정민. 2013. “세대균열에 대한 효과 고찰: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 류재성. 2013. “안철수 지지자의 선택.” 『2012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정치와 특성과 변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마인섭. 2003. “한국 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1호, 31-69.
- _____. 2004. “정당과 사회균열구조.” 심지연 편저.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마인섭·장훈·김재한. 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29-52.
- 문용직. 1993. “1990년 3당 합당의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제1호, 67-88.
- 문우진. 2005. “지역분위 투표와 합리적 선택이론: 공간모형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21권 3호(통권 50호), 151-186.
- _____. 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17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통권 14호), 87-113.
- 민영. 2011.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 접근, 활용,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권 제1호, 150-187.

- 박경산. 2003. “미국 정당의 변화와 개혁에 관한 연구.” 『미국학』 제26집, 137-158.
- 박명호. 2004a. “4.15 총선과 한국정치 - 신(新) 균열구조의 등장과 정당체제의 재편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1호, 27-56.
- _____. 2004b. “한국정당정치의 이념적 특성과 변화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 419-443.
- _____. 2004c. “17대 총선과 정당정치의 변화: 지역주의 정당체제와 관련하여.” 『정치·정보연구』 제7권 1호, 1-26
- _____. 2006. “17대 총선과 정당구도의 변화.”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 _____. 2012. “2012년 총선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15권 1호, 127-154
- 박보영. 2010.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 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제19집, 5-45.
- 박상병. 1997. “한국정당체제의 균열구조 - 균열구조의 이론과 한국 정당체제의 성격.” 『동향과 전망』 통권 제33호(1997년 봄호), 216-238.
- 박상훈. 2007.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왜 문제인가.”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9.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김종엽 엮음. 『87년 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서울: 창비.
- 박원순. 2002.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서울: 당대.
- 박원호. 2012a.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파주: 나남.
- _____. 2012b. “세대균열의 진화: ‘386 세대’의 소멸과 30대 유권자의 부상.” 박찬욱·김지윤·우정엽 공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1: 2012 총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_____. 2013. “정당일체감의 재구성: 제18대 대선을 중심으로.”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 박찬욱. 2005. “지역균열의 해소와 균형정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4집 제2호, 69-125.
- _____. 2006. “한국 시민의 투표행태 분석: 제16대(2002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사회균열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임혁백·고바야시 요시아키 공편. 『시민사회의 정치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 서울: 아연출판부.
- _____. 2009. “사회균열과 투표선택: 지역·세대·이념의 영향.” 김민전·이내영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본 18대 국회의원선거』. 동아시아연구원.
- _____. 2013. “2012년 대통령선거의 특징.”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 박찬욱·김경미·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정향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서울: 생각의 나무.
- 박찬욱·이현우 외. 2004. 『미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흐름.
- 박찬표. 2003.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 ‘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사회과학연구』 제11집, 137-164.
- _____. 2007a. “법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7b. “전문가정당 정치론 대 대중정당 정치론.”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8. “제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2호, 5-40.
- 박태주. 2008. “노동정책,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개혁의 실증.” 한반도 사회경제연구회 엮음. 『노무현 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서울: 창비.

- 백준기 · 조정관 · 조성대. 2003.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국가전략』 제9권 4호, 139-168.
- 백창재. 1999. “미국 예비선거제의 정치적 영향: 대표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8 · 9권, 213-235.
- 삼성경제연구소. 2006a.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47호.
- _____. 2006b. “소득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연구보고서』.
- 서복경. 2002. “한국정당체제의 기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4. “민주노동당 ‘있는’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 『사회연구』 제2호, 149-172.
- _____. 2010. “투표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1호, 109-129.
- 성경룡. 1992. “한국의 사회계급과 정당구조.” 이은진 · 김석준 외 공저.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사회문화연구소.
- _____. 1993.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 사회운동론적 접근.” 『한국정치 · 사회의 새 흐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85-132.
- 손호철. 1993. 『전환기의 한국정치』. 서울: 창작과 비평.
- _____. 2000. “전환의 한국정치: 61년 체제의 해체와 변형.” 『아세아 연구』 제43권 1호(통권 103호), 27-58.
- _____. 2008.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2호(통권 65호), 31-59.
- 송경재. 2009.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55-83.
- 시민의 신문. 2006. 『한국 민간단체 총람』. 서울: 시민의 신문.
- 신광영. 2003.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 실태: 서베이 자료 분석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통권 제59호, 32-54.
- _____. 2004a.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서울: 을유문화사.

- _____. 2004b. “중산층의 위기, 표준과 상승의 몰락: 왜 중산층의 위기가 우리 모두의 위기인가.” 『당대비평』 통권 제24호, 42-56.
- _____. 2004c. “한국 진보정치의 존재조건: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의 가능성.” 『역사비평』 통권 68호, 41-64.
- _____. 2005.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노동계급의 현재.” 『역사비평』 통권 71호, 114-139.
- _____. 2006a.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한국사회학회 편.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서울: 인간사랑.
- _____. 2006b. “서비스사회와 계급구성의 변화.” 『동향과 전망』 제68호, 82-109.
- _____. 2006c. “현대 한국의 사회변동: 고도산업화 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경제와 사회』 통권 제69호, 10-39.
- _____. 2008.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불평등체제.” 『시민과 세계』 제13호, 13-24.
- _____. 2009. “진보적 대안의 재구성.” 『작가세계』 통권 제81호(2009년 가을호), 304-321.
- _____. 2011.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한국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제50집 1호, 37-70.
-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통권 제13호, 63-80.
- 신원. 2002. “‘정치 혐오’의 진흙탕에서 피운 ‘정치 사랑’의 연꽃.” 노혜경 외. 『유쾌한 정치 반란 노사모』. 서울: 개마고원.
- 신진욱. 2004.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 1960-1986년 한국 노동자 집단행동의 레퍼토리와 저항의 사이클.” 『한국사회학』 제38집 6호, 219-250.
- _____. 2009a. “진보의 혁신과 시민정치.” 『시민과 세계』 제16호, 58-83.
- _____. 2009b.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제.” 홍성태 엮음. 『촛불집회와 한국사회』. 서울: 문화과학사.

- 심지연. 2004a.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서울: 백산서당.
- 심지연 편저. 2004b.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안병진. 2004.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 미국적 정치의 시대와 민주주의 미래』. 서울: 푸른길.
- 안순철·가상준. 2006.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민주노동당 투표자에 대한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2호(통권 9호), 37-57.
- 안순철·조성대. 2005.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갈등구조와 전망: 공간이론과 2002년 대통령선거.” 『21세기 정치학회보』 15집 1호, 111-131.
- 안승국. 2003. “한국에 있어서 자본축적,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치사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1호, 115-140.
- 안희수·정영태. 1993. “한국에서 중간계급의 확대가 정당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제2호, 61-91.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193-214.
- _____. 2006. “세대와 투표양태.”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 어수영·한배호. 1996.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81-104.
- 오승용. 2009a.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0권, 282-315.
- _____. 2009b.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통령-의회관계 연구: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제2권 제2호, 125-160.
- 오현주·길정아. 2013. “유권자의 이념과 투표선택: 보수의 결집과 진보의 분열.”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 유종일. 2006. “참여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창작과 비평』 통권 133호(2006년 가을호), 299-311.
- _____. 2009.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최태욱 엮음. 『신자유주의 대안론: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 넘어서기』. 서울: 창비.

- 유종일 외. 2011. 『박정희의 맨 얼굴』. 서울: 시사IN북.
- 유팔무. 1997.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극복: 저항적 시민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당대비평』 통권 제2호, 서울: 생각의 나무.
- 유팔무 외.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소화.
- 유철규. 2004. “양극화와 국민경제 해체의 경제구조: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아세아연구』 제47권 4호, 23-41.
- _____. 2005. “국민경제 해체의 위기구조.” 최장집 편. 『위기의 노동』. 서울: 후마니타스.
- 윤성이. 2009.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1호, 315-334.
- 윤영관. 1999. 『21세기 한국정치경제 모델: 좌, 우,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 서울: 신호서적.
- 윤재관. 2003. “인터넷 정치 참여의 활성화 조건에 관한 연구: ‘노사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종빈. 2005. “17대 총선과 탄핵 쟁점.”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 _____. 2011. “지구당 폐지와 한국정당의 민주성.”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2호(통권 19호), 67-92.
- 은민수. 2003. “한국 보수정당 지배체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_____. 2000. “한국 정당제 변화의 특성과 요인: 1987~1997.” 『아세아연구』 제43권 1호(통권 제103호), 59-91.
- _____.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개인적 투표결정요인과 집합적 투표결정요인.”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8집 3호, 67-84.
- _____. 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1호(통권 16호), 95-120.
- 이갑윤·이현우. 2008. “이념 투표의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37-167.

- 이내영. 2009a.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제17권 제2호, 42-72.
- _____. 2009b. “18대 총선의 정당지지의 재편: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김민전·이내영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동아시아연구원.
- _____.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2호(통권 19호), 251-287.
- 이내영·정한울. 2008. “진보는 왜 한나라당을 지지했나: 이념·정당·지역·이슈의 역할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동윤. 2008.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1호(통권 12호), 5-37.
- 이병훈. 2009.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 최태욱 엮음. 『신자유주의 대안론: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 넘어서기』 서울: 창비.
- _____. 2011. “사회통합적 노동개혁, 진보의 좌절과 현실 타협.” 강원택·장덕진 엮음.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서울: 한울.
- 이병훈·신재열. 2011. “자영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제92호(2011년 겨울호), 247-274.
- 이선향. 2011.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담론201』 제14권 제1호, 57-82.
- 이성균. 2008.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도시 임금 소득자 가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4호, 119-146.
- 이성백. 2006. “사회적 양극화: 원인과 해법.” 『진보평론』 제29호(2006년 가을호), 196-215.

- 이성철 · 백운순. 2002.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정치기획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 낙선운동과 노사모 운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2권 제2호, 277-293.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11-136.
- 이정식. 1996. “정당체제.” 윤정석 · 신명순 · 심지연 편.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74-206.
- 이정우 · 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2호, 79-109.
- 이정진. 2007. “재편성 개념으로 분석한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 미국 및 유럽사례와의 비교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 109-138.
- _____. 2008. “지구당 폐지과정에서의 담론구조와 법 개정.”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기획패널2』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5-177.
- _____. 2010.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 개정 논의.” 『한국 정치외교사 논총』 제31집 2호, 353-384.
- 이종래. 2003. “노동자집단의 투표행위와 계급정체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58호(2003년 여름호), 91-120.
- 이종석. 2002. “대통령 선거와 북한: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와 변화가능성.” 『역사비평』 통권 제60호(2002년 가을호), 101-113.
- 이종희. 1999.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한국의 시민운동: 진보적 사회운동의 지평확대를 위하여.” 『진보평론』 제2호(1999년 겨울), 56-74.
- 이지호. 2008.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주의 시기의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제24권 제4호, 95-126.
- _____. 2009.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123-149.
- 이충식. 1995. “한국사회의 균열구조, 정당체계, 그리고 민주화.” 『호남정치학회보』 7권 0호, 135-151.

- 이현우. 2003. “미국 정당의 도전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11집.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85-110.
- _____. 2008a. “투표율 하락의 교훈: 숨어있는 기권자 민심도 간과해서는 안돼.” EAI 여론브리핑 제26호. 2008년 4월 12일.
- _____. 2008b.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대표성과 변화.”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유공모 패널1』. 한국국제정치학회, 7-26.
- 이현출. 2003.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의정연구』 제9권 제1호, 29-59.
- _____. 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321-343.
- 임성호. 2003.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 의회민주주의 적실성의 회복을 위한 소고.” 『의정연구』 15권 0호, 133-167.
- 임수환. 2007. “제14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정치·정보연구』 제10권 2호, 1-20.
- 임영일. 2004. “노동운동과 노동정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64호(2004년 겨울호), 65-83.
- 임영일·임호. 1993. “87년 이후 노동자층의 의식변화와 노사관계.” 『경제와 사회』 통권 제17권, 29-53.
-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51-77.
- 장덕진. 2008. “누가 촛불을 드는가: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참여과정의 단계별 분석.”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사회학: 또 다른 60년을 향하여』. 한국사회학회 2008 후기 사회학대회, 119-149.
- 장미혜. 2008.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편.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서울: 인간사랑.
- 장상철. 2008. “누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정당지지 결정요인.”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사회학: 또 다른 60년을 향하여』 한국사회학회 2008 후기 사회학대회, 384-393.

- 장승진. 2012. “제19대 총선의 투표선택: 정권심판론, 이념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집 5호, 99-120.
- 장우영. 2010. “네트워크 개인주의와 시민저항: 2008년 촛불시위를 사례로.” 『한국정치연구』 제19집 제3호, 25-55.
- _____. 2012. “온라인 공론장과 정치참여: 2008년 촛불시위에서의 ‘아고라’.”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 1-26.
- 장원호·김병조. 2008. “중산층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 한국사회학회 편.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서울: 인간사랑.
- 장한익·최율. 2006. “경제적 양극화.” 『2006 전국사회학대회: 한국사회의 전환 - 갈등에서 통합으로』, 213-215.
- 장훈. 1993. “영국 보수당에서의 신보수주의 등장의 정치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9권 1호, 127-154.
- _____. 1994. “정당 이데올로기 변화의 모델.” 『한국정치연구』 제4집 제1호, 279-301.
- _____. 1995. “프랑스 사회당의 자주관리 사회주의 등장의 정치과정: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정당 내부 정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667-692.
- _____. 1996. “후기산업사회의 정당정치 - 서구 녹색당 성장의 사회적 기원과 정치·제도적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30집 1호, 321-343.
- _____. 2002.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미국과 한국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의 개혁과 정당구조의 변동.” 『의정연구』 제8권 제2호, 178-207.
- _____. 2003. “한국의 정치적 대표: 유권자-국회의원의 이념적 대표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1호, 71-93.
- _____. 2004.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과제: 진보-자유지상주의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압축 이동.”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_____. 2010.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파주: 나남.
- 전진영. 2007. “민주노동당의 제17대 국회 원내 입법활동 분석.” 『신아세아』 제14권 제2호, 신아시아연구소, 184-207.

- _____. 2009.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2호(2009 가을호), 173-196.
- 정구중. 2006. “16대 대통령 선거 분석: 정치변동에서 사회변혁으로.”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 정대화. 2004.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본 진보정당: 민주노동당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64호(2004년 겨울호), 41-64.
- 정병기. 2009.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제의 현황과 전망: 보수적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해체,” 『대한정치학회보』 17집 2호, 45-71.
- _____. 2012. “19대 총선에 나타난 이념 및 지역균열과 대선 전망.” 『진보평론』 제52호(2012년 여름호), 12-32.
- 정영태. 1993a. “계급별 투표행태를 통해 본 14대 대선.”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1)』. 파주: 나남.
- _____. 1993b. “노동자와 중간층의 정치의식: 14대 대선 투표행태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10, 196-216.
- _____. 2008. “노동자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의식 조사결과.” 『노총연구원신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_____. 2011. “라이벌 정치운동단체의 연합에 의한 정당건설: 민주노동당의 사례.”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2호, 79-106.
- 정준표. 1998.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한 변수.” 『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1호, 111-151.
- 정진민. 1992.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145-167.
- _____. 1996.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 뉴딜연합의 약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1호, 199-222.
- _____. 1997. “전후 미국정당기반 재편과 정당체제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2집 4호, 223-241.
- _____. 1998.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서울: 한울.

- _____. 2000.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1호, 237-254.
- _____. 2001.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체계의 변화: 정당체계 재편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7권 2호, 201-222.
- _____. 2003a. “한국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재편성.”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1호, 95-118.
- _____. 2003b. “정당개혁의 방향: 정당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2호, 23-39.
- _____. 2005. “지구당 폐지 이후의 새로운 정당구조와 당원중심 정당운영의 범위.” 『의정연구』 제11권 제1호, 5-26.
- _____. 2008.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 _____.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 1-21.
- 정진상. 2006. “노동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1987-2003』. 파주: 한울.
- 정철희. 2002. “신계급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35-58.
- _____. 2006. “새로운 정치균열과 신(중간)계급의 정치적 정체성: 리버테리언 대 권위주의?.” 『한국의 중산층, 개혁적인가』(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제2차 포럼 자료집), 13-36.
- 정태석. 2006.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유럽의 신사회운동과 한국의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72호(2006년 겨울호), 125-147.
- 정한울. 2008. “경제는 어떻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나?” 동아시아연구원 2007 대선 패널조사 언론보도자료(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 정한울 · 권혁용. 2009.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김민전 · 이내영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본 18대 국회의원선거』. 동아시아연구원.
- 정해구. 1997. “통일 · 대북 의식의 변화와 ‘레드 콤플렉스’.” 『역사비평』 통권 40호(1997 가을호), 86-98.

- 정혜숙·임영규. 2006. “17대 총선과 지역주의.” 어수영 편저. 『한국의 선거 V -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오름.
- 조기숙. 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집 2호, 203-232.
- _____.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파주: 나남.
- _____. 2009.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3호, 125-148.
- 조기숙·박혜윤. 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243-268.
- 조대엽·김철규. 2007. 『한국 시민운동의 구조와 동학』. 서울: 집문당.
- 조돈문. 1994.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1960-1990: 계급구조의 양극화의 고찰.” 『한국사회학』 제28집 봄호, 17-46.
- _____. 2006.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72호(2006년 겨울호), 11-41.
- _____. 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경제와 사회』 통권 제79호(2008년 가을호), 184-213.
- _____. 2011.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서울: 후마니타스.
- 조돈문·이수봉. 2008. 『민주 노조 운동 20년: 쟁점과 과제』. 서울: 후마니타스.
-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89-109.
- 조성대. 2004. “4.15총선과 한국정치의 갈등구조: 지역주의와 갈등의 대체.” 『의정연구』 10권 2호, 209-235.
- _____.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현대정치연구』 창간호, 169-198.
- 조중빈. 2003. “16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2003년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조효래. 2006.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내부구성과 임금실태.”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1987-2003』. 파주: 한울.

- 조희연, 2001. “노동계급은 일반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운동을 보는 민중적 관점.” 『노동사회』 제53권, 30-42.
- _____. 2003. “87년 이후의 ‘수동혁명’ 적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 맑스주의와 한국의 시민운동.” 『지구화 시대 맑스의 현재성』. 서울: 문화과학사.
- _____.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서울: 아르케.
- _____. 2008.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와 시민운동의 변화.” 김진균 교수 저작집.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 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서울: 문화과학사.
- _____. 2009. “‘87년 체제’ ‘97년 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김종엽 엮음.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서울: 창비.
- 주봉호, 2007.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북한 변수.” 『정치·정보연구』 제10권 2호, 21-45.
- 진영재·김민욱, 2007.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4호(통권 59호), 65-98.
- 진영재·박준식, 2008. “한국 정당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질: 1987년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제2호, 129-149.
- 차성수, 1998. “시민사회의 지형변화와 시민운동.” 『지역사회연구』 제6집 1호, 181-196.
- 채진원, 2012. “무당파·SNS 유권자의 등장배경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와 시사점.”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1호, 309-331.
- 최장집, 1985. “해방 40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한국현대사1, 1945-1950』. 서울: 열음사.
- _____. 1991. “지역감정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 김종철·최장집 외 편.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 _____. 1996. “지역문제와 국민통합.” 최협 엮음. 『호남사회의 이해』. 서울: 풀빛.
- _____.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5.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7. “민주주의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정리.” 최장집 외.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 최장집 · 박찬표 · 박상훈. 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서울: 후마니타스.
-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375-394.
- 최태욱 엮음. 2009. 『신자유주의 대안론: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 넘어서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최현. 2007. “시민운동의 진로 모색: 노동 없는 민주주의?” 『시민과 세계』 제11호, 87-97.
- 하준경. 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사회과학논총』 제8집, 483-504.
- 한귀영. 2012. “2012년 총선은 왜 중대선거가 되지 못했나.” 『시민과 세계』 제21호, 139-155.
- 한반도 사회경제연구회 엮음. 2008. 『노무현 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서울: 창비.
- 한상진. 1986. “한국 중산층은 보수적인가?” 『사상과 정책』 11, 114-132.
- _____. 1987.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1집 여름호, 121-148.

- 함인희 · 이동원 · 박선웅. 2001.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서울: 집문당.
- 현대경제연구원. 2012. “중산층의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 의식의 약화와 내핍생활의 확산.”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 주평』 통권 제 501호.
- 현재호. 2004a.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연합에 관한 연구: DJP 연합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7권 1호(통권 115호), 147-178.
- _____. 2004b. “정당 간 경쟁연구: 1952-2000: 선거강령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2호, 189-215.
- _____. 2006. “민주화 이후 정당 간 경쟁의 성격: 노동 없는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9권 2호(통권 124호), 42-78.
- _____. 2008.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대표체제로서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213-241.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출판부.
- 홍두승 · 김병조. 2006. “한국의 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 1차 발표자료집, 3-18.
- 황아란. 2009.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3호(2009년 가을), 191-217.

2. 영문연구서

- Bartolini, Stefano and Peter Mair. 1990. *Identity, Competition and Electoral Availability: The Stabilisation of European Electorates, 1885-198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 Paul. 1984. “The Dealignment Era in America.” In Russe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londel, Jean. 1968. "Party Systems and Patterns of Government in Western Democracie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 No.2, 180-203.
- Brady, David W. 1988. *Critical Elections and Congressional Policy Mak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urnham, Walter Dean. 1970. *Critical Elections and the Mainspring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 _____. 1981. "The System of 1896: An Analysis." In Paul Kleppner et al., eds. *The Evolution of American Electoral Systems*. Westport: Praeger.
- _____. 1996. "Realignment Lives: The 1994 Earthquake and its Implications." In Colin Campbell et al., eds. *The Clinton Presidency*. Chatham: Chatham House.
- Dahl, Robert A. 1966. "Patterns of Opposition." In Robert A. Dahl ed. *Political Oppositions in Western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 J. 1984. "Political Forces and Partisan Change." In Russe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 J., Paul Allen Beck and Scott C. Flanagan. 1984.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Russe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 and Steven Weldon. 2005. "Public Images of Political Parties: A Necessary Evil?" *West European Politics* Vol.28, No.5, 931-951.
- Duverger, Morris.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ies in the Modern State*. translated by Barbara and Robert North. London: Wiley.

- Ersson, Svante, and Jan-Erik Lane. 1982. "Democratic Party Systems in Europe: Dimensions, Change and Stabilit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5, No.1, 67-96.
- Flanagan, Scott C., and Russel J. Dalton. 1984. "Parties Under Stress: Realignment and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West European Politics* Vol.7, No.1, 7-23.
- Ginsberg, Benjamin and Martin Shefter. 1990. *Politics by Other Means: The Declining Importance of Elections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 Hopkin, Jonathan and Caterina Paolucci. 1999. "The Business Firm Model of Party Organization: Cases from Spain and Ital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 307-339.
- Ignazi, Piero. 1992. "The Silent Counter-Revolution: Hypothesis on the Emergence of Extreme Right-Wing Partie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22, No.1, 3-34.
-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5, No.4, 991-1017.
- _____.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nda, Kenneth. 1980. *Political Parties: A Cross-National Survey*. New York: The Free Press.
- Katz, Richard and Peter Mair. 1995.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Vol.1, No.1, 5-28.
- Key, V. O. 1955.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17, No.1, 3-18.
- _____. 1959. "Secular Realignment and the Party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Vol.21, No.2, 198-210.

- Kirchheimer, Otto. 1966.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In Joseph LaPalombara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iesi, Hanspeter. 1998. "The Transformation of Cleavage Politics: The 1997 Stein Rokkan Lectur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33, No.2, 165-185.
- Kitschelt, Herbert P. 198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 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6, No.1, 57-85.
- Kwak, Jin Young. 2003. "The Party-State Liaison in Korea: Searching for Evidence of the Cartelized System." *Asian Perspective* Vol.17, No.1, 109-135.
- Lane, Jan-Erik, and Svante O. Ersson. 1994. *Politics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3r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1997. "Parties and Voters: What Creates the Tie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20, No.2, 179-196.
- Lawson, Kay. 1988. "When Linkage Fails." In Kay Lawson and Peter H. Merkl eds. *When Parties Fail: Emerging Alternative Organiz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0. "The Cleavage Model and Electoral Geography: A Review." In R. J. Johnston, Fred M. Shelley, and Peter J. Taylor eds. *Developments in Electoral Geography*. London: Routledge.
- Lipset, Seymour M. 1996.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 W. Norton(국역: 문지영 옮김. 2006.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 _____. 1990.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In Peter Mair ed.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cardie, Paul. 2000. "Prophets, Purifiers and Prolocutors: Towards a Theory on the Emergence of New Parties." *Party Politics* Vol.6, No.2, 175-185.
- Maguire, Maria. 1983. "Is There Still Persistence: Electoral Change in Western Europe: 1948-1979." In Hans Daalder and Peter Mair eds.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Continuity and Chang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Mair, Peter. 1983. "Adaptation and Control: Towards an Understanding of Party and Party System Change." In Hans Daalder and Peter Mair eds.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Continuity and Chang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_____. 1997. *Party System Change: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ne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Chan Wook. 1999.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1997: Kim Dae-Jung's Victory as a Momentum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한국정치연구』 제8,9권, 57-80.
- _____. 2009. "Effects of Social and Ideological Cleavages on Vote Choice i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f December 19, 2007."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85-120.
- Pedersen, Mogens N. 1983. "Changing Patterns of Electoral Volatility in European Party Systems: Explorations in Explanation." In Hans

- Daalder and Peter Mair eds.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Continuity and Change*.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_____. 1990. "Electoral Volatility in Western Europe, 1948-1977." Peter Mair ed.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trocik, John. 1981. *Party Coalitions: Realignment and the Decline of the New Deal Syste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7. "Realignment: New Party Coalitions and The Nationalization of The South." *The Journal of Politics* Vol.49, No.2, 347-375.
- Reiter, Howard L. 1989. "Party Decline in the West: A Sceptic's View."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1, No.3, 325-348.
- Rokkan, Stein. 1968. "The Structuring of Mass Politics in Smaller European Democracies: A Developmental Typolog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10, No.2, 173-210.
- Rose, Richard and Derek W. Urwin. 1970. "Persistence and Change in Western Party Systems Since 1945." *Political Studies* Vol.18, No.3, 287-319.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oonmaker, Donald. 1988. "The Challenge of the Greens to the West German Party System." In Kay Lawson and Peter H. Merkl eds. *When Parties Fail: Emerging Alternative Organiz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mir, Michal. 1984. "Ar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Frozen"?: A Comparative Dynamic Stud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17, No.1, 35-79.
- Shattschneider, Elmer E.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_____. 1970.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국역: 현재호 · 박수형 옮김. 2008. 『절반의 인민주권』. 서울: 후마니타스).
- Smith, Gordon. 1989. "A system perspective on party system change."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Vol.1, No.3, 349-363.
- Sundquist, James L. 1973.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 Volkens, Andrea and Hans-Dieter Kligemann. 2002. "Parties, Idologies, and Issues: Stability and Change in Fifteen European Party Systems 1945-1998." In Luther and Muller-Rommel eds. *Political Parties in the New Europe: Political and Analytical Challen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re, Alan. 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linetz, Steven. 1979.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Revisited." *West European Politics*. Vol.2, No.1, 4-28.
- _____. 1990. "The Transformation of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In Peter Mair ed.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 기타 자료

경향신문. 2006. "盧 대통령 국민과 인터넷 대화: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말라" 단호" (3월 24일).

국토교통부. "자가점유비율"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39&bbs=INDX_001&clas_div=C (검색일: 2013.6.28).

- 국토교통부. “신(新)주택보급률”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227&bbs=INDX_001&clas_div=C (검색일: 2013.6.28).
- 박상훈. 2008. “운동이 정치체제 대신 못해... 보수독점 강화할 수도.”
『오마이뉴스』 (7 월 8 일)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8574 (검색일: 2013.1.28).
- 세계일보. 1994. “남북정상회담 적극 추진: 김 대통령, 조건 없이 언제든지 만날 용의” (2월 25일).
- 손호철. 2012. “대통령인사권 줄이면 관료는 누가 통제? 새정치선언, 다급한 민주당이 안철수 투정에 항복한 것.” 『오마이뉴스』 (11월 2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4506 (검색일: 2013.3.15).
- 연합뉴스. 2013. “금융소득 年 1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1만8천명.” (1월 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31/02000000000AKR20121231159500008.HTML?from=search> (검색일: 2013.2.18).
- 월간 『말』. 2002. “盧風, 대선정국 강타하다/ 노사모 정치의식 설문조사: ‘노무현 아니면 찍지 않겠다’ .” 통권 191호(2002년 5월호).
- 통계청.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13.1.1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kosis.kr>) (검색일: 2013.3.10)
- 한겨레신문. 1996. “역대 선거 고비마다 ‘북한변수’ ” (4월 7일).
- 한국갤럽. 2003. “국민의식 조사: 이념적 정체성 평가” . (4월 29일).
[https://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3540&SearchGb=&SearchKey=&MSeq=13654&Yy=2003&PageID=F058&PGNO=1&date=Fri%20Jun%2028%202013%2014:17:47%20GMT+0900%20\(%B4%EB%C7%D1%B9%CE%B1%B9%20%C7%A5%C1%D8%BD%C3\)](https://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3540&SearchGb=&SearchKey=&MSeq=13654&Yy=2003&PageID=F058&PGNO=1&date=Fri%20Jun%2028%202013%2014:17:47%20GMT+0900%20(%B4%EB%C7%D1%B9%CE%B1%B9%20%C7%A5%C1%D8%BD%C3)) (검색일: 2013.3.5).
- 한국경제신문. 2013. “2013 신년기획: 22년 전엔 국민 75%가 중산층...지금 당신은?” (1월 1일).

- Economist. 2013. “The March of Protest: A Wave of Anger is Sweeping the Cities of the World, Politicians Beware.” (6월 29일).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80143-wave-anger-sweeping-cities-world-politicians-beware-march-protest> (검색일: 2013.7.8).
- Fukuyama, Francis. 2013. “The Middle-Class Revolution.” *The Wall Street Journal* (6월 29일).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873904578571472700348086.html> (검색일: 2013.7.8).

Abstract

The Rise of Class Cleavage and Party Realignment in South Korea

Lee, Yong Ma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outh Korean party system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has been a system constructed by ideologically conservative and politically regionalist parties. This party system met with a crisis shortly after its establishment, characterized by a rapid decrease of turnout and an increase of the non-committed. Even in Youngnam and Honam, Chungchong province, three main strongholds of regionalist parties, regionalist voting tendency of the electorates has been weakened.

Two historical events,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resulted in the total change of social cleavage structure in Korea. First, inter-Korean relations have experienced revolutionary change since the 2000 summit and the Korean people started to realize that two Koreas would be able to co-exist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As a result, anti-communism or anti-North Korea sentiment in South Korea has been diluted gradually. This gives a possibility that Korean society can recover the normal ideological structure balanced by left and right from the abnormal one that has been leaning to the right since the 1950 war.

Furthermore, the deepened economical polariz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resulted in the major change in the existing socio-economical cleavage

structure. The new middle class had been growing, as the industrial structure advanced. But the new middle class has shrunk since the financial crisi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South Korean capitalism started developing in 1960s. The financial crisis gave an important momentum to the change of class structure.

The formation of working class in South Korea had just begun since the worker's struggle in 1987. Many trade unions were organized rapidl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as legalized in 1997, and Democratic Labor Party was founded in 2000. But everything has chang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division within the labor has been deepening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etween big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and between export companies and domestic industries, etc. As a result, the working class has been facing a serious organizational crisis.

For the same time, the new middle class has been active politically with the growth of civic movements since the 1990s. The civic movements have played a role of setting up progressive agenda. The party reforms that took place after the retirement of 'Three Kims' encourag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middle class rather than that of the lower class. As a result, the new middle class with higher education has been active politically.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change of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s have made the new middle class more politically engaged and more progressive than the working class.

According to my analysis of six national elections since 2002, the new middle class with higher education and higher income has continuously supported parties with progressive agenda. In contrast, the upper class has supported conservative parties. The old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have vacillated and have not been ideologically consistent. In short, the new

class cleavage between the upper class and the new middle class has emerged in the 2000s.

The different voting behavior of the upper and the new middle class is based on their ideology. The new middle class showed the most progressive inclination, while the upper class showed the most conservative inclination, measured by both subjectiv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specific policies.

But the ideological inclination differed in the area of policy even among the new middle class. On the political issue of policy concer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 new middle class was very progressive, while it was conservative on the issue of economy. This shows that “development ideology” formed during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be dominant.

The class cleavage came out most clearly substituting the previous regional cleavage in the elections in which the main issue was political. However, The class cleavage was weakened and the regional cleavage was stronger in the elections in which the main issue was economical. The party-electorate alignment between the politically progressive group and the new middle class has not taken a root and swayed according to election issues. This is characteristic of an initial stage of party realignment, which means Korean political party system has entered into a secular realignment.

Keywords: cleavage structure, class cleavages, new middle class, party-electorate alignment, party realignment, secular realignment

Student Number: 2004-30899

